

2004
국방백서



국 방 부

발 간 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에서는 경제적 차원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군사적 차원의 갈등과 분쟁요인도 상존하는 등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건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 등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등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이중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등 주한미군 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전과 위협 요인들을 극복하고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방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어떠한 유형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전쟁 억제력을 조기에 확충하여 우리 안보의 절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고 선진화·현대화된 국방운영 및 신뢰받는 국군상 정립을 위해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에 의한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군의 기본임무와 사명에 매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2004 국방백서」는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다 진솔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 하였습니다. 금번 국방백서에는 안보정세의 변화, 국방정책 방향과 국방태세, 우리 국방의 현황과 추진해야 할 과제, 국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향,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국민의 편익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군의 활동 등을 소상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국민적 우려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조정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되어 평화재건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활동상과 성과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국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보분야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국방백서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방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4. 12. 31.

국 방 부 장 관

윤 광 응
윤 광 응

목 차

제1절 세계 안보정세	18
I 새로운 위협의 확산	18
가. 테러	18
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19
다. 지역적 불안정성과 국지분쟁의 지속	19
라. 기타 위협	19
II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	20
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노력	20
나. 지역안보협력체제의 발전	20
다. 전략무기 감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	21
III 전쟁양상의 변화	23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24
I 주변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24
가. 미국	24
나. 일본	26
다. 중국	28
라. 러시아	30
II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1
가. 미국	31
나. 일본	32
다. 중국	32
라. 러시아	32

제3절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33
I 북한의 일반정세 및 대남정책	33
가. 내부정세	33
나. 대외정책	34
다. 대남정책	34
II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	35
가. 군사정책	35
나.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기구	35
다.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및 배치	36
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39
III 주요 군사동향	41

2장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과 국방정책

43

제1절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구상	44
I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목표	44
II 국가안보전략 기조	45
가. 평화번영정책 추진	45
나.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45
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46
라. 포괄안보 지향	46
III 전략과제 및 기반과제	46
제2절 국방정책 기본방향	48
I 국방목표	48
II 국방운영 중점	49
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49
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50
다. 일관된 국방개혁 추진	50
라.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51

제1절 군사력 운용 및 보유전력	54
I 우리 군의 군사력 운용 개념	54
II 각군별 보유전력	55
가. 육군	55
나. 해군	56
다. 공군	57
라. 예비전력	58
제2절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운용	59
I 주한미군 현황	59
II 증원전력	60
제3절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62
I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유지	62
II 침투·국지도발 대비태세	63
III 전면전 대비태세	63
IV 테러 대비태세	64
V 장병 정신무장 강화	65
제4절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	66
I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66
가. 울지포커스렌즈(UFL) 연습	66
나.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66
다. 독수리(FE) 연습	67
라. 태극 연습	67
마. 호국 훈련	67
바. 화랑 훈련	68

II 각 군별 훈련	68
가. 육군	68
나. 해군	69
다. 공군	70
라. 해병대	71
제5절 동원 및 향토방위작전태세	72
I 전시대비 동원태세	72
가. 인원동원	72
나. 물자동원	73
II 향토방위작전태세	74
III 예비군 자원관리	74
IV 예비군 교육훈련	75
가. 동원훈련	76
나. 동원미참자훈련	76
다. 향방훈련	77

4장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제1절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과 추진방향	80
I 추진배경과 개념	80
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배경	80
나.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	81
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의미	82
II 목표 및 추진방향	84
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84
나.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	86
다.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87
III 향후 추진	88
가. 국방예산 확보와 배분	88
나. 추진계획의 이행	88

제2절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89
I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방위체제 강화	90
가.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90
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91
다. 한미 연합방위체제	92
II 한·미동맹 발전 토대 구축	92
가. 용산기지 이전	93
나. 미2사단 재배치	94
다. 주한미군 감축	95
라. 군사임무 전환과 연합지휘체제	96
마. 연합군사능력 발전	97
III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97
가. 방위비 분담	97
나. 민원 해소 및 훈련여건 개선	98
다. 한미 유대강화 활동	99
IV 미래 한·미동맹 발전	99
제3절 대외 군사관계 발전	100
I 대주변국 군사외교	100
가. 대 일본 관계	100
나. 대 중국 관계	101
다. 대 러시아 관계	102
II 군사교류협력 다변화	103
가. 동남아/대양주 지역	104
나. 유럽 지역	105
다. 기타 지역	107
III 국제 평화유지활동	109
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개관	109
나. 우리 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109
다.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11
라. 우리 군의 해외파병활동	112

IV 다자안보협력과 국제군비통제 활동	121
가. 다자안보협력 활동	121
나. 국제군비통제 활동	122

제4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 126

I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26
가. 정전체제 유지	126
나. 평화체제 구축	128
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129
II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	131
가.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추진	131
나.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지원	134
III 국군포로 송환 노력	137
가. 미송환 국군포로 현황	137
나. 정부의 해결 노력	137

제5절 자위적 방위역량 건설 139

I 군사력 건설 방향	139
II 국방 전력투자사업과 연구개발	140
가. 전력투자사업의 목표 및 방향	140
나. 국방 획득업무 제도개선	141
다. 국방 전력투자사업 추진현황	142
라.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144
마. 국방 획득분야 개혁	151
III 국방정보화 추진	152
가. 국방정보화 정책 방향	152
나. 국방정보화 환경개선	153
다. 정보통신 기반체계	154
라. 전장관리 정보체계	155
마. 자원관리 정보체계	157

IV 국방인력 육성	159
가. 국방인력 육성방안	159
나. 정예장병 육성을 위한 교육	162
제6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165
I 장병 근무여건 개선	165
가. 장병 처우 개선	165
나. 병영시설 및 의료환경 개선	168
다.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170
라. 군 복지 운영체제 개선	171
II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강화	173
가. 취업지원의 기본 방향	173
나. 제대군인 직업보도교육 확대 시행	175
III 군인연금제도의 개선	177
가. 군인연금제도의 특성	177
나. 군인연금제도 개선 노력	178
제7절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	179
I 국방중기계획	179
가. 중기계획 중점 및 사업 규모	179
나. 분야별 사업계획	179
II 2005년도 국방예산	182
가. 일반회계 예산	182
나. 특별회계 예산	183
III 적정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	184
가. 국방비 배분 추이와 국방운영 실태	184
나. 국가의 능력에 상응하는 국방비 지출	186

제1절 국방개혁의 추진목표와 추진중점	188
제2절 분야별 추진 현황	189
I 정신개혁과 군대문화 혁신	189
가. 직업군인의 가치관 재정립	189
나. 간부의 건전한 생활기풍 확립	190
다. 선진 병영생활 문화 조형	191
라. 부패·비리·부조리 척결 활동 강화	192
II 국방제도 개선	195
가. 인사제도 개선	195
나. 병무제도 개선	196
다. 조달업무 개선	199
라. 군 사법제도 개선	201
III 국방부분부 현역 편제 조정과 군 구조 정비	202
가. 국방부분부 현역 편제 조정(문민화)	202
나. 상부조직 정비	204
다. 전력 및 부대구조 정비	205
라. 미래전 대비 중·장기 전력구조 발전	205
제3절 향후 국방개혁 방향	207
I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의 필요성	207
II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에 의한 국방개혁 방향	208
가. 문민통제체제 발전	208
나. 국력에 걸맞는 군사력 건설	208
다.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 보장	209
라.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210

제1절 「열린 국방」 구현	214
I 정보공개와 국방 민원업무 개선	214
가. 정보공개	214
나. 국방 민원업무 개선	216
II 국방홍보업무 활성화	218
III 국방정책 발전에 민간전문가 참여	220
가. 국방정책 자문위원회	220
나.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	221
제2절 「국민을 위한 국방」 구현	222
I 병무행정 개선	222
가.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222
나.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 향상	227
II 군 환경보전활동	231
가. 군 환경관리체계 발전	231
나. 주둔지 환경오염방지 사업	233
다.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대책 추진	234
라.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235
마. 작업환경 안전 관리	236
III 지역사회 발전과 민군관계 개선	237
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사시설 관리	237
나. 재해·재난시 대민지원 활동	240
다. 기타 대민지원 활동	243

1. 2004년 세계분쟁 현황
2. 핵 보유국의 핵전력 현황
3.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5. 북한 연도별 군사비
6. 남·북 군사력 비교
7. 북한의 미사일 개발/제원
8.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 일지
9. 연합 및 합동 연습/훈련 현황
10. 남북군사회담 경과 일지('00. 9.~'04. 7.)
11.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12.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13.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14.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주요 일지
15.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6.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7. 2003~2004년도 대외 군사교류협력 현황
18. 주요 국제군비통제협약/기구
19.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력회의/참가국
20.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국방부 참가 현황('02. 4.~'04. 7.)
21.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LNWFZ-NEA) 진행 경과
22. 유엔 평화유지 활동 현황('04년 11월 현재)
23.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평화·재건지원 파병 경과
24. 연차별 정부재정과 국방비
25. 2005년도 국방예산
26. 연도별 국방비 구성 현황
27.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28. 2004년도 주요 군사장비 전력화 현황
29. 방산 관련 협정체결 현황
30. 국방연구개발 투자 현황
31. 2004년 국방개혁 추진과제(101개)
32. 국방기구도 및 국방인원 현황
33. 군 환경시설 설치 중기계획
34. 군 보유 토지 및 건물 용도별 현황
35. 국방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2003~2004년)
36.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37.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
38. 국방 주요연표(2003~2004.11.)

여 백

1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제3절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제1절 세계 안보정세

오늘날 국제안보정세는 냉전시 잠재되어 있던 영토, 종교, 자원, 환경, 민족 문제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고 있으며,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대테러전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구도로 세계질서 개편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제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선제공격과 선별적 개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테러 및 국제범죄, 불법무기 거래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보다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고 있어 국제평화유지와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적극 전개되고 있다.

I 새로운 위협의 확산

가. 테러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일개 테러조직에 의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도 전쟁에 버금가는 재산 및 인명의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정신적 공황에 가까운 충격과 위기감에 휩싸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국가 이외의 조직이나 세력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테러의 위협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오늘날 테러는 그 세력이 영토나 국경을 초월하여 범세계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실체를 찾기 어렵고 시기와 장소를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초국가적 테러 위협은 전통적인 적과 위협의 개념,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비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국제테러와 함께 일부 국가 및 테러단체에 의한 핵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과 확산이 세계 안보의 주요 위협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는 국제 암거래 등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탄저균과 사린가스 등의 생화학무기는 제조가 쉽고 생산비용이 저렴하므로 다수의 약소국가뿐만 아니라 테러조직들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사용 가능성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 국제사회는 확산 우려국가의 대량살상무기 생산능력 제거와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다. 지역적 불안정성과 국지분쟁의 지속

냉전시대에 잠재되어 있던 영토·자원분쟁, 종교·인종·민족갈등, 분리독립 운동 등 복합적인 갈등요인들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지분쟁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단 내전 등 28회, 미주에서는 콜롬비아 내전 등 5회, 중동에서 이라크 전쟁 등 13회, 아시아에서는 네팔 내분 등 20회,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러시아-체첸 분쟁 등 9회, 그리고 유럽에서는 코소보 독립전쟁 등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국지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테러활동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소련 붕괴 이후, '91년
12월 구소련 구성 공화국
중 발틱 3국을 제외한 12
개국에 의해 창설된 국가
연합체



○ 발리 폭탄테러

라. 기타 위협

첨단기술 및 정보·통신 수단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국경개념이 약화되면서 국제범죄, 해적행위, 불법난민, 사이버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다

초국가적 위협 :
국가 또는 비국가적
행위자가 국경을 초월하여
야기하는 위협

비군사적 위협 :
국가 및 비국가적 행위자
의 군사력 이외의 수단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
되는 위협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지진해일은 물론 지구온난화에 의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중증급성호흡증후군 등 신종 전염병 등도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안보관련 행위의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테러단체, 범죄집단, 종교단체, 인종집단, 각종 비정부기구 등이 국제정치的主要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다.

II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노력

다양한 형태의 지역분쟁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이의 사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와 지역별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의 활동분야도 군축, 개발, 환경, 인권, 마약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 역시 분쟁의 예방, 평화협상 타결에 유리한 환경 조성, 포괄적인 합의 이행 감시, 인도주의적 구호품 전달 및 정전협정 집행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동·아프리카 지역 분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나 강대국들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유엔의 분쟁해결 능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회원국들은 새로운 국제현실을 반영하여 유엔이 보다 실효적인 기구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기능을 수행해야 할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 여부, 특히 거부권 부여 문제는 회원국 간의 의견 상충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나. 지역안보협력체제의 발전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다자간 지역안보협력기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1994년 이래

역내 신뢰구축 제고 및 예방외교를 위한 다양한 협의의 장이 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북한이 가입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유일한 정부간 다자안보협력체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2004년 7월에 개최된 외무장관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및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ARF는 ASEAN+3, APEC 정상회담 등과 함께 지역 안보문제에 관한 당사국들의 연례적인 공식·비공식 접촉 창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국 간의 다양한 정치적, 민족적 배경과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안보협력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통한 협력과 병행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의 정치·외교·군사적 역할의 확대 등 지역안보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NATO는 2004년 3월 29일 동구권 7개국이 신규로 가입하여 26개국으로 확대되면서 NATO의 방위역할을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활동영역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EU는 2004년 5월 1일 회원국이 25개국으로 확대되어 회원국간 정보공유체계 확립, 테러조직 자금 차단 및 자산 동결, 국경통제 강화, 대테러 데이터베이스 신설 등 대테러 공조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역내 분쟁을 조정하고, 대륙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AU)이 2001년 5월 26일 창설되었고, 2003년 2월 3일 AU정상회의는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할 권한을 갖는 평화안보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였다. 현재 AU는 EU형태의 지역통합체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감소 및 지역별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AU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등 일부 회원국 간의 이해대립, 회원국의 주권양도에 대한 거부감, 대규모 운영비 확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다. 전략무기 감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

2002년 5월 24일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무기 감축에 관한 조약」(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하여 2012년 12월 말까지 양국의 핵탄두 수를 1,700~2,200기 수준으로 감축하고, 핵전력의 구성과 구조는 이 상한선

ARF:
ASEAN Regional Forum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EAN+3 :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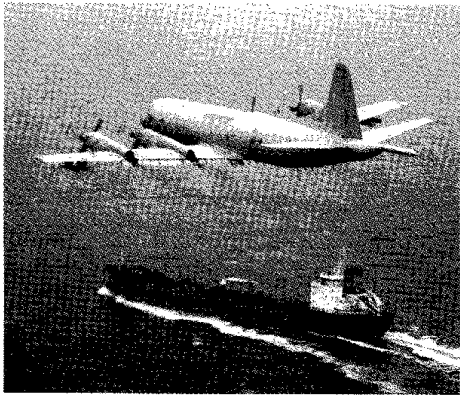
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EU :
European Union

AU :
African Union

모스크바 조약은 2003년 3월 미국상원에서 5월에는 러시아 상원·하원에서 비준되고 2003년 6월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비준서를 교환하여 발효



○ PSI 훈련(대량살상무기 선적 의심선박 추적)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대규모 핵무기 감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의 위험성과 이들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국제테러조직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해상, 공중, 육상에서 차단하는 내용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6월 마드리드에서 제1차 PSI회의(11개국 참가, 현재는 15개국)를 개최한 이래, PSI 참여국간 해상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등 2004년 말 현재 PSI 회의 7회, PSI 훈련 12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9월 23일 UN 총회 연설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UN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4년 4월 28일 만장일치로「유엔안보리 결의 1540」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과 이란 등에 핵 개발 포기압박을 가하는 한편, PSI 참여국 확대 및 유엔 등 범세계적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노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리비아가 2003년 12월 20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선언에서 리비아는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완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미사일도 동시에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화학무기금지협약(CWC)·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국제군축협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약속 이행실적과 협조정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노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리비아가 2003년 12월 20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선언에서 리비아는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완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미사일도 동시에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화학무기금지협약(CWC)·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국제군축협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약속 이행실적과 협조정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유엔안보리결의 1540 :
국제테러 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가 핵·생물·화학 무기 및 운반수단을 개발·획득·제조·보유·운반·이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안보리 결의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NPT :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CWC :
Chemical Weapon
Convention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III 전쟁양상의 변화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전쟁양상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은 개전 초기부터 미사일과 항공력을 이용한 대규모 공습과 지상전을 병행한 '신속결정작전(RDO)'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밀타격무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불필요한 대량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효과기반작전(EBO)'과 전투조직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네트워크 중심작전(NCW)'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조기에 주요작전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전쟁양상이 다수의 병력과 재래식 무기에 의한 영토 확보와 대량 인명살상과 파괴 중심의 전쟁에서, 정보·감시·정찰(ISR)체계, 장거리 정밀타격무기(PGM) 등 첨단무기체계를 활용하여 적의 정보체계를 마비시키고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을 타격함으로써 전쟁의지를 말살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된 군사능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가용한 군사기술과 국가역량에 기초하여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정예화 하는데 주력하여 병력·장비중심의 군을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고, 조기경보 및 감시, 기동력, 정밀타격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RDO :
Rapid Decisive
Operation

EBO :
Effect-Based
Operation

NCW :
Network Centric
Warfare

ISR :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PGM :
Precision Guided
Munitions

전략적 중심 :
한 부대가 행동의 자유나
유형전투력 또는 전투의지
를 창출하는 장소, 능력 또
는 특성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긴장완화와 협력이 증진되는 추세 속에 동북아 지역도 경제적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역내 국가간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 중에 있고 ASEAN+3, ARF, APEC 등을 통한 다자간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도 냉전구조가 잔존하고 있으며, 북핵문제와 양안문제, 도서 및 영토분쟁 가능성 등 지역 갈등요인이 산재되어 있다.

더불어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내 국가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변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I 주변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가. 미국

(1) 국방정책

미국은 미래의 다양하고 불확실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4대 국방목표로 ①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국토를 보호 ②전략적 접근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 ③국제안보질서 유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 ④동맹의 강화 등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능력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 개념을 바탕으로 ①미 본토 방어 ②세계 4대 주요지역에서 적 위협 억제 ③그 중 2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 가능한 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유지 ④위 2개 지역 중 1개 지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핵전력의 운용에 있어서는 종래의 억제와 방어 위주에서 벗어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선제공격과 핵사용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방정책과 전략 :
4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정책검토 보고서」(2001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01.9.30)와 '02년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02.9.20) 그리고 「'03국방연례보고서」(Annual Report, '03.11.25) 등을 통하여 제시

미국의 4대 국방목표 :
2004년 국가군사전략(NMS : National Military Security)에 근거

(2) 군사동향

미국은 현재 140만 명 규모의 병력 수준을 계속 유지(육군 10개 사단, 해군 12개 항모전투단, 공군 46개 전투비행단, 해병 3개 사단)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을 추진하여 합동기동군 개념의 여단 중심형 군구조로 재편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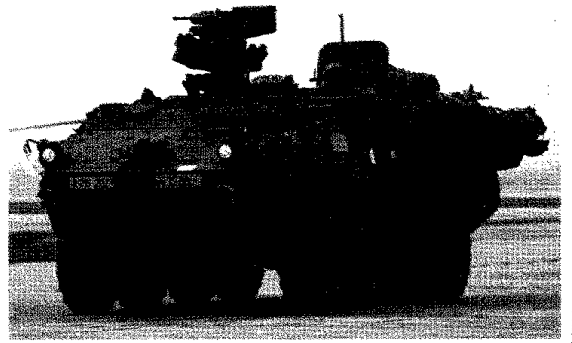
범세계적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도 미군 재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인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2004년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합의하였고, 주일미군의 재조정은 미일 양국간에 협의 중에 있다. 미국은 일본 요코타 기지의 미 5공군사령부와 괌의 13공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주일 미 공군의 효율적 운용을 추구하는 계획 등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육군은 적이 반응하기 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신속결정작전(RDO)’ 개념 하에 현용전력(current forces)과 미래전력(future forces)을 동시에 개발·개선한다는 방향에서 변혁을 추진함으로써 장차 43~48개의 작전여단(UA) 중심의 미래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군은 발전된 정보기술(디지털)을 활용하여 타격능력 구축을 위해 분산된 전함들을 동시에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중심전(NCW)’ 개념 하에 미래에는 37개의 기동타격군(ESG) 중심의 전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군은 최소한의 손실로 적의 정치·경제적 네트워크 요소간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평가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효과기반작전(EBO)’ 개념 하에 10개의 항공기동군으로 재편하고, 차세대 전투기 1,760여 대와 신형전투기(F/A-22) 340여 대를 전력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은 1개 항모전투단과 8개 전투비행대대 및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성능 정보수집체계와 수집된 첩보를 융합하여 작전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력체계 및 이와 연계된 정밀타격전력을 구비하고 있다.



○ 스트라이커 전투차량

RDO :
Rapid and Decisive Operations

현용전력 :
합동전력의 일부로서 현재의 작전수행을 위한 현 육군 전력

미래전력 :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미래 작전군

UA :
Unit Action

NCW :
Network Centric Warfare

ESG :
Expeditionary Strike Group

EBO :
Effect Based Operations

AWACS :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도표 1-1】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력

지역	주한미군	주일미군
육군	1개 군사령부(제8군사령부) 병력 31,460여 명 / 전차 116대/ 장갑차 111대	1개 군단사령부, 병력 1,600여 명
해군	병력 300여 명	1개 함대사령부, 병력 5,200여 명, 항공모함 1척, 수상전투함 9척
공군	1개 공군사령부 (제7공군사령부) 병력 9,420여명, 전투기 84대	1개 공군사령부(제5공군사령부), 병력 14,130여 명, 전투기 84대
해병대	병력 180여 명	1개 해병원정부대, 병력 20,000여 명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3.10.) 등

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또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에 따라 동북아와 중동지역에 병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한 기존 군사전략을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 전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해외의 해군·공군기지를 중추기지로 확보하여, 유사시 분쟁지역에 신속 투입하는 방향으로 기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일본

(1) 방위정책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방위정책의 기조로 추진해 오다가 1976년에 최초로 ‘방위계획대강’을 수립하였고, 1995년 1차 개정하여 이른바 ‘기본적 방위력 구상’ 개념 하에 5년 단위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전력을 증강해 왔다. 9·11테러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안보의식이 확산되자 2004년 12월 ‘신방위계획대강’을 채택하여 이른바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구상’ 개념으로 재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총체적 안보전략’이라는 신전략 개념 하에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고 국제안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일본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해 나가면서 기존의 전수방위, 비핵 3원칙을 견지함과 동시에 미·일 안보체제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안보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에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PKO 활동과 이라크 재건 지원 등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의 협력활동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을 ‘부가임무’에서 ‘주요임무’로 전환하였다.

방위계획대강 :
일본방위력의 구체적인
개념 및 증강목표, 유지,
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지침을 제시한 국방정책
기획서 1976년10월 최초
책정된 후 1995년11월에
개정되었으며,2004년 12월
10일 2차 개정 실시

(2) 군사동향

일본은 '04 12월 '신방위계획 대강' 을 채택하고 '05~'09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막료회의를 개편하고 통합막료장이 육·해·공 자위대의 지휘통제와 방위청 장관의 군령권 집행을 보좌하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본부를 장관 직속에 두도록 하였다.



● 공중조기경보기(E-767 AWACS)

육상자위대는 일본 본토내 전쟁위험의 감소에 따라 지상전력을 16만 명에서 15.5만 명으로, 전차는 1,000대에서 600대로, 야포는 740문에서 600문으로 감축하고, 11개 사단과 3개 여단 등의 부대를 9개 사단 6개 여단으로 그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반면, 보병부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한 다용도 헬기를 도입하고, 대규모·특수 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파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표 1-2】 일본의 주요 군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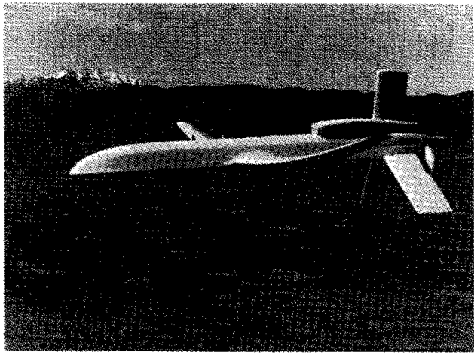
구분	보유 전력
육상 자위대	10개 사단 및 3개 여단과 2개 혼성단, 병력 147,000여 명, 전차 1,000대, 장갑차 1,220대, 야포 740문, 헬기 495대 등
해상 자위대	1개 호위함대사 및 5개 지방대, 병력 44,000 명, 이지스함 4척 포함 호위함 53척, 잠수함 16척, 대형 수송함 3척 등 140척의 함정, P-3C 97대, 초계 / 소해 헬기 107대
항공 자위대	3개 방면대 및 1개 혼성단, 병력 45,000여 명, E-467 조기경보기 4대, F-2 전투기 49대, F-15J/DJ 4.5 요격기 203 등 680여 대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원문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3. 10.) 등

해상자위대는 방공능력 강화 및 미사일 방어(MD)체계를 연동한 이지스함의 도입 등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서지역에 대한 침투에 대응하고 주변 해역의 경계를 위한 호위함, 초계헬기 등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동시에 53척의 호위함을 47척으로, 173기의 작전용 항공기를 150기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MD: Missile Defense

항공자위대는 대공 경계부대, 자동경보관제 조직의 현대화 등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공중급유기 1대를 신규로 도입하며 F-2 전투기의 전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무인정찰기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강화를 위해 통합연습훈련 횟수 증가와 정보통신기반의 공용화를 추진하고, 정보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본부 등 정보부대의 수집 및 분석체계 정비, F-15의 정찰기능 보강, 무인 정찰기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과학기술 발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집약·전달·공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휘통신시스템과 정보네트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일미군과의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확대하며 미사일 방어(MD)체제 구축과 관련, 성능 개선에 공동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작전운용과 장비기술면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 중국

(1) 국방정책

중국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의 평화발전을 위해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하면서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당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원하며, 해양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방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의 정예화·전문화 달성,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 대만의 미사일 방어(MD)체제 편입 반대 등의 국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국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첨단기술 조건 하의 국지전 승리 전략’이며, 이는 지상군의 정예화, 해·공군의 원거리 투사능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독립저지를 중국의 대외 군사관계와 국방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2) 군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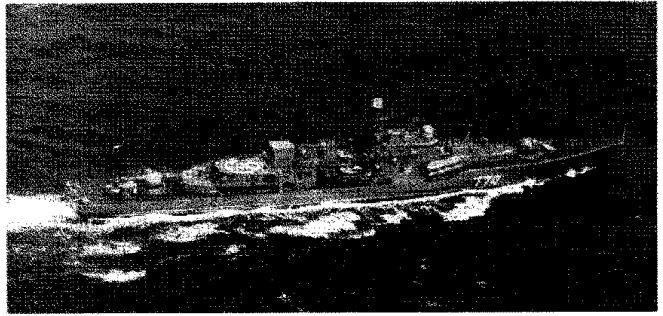
중국은 해·공군 및 제2포병의 건설을 강화하여 제해권, 제공권 및 전략적 반격능력을 높이고, 군사정보체계와 정보화 주전(主戰)무기체계 위주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병력 규모면에서는 ‘9.5계획’ 기간(1996~2000)중 추진된 50만 감군을 바탕으로 2005년까지 20만 명을 추

첨단기술조건하의 국지전 승리 전략 :
향후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첨단무기와 현대화된 진술·전략을 적용하여 소규모 지역단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전략

‘9.5계획’ :
중국군의 군개혁 5개년 계획으로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적용해 왔음. 2004년 말 현재 ‘10.5계획(2001~2005)이 진행 중임.

가 감축기로 하고, 간부들의 경우 국방대학 연수 및 대기발령 형식으로 2003년에만 4만 2,000명을 전역시켰다.

육군은 정예화·기동화·작전범위 확대를 위해 공격헬기 부대를 주축으로 한 육군항공단의 증설, 동남부지역에 기동전술미사일부대 창설, 군 지휘통제 자동화체계 구축, 야간전투 장비 및 대전자전 능력의 향상 등을 추구하고 있다.



○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도표 1-3】 중국의 동북아지역 군사력

구분	보유 전력
지상군	4개 집단군 예하 17개 전투사단, 병력 320,000 명, 전차 2,000여 대, 장갑차 1,800여 대 및 각종 화포, 미사일
해 군	북해·동해 함대, 병력 약 100,000명, 전투함정 455척, 잠수함 25척을 주축으로 한 926척의 함정, 1개 해군항공사단의 전폭기 및 헬기 100여 대
공 군	북경·심양·제남군구의 6개 비행사단, 병력 약 24,000 명, 폭격기, 전투기 지원기 등 각종 전술기 1,000여 대
제2포병 (전략군)	남경군구 2개 미사일여단, 병력 10,000 명 동평-31호(IRBM) 약 40기

※중국의 동북아지역 군사력이란 지상군은 심양군구, 해군은 북해·동해 함대, 공군은 북경·심양·제남군구 전력을 포함한다.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3. 10.) 등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구축함과 킬로(Kilo)급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여 근해 방어작전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최근에는 뤼하이(旅海)급 미사일구축함 4척의 추가 건조가 종료단계에 있다. 또한, 사정거리 8,000km의 JL(巨浪)-Ⅱ형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094형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SU-27/30을 비롯한 최신예 전투기의 도입과 함께 기술을 이전받아 면허생산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기경보기 도입과 J-10형 전투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13대 규모인 공중급유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공중급유 장치를 보완하여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확대시키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핵 및 미사일에 대한 기술개발과 전자전에 대한 집중 연구 등 전략무기와 사이버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사거리 8,000 km의 대륙간탄도탄 동평-31을 4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 중국 최초 유인우주선 선저우-5호 비행사 귀환 모습

2003년 10월 중국은 11년 6개월에 걸쳐 총 개발비용 약 2조 7,50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첫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3번째 유인우주선 발사국의 대열에 오르는 등 첨단기술 및 우주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 러시아

(1) 국방정책

러시아는 2000년 4월 21일 발표된 '신군사독트린'을 통해 '러시아연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예방·축소·무력화'시키는 것을 국방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신군사독트린'은 자국뿐만 아니라 CIS 국가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에도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명시하고, 체첸사태와 같이 연방의 결속과 유지를 위협하는 국지분쟁에 대해서는 '공세적 방어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2) 군사동향

러시아는 '강대국 위상 회복'을 위하여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는 기존 7개 군관구를 6개 군관구로 조정하였으며, 2005년까지 육·해·공군의 3군 체제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5년까지 국방부 예하 병력을 12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감축하되, 현 혼합병제를 2010년까지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러시아는 첨단장비 개발에 주력하면서, 국가적



○ 러시아 전략폭격기 TU-160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 :
구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 구성 공화국 중
발틱 3국을 제외한 12개국
에 의해 창설('91.12)된
국가연합체

차원에서 무기수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방산분야 수출액이 54억 달러에 달해 세계 무기수출 2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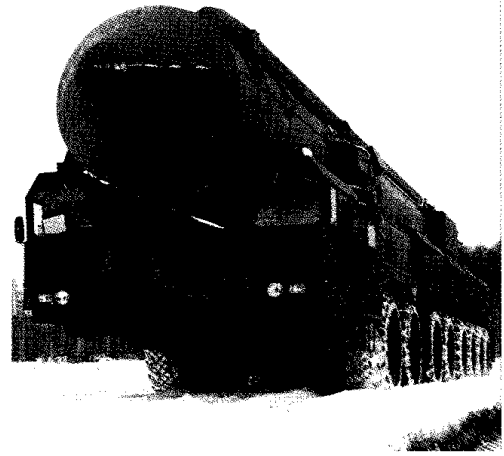
전략무기의 경우 양적으로는 감축시키고 있지만, Topol-M 신형미사일을 2003년까지 4개 부대에 실전 배치하여 핵전력 부대의 신속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Topol-M 미사일과 TU-160 전폭기를 개량하여 핵전력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각종 장비개선과 노후 군사위성 교체를 통해 우주 및 미사일 감시능력과 지휘통제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우주군의 전력 증강은 푸틴 대통령의 ‘강국 재건’을 위한 군 개혁에 부응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계와 우주 개발 경쟁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표 1-4】 러시아의 극동지역 군사력

구분	보유 전력
지상군	10개 차량화소총사단, 3개 기관총사단, 1개 포병사단, 전차 3,900대, 장갑차 6,400대, 공격헬기 85대
해군	5개 전단, 1개 항공사단, 병력 50,000여 명, 잠수함 8척, 주요 전함 8척, 지원함 99척, 폭격기 20대, 대잠기 45대, 지원기 10대
공군	3개 전선항공사단, 2개 장거리 항공사단, 병력 42,000 명, 폭격기 157대, 전투기 137대, 지원기 51대 ※시베리아 및 극동군관구 공동 지원세력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3. 10) 등



○ Topol-M 미사일

II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가. 미국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은 아·태지역 경제 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지역패권국의 출현을 방지하는 한편, 테러·WMD 위협 등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차원의 군사전략 중점을 유럽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조정 역시 세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6자회담 틀 안에서 관련국과의 협조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에 6자회담 참여와 핵개발 포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은 미·일동맹 체제를 근간으로 2004년도 기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방위비(약 4조 9천억 엔)를 투입하면서 자위대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역내 국가와의 적극적인 안보대화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 구축과 일·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중국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중국의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현대화’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유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남북한과 동시 수교한 인접국으로서의 입지를 활용하여 실리적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남북 쌍방의 핵 보유 반대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라. 러시아

러시아는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약화된 한반도에 대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과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연결되고, 송유관 및 가스관이 한반도와 연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한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SR :
Trans-Siberian Railway

TKR :
Trans-Korea Railway

제3절 북한정세의 군사위협

북한은 '2005년 신년 공동사설' 을 통해 당 창건 60주년, 선군정치 10주년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당, 전군, 전민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면서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 참가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과 경제실리를 획득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지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총 121회(2004.12월 기준)의 정치·군사, 경제 및 적십자·체육분야에서 당국 간 대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개성공단 건설 및 금강산관광사업 추진 등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군에 비해 양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한 가운데 장사정포 및 천마호 전차 생산, 헬기 도입, 소형 잠수함 건조 등 재래식 전력 증강과 더불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I 북한의 일반정세 및 대남정책

가. 내부정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개활동 대부분을 군부대 방문 등 군 관련행사에 집중하면서 군의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는 '선군정치' 를 통하여 체제내부 결속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은 1999년 이후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식량과 에너지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기술 및 자본의 한계, 제한적인 경제개방 조치, 사회 간접자본과 에너지 등 자원 부족으로 경제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 발표 이후 개성공단 사업 추진 등 경제개혁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선군정치 :
체제유지 및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을 내세워 경제건설을 선도하며, 군대우대 및 혁명정신을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

사회적으로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인적 접촉·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나. 대외정책

북한은 2000년 이후 대외정책 방향을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로 전환한 후 대서방 관계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 현재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20개국과 공식 수교하였다.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북경)

미국과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지속 주장하면서 2002년 10월 미국의 북핵 문제 제기에 대해 동년 12월 이후 핵동결 해제와 NPT 탈퇴 선언 등 강경대응함으로써 미·북 갈등이 증폭되었으나, 중국 등 주변국의 중재로 6자회담에 참여하여

북핵문제와 체제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의 동시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는 2002년 9월 17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수교회담 재개에 합의한 이후 2004년 5월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와는 양국 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인사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지원 요청과 함께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후원 세력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 대남정책

북한은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대화를 지속하면서,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실리위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국에 대해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을 완화시키

기 위한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하여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합의하는 등 과거보다는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II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

가. 군사정책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군사적으로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군사정책으로 채택한 이래 장기간에 걸친 전쟁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당분간 현재의 군사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원을 군사부문에 우선 배분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지·해·공군 주요전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4년도 국방비를 국가 총예산의 15.5% 수준으로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과 예산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 군사비는 국민총생산(GNI)의 3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북한의 국방비는 국가예산 이외에도 군수경제 운영 체제(제2경제), 무기 수출, 군부대 외화벌이 사업 등 독자적인 군 예산체계 등을 통해 조달되고 있으며, 군수공장이 국유화되어 있는 등 매우 저렴한 군사비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대 군사노선

- ① 전 국토의 요새화
- ② 전 인민의 무장화
- ③ 군 장비의 현대화
- ④ 전 군의 간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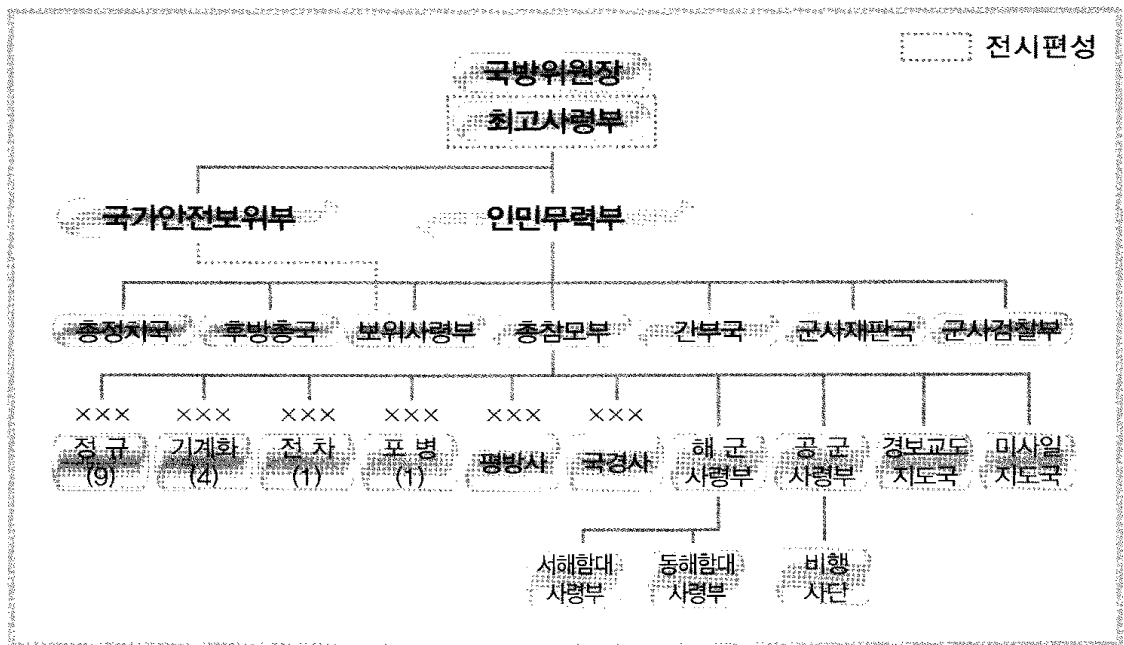
나.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기구

북한의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의 최상위 기관은 국방위원회로서 전반적인 국방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독립기구이며, 그 예하기구로 인민무력부가 편성되어 있으며 군사지휘체제는 도표 1-5과 같다.

1998년 9월 5일의 개정된 헌법(제100조)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으로 강화됨으로써 국가 최고권력기관으로 격상 되었으며, 국방위원장은 ‘정치, 군, 경제역

량의 총체를 지휘 통솔하는 국가 최고의 통수권자'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인민무력부는 군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며, 총정치국은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상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통합군 체제로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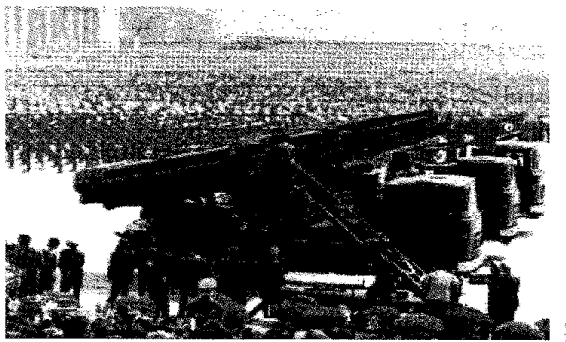
【도표 1-5】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다.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및 배치

(1) 지상군

북한 지상군은 9개 정규군단, 4개 기계화군단, 1개 전차군단, 1개 포병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총 19개의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 240mm 방사포

주요 전투부대는 80여 개 보병사단 및 여단 (교도사단 포함), 30여 개 포병여단, 10여 개 전차여단 및 7개 전차연대, 20여 개 기계화여단, 25개 특수전여단 등 총 170여 개 사단 및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전방에 4개 군단, 그 후방에 1개 전차군단, 2개 기계화군단 및 1개의 포병군단

등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방지역에 추진배치하고 있는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사거리가 우리의 수도권까지 미치고 있어 현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집중사격이 가능하다.

북한군 지상군의 주요장비 보유현황은 도표 1-6과 같다.

【도표 1-6】 북한 지상군의 장비현황

				
전 차 3,700여 대	장갑차 2,100여 대	야포 (방사포 포함) 13,500여 문	방공무기 15,600여 문	도하장비 (K-16/S형 부교) 760/2,200여 대

한편, 전방군단 특수전부대 포함 약 12만 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는 유사시 남한 전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후방지역 교란과 혼란 조성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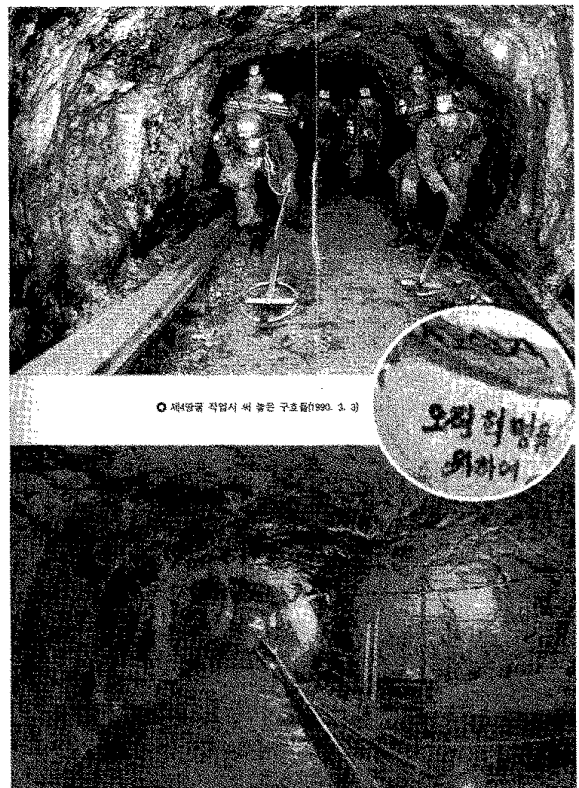
이와 함께 북한군은 전선지역의 주요 접근로상에 위치한 땅굴을 통해 기습공격을 병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군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의 2개 함대와 12개 전대 및 2개의 해상지격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함정 보유현황은 도표 1-7과 같다.

전투함정 중 수상전투함은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의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투함정은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잠수함(정)은 로미오급 및 상어급 잠수함 60여 척과 유고급 잠수정 1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원함정은 상륙함, 고속상륙정, 공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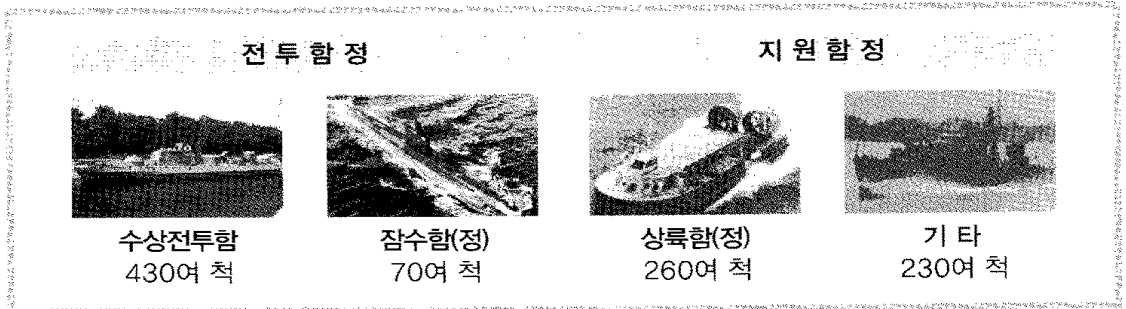


○ 북한이 굴착한 땅굴

양정 등의 상륙용 함정과 소해정, 해상경비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북한 해군은 2개의 저격여단과 공기부양정 130여 척, 고속상륙정 90여 척 등 260여 척의 병력수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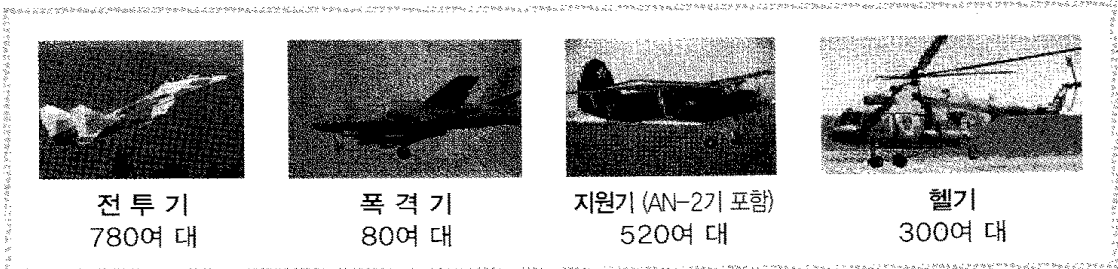
【도표 1-7】 북한 해군의 함정 현황



(3) 공군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 중앙통제 하에 4개 비행사단과 1개의 헬기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기의 약 40%를 전방기지에 배치하고 있다. 항공기 보유현황은 도표 1-8와 같다.

【도표 1-8】 북한 공군의 항공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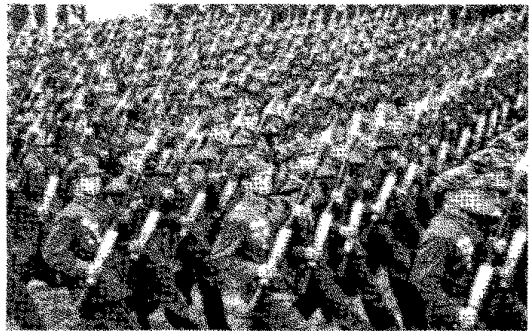


항공기 전력은 MIG-15/17/19/21 전투기와 IL-28 전폭기 등 구 소련제 제 1·2세대 전투기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MIG-23/29 및 SU-25 등 제 3·4세대 전투기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개량형 MIG-21 전투기와 러시아로부터 MI-8 헬기 및 KA-32 헬기를 도입하였다.

북한 공군은 2개의 저격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기 저공으로 아군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약 300여 대의 AN-2기를 갖추고 있다.

(4) 예비전력

북한은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전 인민을 무장화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병영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30%가 동원 대상인 770만여 명의 예비전력은 연 15~30일간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병영체제의 북한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 동원대상인 교도대 62만여 명, 향토예비군 성격의 노농적위대 572만여 명, 고등중학교 군사조직에 해당하는 붉은청년근위대 94만여 명, 기타 준군사부대로서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군수동원총국,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약 42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1) 핵 개발

북한은 1960년대에는 영변에 핵시설을 건설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핵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였다. 한편, 1980년대 이후 5MWe 원자로의 가동 및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하여 핵물질을 확보하는 등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고품실험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연료 주기 :
광석상태의 우라늄이 정련-변환-농축-가공 단계를 거쳐 원자로에서 사용된 후 재처리, 재활용 및 고준위폐기물로 영구 처리 되기까지의 전 과정

현재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1992년 5월의 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kg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은 2002년 12월 핵시설 동결해제 이전에 보관해 왔던 8,000여 개의 폐연료봉을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재처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플루토늄의 확보가 가능한 영변의 5MWe 원자로는 2003년 2월 말부터 계속 가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에 따라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개발을 위해 관련부품을 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표 1-9】 북한 영변의 핵시설



(2) 화학무기

북한은 1961년 말 김일성 주석의 ‘화학화 선언’에 따라 화학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기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여러 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 및 최루성 등 유독작용제 약 2,500~5,000톤을 여러 개의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중·장거리 미사일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 사정거리 300km의 SCUD-B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사정거리 500km에 이르는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작전배치 하였다.

1998년 8월에는 대포동-1호 미사일 운반체 발사실험을 하였으나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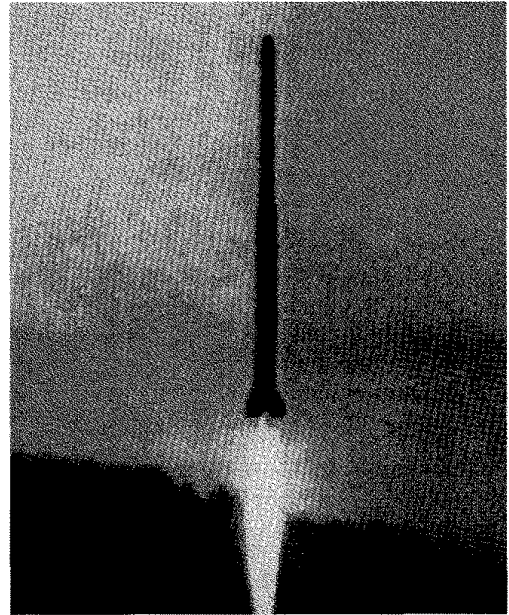
하였다. 그러나 운반체의 엔진연소와 탄체의 다 단계 분리 등 제반기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2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II 주요 군사동향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방문 활동은 현저하게 증가(2002년 24회 → 2003년 50회 → 2004년 53회)하고 있는데, 이는 선군정치의 일환으로 군의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유도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독려활동으로 평가된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군사적 긴장유발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서방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한 후 이를 저지하는 아군 고속정에 선제 기습사격을 가함으로써 ‘서해교전’이 발생하였다. 2001년 11월과 2003년 7월 및 8월에 중부·동부전선에서 아군 경계초소(GP)에 총격을 가하였으며, 2003년 2월에 MIG-19기 1대가 연평도 상공을 침범하였다.

지난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 양측은 6월 15일부터 불법 조업하는 제3국 어선에 대한 정보교환과 경고통신을 실시하고, 전선지역에 설치되었던 시각매개물(선전물, 입간판 등)과 확성기 방송장비를 철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주석 사망 10주년에 남측 조문단의 방북을 우리 정부가 불허했다며 2004년 7월 이후 회담개최에 불응하고 전선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를 중단하였다. 특히 남북장성급회담 이후에도 북한 경비정이 9차례나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서해 접적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 대포동 1호 시험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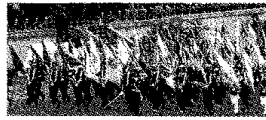
여 백

2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과 국방정책



제1절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구상



제2절

국방정책 기본방향

제1절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구상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평화정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핵심현안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은 우리의 안보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국제테러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대두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는 동시에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포괄하는 국가안보정책을 구체화 하였다.

I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목표



○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담은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다.

국가이익은 국가가 어떠한 안보환경 하에서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내용상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목표와 동일하다.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우리의 국가이익을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등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당면한 대내외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여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I 국가안보 전략기조

정부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전략기조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각 분야별 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였다.

가. 평화번영정책 추진

평화번영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나아가 남북협력의 심화·확대를 통한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모든 갈등과 현안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신뢰우선 원칙과 호혜주의를 추구한다. 셋째, 모든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넷째,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되도록 한다.

나.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적 실용주의 외교는 안보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균형을 취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화, 인권, 주권 등 보편적 가치와 함께 국가적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며,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함께 다자안보대화과 협력정책을 병행 발전시켜 나가며,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의 고유한 특성과 위상을 유지하고, 대외관계에서 협력적·수평적 호혜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되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해 자위적 방위역량의 확보와 국가 간 안보협력관계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자간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며, 도발할 때에는 이를 격퇴하는 데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구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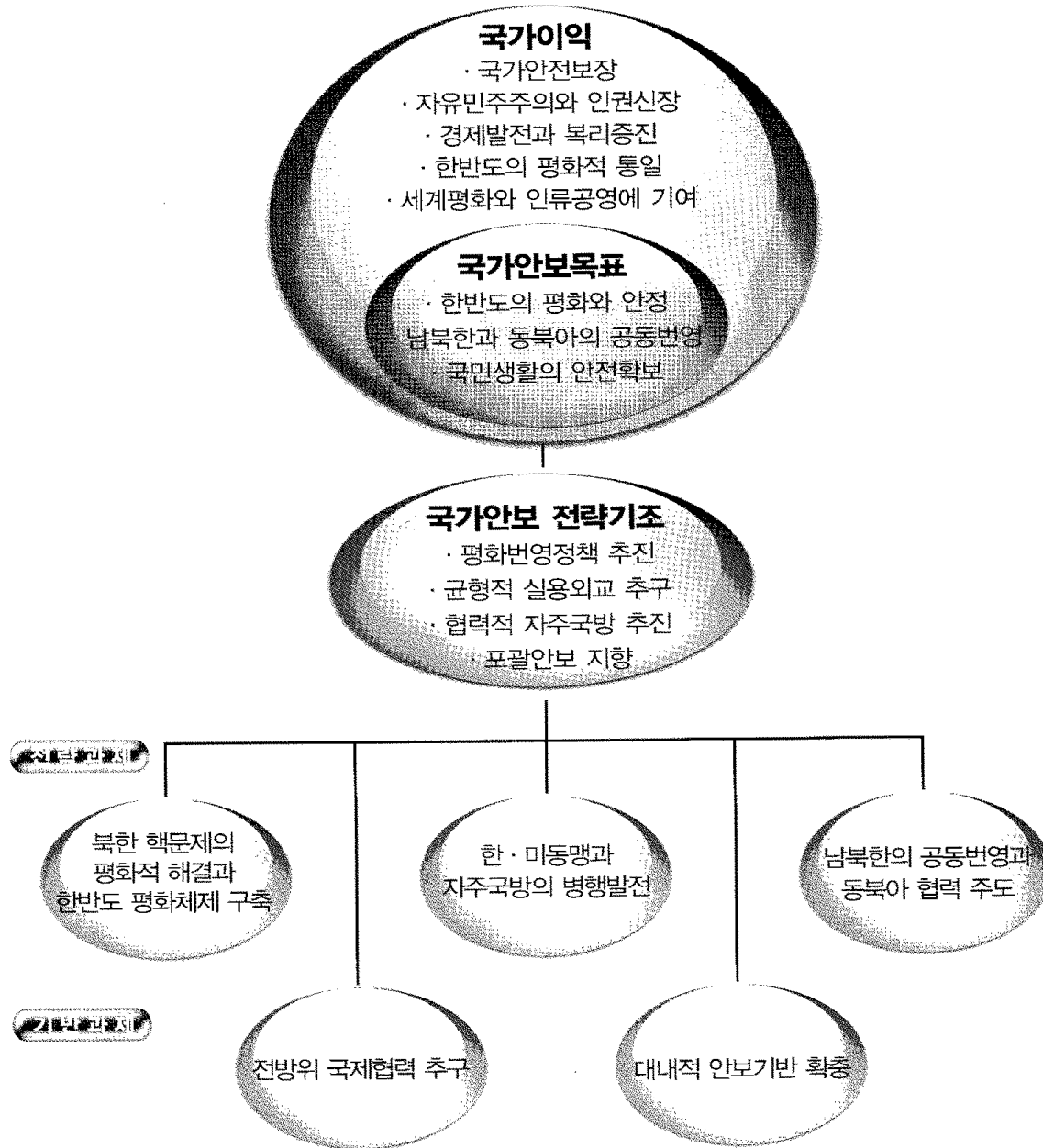
라. 포괄안보 지향

오늘날 각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는 대내외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반 분야에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라는 국가안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부문은 물론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비군사 부문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안보개념인 포괄안보를 지향하고 있다.

III 전략과제 및 기반과제

정부는 국가이익, 국가안보 목표, 국가안보 전략기조에 바탕을 두고 전략과제와 기반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략과제는 당면한 핵심 안보현안이자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관건이 되는 과제로서 참여정부 기간 중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과제이다. 기반과제는 그 자체가 안보정책 목표임과 동시에 전략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과제로서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상시적 과제이다. 이러한 전략과제와 기반과제를 포함한 정부의 안보구상을 정리하면 도표 2-1과 같다.

【도표 2-1】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국방여건 하에서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목표와 국방운영 중점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I 국방목표

국방목표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1994년 3월 10일 개정)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 라 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이룩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라 함은 우리의 국가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인접 국가들과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등 국제사회의 세계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II 국방운영 중점

국방부는 국가안보 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의 중점을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③ 일관된 국방 개혁 추진 ④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으로 설정하여 군의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므로써 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침투나 국지도발, 그리고 테러 등의 군사 및 비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서북해역의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따른 군사적 영향 평가와 군사대비태세를 보강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전쟁억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감시정보·조기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위기관리체제와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연합전투능력과 작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된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테러 유형별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테러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국가 중요시설 및 주한 미군시설에 대한 방호태세와 대테러 작전부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무형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와 신세대 장병의 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신교육 프로그램과 시청각교재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장병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자주 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으로서 우리 안보에 대한 자주적 역량을 갖추어 나갈 때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자주국방’을 국방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설정하고 “참여정부 임기 내에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를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의 기본축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한·미동맹관계를 주한미군 재조정 등 최근의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억제능력을 조기에 확충하는 동시에, 미래 불특정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군 구조 개편과 합참의 기능강화를 통해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하고 합동성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예화·효율화된 군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정 국방비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소요되는 국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경제를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다. 일관된 국방개혁 추진

군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자기 평가와 개혁을 통하여 군사적 대응태세와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혁신 노력에 적극 부응하여 국방 제분야에 걸쳐 개혁과제를 선정,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본부의 현역 편제 조정을 통해 문민화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국방획득제도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식별하고 전력증강 관련 기능을 통합한 방위사업청(가칭)을 신설하여 획득업무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체제를 정착시키고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인사운용의 합리성·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병영시설과 군 숙소 개선 등 병영환경과 복지여건을 향상하고, 각종 처우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라.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아무리 첨단무기와 장비로 무장된 강력한 군대라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스스로 내부개혁을 통해 바람직한 군대문화를 발전·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투위주의 사고와 가치관을 정립한 가운데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정신개혁과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군대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개방성·투명성이 보장되는 「열린 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고객지향성을 제고해 나가며,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국방현안과 국민적 관심사항을 적극 공개하는 한편, 국방정책 발전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민의 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즉, 국가적 재난관리 지원을 군의 기본임무로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체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군사활동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군 환경시설 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 백

3

평화 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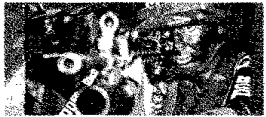
제1절

군사력 운용 및 보유전력



제2절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운용



제3절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제4절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



제5절

동원 및 향토방위작전태세

제1절 군사력 운용 및 보유전력

우리는 일관된 평화번영 및 통일정책으로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전쟁을 억제하고 있으며, 적의 무력도발에 대비하여 군사전력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재조정에 따라 한국방어에 있어서 우리 군의 방위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보유전력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I 우리 군의 군사력 운용 개념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 대북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전략의 무용성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조성해 나가고, 주변국과는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적의 무력도발과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전쟁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력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한·미연합전력으로 초전에 적 주력을 격퇴하여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고 반드시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상정한 방어 목적의 한미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국의 방위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합참의 독자적인 전쟁기획·계획 수립 및 작전수행을 위한 기능과 조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II 각군별 보유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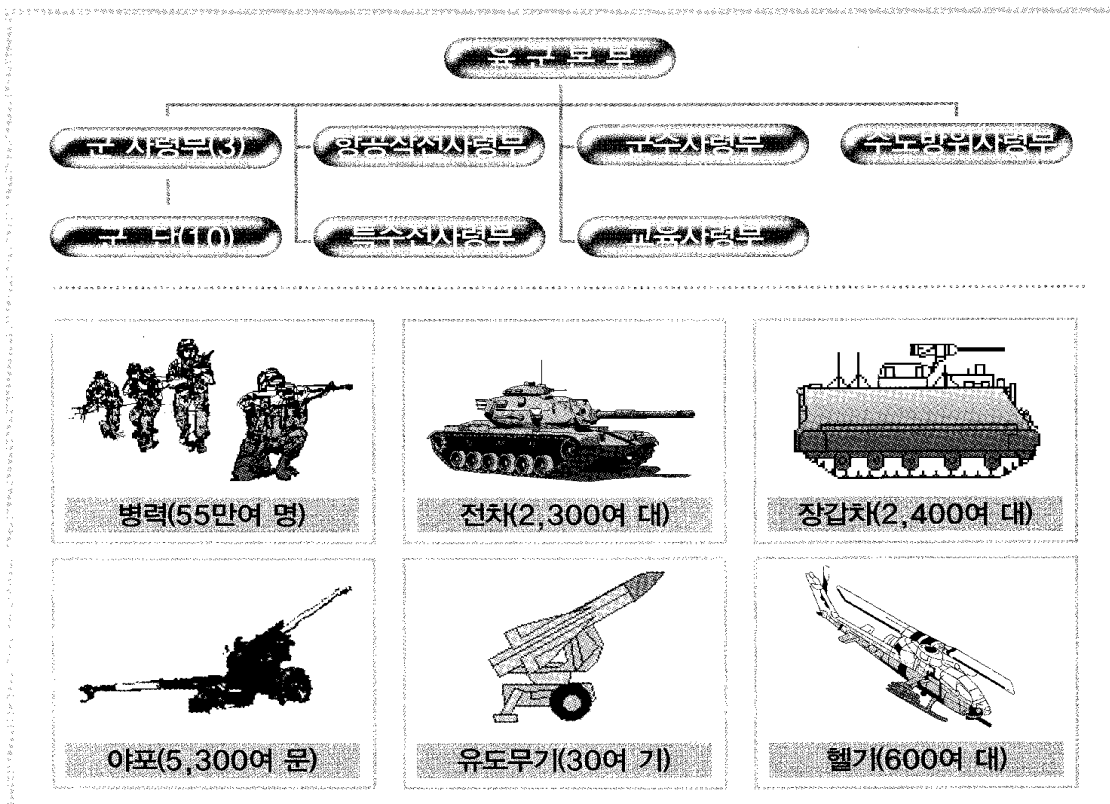
가. 육군

육군은 평시에는 경계작전 및 교육훈련, 전투준비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모든 지상전에서 승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평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여 세계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본부와 3개 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과 장비 현황은 도표 3-1과 같다.

1군과 3군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수도권을 포함하는 전방 책임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2군은 1군·3군 후방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유지 지원 및 중요시설 방호 등 수도권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특수전사령부는 첩보수집과 아군의 화력유도 및 기타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작전사령부는 다양한 기종의 헬기를 운용하여 기동부대에 대한 화력지원과 공중수송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도표 3-1】 육군의 구성과 보유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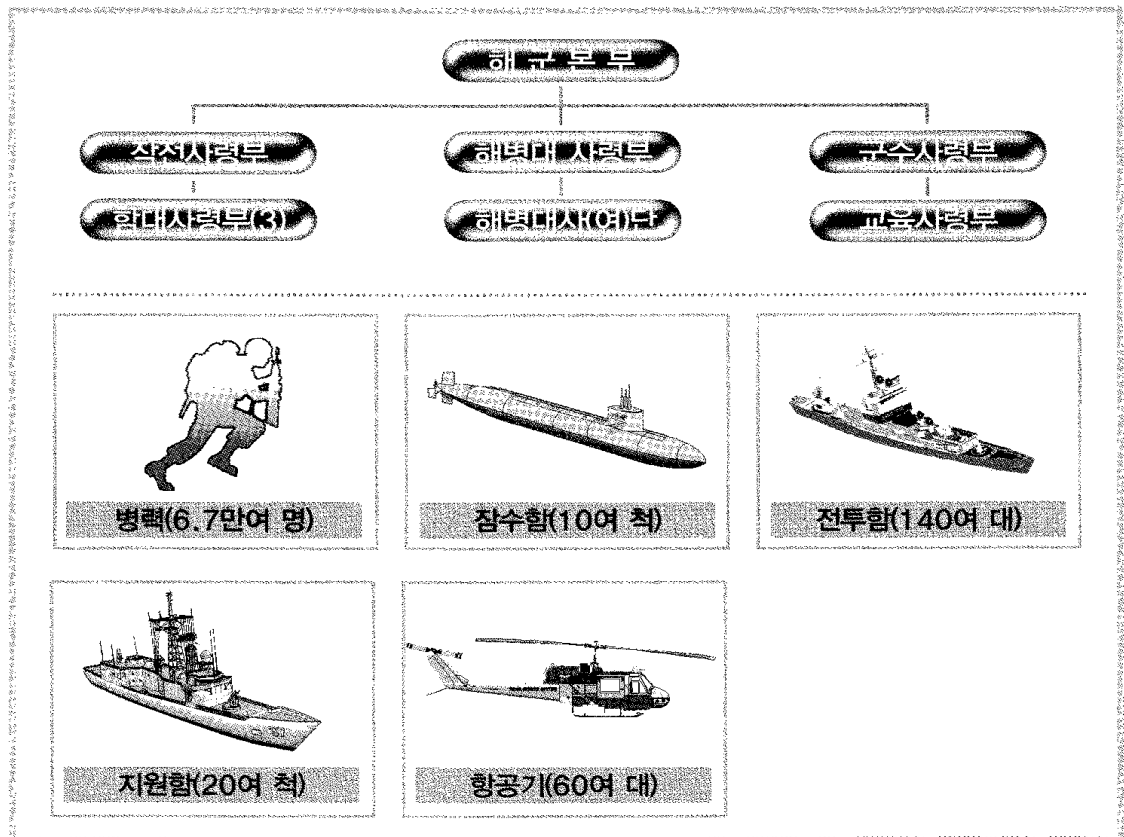
나. 해군

해군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해양에서의 국가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며, 국가 대외정책 지원과 국위선양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전시에는 해양을 통제하여 우리의 해양활동은 보장하되, 적의 해양활동은 거부하고, 국가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며, 적의 측방과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을 수행한다.

해군은 해군본부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기타 지원 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과 장비 현황은 도표 3-2와 같다.

작전사령부는 해상작전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며 각종 함정, 항공기를 운용하여 잠수함전, 대잠수함전, 기뢰전, 상륙전, 구조전, 특수전 등을 수행한다. 예하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정)을 운용하여 책임해역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적의 측방 및 후방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수행하며, 동서 양해안으로 적 전투력 분산 강요 및 수도 서울 서측방 방호와 서북 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도표 3-2】 해군의 구성과 보유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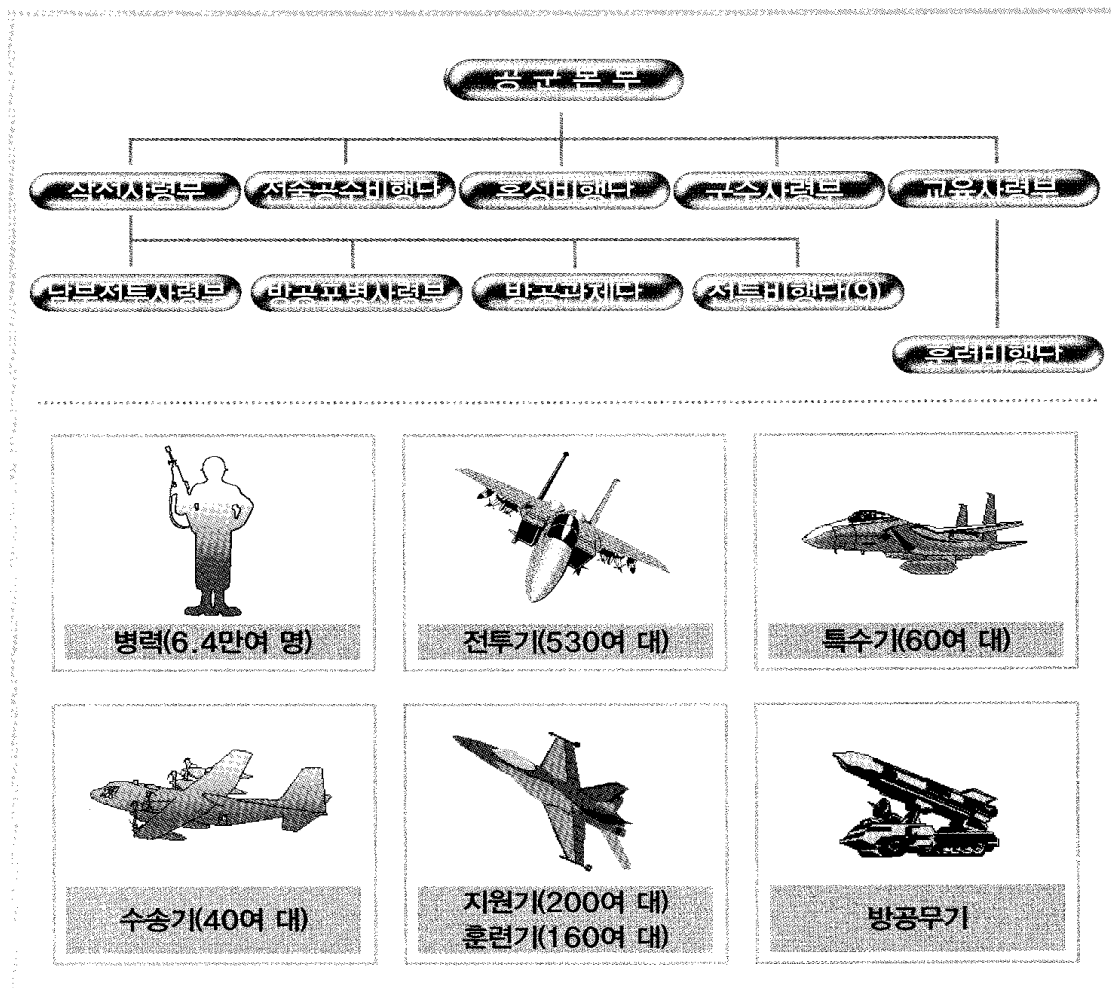


다. 공군

공군은 평시에는 적의 징후를 공중감시하고, 적이 도발할 경우에는 응징정보복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시에는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적이 공중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며 적의 주요 전력과 잠재 전력을 파괴하여 전쟁수행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지상군과 해군의 작전 지원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고, 총 12개 비행단이 공군본부, 작전사령부, 교육사령부 예하에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과 장비 현황은 도표 3-3과 같다.

【도표 3-3】 공군의 구성과 보유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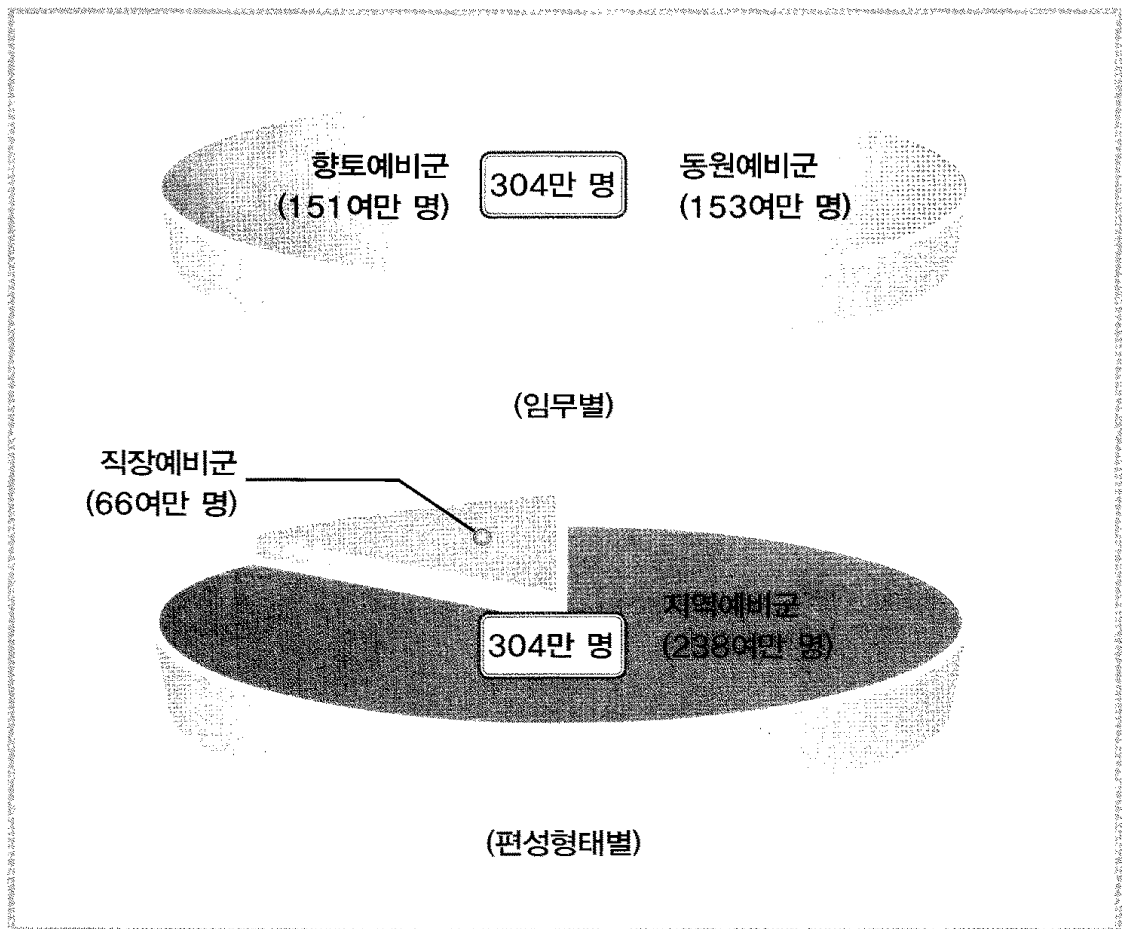
작전사령부는 다양한 항공기를 운용하여 공세 및 방어 제공작전, 전략 공격작전, 항공차단작전, 지상 및 해상작전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 탐 색구조작전, 수송작전 등의 항공작전을 수행한다.

라. 예비전력

예비군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에는 현역 군부대의 증·창설이나 손실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로서 현역과 동일한 전투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예비군은 약 304만 명으로, 각 지역 예비군 부대와 직장예비군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예비군의 편성은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에는 군 인사법에 의거 현역 정년까지, 군복무를 필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은 군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지역 및 직장예비군 부대 편성요원으로 운용되며, 예비군 현황은 도표 3-4와 같다.

【도표 3-4】 예비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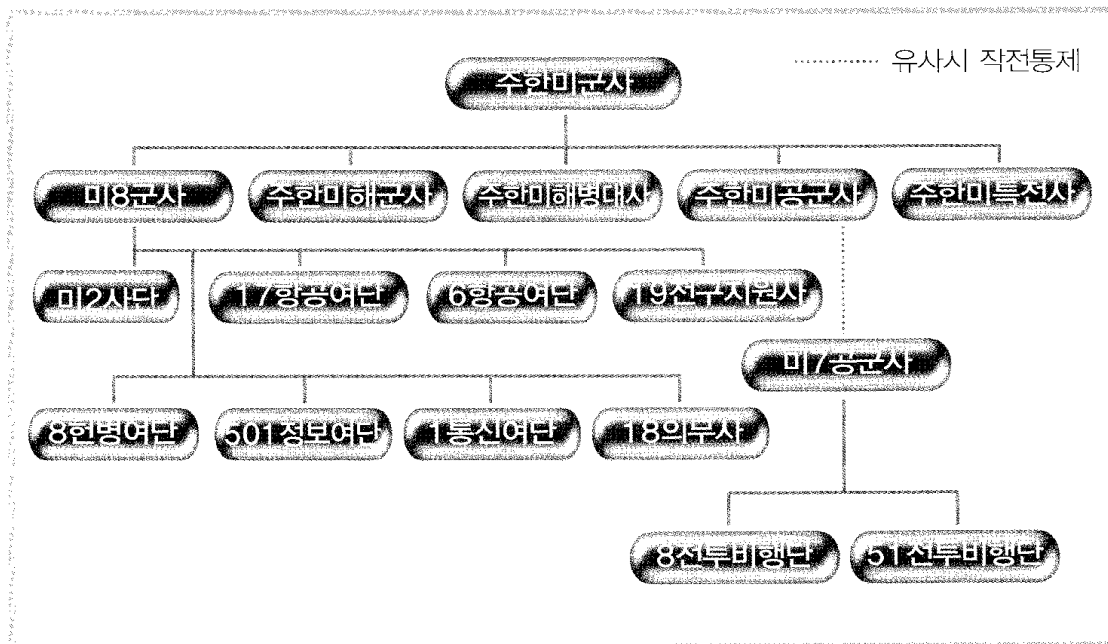
제2절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운용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유사시 한국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해 69만여명 규모의 전력이 증원된다.

I 주한미군 현황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그 예하 사령부로는 미8군사령부, 주한 미해군사령부, 주한 미해병대사령부, 주한 미공군사령부 및 주한 미특전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한미군사 조직은 도표 3-5와 같다.

【도표 3-5】 주한미군사 조직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은 도표 3-6과 같이 2사단과 2개의 항공여단을 주축으로 140여 대의 신형 M1A1 전차, 170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하여 30여 문의 155밀리 자주곡사포, 30여 문의 다연장로켓과 패트리 어트를 포함한 지대공 유도탄, 70여 대의 아파치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은 한·미간 2008년까지 12,500명을 3단계로 감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10억 불을 투자해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도표 3-6】 주한미군 전력



ATACMS :
육군 전술유도무기체계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육군에서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로서 사거리는
최대 300km에 달한다

II 증원전력

유사시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이러한 미 증원전력은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전개되며, 이러한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는 '신속억제방안(FDO)', '전투력증강(FMP)'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신속억제방안'은 전쟁발발 이전 위기 시에 시행되는 외교·정치·경제·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5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력

TPFDD :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
유엔사/연합사 작전계획
시행을 위해 연합사령관
이 요구하는 미 증원부
대의 부대전개목록 및
재원을 말한다

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FMP :
Force Module
Package

증강'은 '신속억제방안' 등을 통해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로, 긴급전개 항공기, 항모전투단 등 주요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 증원 전력, "TPFDD"

미 증원전력은 미군의 전략기동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전략기동이란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군대와 장비를 운반하는 것으로 전구(theater)와 전구간의 수송을 말하며, 주 요소로는 항공수송, 선박수송, 분쟁 예상지역에 대한 장비와 전쟁지속물자의 사전배치 등이 속한다.

미 증원전력에는 3종류가 있는데 첫째, 신속억제방안(Flexible Deterrence Option ; FDO)에 의한 전력이다. 이는 전쟁억제에 목표를 두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 고조시 또는 위기시에 시행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5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감시·정찰용 전력이 포함한다.

둘째, 전투력 증강(Force Module Package ; FMP)에 의한 전력이 있다. 이는 FDO를 통한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초전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 부대를 증원하는 계획으로서, 여기에는 항모전투전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FDO와 FMP전력을 포함하는 시차별부대전개제원(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e : TPFDD)에 의한 증원전력이 있다. 여기에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In-Place)전력, 상황발생시 시차별로 전개하도록 되어 있는 (Pre-Planned)전력, 요청시 추가로 전개되는(On-Call)전력 및 국외지원(Off-Peninsula)전력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이러한 증원전력에는 유사시 개진 초 전방에 밀집한 적 포병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 최선에 전투기를 탑재하고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수 개의 항모전투단, 공중우세 확보, 방공, 적지타격을 위한 공중전력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해군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절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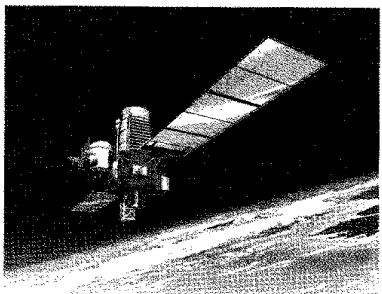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비해 양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대남위협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군사적 위협은 물론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I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유지

우리 군은 독자적인 신호 및 영상 수집체계와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이용하여 북한군의 활동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각종 신호·영상장비 등 정찰·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북한군의 전선지역으로부터 후방지역에 이르기까지 포병 및 미사일부대, 기계화 부대 등 주요 전력의 이동 및 훈련 상황을 추적·감시하는 한편, 해상과 공중에서도 자동화된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해상 및 공중 활동을 실시간에 감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거나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조기에 종결하여 전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위기관리 및 협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평상시 연합위기관리협의체를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발생 가능한 위기유형별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정기적인 연습과 수시 훈련을 통하여 위기관리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국방부, 합참, 그리고 연합사의 위기조치기구간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상황과악과 효과적인 조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휘소 자동화체제의 연동 및 성능 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정찰위성

II 침투·국지도발 대비태세

북한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1999년 연평해전, 2001년 북한상선 영해침범, 2002년 서해교전을 비롯한 북방한계선(NLL) 침범, GP 총격도발 등 끊임없는 대남도발을 자행해 왔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과 침투세력을 24시간 추적·감시함은 물론, 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 관할지역에 함정 및 잠수함,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북해역에서의 의도적 도발에 대비하여 명확한 작전지침에 따른 즉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와 해안 및 강안 경계태세를 과학화된 감시장비로 보강하고, 영공침범에 대비한 대응작전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2004년 2월 대통령 주재 하에 통합방위중앙회의를 개최하여 총력안보를 결의하였으며, 지상 협동훈련, 화랑훈련, 대침투종합훈련 등을 통한 통합방위작전 절차의 숙달과 함께,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대피 및 제독, 도시 기반시설의 방호, 시설복구 등 후방지역 작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III 전면전 대비태세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즉,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개전 초 수도권에 대한 위협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정보 및 정밀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적의 핵심전력을 타격하여 조기에 제거하는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전개념 하에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독수리 연습(FE) 등 각종 연합 및 합동훈련을 통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 군사력의 수적 우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질적 능력 확보의 일환으로 한국형 대형구축함(KDX-II), K1A1 전차, 신궁, 천마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전력화하는 한편, 첨단화된 컴퓨터 장비를 활용하여 작전지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휘소 자동화체계 등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NLL :

Nothern Limit Line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 정하기 위하여 53.8월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선으로 동해는 군사분계선을, 서해는 서북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GP :

Guard Post

비무장 지대안에 설치된 경계초소

화생방위협에 대한 대피태세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화생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99년 국군 화생방 방호 사령부 창설, 화학부대 편성보강 및 장비 대폭 증강, 미 화생방부대 조기전개, 민수용 방독면 지속확보, 도심지역 유독가스 발생사고에 대비한 긴급출동 부대 편성 등 화생방 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UF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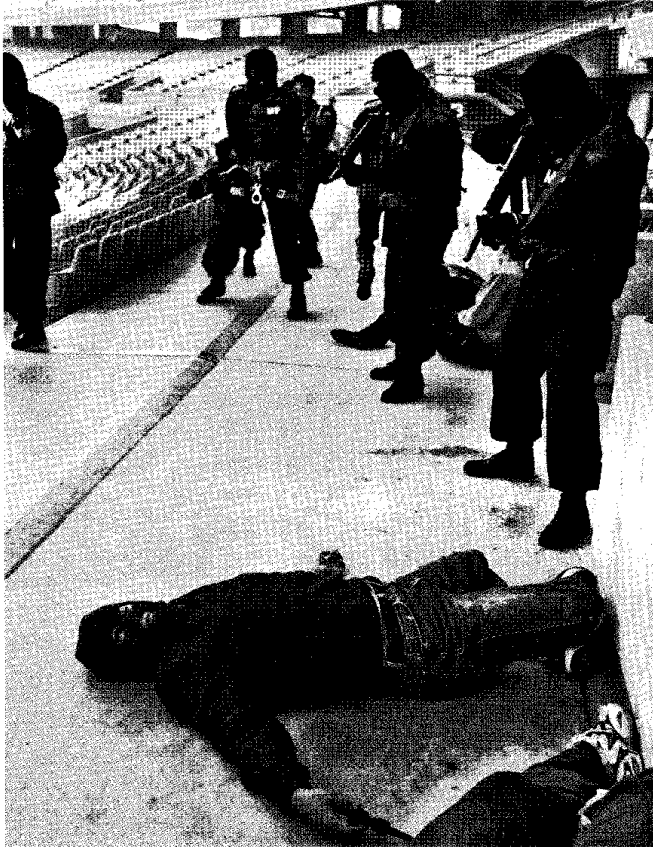
Ulchi Focus Lens

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시차별 부대전개지원'에 의해 작전지역으로 도착하는 미 증원전력을 수용, 대기, 전방이동, 통합을 통하여 지휘관의 작전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과정

IV 테러 대비태세

탈냉전 시대 국제사회는 9·11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 전담부대 테러대비 훈련

우리 군은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를 계기로 테러대비 종합 발전계획을 추진하여 대비계획을 보완하고 테러 전담부대 편성, 대테러 조직 및 장비 보강 등 테러 대비태세를 발전시켜 왔다. 화생방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에 정찰 및 제독임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테러 전담요원인 대테러 특공대, 폭발물 및 오염사고 처리반, 저격수 요원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정보원·경찰 등 대테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어떠한 형태의 테러도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V 장병 정신무장 강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 및 대적관이 확립되고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국가관을 정립하고, 우리의 안보상황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안보관 및 대적관을 확립하며, 군인에게 필요한 정신적 요소와 행동규범을 실천할 수 있는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화된 시대상황과 신세대 장병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병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느끼고 신념화·행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과학화 시대에 부응한 교육을 위해 '사이버 정신교육 체제'를 발전시키고, 정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 전용 위성 TV 방송(2005.10.1. 개국 예정)을 통한 전군 동시교육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사이버 정신교육

제4절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

우리 군은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 및 전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연합전시증원(RSOI) 및 독수리(FE) 연습, 태극 연습, 호국 훈련 등 다양한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군의 전쟁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I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 한·미 연합 UFL연습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한국 방위를 위해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정부 및 군사분야 종합지휘소 연습으로서, 정부차원의 군사지원을 위한 ‘을지연습’ 과 군사차원의 작전계획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포커스렌즈연습’ 을 통합하여 1976년부터 컴퓨터 모의방법을 적용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이다.

UFL :
Ulchi Focus Lens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간 정부연습은 행정기관은 물론 주요 산업체 등도 참가하여 범정부차원의 전쟁대비 훈련을 실시하며, 군은 한·미 연합으로 위기관리 및 방위연습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와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은 전시 한반도에 증원될 미 증원군이 최초 한반도 도착에서부터 전방으로 이동하여 전장으로 통합되는 일련의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 군수지원, 동원 및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연합전시증원 연습은 매년 3월에 실시되며 한국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작전사급 이상 부대와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미군 증원부대 등이 참가한다.

다. 독수리(FE) 연습

독수리(FE) 연습은 한·미 연합 및 합동 공·지·해 작전과 연합 특수 작전 및 후방작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연합 및 합동 야외 기동 연습이다. 이 연습은 합동참모본부, 연합사령부, 각 작전사령부가 참가하며, 1961년부터 매년 10월에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2002년도 이후부터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연계하여 3월에 실시하고 있다.

FE :
Foil Eagle

1부 연습에서는 후방지역 주요시설 방호작전 및 연합 상륙작전, 연합 항공작전을 실시하며, 2부에는 해병 상륙단을 포함한 군단급 야외기동훈련 (FTX)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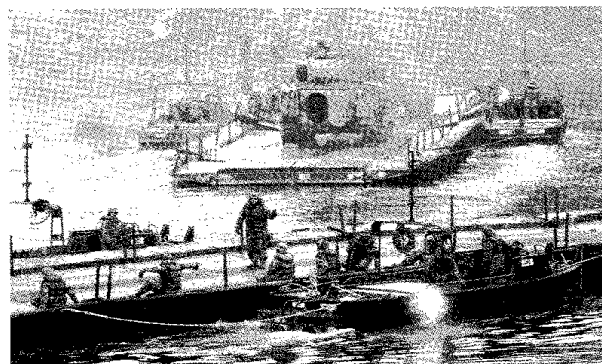
FTX :
Field Training Exercise

CPX :
CommandPost Exercise

라. 태극 연습

태극 연습은 전시에 대비하여 합동참모 본부의 전쟁기획 및 계획 수립 능력을 배양하고, 작전지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5월에 실시해 온 지휘소 연습(CPX)이다.

합참은 태극 연습을 통해 전시 임무 및 기능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전투위주의 사고와 합동성을 강화시켜 합동작전수행체 제, 대화력전 및 중심작전 수행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 연합 전차 도하훈련

마. 호국 훈련

호국훈련은 군단급 부대의 작계시행능력 제고와 대부대 합동작전 및 통합전투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주관 하에 작전사가 통제하여 1996년부터 연례적



○ 해병 상륙훈련

으로 실시하는 대부대 야외기동훈련(FTX)이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참가하여 해안 및 내륙 축선별로 국지도발 대비훈련과 전면전 대비훈련을 실시한다. 호국훈련을 통해 작전적 수준의 합동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공세적 방어태세를 강화하며, 신형장비 및 운용교리의 실효성 등도 검증하고 있다.

바. 화랑 훈련

화랑훈련은 후방지역 통합방위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1977~1981년까지 3군사령부 통제 하에 실시되던 수도권 대침투 종합훈련을 전군으로 확대 발전시켜 통합방위본부 주관 하에 민·관·군 전 작전요소가 참가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은 서울 권역, 대전·충청·전라·제주 권역,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전·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 능력 증대를 목표로 하여 주민신고 활성화,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확립,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전·평시 작계시행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화생방 방호훈련



○ 장비 제독훈련

II 각 군별 훈련

가. 육군

육군은 평시에 적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완전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전시에는 모든 지상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하고, 훈련하는 방법대로 싸우는'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부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은 부대훈련의 과학화를 위하여 전투지휘훈련과 과학화 전투훈련, 그리고 모의장비형 훈련 등의 훈련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전장실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여 교육훈련의 실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전투지휘훈련(BCTP)은 자체 개발한 「창조21 모델」과 「화랑21 모델」을 적용하여 군단, 사단, 연대 및 대대단위로 해당부대 지휘관 및 참모의 전투지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지휘절차 숙달, 통합전투력 운용능력의 제고, 전장체험 및 야전예규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BCTP :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과학화 전투훈련은 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실병력과 실장비가 과학적 훈련기법을 이용하여, 전문 대항군을 운용하여 실시하는 쌍방 자유 기동훈련이다. 현재는 중대급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인제·홍천 훈련장에서 대대급 훈련을 시행하고 2006년부터 상비사단별로 이동식 장비를 활용하여 중대급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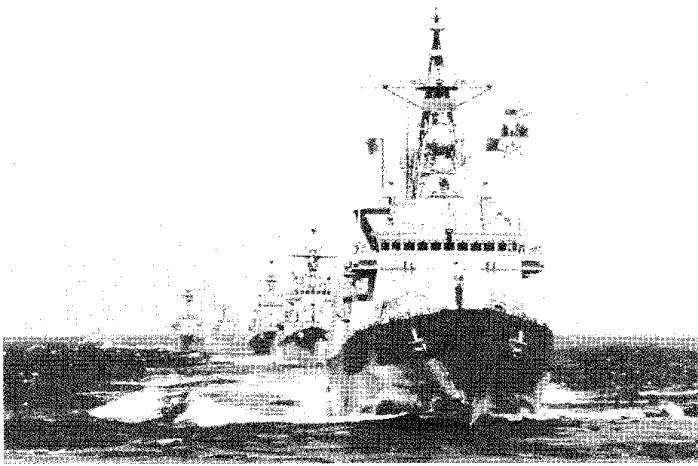
◎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훈련

나. 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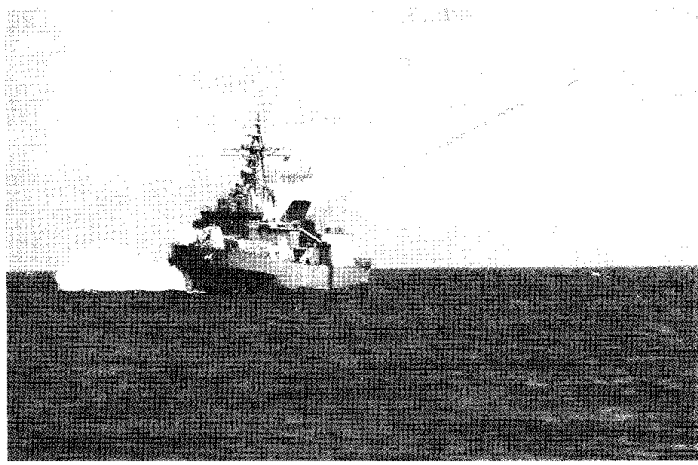
해군은 동해·서해·남해 각 해역별로 전장환경에 부합된 실전적 부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훈련은 함대 및 전투전단 해상기동훈련과 해사생도 순항훈련 등이 있다.

해상기동훈련은 유사시 적 해상전력을 조기에 격멸하여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 훈련으로서 최신에 구축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 입체전력이 참가하여 연평균 10여 회 실시한다.

해사생도 순항훈련은 해사생도로 하여금 실무 장교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방국에 대한 친선방문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기 위



○ 함대 기동훈련



○ 대함 미사일 발사훈련

한 훈련으로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0~150여 일 간에 걸쳐 진행된다.

해군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은 연합 방위체제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과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국 간 연합훈련으로 구분한다.

한·미 연합훈련은 대잠해양탐색 훈련, 잠수함 훈련, 기뢰전 훈련, 구조전 훈련, 특수전 훈련, 폭발물 처리 훈련 등에 참가하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해군은 다국 간 연합훈련인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 서태평양 우방국 15개국과 군사교류 및 협력관

계를 증진하는 한편, 선진 해군의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다. 공군

공군은 평시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응정보복 능력을 구비하며, 적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훈련은 실제전장과 전투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전시에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지상군과 해군의 작전수행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 주도권을 조기에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의 영공 침범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제공훈련은 적 침투전술을 적용한 가상적기를 대상으로 요격기 및 방공포병 부대가 참가하여 침투하는 적기를 가능한 원거리에서 탐지·식별·요격·격파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적의 군사력과 전쟁수행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제공훈련 및 항

공차단 훈련은 전술표적을 대상으로 공군 단독 또는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과 지대지 중심 타격 훈련을 병행하고 있으며, 실시간 긴급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긴급 항공차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상군 및 해군 지원을 위한 근접항공지원훈련은 전천후 정밀공격이 가능한 전투기와 야시장비를 활용하여, 지·해상의 가상표적에 대하여 주·야간 근접항공지원 및 대함 공격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전적 공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합동 실무장 폭격훈련, 야간 폭격훈련, 정밀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서해대교 상공 F-16편대 비행

라. 해병대

해병대는 투철한 해병대 정신 함양과 상승불패의 정예 전투원 육성을 목표로 정신전력, 전투체력, 전투사격, 화생방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각종 기동·관측 장비의 시뮬레이터와 제대별 위게임 모델 등을 적용한 과학화된 훈련과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공·지·해 합동훈련, 군단 야외 기동훈련 등 합동훈련과 연합 지상훈련, 연합 및 합동 상륙훈련 등을 통해 통합전투력 수행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제5절 동원 및 향토방위작전태세

오늘날 선진 각국은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상비전력을 긴 요전력 위주로 운용하면서, 예비전력의 비중을 점차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장차전 양상은 국가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는 국가총력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비전력의 효율적인 운용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향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제한된 국방재원과 동원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비전력 건설 방향과 연계된 정예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향토방위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예비군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동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I 전시대비 동원태세

가. 인원동원

인원동원에는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 등이 있다. 병력동원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군부대 확장(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에 소요되는 병력을 동원하여 군부대 전투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병력동원은 인원동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전시 병력동원의 효율성 보장을 위해 자원관리와 동원병력 호송 및 통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전시근로소집은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보급품과 탄약 운반 등 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전시근로소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전시근로소집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절차를 정립하고, 소집부대별로 분산 운용하던 전시근로자도 전시근로부대에 통합함으로써 운용의 융통성을 보장하였다.

기술인력동원은 장비를 운용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기술인력동원은 기존에 235종의 국가기술자격·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동원지정하던 것을 신기술 및 정보화분야에서 30여 종의 첨단 기술·면허를 발굴하여 추가 동원지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나. 물자동원

물자동원은 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자, 장비, 시설, 업체 등의 자원을 적기적소에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자원에 따라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통신동원 등으로 구분한다.

산업동원은 식품·피복류·유류·축성자재 등의 물자, 생산 및 정비업체, 홍보매체, 병원 등을 대상으로 군 요구규격에 적합한 품목을 동원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 요구 규격을 완화하여 민수용 물자로 대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대와 부서 간에 산업동원정보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송동원은 유사시에 군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수송용 장비와 정비업체, 운송 및 하역업체 등을 사용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는 것이다. 적기동원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부족한 차량은 대체차종을 사용동원하도록 하고, 자원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대체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원방법을 개선하였다.

건설동원은 군이 필요로 하는 건물, 토지,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정비업체, 건설업체 등을 사용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는 것이다. 동원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해당 시·도에 장비가 부족할 경우 유사장비로 대체하여 지정하도록 개선하였다.

통신동원은 일반통신(국제·국내회선)과 위성통신 회선, 정보통신업체를 사용동원 또는 통제운영 하는 것으로서, 전시 군 통신망을 신속히 지원하여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용동원

일정기간 동원하여 사용하다가 동원 해제 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장비를 동원할 때 적용

통제운영

동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 수리, 가공, 유통과정들을 통제하는 것이며, 통제되는 부분 외에는 업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업체동원 등에 적용

II 향토방위작전태세

향토방위작전은 전·평시에 특정지역 내에 침투한 적을 조기에 소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여 실시하는 민·관·군 통합 작전이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된 이래 30여 년 간 89회에 걸쳐 연인원 약 400여만 명이 동원되어 침투한 간첩 및 무장공비 85명을 사살하고, 14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린 바 있다.

전·평시의 향토방위작전 수행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예비군 전투장비 현대화와 향방물자를 보충해 나가는 한편, 예비군육성 주체별 지원책임과 지원사항, 체계적인 육성 계획 수립 및 업무 처리절차 등을 규정 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 예비군의 대침투작전 참가

III 예비군 자원관리

지역예비군부대는 책임지역의 예비군 자원관리 및 향토방위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전국의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대가 편성되어 있고, 시·군·구 단위로는 별도의 기동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소속 직장의 예비군자원 수에 따라 여단으로부터 분대까지 편성하고 있다. 중대급 이상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일반직장과 분대급 이상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국가보안목표의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의무적으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방병무청과 예비군부대 간 인터넷을 통한 예비군 자원관리 및 일일 결산체계가 구축되어 각급 예비군부대는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예비

군 자원 현황, 전·출입자 및 출·귀국자 현황은 물론, 신규 편성자·신상변동자 등 예비군 자원관리에 필요한 각종 전산 명부(18종)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관련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IV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은 ‘동원절차 숙달 및 동원 후 전투력발휘 보장’ 과 ‘향토방위작전 능력 배양’ 에 목표를 두고 실시된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는 가운데 교육훈련의 수준과 강도를 높여 즉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

과거 연간 4시간 소집점검훈련만 실시하던 전역 1년차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3박 4일간 실시하던 동원훈련기간을 2박 3일로 조정하고 또한 8년차에게만 적용되던 훈련면제대상을 7년차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병역의무를 경감시키는 한편, 지정된 동원소집부대를 유지한 가운데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전투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예비군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시간은 도표 3-7과 같다.

【도표 3-7】 예비군 대상별 훈련기간

(단위 : 시간)

구분	계	동원 훈련	동원미참 훈련	향방기본 훈련	향방작계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신규전역자(간부, 병)	100						100
병	1~4년차 동원지정자	100	28(2박3일)				72
	동원 미지정자	100		24	12		64
	5~6년차(지정자)	68		8(8)	12(6)	(4)	48
	7~8년차	68					68
	동원지정자	100	28(2박3일)				72
간부	1~6년차 동원장교	100	28(2박3일)				72
	미지정자 부사관	100		24	12		64
	7~8년차	68					68

예비군 훈련대상자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훈련소집 통지로 훈련소집 방법을 개선하여 동원훈련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예비군 스스로 희망하는 일정과 훈련장소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전적이면서 신세대 취향에 맞도록 마일즈 장비와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훈련방법을 발전시켜 적용하고 있다.

가.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군부대에 동원지정된 예비군 중 1~4년차 자원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에 기초하여 부대 중·창설절차 숙달 훈련,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훈련, 전시 작전계획 시행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나. 동원미참자훈련

동원미참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와 동원훈련미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병과 및 주특기 훈련에 중점을 둬으로써 전시 군부대에 충원되어 손실보충자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훈련방법을 보완하여 육군출신 예비군은 현역복무 당시 해당병과 부대로 입소하여 훈련하며, 해·공군 출신예비군은 해당 소속 군부대로 입영하여 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 향방훈련

향방훈련은 향방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으로 구분된다. 향방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대임무수행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숙달함으로써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향방작계훈련은 1~4년차 병 자원 중 동원미지정자, 5~6년차 병 자원, 1~6년차 동원 미지정 부사관 자원을 대상으로 향방작계 시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하되, 해당지역 작전 부대장 통제 하에 독수리 훈련·화랑훈련 등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민·관·군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 백

4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제1절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과 추진방향



제2절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제3절

대외 군사관계 발전



제4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



제5절

자위적 방위역량 건설



제6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제7절

중기계획과 국방예산

제1절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과 추진방향

협력적 자주국방은 우리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서, 정부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국가안보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통령의 전략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연계한 자위적 방위역량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I 추진배경과 개념

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배경

우리는 창군 이래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안보환경, 가용 국방재원, 국민적 관심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은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의한 급속한 전력증강과 1968년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이 진행되던 1971년부터 본격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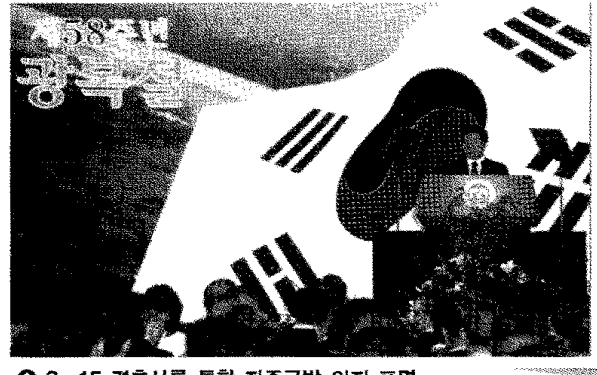
이후 우리 군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율곡사업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방위력을 확보하고 합참의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1994년에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등 전력 증강, 작전수행능력과 연합지휘체제 발전 측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국방비의 하향배분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전력의 군사위협이 증대됨으로써 아직까지 대북억제를 주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

전략과제 :
당면한 핵심안보현안이자 국가안보목표 달성에 관건이 되는 과제로서 참여정부 기간중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과제

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회 일부에서 안보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등 안보 취약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국력신장에 부합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개발,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국군의 방위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가 한반도 안보에 주체적 당사자가 되겠다는 국가의지의 표현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 날 치사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표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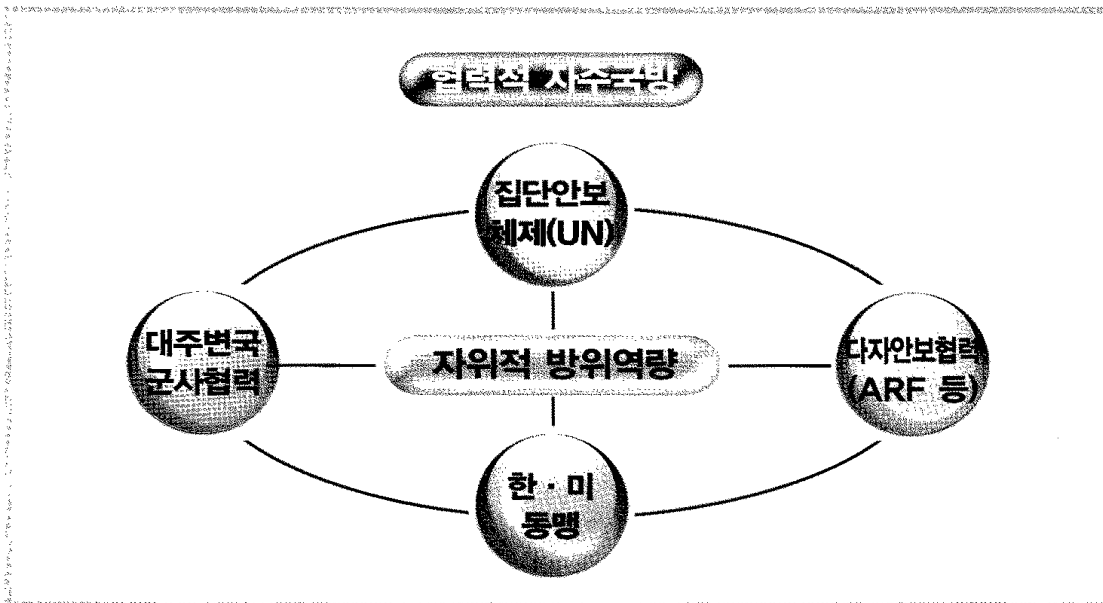


○ 8·15 경축사를 통한 자주국방 의지 표명
 “저는 저의 임기동안,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개념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군사협력과 집단안보체제 등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하는 경우 이를 격퇴하는 데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구비한다는 것이다.

【도표 4-1】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도



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의미

(1) 보편적 국방정책인 자주국방

모든 주권국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의 옹호 및 증진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주국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자국에 대한 제반 안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자주국방을 국방의 기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대만·호주·캐나다 등 미국과 동맹이나 긴밀한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자주국방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국방백서 등 공개문서에 명문화하고 있다.

즉, 자주국방은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 국방정책이며, 우리의 자주국방 또한 국가 주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수호할 수 있는 주체적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국가의 지 구현의 일환일 것이다.

(2) 국가간 협력관계를 안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현대의 자주국방은 국가 간 협력관계를 안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의미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 또한 자위적 방위역량의 확보와 안보협력관계의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 간 제반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순수한 자국의 능력만으로는 국가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여러 나라와 동맹 또는 안보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자주국방 기치 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



여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에는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 노력과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관계를 통해 다중적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3) 공고한 한·미동맹 유지·발전을 전제

한국이 처한 지·전략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동맹전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한 안보상황과 주변 강대국을 고려할 때,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 수호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외교·경제·기술협력의 동반자였으며, 한·미동맹관계의 바탕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안보이익을 추구해 왔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발전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안보요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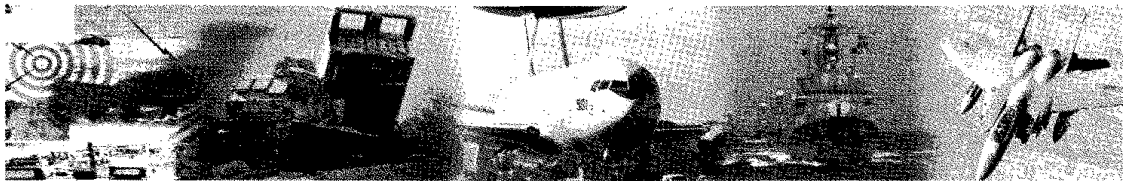
따라서 협력적 자주국방은 ‘자위적 방위역량’의 기반 위에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안보의 절대역량을 키우고 안정성을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II 목표 및 추진방향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지침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 내에 자주국방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2004년 11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2003년 5월과 7월에 '자주국방'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과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번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은 지난 2004년도 5~6월에 진행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감축계획 추진 등 국방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통령의 추가지침에 따라 이러한 기존계획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 '군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예산 소요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란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기본 축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한·미동맹관계를 최근의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10대 군사임무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주한미군 감축 등 주한미군 재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포괄적·역동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은 200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미2사단 재배치는 1단계로 2006년까지 한강 이북의 군소기지를 동두천·의정부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에는 주력부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단계

시행은 추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지도부 간 협의 후 결정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맡고 있는 10대 군사임무 중 JSA 경비임무, 후방지역제독 작전 임무 등은 이미 한국군이 인수하였으며, 2005~2006년에는 신속지뢰설치, 공지사격장 관리, 주야 탐색구조 등 7개 임무를 단계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한편, 대화력전 수행임무는 2005년 8월에 한국군 능력을 평가 후 전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12,500명을 2008년까지 3단계로 감축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포괄적·역동적 발전을 위해 기존의 '미래 한·미동맹 발전 정책구상' 회의(FOTA)를 대체하는 '안보정책구상' 회의(SPI)를 통해 미래 한·미동맹의 목표와 비전,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한미 지휘관계 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장기적 주둔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 임기 내에 안보상황 변화에 부합된 새로운 한·미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FOTA :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나.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이란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조기에 구비하며, 동시에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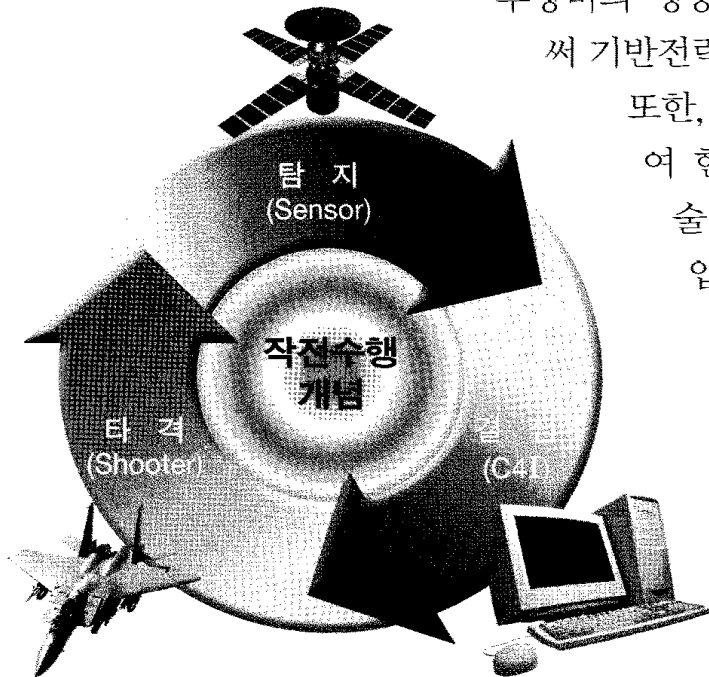
이를 위한 군사력 건설 중점은 미래 전쟁양상에 부합되도록 실시간(real-time)에 표적을 탐지하여 즉각 결심하고(C4I) 이를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탐지에서 타격(Sensor to Shooter)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전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 전술제대 및 전략제대에 이르기까지 전제대에 걸친 ‘실시간 지휘통제·통신체계(C4I) 구축’, 그리고 ‘중심표적에 대한 전략타격능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검토·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필수전력 확보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예비전력과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조직을 정비하고, 향토방위 긴요물자를 조기 완비함으로써 북한 특수작전부대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각군의 교체시기가 도래한 구형·노후장비의 성능을 개량하고 대체전력을 확보함으로써 기반전력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인 첨단무기 개발 기술 수준을 2010년도에는 선진국권에 진입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 군은 2008년경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쟁억제능력을 구축하여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이란 우리 군의 취약점을 진단하여 이를 보강함으로써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예화·효율화된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한국군 합참의 전쟁기획·계획 및 작전수행능력을 보강하고 합참의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명실 공히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참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여 독자적 전쟁수행조직을 구축하고, 우수인력 확보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합참의장의 인사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방여건과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병력규모를 조정하여 현재의 병력집약형 구조를 미래전에 적합한 전력구조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 국방부분부의 현역 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이른바 문민화 추진을 통해 국방부분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책과 국방정책의 조화로운 연결을 보장하고, 각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부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통합전력 발휘와 군의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편, 방위사업청(가칭) 창설 등 국방획득제도와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획득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은 미래전에 대비 가능한 선진국방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향후 추진

가. 국방예산 확보와 배분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4년간(’05~’08) 약 9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비의 연차적 증원이 긴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8년까지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GDP 대비 3.2%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수준은 매년 전년 국방비 대비 약 11% 정도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전력증강에 투입되는 전력투자비의 국방비 점유율을 2004년 기준 33.2% 수준에서 2008년에는 37.5%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것이며, 경상운영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력투자비는 독자적 감시·정찰 체계 구축, 중심타격능력 확보, 기반전력 내실화 및 연구개발 능력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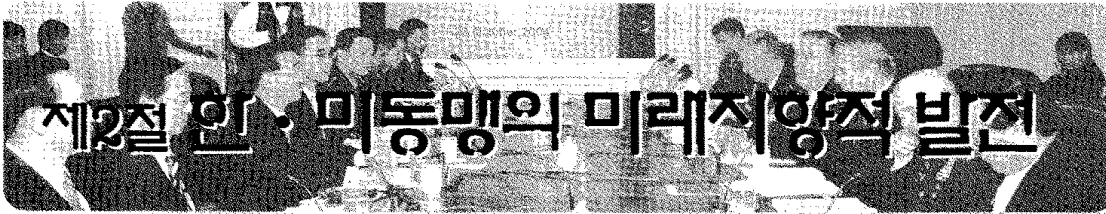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나. 추진계획의 이행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통해 전반적인 목표와 방향, 그리고 지침 및 개략적인 추진일정들을 수립하였다.

앞으로 이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국방부차관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편성하여 계획의 실시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나감으로써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중기계획’ 등 각종 기획·계획 문서에 반영, 정책화하는 가운데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참여정부 임기 내에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법적 근거로 하여 형성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근간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등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 종식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정세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등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전통적 위협과는 다른 형태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대두되는 등 전 세계적인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9·11테러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본토방위와 대테러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미국은, 군사변혁(Transformation)과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전략개념을 구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안보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 변화를 향한 시대적 필요성과 국민적 기대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는바, 2004년은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다양하게 이루어진 한 해였다.

한미 양국은 2003년 4월부터 시작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협의를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미관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한미 양국은 연합전력을 질적으로 강화시켜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조정 등 동맹관계의 제반 요소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은 지난 50여 년간의 한·미동맹 관계를 돌아켜보고 미래의 동맹을 위해 준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협력적 자주국방' 과 연계하여 군사분야를 넘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역동적 동맹' 으로 변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FOTA :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I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방위체제

가.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 2004년 APEC 한미 정상회담

탈냉전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종전의 구체적인 위협에 근거한(threat-based) 전략기획으로부터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capability-based) 전략기획으로 전환하였다.

즉, 미 본토 방위능력을 강화하면서 2개의 대규모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하는 Win-Win 전략을, 1개의 전구에서는 적을 격퇴하고 다른 전구에서는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수정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에 대한 도전을 불용하고 불확실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전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지속 유지해 왔던 동맹전략, 군사전략개념과 준비태세, 군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한편 군사변혁을 통해 전력의 첨단·기동화·경량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고정배치 기지’ 개념으로부터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유동배치 기지’ 개념으로의 전환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전력구조와 기지체계를 재조정 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한 미군도 이러한 개념 하에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한다는 전략개념 하에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계하여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양국은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창설하고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외교·안보관계관이 참가하는 한미간 최고의 안보협의기구로서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의 위임을 받아 ‘군사위원회(MC)’에 전략지침을 하달하며,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한미간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협의 기구로서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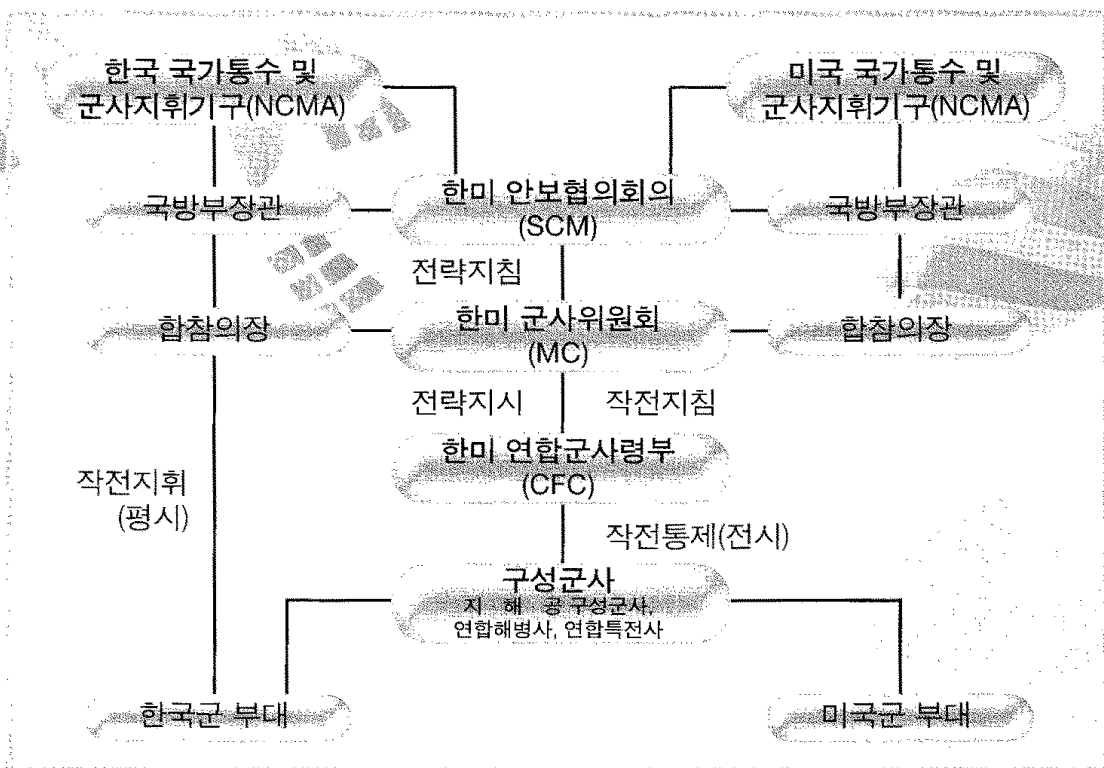
지난해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 합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한국의 이라크 평화·재건부대 파견 등 한미간 안보협력 성과를 평가한 후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양국 국방장관간의 연례 안보협의체로 운영해 오다, 1971년 미7사단 철수가 논의되면서 양국의 외교·국방관계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안보차원의 회의로 발전

NCMA :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

MC :
Military Committee
1977년 7월 제10차 SCM시 한미연합사 창설 및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부여할 한미 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상급기관

【도표 4-2】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지휘체제



다. 한미 연합방위체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1978년 11월 창설된 한미 연합군사령부(CFC)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운영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합사는 한국전쟁 이래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를 행사해 왔으며, 지난 1994년 12월 ‘정전시 작전통제’가 한국군에 환수됨으로써 현재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 작전통제’만을 행사하고 있다.

CODA :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연합사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고 위기관리 제도를 점검·보완함과 동시에 을지훈련(UFL), 연합전시증원훈련(RSOI) 등을 통한 실전적 검증은 지속 추진하여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한반도 조기경보 능력 향상을 위한 전구 수집관리체계를 전산화하고, 한미 C4I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등 실질적인 연합방위체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앞으로 연합방위체제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전력의 현대화를 통한 병력 중심으로부터 첨단 전력중심으로의 전환, 그리고 한국군의 전력증강 등과 연계하여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현대적 방위체제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II 한·미동맹 발전 토대 구축

한미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동맹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2002년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시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협의를 추진하였다.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는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연합군사능력 발전, 군사임무 전환, 한미 지휘관계 연구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2003년 4월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이듬해 9월까지 총 12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협의를 거쳐 「용산기지이전협정」(UA/IA), 그리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추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동맹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UA :
Umbrella Agreement
용산기지 이전 관련 원칙,
부지, 비용 등을 포함하는
조약 형식의 문서로서 전문
과 8개 조로 구성

IA :
Implementing
Agreement
용산기지 이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
는 조약 형식의 문서로서 전
문과 7개 조로 구성

LPP :
Land Partnership Plan
제33차 SCM(’01.11.15)에서
한미 의향서를 체결하고,
’02.10.31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함

가. 용산기지 이전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지난 1990년 6월 한미간에 이전 합의를 체결하여 추진하던 과정에서 1992년 용산 골프장이 반환되었으나 과도한 이전 비용 문제 등으로 1993년 6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이후 2001년 12월에 용산기지 내 미군 아파트 건립 문제로 기지이전사업이 재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양국은 2002년 3월 ‘용산기지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 ‘용산기지이전협정’ 서명식

【도표 4-3】 1990년 합의서 대비 주요 개선사항

구분	'90년 합의서(MOA/MOU)	신 합의서(UA/IA)
국내법적 위헌소지	· SOFA 합동위원회 문서 ·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음.	· 조약(UA) 및 SOFA문서(IA) · 국회 비준 동의(UA에 재정부담 관련내용 포함)
문제조항	· 복지·편의 시설 영업손실 보상 · SOFA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 에 대한 한측 책임부담 명시	· 한측 책임 없음을 명시
이전비용 통제장치	· 이전비용 관련 통제장치 부재	· 비용소요 검증 후 지불 ('백지 위임식 비용부담' 논란 해소)
현금 및 현물 제공 관련	· 시설관련 모든 경비 부담 이사 비용은 현금으로 제공	· 모든 시설 및 이사비용의 현물 제공을 명시
환경조항, 지자체와의 협력조항	· 조항 미비	· 환경공동조사/치유절차 이행 이전계획과 지역발전간 상호 보완을 위한 협조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이전 관련	· 합의서 미적용(지속 잔류)	· 외교부간 협의에 의거, 용산기지 이전과 동시 환수

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각 국간 군사협력과 동맹관계에 따라 군대의 파견 및 접수가 활발해지면서 군대의 파견국과 접수국간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인해 야기되는 재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주둔군지위협정'. 우리나라도 이라크에 파견되는 우리군의 지위보장을 위해 2003년 4월 쿠웨이트와 SOFA를 체결한 바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용산기지 조기이전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에는 긴밀한 실무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2008년 말까지 유엔사/연합사(UNC/CFC)를 포함한 용산기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1990년의 합의를 대체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UA/IA)을 체결하였다. UA와 IA가 2004년 12월 17일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합의 시에는 1990년도 합의서에 대해 제기되었던 국내법적 위헌소지를 비롯한 문제조항 등을 대폭 개선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용산기지 이전은 용산기지 환수라는 오랜 국민적 숙원을 달성하고,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미군기지 주변의 장기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든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 등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벗어나 주둔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연합방위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 미2사단 재배치

미2사단은 주로 경기 북부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부대운용 개념이 변화되고, 한국의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국토의 균형된 발전이 요구됨으로써 미2사단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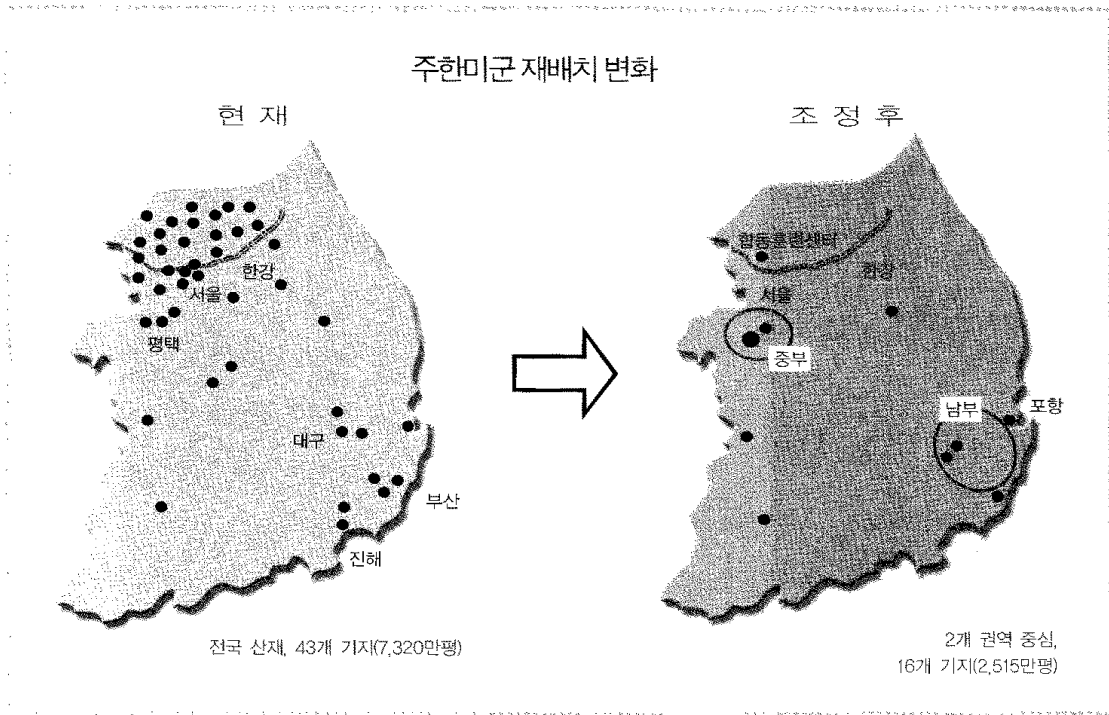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2사단은 향후 2단계에 걸쳐 한강 이남 주요 권역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1단계에는 2006년까지 한강 이북의 군소 기지들이 동두천·의정부 지역으로 통합되며, 2단계에는 한강 이북의 미군 주요부대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 시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추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다.

1단계 재배치 사업과 병행하여 2단계 재배치를 위한 부지확보 및 기반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2사단의 1·2단계 재배치를 통합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양국

간에 합의되었다.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2단계 재배치가 완료되면 주한미군 기지는 2개의 핵심권역(중부, 남부)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주한미군의 부대운용 효율성 증대는 물론, 우리 국토의 균형된 발전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주한미군 감축

2004년 6월 미국은 2005년까지 주한미군 12,500명의 감축을 희망하는 기본구상을 우리 측에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의 조기 감축으로 인한 대북 억제력 및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가지는 상징성, 한미 연합방위태세, 한국군의 전력증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 시기 및 규모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국측과 협상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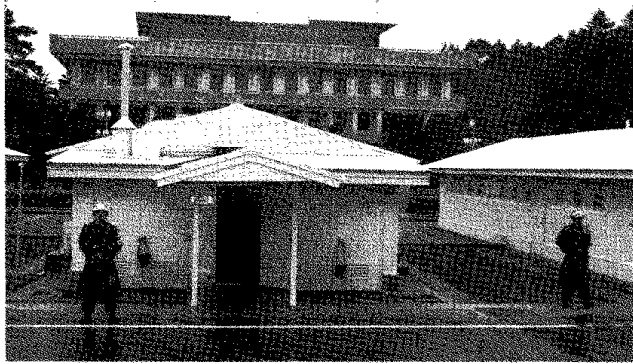
협상에서는 대북억제 긴요전력 감축의 최소화, 이미 합의된 군사임무 전환 일정과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계획, 미2사단 1·2단계 재배치 계획 등을 감안하고, 특히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과 연계하여 감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협의하였다.

MLRS :
Multiple-Launch
Rocket System

약 4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쳐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최초 계획보다 3년 연장시켜 2008년까지 3단계로 감축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다. 먼저, 2004년 말까지 미2사단 2여단 전투단과 군사임무전환 관련부대를 포함하여 5,000명을 감축하였고, 이어서 2005~2006년에는 5,000명을, 2007~2008년에는 2,500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자산 감축면에서도 융통성을 갖기 위해 최초 미측이 계획하였던 다연장 로켓(MLRS)과 대포 병례이다 등 대화력전 자산은 잔류시키고, 전차·장갑차 등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 전투장비는 사전 배치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성공적 합의는 대체 전력을 구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안보우려를 해소시켜 주는 현실적 효과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정하는 합의 과정을 거쳐 상호 만족할 만한 협의결과(win-win)를 도출하였다는 데에서 또 다른 값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라. 군사임무 전환과 연합지휘체제



○ 공동경비구역(JSA : Joint Security Area)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능력의 발전과 연계하여 그동안 주한미군이 수행해 왔던 10개의 군사임무 중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 후방지역 제독작전 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였고 나머지 임무도 단계적으로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하였다.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은 한국군의 능력 증대에 따른 임무 확대와 아울러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을 제고시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다만,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 약화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을 한국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특히 대화력전 수행본부는 2005년 8월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한 후 전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은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근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미래 대비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신중히 접근해 나갈 것이다.

마. 연합군사능력 발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억제에 있어서 안보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50개 분야에 11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주한미군의 전력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능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 개편을 통해 전력 운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군도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미 연합군사능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II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한미 양국간의 꾸준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영시설 노후화, 숙소시설 부족, 훈련장과 관련한 민원증대 등으로 주한미군의 근무여건이 타 국가에서의 근무여건보다 열악하여, 주한미군 장병들의 사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열악한 주둔여건이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한·미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동인식 하에 주둔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가. 방위비 분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우방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수준 및 한국방위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도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방위비 분담금 :
방위비 분담금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통상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근거하여 분담하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여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해 오고 있다.

한국 측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막사 등 비전투 시설 건축을 위한 군사건설, 탄약고 등 전투용 및 전투근무지원 시설 지원을 위한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철도·차량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 지원을 위한 군수지원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도에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6억 2,200만 달러이며, 이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2005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간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나. 민원 해소 및 훈련여건 개선

주한미군의 실전적 훈련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미군 훈련차량에 의한 각종사고 및 피해와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에서의 소음피해 등으로 훈련장 인근 주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야기되었고, 나아가 훈련여건도 더욱 악화되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FA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훈련장 주변 개선과 주한미군이 훈련간 준수해야 할 각종 안전조치들에 대해 SOFA 운영개선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보도 신설, 굴곡·병목지점 확장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미군 부대이동 규정 보완 및 장비 개선·차량이동 통제활동 강화, 훈련 및 차량이동 계획 사전통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훈련간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격장을 조기에 폐쇄하는 대신 주한 미 공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체 훈련장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효과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다. 한미 유대강화 활동

한미 양측은 한미간의 인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군 지역부대-주한미군-지역주민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고 있다.

한미 친선활동의 강화 노력에 있어서 한국군은 '한미 부대간 자매결연', '주한미군 초청행사', '주한미군에 대한 후견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New Horizons Day', 'Good Neighbor Program', '부대 개방행사' 등 다양한 유대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주한미군은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수해복구, 의료지원 등 대민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주한미군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간의 유대강화 활동은 문화와 환경이 서로 다른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간에 상호 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New Horizons Day :
주한미군이 신규전입 마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와 국민정서에 대한 이해 증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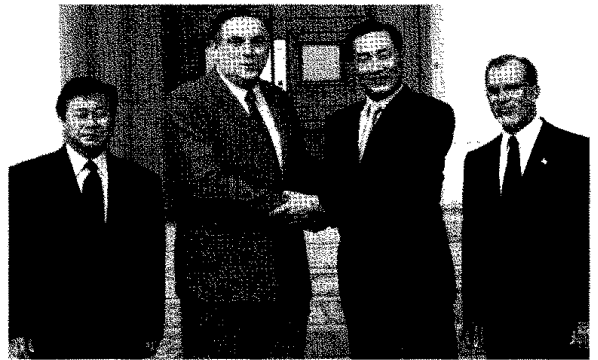
Good Neighbor Program :
연합사령관 주관하에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간 유대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IV 미래 한·미동맹 발전

한미 양국은 2004년까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와 같은 한미간의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미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 동맹 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사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05년부터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을 가동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미 양국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남북관계 진전과 동맹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구상해 나갈 것이다.



①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 양국 대표

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제3절 대외 군사관계 발전

우리 군의 대외 군사외교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우방국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하는 가운데 주변국과 균형된 군사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지역 내 다자간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 참전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군사교류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국제 평화유지활동과 국제군비통제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I 대주변국 군사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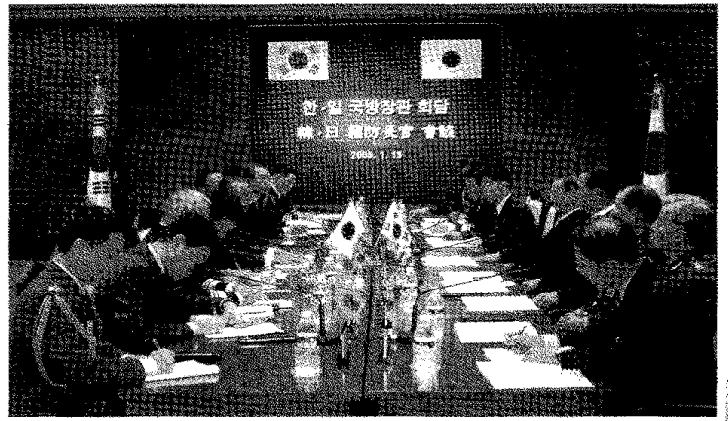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방향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안보현안에 대해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다양한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군사적 신뢰와 유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가. 대 일본 관계

한·일 양국은 군 인사교류 및 군사학교 학생 교환방문 등 인적분야의 교류에서부터 군 지도부의 상호방문 및 정례회의 개최 등 다양한 군사교류를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 양국은 상호 교환방문 형식으로 해마다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13일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오노 요시노리 일본 방위청장관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은 이웃해 있는 두 나라의 군 최고수뇌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유대 친선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자리

에서 양 장관은 최근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 지역 정세 등 양국의 안보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데 합의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적극 지지하였다. 또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군사교류 협력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편, 국방부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등 각종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유사법제 입법 등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을 청취하고 우리의 관심사를 전달하는 한편, 양국의 대북정책과 국방정책 방향,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편성 협의 관련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넓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그동안 구축한 일본과의 군사적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2004년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위해 양국간 실질적인 국방·안보협력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 대 중국 관계

중국과의 국방교류는 2003년 7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안보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 지도급 인사교류는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인사교류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조성태 국방부 장관이 한국전쟁 이후 국방부장관으로서



○ 우리 함대 최초의 중국 방문

는 처음으로 1999년 8월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군사관계의 새 장을 열었으며, 2000년 1월에는 츠하오티엔(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중국 국방부장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어서 2001년 12월에는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군간 군사적 유대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군 최고 수뇌부간 대화와 접촉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양국 군 지도급 인사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2003년에 합참의장, 2004년에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 군부에서도 2003년 중국 총참모장과 군사대표단, 2004년에는 중국군 총참모부 군사대표단이 각각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중 군사교류는 국방학술 회의와 체육교류가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함정 및 항공기가 상호 방문하는 등 안보분야 협력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가는 한편, 양국 관계의 균형 발전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교류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다.

다. 대 러시아 관계

러시아와는 수교 이듬해인 1991년에 양국 무관부를 개설하고, 군 지도급 인사 상호교류, 군사적 신뢰구축과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 합참의장 러 태평양함대 사령관 접견

나아가 2003년 4월 10일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부장관 방한 시 양국 국방장관은 군사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7월에는 양국 공군 간 회의를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8월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주최하는 인도주의적 해상 공동수색구조훈련에 일본과 함께 우리 해군도 참가하였다. 이는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최초의 합동 군사훈련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 간 평화적 군사협력의 시초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004년 2월에는 러시아측의 협조요청에 따라 러·일전쟁 10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당시 침몰한 까레예츠함 전물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관이 탑승한 함정 3척의 인천항 방문을 지원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고, 동시에 기뢰제거 훈련 일환으로 양국 함정간 해상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2004년 8월에는 2002년에 체결된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 협정」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를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양국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외교시 1990년 수교 이래 14년간 양국 관계를 규정하였던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의 미래지향적인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러 군사관계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까레예츠(한국인)함 :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인천 소월미도 해상에서 일본함대와 격렬한 전투 끝에 항복을 거부한 채 러시아장병 전원이 함선과 함께 자폭하였고, 러시아는 이를 기려 2003년 8월 1,000톤급 대잠함을 새로이 ‘까레예츠’로 명명하였다.

II 군사교류협력 다변화

국방부는 평시 우방국과의 군사적 유대와 친선을 강화하므로써 우리의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획득하는 한편 유사시 긴밀한 안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교류 협력대상국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관부 운용, 군 인사 상호방문, 군사교류 협력 회의, 군사교육·학술교류, 함정 상호방문,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군사협정체결 등 교류협력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환태평양 육군총장회의, 해양대제전, 국제항공전람회(Korea Air Show)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주관하여 참가국들과의 군사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2004년 싱가포르에서 20여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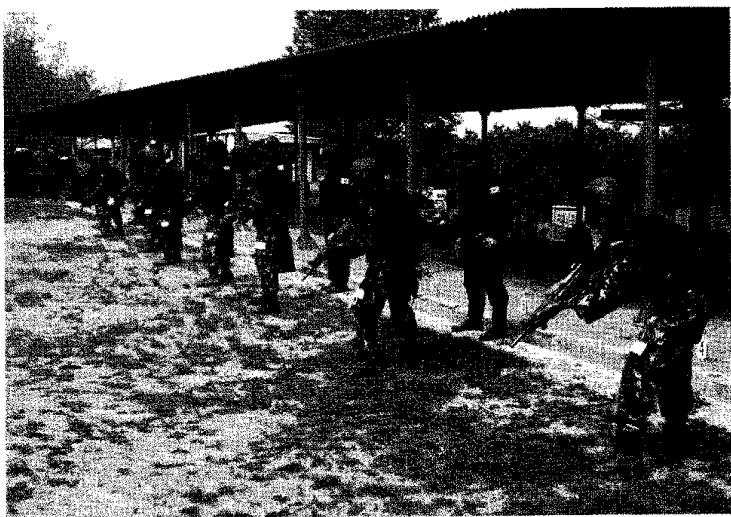
된 '제3회 아시아 안보회의'에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최초로 참석하여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활동 참여 등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 대한 참가국 대표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한편,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방장관 및 군 수뇌들과의 회동을 통해 국방 현안과 관심사를 상호 교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가. 동남아/대양주 지역

동남아 지역은 1980년대 이후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우리의 중요한 협력국의 하나로 등장하였으며, 자원 및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방산협력,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한 역내 안보협력 등 안보·군사외교 분야에서 전략적 중요성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군 지도급 인사교류,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군사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 이루어진 주요 군 지도급 인사교류로 인도네시아 공군사령관과 해군사령관, 말레이시아 총참모장과 해군사령관, 필리핀 공군사령관, 베트남 총참모장 등이 방한하였으며 우리 측은 공군총장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국방부장관이 싱가포르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베트남 군 축구단 방한 전지훈련,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호요원에 대한 대테러교육 실시, 국방대학교·사관생도 교환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교류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2003년 우리 해군 순항함대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각 국을 순회한데 이어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해군 순항함대가 방한하여 이들 국가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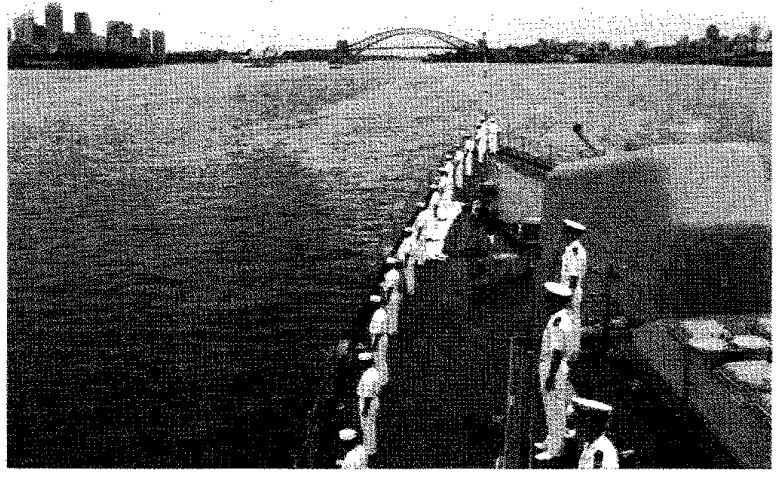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호요원들의 대테러 수탁훈련 장면

의 우호관계를 한 단계 더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군사교류 다변화 노력의 결과, 2003년 8월 캄보디아와 「군사교육교류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실질적 군사교류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제1·2차 한·베트남 방산·군수 공동위가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어(2003년 한국, 2004년 베트남) 동남아 지역에서 정례 방산협력회의가 기존의 4개국에서 5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도 한·인도네시아 공군 정례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대양주 지역과는 한국전 참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외교·국방 관계관이 함께 참석하는 정치·군사협의회 및 국방 당국자간의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의 상호 안보 관심사와 교류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는 매우 유익한 안보 협의체이다. 아울러 수시 함정 교환방문, 국대원생 상호방문, 군사교육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군사교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우리 해군 순항함대의 호주 시드니 입항 장면

주요 교류내용으로 2004년 4월 제7차 한·호 및 제5차 한·뉴질랜드 국방정책실무회의가 호주 캔버라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연이어 버트 뉴질랜드 국방장관과 퍼저슨 뉴질랜드 국방총장이 방한하였다. 해군 교류로는 2003년 우리 해군 순항함대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였고 2004년에는 호주 해군 함정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나. 유럽 지역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외교 목적은 이 지역에서 우리 군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유럽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참전국과의 지속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용

사 재방한, 참전 기념비 건립, 전쟁 미경험세대 교류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군 지도급 인사교류는 1999년 조성태 국방부장관이 터키를 방문한 이후 2004년 2월 육군 참모총장이 스페인과 터키를 방문하는 등 유럽지역 국가와 상호방문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2년 루마니아 총참모장, 2003년 스웨덴 국방총장, 네덜란드 국방장관, 2004년 9월 스페인 육군총장 방한과 같이 과거 우리와 군사관계가 별로 없었던 국가들과의 군사교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지역 국가와의 쌍무 정례 회의체로는 국방정책실무회의,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정보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방산협력을 중심으로 교류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사 교육교류는 2004년까지 우리 군 장교가 그리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 총 13개국 군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독일, 이태리, 터키, 프랑스 등 4개국 군 장교가 우리 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또한 2003년 육군 군악대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군악제인 ‘영국 에딘버러 국제 군악제’ (03.7.21.~8.25.)에 참가, 한국 전통 군악을 연주하여 참가국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 에딘버러 국제 군악제 육군 군악대 참가 기념

다. 기타 지역

서남아 지역 국가와의 군사교류는 비교적 미진하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의료지원단 병력을 파견한 인도와는 1973년 국방대학원생 교환방문을 시작으로 군사 교육기관간 비정기적 상호방문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군 위탁생들을 인도 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등에 해마다 1~2명씩 파견하고 있다. 해군 간 교류에 있어서는 우리 순항함대가 2004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인도를 방문하였으며, 인도 해군은 1998년 우리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한데 이어 2003년 11월에는 3척의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양국 해군간 유대를 한층 강화하였다. 2004년 9월에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외교·안보 대화 및 군사협력을 증진해 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군사 당국간의 접촉과 대화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파키스탄과는 1990년 파키스탄에 상주 무관부를 개설한 이후 2003년 4월 파키스탄 해군대학생 방한과 같이 군 교육교류를 중심으로 군사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는 1998년 프리킷함 1척 수출을 계기로 방산협력이 증대되면서 2001년 10월 방글라데시에 상주 무관부를 개설하였으며, 해군을 중심으로 군사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중동지역 국가와의 군사관계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스라엘 국방사무차관('00.9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00.10월), 쿠웨이트 국방장관('04.11월) 등이 방한하였다. 또한 2003년 4월에 「한·쿠웨이트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고 2004년 3월에는 쿠웨이트, 9월에는 요르단에 각각 상주 무관부를 개설하였으며, 쿠웨이트 국방장관 방한시는 양국 국방부간 군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군 인사 교류 확대와 군사교육 교류, 방산·군수 협력 등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계기로 이 지역에 대한 군사외교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004년 2월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방(UAE), 오만, 쿠웨이트를 방문하였고 이에 발맞춰 육군참모총장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를 시찰하는 중 쿠웨이트와



한·쿠웨이트 군사교류양해각서 서명식 장면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를 방문하여, 파병작전 지원국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라크 파병부대 전개 지원을 위해 미군 중부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와 우리 연락장교 파견을 위한 SOFA 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지도급 인사들의 중동지역 방문은 물론 중동 군사지도자 방한 초청, 군사교육교류 및 방산협력을 강화

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세계 국가수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은 국제무대에서 비중이 매우 크며, 중남미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방산협력 등 이들 지역과의 군사외교 수요 또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3년 및 2004년은 중남미와의 군사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바, 2003년에는 우리 해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차관이 칠레와 멕시코 2개국을 방문하였고 동년 10월에는 베네수엘라 해군총장, 2004년에는 파라과이 국방장관과 칠레 및 브라질 육군사령관이 각각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전통적 우방국인 캐나다와는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양국 국방현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해상초계기 연합대잠훈련과 캐나다 국방총장 방한이 이루어졌고 2004년에는 우리 합참의장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캐나다 해군 함정이 방한하는 등 양국간 군사교류협력 수준을 한 단계 제고시켰다.

III 국제 평화유지활동

가. 평화유지활동(PKO) 개관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민족·종교·영토·자원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지역적 차원의 국지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국제적인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국제 평화유지활동은 세계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왔다. 세계 각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국제 평화유지활동을 오늘날 국가적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의 주요한 군사활동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이 직접 주도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유엔의 승인 하에 지역기구 또는 특정국가가 주도하는 다국적군 형태의 평화유지활동으로 구분된다.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 정전감시단(UNTSO)을 시작으로 지난 55년간 120여개국에서 약 100만여 명이 59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에 참여하여 왔다. 2004년 11월 현재 102개 유엔 회원국에서 파견된 66,300여 명의 군 및 경찰 요원이 라이베리아, 그루지아, 인도·파키스탄 등 16개 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PKO :
Peace Keeping
Operation

UNTSO :
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나. 우리 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우리 군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3년 소말리아(UNOSOM-II)에 공병 대대를 파견한 이래, 앙골라, 서부사하라, 동티모르 등에 파견하여 왔으며 1999년 10월 동티모르에 파견된 상륙수부대는 파견 당시 보병부대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한 국내의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지 파견 이후 책임지역에 대한 치안유지, 국경선 통제와 민사작전 등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으로부터 ‘다국적군의 왕(말라이무핀)’이란 호칭을 받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2003년 10월에 완전히 철수하였다.

UNOSOM-II :
UN Operation in
Somalia

하고 정부부처별 업무분장, 해외파병 업무 절차, 해외 파병요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3) 평화유지활동 교육체계 발전

국방부는 평화유지활동과 파병업무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고, 평화유지활동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국제평화지원센터’를 국방대학교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가 설립되면 군인뿐 아니라, 경찰·민간인에 대한 수탁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전문 평화유지활동센터로 기능할 것이다.

라. 우리 군의 해외파병활동

20세기 말 냉전 종식 이후 국제테러는 세계평화·안전에 가장 큰 위협으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 파병하였다.

(1) ‘항구적 자유작전’ 지원 파병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미국이 9·11테러의 주범인 빈라덴과 알카에다 조직, 그리고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아프가니스탄을 응징하기 위해 「항구적 자유작전(OEF)」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 10월 7일 개시한 대테러 전쟁이다.

‘항구적 자유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24일 대미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국회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 육군 의료지원단, 해·공군 수송지원단, 건설공병지원단을 파견하였다.

육군 의료지원단은 최초 100명으로 구성되어 2002년 2월 27일부터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과 동맹국군에 대한 의료 지원과 대민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3년 2월 전개한 3진부터는 아프가

OEF :
Operation Enduring
Freedom



○ 아프가니스탄 수송지원단 창설

이라크 평화·재건지원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도리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측과의 현안문제 해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한국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다. 넷째, 국제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파병국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군 부대의 장거리 전개와 재보급 능력 등 군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 대국민 설득 노력

국방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국회와 언론, 국민 설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국방부장관은 각 정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 4당대표 방문,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가파병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기에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권 3개국(오만, UAE, 쿠웨이트)을 방문하여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에 대해서도 파병의 필요성과 파병을 통한 국익창출의 극대화 노력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범정부 파병지원추진위원회 운영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 파병지원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국가정보원 등의 차관보급을 위원으로 편성된 위원회는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 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실무적인 문제를 토의한 바 있으며, 두 차례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의 파병에 관련된 안건들을 토의·조치하였다.

● 파병 기본계획

파병부대의 임무는 일정 책임지역을 담당하여 전후복구 지원과 구호활동,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기능 발휘 지원, 친한화 활동 등으로 하며, 현지 치안은 이라크 군·경찰이 담당하고 우리 군은 양성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대의 편성은 서희·제마부대를 포함하여 3,600여 명으로 하며, 이는 사·여단 사령부 및 직할대 1,200여 명, 재건지원 1,600여 명, 경계병력 800여 명으로 융통성 있는 임무수행과 아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예병력으로 편성하였다.

파병지역은 최초 키르쿠크 지역으로 검토하였으나, “독자적인 책임지역에서 평화·재건 지원임무를 수행한다”는 정부의 파병원칙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병지역을 쿠르드자치구역인 아르빌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차례의 현지조사와 협조활동을 통해 아르빌 지역을 파병지역으로 확정('04.6.18)하고 아르빌 주당국과 필요한 세부 내용을 협조하였다.

● 철저한 파병준비

2월 13일 국회 동의안이 통과되자 국방부와 관련부서는 본격적으로 파병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파병 인원소집 공고 및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14.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최종적으로 3천6백여 명을 선발하였다. 6주간의 파병전 교육을 통해서 현지적응 교육, 현지 습관과 풍습 이해,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토록 하였다. 아랍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46명의 군내자원에게 1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인 아랍어 자원 41명을 계약직 군무원으로 선발, 채용하였다. 또한 타국군과의 차별화된 복장과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오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380대의 차량에 대한 방탄화 작업과 함께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개선하였다.

○ 이라크 파견 장병들의 어학교육



자이툰부대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4년 9월 27일에 합참의장이, 11월 3일에는 국방부 장관이 각각 아르빌 주둔지를 방문하여 부대원들을 격려했으며, 10월 10일에는 이라크에 파병한 동맹군 부대를 방문한 적이 없는 럽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자이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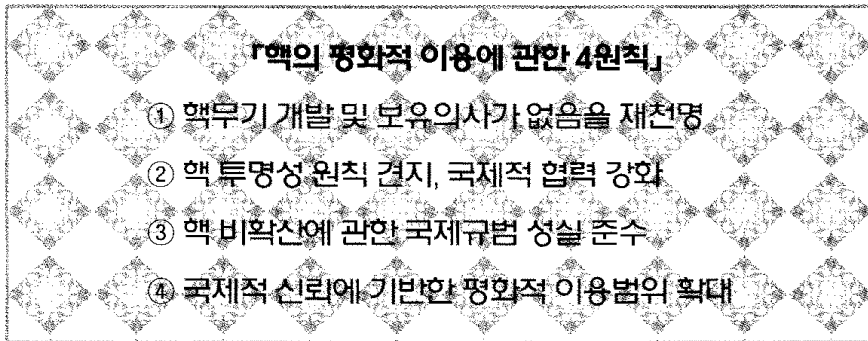
특히,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8일 자이툰부대를 방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가 충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600여 명의 장병들과 조찬을 함께 한 뒤 내무반과 자이툰병원 등 주요 시설을 순시하였다. 장병들과 대화시 대통령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외교력이자, 한국의 또 다른 힘이고 발언권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라고 언급하여 자이툰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부대 격려

및 레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확산 방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더불어 평화적 해결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문적 연구차원의 소량 핵물질 실험(1982년 플루토늄 화학실험, 2000년 레이저 이용 우라늄 분리실험) 관련, 정부는 IAEA의 관련 확인·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2004년 9월 18일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여 우리 정부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아울러, 핵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0월 25일 독립적인 핵 통제기구를 신설하는 등 제반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2004년 11월 26일 IAEA 이사회에서 '플루토늄 화학실험 확인과 관련한 한국의 협력을 환영하고, 관련 핵물질의 양이 의미있는 양이 아니며, 미신고 핵물질 실험이 계속되어 왔다는 징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핵물질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었다.



(2) 화학·생물무기 비확산 노력

정부는 국제적인 화학무기 금지 및 폐기 추세에 부응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에 가입하여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 1997년 제2차 당사국 총회 이래 북한 등 화학무기금지협약 미가입국들의 조속한 협약가입을 촉구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보편성 확보를 위한 권고안」 및 2003년 제1차 CWC평가회의시 동 권고안을 보다 구체화시킨 「보편성 확보 행동 계획」의 상정·채택을 주도하여 북한 등 우려국가들의 협약가입을 통한 화학무기의

(CCW)에 가입하여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인도주의적 지뢰제거 활동 의지를 대내외에 인식시키는 한편, 안보현실을 감안한 지뢰의 사용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향후 국방부는 2006년까지 후방 지역의 모든 대인지뢰를 완전히 제거할 예정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인류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동참하기 위해 유엔 지뢰제거 신탁기금 제공은 물론 인도주의적 지뢰제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5)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노력

9·11테러 이후 국제군비통제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된 핵심기술,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이 확산 우려 국가 및 집단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출통제체제의 강화에 있다.

NSG, MTCR 등의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체제와 더불어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최근 테러조직이나 불량국가들이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엔안보리는 2004년 4월 28일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강화와 테러단체 등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행위 지원 금지를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540」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부처 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유관부처 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우리나라의 방산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이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적극 예방·차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적극적인 국제군비통제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투명성과 국제적 신인도를 크게 증대시키고,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의할 것을 요구하며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측은 2003년 3월부터 정례적인 군정위 참모장교 접촉을 거부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준수한다는 입장으로, 군정위와 그 틀 안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 중감위 등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정전체제 틀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군사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나.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6·25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간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과 대결 위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공존과 공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I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

가.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추진

(1)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은 총 19차례(군사실무회담 9회, 수석대표접촉 10회)에 걸쳐 남북 간 철도·도로의 연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군사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의미와 함께,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증대를 군사적으로 보장한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측은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2000.9.25~26)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의를 위하여 2000년 10월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회담 개최에 앞서 남북한 비무장지대 일부의 개방과 이에 따른 군사적·기술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합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유엔사와 북한군은 경의선 철도·도로가 통과하는 서해지구의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채택·발효(2000. 11. 17.)시켰다.

이로써 남북 쌍방은 2000년 11월 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이후 4차례의 회담을 통해 남북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철도·도로 연결에 따르는 쟁점을 해소하고 세부 사항들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2001년 2월 8일 5차 회담에서 서해지구의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합의서는 북측이 행정적인 이유를 들어 관련 합의를 지연시킴으로써 발효되지 못하다가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2002년 9월 18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동시 착공과 공사착공 이전까지 군사적 보장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지구와 마찬가지로 유엔사와 북한군은 동해지구의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고(2002. 9. 12.),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2. 9. 17.)에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이후 남북군사실무회담은 과거와는 달리 정치적 사안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적 협의에 집중함으로써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2003. 1. 27.),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2003. 9. 17.),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3. 12. 23.)를 채택·발효시켰다.

상기 합의서들은 남북 군사당국자가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와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큰 틀 속에서 쌍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남북군사실무회담은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2004. 2. 6.)에서 남북 쌍방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기존의 남북군사실무회담과는 별개로 쌍방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북측에 회담 개최를 제안(2004. 2. 12.)하였으나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오던 중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2004. 5. 7.)에서 양측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재합의하고, 북측이 제1차 회담을 “2004년 5월 26일 금강산지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해 음에 따라(2004.

5. 12.) 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양측은 수석대표의 계급문제로 진통을 겪은 끝에 5월 25일 1성 장군을 수석대표로 하는 회담대표단 명단을 교환하였으며, 5월 26일 금강산에서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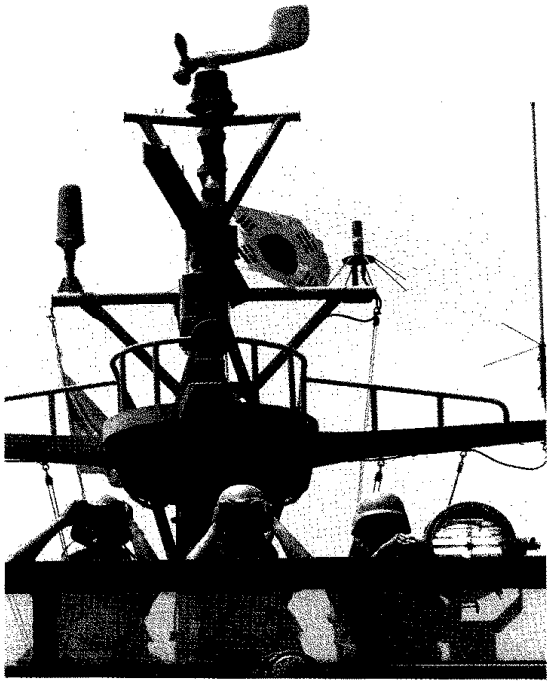


○ 제1차 남북장성급회담

이 회담에서 우리 측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① 서해 함대사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② 경비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③ 경비함정간 시각신호(발광 및 기류) 제정·활용 ④ 제3국 어선의 불법어로 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제라고 하면서 이 문제부터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월 3일부터 4일까지 설악산에서 진행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하였다. 이는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분야에서의 상호 접점을 마련하고, 두 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서해문제’와 ‘선전문제’를 연계하여 일괄 타결, 합의하게 된 것이다.

상기 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 서해 해상 남북 함정간 교신

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하였다.

이후 양측은 합의에 따라 6월 14일 서해 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과 기류·발광 등 통신수단별 운영시험을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전면 중지하였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는 선전수단 시설과 기구 철거작업을 개시하였으며, 6월 29과 30일 양일간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1단계 선전수단 철거결과를 확인하고,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 함정간 시험통신 정례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선전수단 제거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7월 5일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갖고 7월 6일부터 2단계 선전수단 제거에 착수하고 서해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7월 중순 이후 남북당국 간 대화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실무대표회담이 중지되었으며, 군사분계선지역 선전수단 철거도 약 50~60%정도 진전된 상태에서 8월 13일 이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서해해상에서 남북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교신 및 불법조업선박에 대한 정보교환 활동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군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또는 실무대표회담을 개최하여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선전수단 철거 문제 등 이미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나.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지원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초 아래 남북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국방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민족의 대동맥을 잇는 상징성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민통선 지역의 지뢰제거와 노반공사를 담당하여 2000년 9월 19일에는 경의선지역에서 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9월 19일에는 정부 차원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북측과 동시에 착수하였다. 남북 군사당국은 공사 진행과 안전보장을 협의하기 위해 공사상황실 간 군 직통전화를 개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 간 상호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도표 4-6】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

노 선	종 류	규 모	구 간	총거리(km)
경의선	철 도	단선	문산(남)~개성(북)	27.3
	도 로	4차선	통일촌(남)~개성공단터(북)	10
동해선	철 도	단선	사천리(남)~온정리(북)	25
	도 로	2차선	사천리(남)~온정리(북)	23.7
	임시도로	1차선	통일전망대~군사분계선	6.6

【도표 4-7】 남북 철도·도로 연결 군 공사구간

구 분	구 간	거리(km)	
경의선	철 도	임진강 이북~군사분계선	4.5
	도 로	통일촌~군사분계선	5.1
동해선	철 도	송헌2교~군사분계선	2.6
	도 로	송헌진교~군사분계선	2.6
	임시도로	통일전망대~군사분계선	6.6

착공식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공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면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2년 12월에는 남측 경의선 지역 철도공사가 완료되었고 2003년 6월 14일에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철도연결 행사를 가졌다. 2003년 2월에는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가 개통되었으며, 2003년 12월에는 남측 경의선 지역 철도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간 상호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대책

- 공사지역 쌍방 경비초소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250m 이격하여 설치
- 지뢰제거시 쌍방거리는 400m 이내 일반공사는 쌍방거리 200m 이내일 때, 날짜 엇바꿔 실시
- 경비인원 100명 이내, 무장은 개인화기 실란 30발 이하



○ 경의선 착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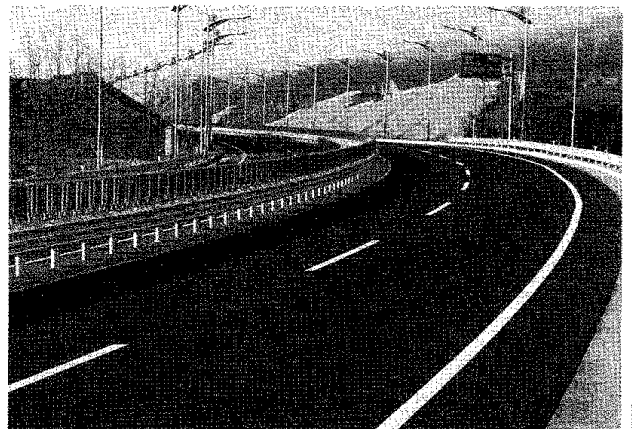
또한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 회담 수석대표접촉에서 「임시도로 통행 잠정합의서」를 타결함으로써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한 금강산 육로관광이 개시되었다. 우리 군은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시 구난·구조를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등과 같은 각종 교류·협력사

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남북간 군사적 보장문제를 비롯한 관련 조치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보취약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사전문가와 현지부대의 군사적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현장상황에 부합된 최상의 군사적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지금의 정전협정체제가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유엔사(UNC)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 남북철도연결 행사(동해선)



○ 경의선 남북연결도로

III 국군포로 송환노력

가. 미송환 국군포로 현황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으나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송환되지 못하였다. 유엔사는 1960년대 초반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이들 국군포로의 송환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 10월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가 귀환함으로써 국군포로 문제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미송환 국군포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방불명자 신고와 병적부 확인 등을 거쳐 1997년 10월 19,409명의 ‘6·25참전 행불자(실종자)명부’를 공개하였는데, 이 명부에는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 귀순자와 47명의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 2004년 12월 현재 538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정부의 해결노력

정부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모든 경로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제기구를 통해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북협상시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직접송환 노력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군포로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하여 서신교환과 상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가 완공되고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등 상황이 호전되면, 더 많은 국군포로들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제3국 체류 국군포로의 숫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조속한 국내송환과 이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제도정비를 실시하였다. 2004년 「국군포로송환등에관한업무운영규정」

(총리훈령 제448호)를 제정·발령(2004.1.19)하여, 제3국 체류 국군포로의 국내 송환에 관한 유관부처의 업무분장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송환 시에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군포로업무처리등에관한규정」(국방부훈령제 746호)을 제정·발령(2004.3.22)하여 국군포로 업무와 관련된 부서별·기관별 임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2004년 이후 제3국 체류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국내 송환이 크게 증가하였다. 귀환 국군포로들에게 1999년 1월 29일 공포된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정의 연금과 정착금, 그리고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아

울러 국방부는 해마다 귀환 국군포로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하여 안보현장 견학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3국 체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측에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귀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귀환포로 조창호 중위 전역식



제5절 자위적 방위역량 건설

우리 군은 그간 불가피하게 전쟁억제력의 많은 부분을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의존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구비가 미흡하였다. 최근 남북 간 화해협력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이중적 안보상황과 미국의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등 우리의 전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존하는 북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이 어느 때보다 절실이 요구된다.

I 군사력 건설 방향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 영토확보나 대량살상을 추구하던 전쟁형태가 적의 정보능력을 마비시키고 중심을 타격하는 새로운 전쟁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우세한 감시·정찰능력, 지휘·통제·통신 자동화체계, 중심표적에 대한 장거리 타격능력과 기동성 등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며, 동시에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군사력 건설방향은 미래 전쟁양상에 부합되도록 '탐지에서 타격(Sensor to Shooter) 체계'를 구축하되, 한반도 전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 전술·작전·전략 제대에 걸친 '실시간 지휘통제·통신체계(C4I) 구축', 그리고 '중심표적에 대한 전략타격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II 국방 전력투자사업과 연구개발

가. 전력투자사업의 목표 및 방향

국방부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장비·물자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 첨단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기술개발 중심 연구소로 발전시키고, 신규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체제를 혁신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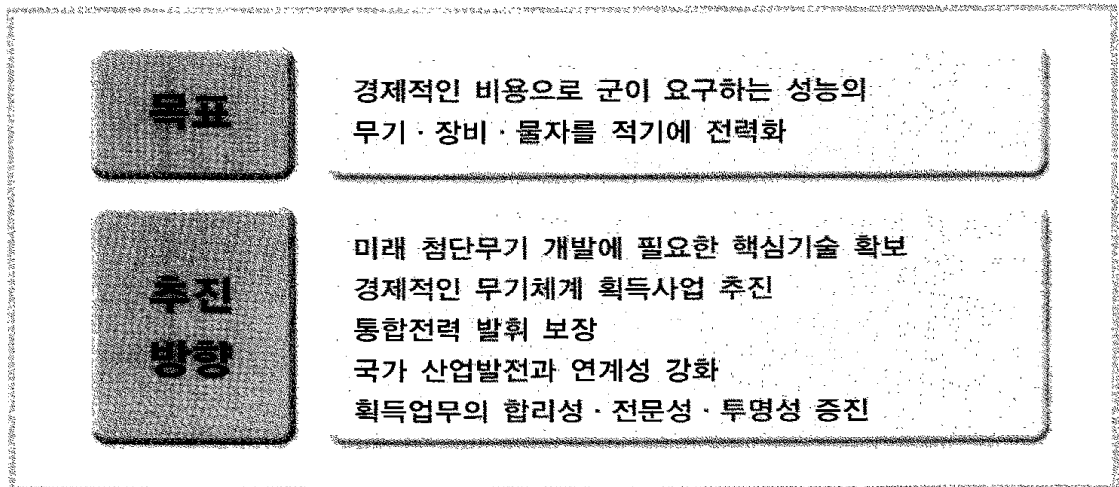
둘째,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현용 무기·장비의 성능개량을 촉진하고, 획득 전 과정에 경쟁원리를 확대 적용한다.

셋째,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해외로부터 구매할 때는 전력화 지원요소를 패키지화하여 확보하고, 현용 무기체계와의 상호 연동성과 운용성을 충족시켜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한다.

넷째, 국내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전력투자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 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섯째, 획득업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와 절차상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사관리 제도를 발전시켜 획득업무의 투명성·합리성·전문성을 증진한다.

【도표4-6】 국방 전력투자사업의 목표 및 방향



나. 국방 획득업무 제도개선

국방부는 획득운영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획득시스템 전 분야를 분석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획득운영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업무수행 절차,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1) 전력투자사업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연구개발계획 승인, 기종 결정, 주요사업의 집행 승인 등은 각 군과 기관 및 방위산업체 간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 보장이 중요하다.

따라서 결재권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결재 방식을 개선하였다. 전력투자사업은 2003년 5월부터 회의체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정부 관련부처의 책임자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결정체제로 전환하였다.

(2) 국외도입 제도와 절차개선으로 경제성 제고

해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은 막대한 국방비의 낭비와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경우 외교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추진전략' 수립을 제도화하여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종도 입찰경쟁에 의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경제적인 구매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3) 연구개발사업의 군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소요를 제기한 군 및 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 소요는 합참에서 종합·심의하여 국방부에 제기하도록 하며, 시제 협력업체를 시제업체와 함께 시제품 기본설계에 참여시켜 효율적인 시제품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핵심기반기술 구축, 국방 연구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 핵심기술연구수행을 위하여 학계에 국방관련 특화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종결정 방법

- 시험평가와 협상을 통해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 해외업체에 입찰참가 자격 부여
- 업체 간 입찰경쟁에 의해 결정

(4) 주요 획득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체제 구축

주요사업은 사업 착수 전에 사전분석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추진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가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협상과 비용분석기관·부서의 업무수행 절차를 개선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5) 조달본부의 계약전담 기관화

계약업무는 조달본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계약업무를 조달본부로 이관하였다.

다. 국방 전력투자사업 추진현황

(1) 국방 전력투자비 변화 추세 및 영향

국방비의 변화와 더불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전력투자비 비율 또한 1999년의 38%수준에서 2003년에는 33.9%까지 하향조정되어 주요 전력투자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표 4-7】 전력투자비 변화 추세

(단위 : 억 원)

구 분	'00	'01	'02	'03	'04	계
전력투자비 (국방비 중 비율)	53,437 (36.9)	52,141 (33.9)	54,756 (32.5)	57,379 (33.9)	62,930 (33.2)	280,643 (33.9)
적정 소요 (국방중기계획 수준)	59,441	63,761	69,159	75,324	79,902	347,587

(2) 2004년도 전력투자사업

【도표 4-8】 2004년도 주요 전력투자사업

구 분	계 속 사 업	착 수 사 업
C4I·정보전력	· 전술통신체계 · 다중채널 VHF 장비 등	· 조기경보통제기 · 통신중계용 전술 차량 등
기동·타격전력	· 대구경다련장(M/A) · K-9 자주포, K1A1 전차 등	· 기계화보병사단 개편 · 헬기 적외선 영상장비
해상·상륙전력	· 한국형구축함(KDX-Ⅱ/Ⅲ) · 214급 잠수함(KSS-Ⅱ) · 대형수송함(LPX)	· 차기호위함(FFX)
공중·방공전력	· F-15K 전투기 ·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등	· 고등훈련기(T-50) 양산 · F-5E/F 수명연장 등
국내 연구개발	· 한국 여건에 맞는 차세대 첨단무기체계 개발능력 배양 · 차기 전차, 군 위성통신체계 등	

2004년도 국방비 전체 규모는 2003년보다 8.1% 증가한 18조 9,412억 원이며, 전력투자비 규모는 2003년보다 9.7% 증가한 6조 2,930억 원이다.

(3) 중기('05~'09년도) 목표 전력투자사업

전력투자사업의 특징은 적기에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전력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10~20년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전력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표 4-9】 2005~2009년도 전력투자사업 계획

현 수준	중기목표	주요무기체계
 <p>C41 전자전 전력</p>	전술적 감시, 조기 경보능력	전략적 감시 및 조기경보능력 확보
 <p>기동·타격 전력</p>	제한된 중심 전투 수행	중심전투수행 능력 확대
 <p>해상 상륙 전력</p>	제한된 연·근해 해상작전 수행	연·근해, 주요 해상 교통로 보호
 <p>공중 방공 전력</p>	제한된 항공 작전 능력	항공작전 범위 확대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 군 위성통신 등
		· K1A1 전차 · K-9 자주포 · 대구경 다련장 · 대포병 탐지레이더
		· 4천/7천톤급 구축함 · 대형 수송함 · 1,800톤급 잠수함 · 400톤급 고속정 등
		· 공중급유기 · F-15K 전투기 · 차기유도무기 등

라.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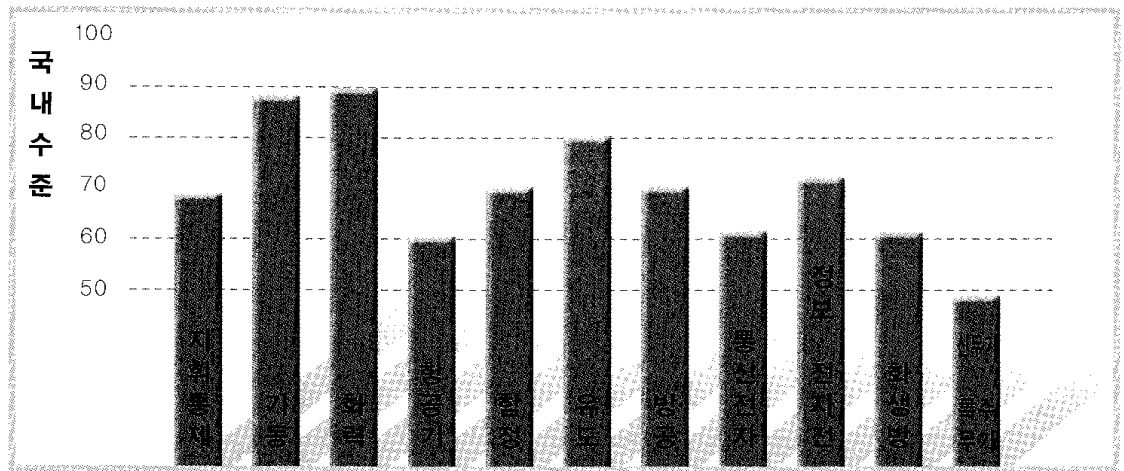
(1) 국방연구개발 정책의 발전

미래전은 고속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비와 인력 중심의 기동전으로부터 지식 기반의 정보전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초정밀 영상정보센서를 탑재한 감시위성, 고감도 복합 수중 음향·비음향 센서를 활용한 수중감시체계, 각종 지능화된 유도무기 등을 획득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핵심기술 보호정책을 강화하여 확고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무기체계 중심의 국외도입에 치우친 면이 많아 국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미흡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 등의 이유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심화되고 첨단장비와 핵심기술을 선진국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도표4-10】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준(2004년 현재)



※ 기동, 화력, 유도무기, 정보·전자전 분야에서는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 유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2004년 국방연구개발의 목표, 발전방향,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 등을 수록한 ‘국방연구개발 정책서’를 발간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0년까지는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습득하여 기술 선진권에 진입하고, 2020년까지는 미래 첨단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위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군의 국방연구개발 정책은 미래 과학기술군 건설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정책에 동시에 부응하기 위하여 핵심전력체계 발전과 기술혁신에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추진 중점사항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째, 국방연구개발체제의 발전을 위해 2003년도에는 범정부적 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 ’03-’07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고부가가치 국방과학기술 개발과제를 반영하였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정책서’에 민간부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방핵심기술 분야는 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이 개발을 주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핵심기술 개발의 아웃소싱을 과감히 확대토록 하였고, 1999년부터 4개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안보 역량강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군사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특화연구센터 5개를 새로 설립함으로써 학계의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핵심기술 개발에 접목시키는 동시에,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토록 하였으며, 학계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방 기초분야 연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 기초연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둘째,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연구소로 육성하여 군의 과학화에 기여하고, 첨단 핵심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며, 관련 핵심기술의 대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분야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에 대한 연금지급 제도인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국방과학연구소를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금수준 향상 등을 포함한 연구원들의 연구여건과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셋째, 국방연구개발 활성화의 선결조건은 무엇보다 국방연구개발비의 절대수준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는 최근 5년간 10%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투자는 그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연구개발비를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의거 국방비 대비 2008년도에 7%, 2015년 1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방연구개발 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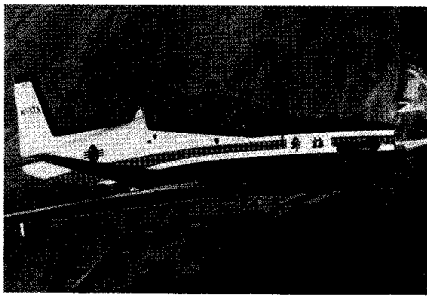
특화연구센터

학계의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핵심기술개발에 접목시키고,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 특정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위촉, 2003년까지 총 352억 원 차원 중 70개 과제에 125개 기관에서 318명의 교수와 1,315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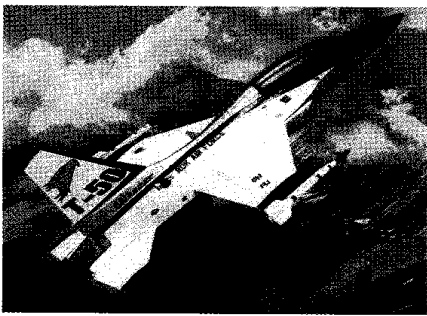
(2) 한국형 첨단무기체계 개발사

우리의 무기체계 개발은 197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화포, 탄약, 통신·전자·기동장비, 해상 및 공중 무기체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이후 60밀리 및 81밀리 박격포, 소화기탄, 박격포탄, 각종 유·무선 장비, 고속정 등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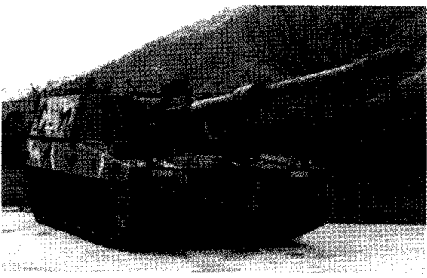
1970년대 중반 이후 기본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에 이르러 기관총, 유탄발사기, 20밀리 발칸포, 전차 성능개량, 105밀리 및 155밀리 견인곡사포, 한국형 전투함, 다련장 로켓 등 일부 고도정밀무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었으며, 1978년 9월에는 사거리 180km 지대지유도탄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 KT-1:
국내 독자개발로 실전 배치한 국내 최초의 항공기 '01년 초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와 수출상담 진행 중



○ T-50 :
국내 항공산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초음속급 고동훈련기 겸 경공격기



○ K-9 신형자주포 :
국내 독자개발로 실전배치한 최대사거리 40km급의 세계 최고수준의 화포

나아가 1980년대부터는 기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과 한국형 무기체계의 개발에 착수하여 한국형 소총, 신형 60밀리 박격포, 155밀리 개량견인곡사포, 장갑차, K-1 전차, 초계전투함, 잠수정, 지대지유도탄, 단거리 함대함유도탄, 30밀리 자주대공포 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84년 개발한 한국형 전투장갑차는 장비의 성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1993년부터 말레이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중동과 동남아 여러 국가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도약기인 1990년대에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밀무기체계의 독자적 개발에 주력하여 포병 사격지휘장비, 반잠수 쌍동선, K731 중어뢰, 전투기용 전자전체계 등의 주력 무기체계와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천마', 공군기본훈련기 'KT-1', 155밀리 신형자주포 'K-9' 등 첨단 고도정밀무기를 잇따라 개발하였다. KT-1은 2001년 초 인도네시아로, K-9 자주포는 2000년 터키로 수출된 이후 현재 여러 국가와 수출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혁신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핵심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선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2000년에는 중어뢰, 군단급 부대에서 운용하기 위

한 정찰용 무인항공기, 2001년에는 함정용 전자전 장비, 2003년에는 함대 함 유도무기 사업을 완성한 바 있으며, 국내 항공산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초음속훈련기인 T-50을 개발하는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다목적 위성, 중고도 무인항공기 등의 감시·정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현무 성능개량, 중거리 대공유도탄 등 중심타격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며, 차기전차, 위성통신, 차기고속정 등 기반전력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21세기 첨단과학군 건설 및 핵심전력 자립화를 위해 C4ISR+PGM을 위주로 지속적인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국내 방위산업 기반 구축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1973년 제정한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완·발전되어 왔으며, 전문·계열화 제도,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 방위산업 육성기금 제도, 계약 및 원가, 조세 특례제도 등이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 방위산업은 고도의 정밀무기까지 생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는바, 2003년 말 현재 82개 업체에서 1,235개 방산물자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방위산업은 더 이상의 내수물량 창출이 어려워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평균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는 등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도표 4-11】 방산업체 경영 실태(98~ 03)

구 분	매출액 (억원)	경상수지 (억원)	가동률 (%)	
			방 산	제조업
1998	33,875	-1,237	52.8	68.2
1999	31,211	-1,287	50.8	76.6
2000	33,359	-1,762	48.5	78.3
2001	37,054	-1,135	50.3	73.2
2002	43,653	164	54.5	76.9
2003	42,693	832	57.3	78.3

이에 국방부는 방위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육성·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전문화·계열화제도를 조정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방위산업 분야의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1983년도 최초 도입되어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전문화·계열화제도는 1999년 이후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의 방산참여를 유도하면서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2003년 현재 전문화 29개 업체 31개 품목, 계열화 48개 업체 86개 품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내 산업기술 발전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문화·계열화 품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핵심전략 및 비익무기체계 위주로 제도를 축소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 전용장비와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보증을 위해 도입·시행되어 온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는 1990년대 이후 국내 민수산업의 발전추세를 반영하는 한편, 기업간 경쟁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가능한 한 무기체계 위주로 방산물자 지정을 억제하고 있다. 이미 지정된 방산물자에 대해서도 2년 주기로 지정 취소여부를 검토하여 다수업체에서 생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지정을 취소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방산물자와 방위산업체 지정현황은 도표 4-12과 같다.

【도표 4-12】 방산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현황

구분	계	화력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합정	통신전자	화생방	기타
방산물자 (품목)	1,235	353	168	168	237	80	144	26	35
방산업체 (업체수)	82	12	8	13	10	7	13	2	17

앞으로도 국방부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을 최대한 억제하여 경쟁 조달에 의해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년 단위의 정기적인 방산물자 지정취소 검토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정취소 검토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군수품 조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방산업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방위산업의 활성화다.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1980년도에 도입한 「방위산업 육성기금」은 2003년까지 연구개발 및 국산화 개발자금, 원자재 비축자금, 방산 유희설비 유지자금 등에 총 3,813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방산업체의 지원 요구에 비해 기금 지원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확대하여 기금 조성책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중소기업청이 운용 중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자금」을 2002년 5월부터 군용물자 부품국산화 개발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조달가격이 해외도입가격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차액만큼 보상해 주는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유인보상제」를 법제화하였고, 방산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의 폐지 및 방산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시한을 2005년 말로 연장하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핵심부품에 대한 개발비 지원, 3군 통합 국산화부품 통합전시회 개최 등 방산업체를 위한 육성 지원정책 및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발굴해 나갈 것이며,

국내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외자유치를 위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허
용할 계획이다.



(4) 국제방산협력 강화

국산 방산물자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도입된 무기의 안정적인 운용보장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방산협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국, 터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21개국과 방산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종전 미국 위주의 방산협력에서 벗어나 유럽, 남미, 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였다. 또한 도입무기의 장기적·안정적 운용보장을 위해 품질보증, 가격정보 교환, 기술자료교환협정 등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산협력 대상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방산협력협정 체결국가와의 정기적인 방산협력공동위 개최를 통해 한국산 방산물자 수출 지원, 국제공동협력사업의 발굴·추진, 선진기술 도입 및 국외도입장비의 원활한 군수지원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미·중동국가 등을 대상으로 신규 방산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가동률 저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의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방산수출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군사외교지침 보완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산수출 확대에 군사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무관의 현지 수출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 지원인력 증원 및 해외방산협력관 신설 등을 통한 국방부 수출전담기구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산수출 유인제도로써 방산수출 마케팅 활동비의 원가 인정, 방산원가 계산시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 배분 제외, 국제방산전시회 참가경비 국고지원 및 한국관 설치운용 등을 적극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각종 홍보수단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전력 위주로 시행되는 서울에어쇼 행사를 2010년까지는 세계적인 육·해·공군 종합방산전시회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과 업체의 노력 결과, 2004년에는 2003년도 수출액 2.4억 불 대비 175% 증가된 약 4.2억 불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세계 방산시장조사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방산수출정책을 수립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출전략 품목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무기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품목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써, 2015년 방산수출 10억 불 달성과 선진국형 방위산업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국제방산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도표4-13】 최근 5년간 방산수출 실적

(단위 : 만 불)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실 적	5,537	23,720	14,300	24,061	41,759

마. 국방획득분야 개혁

정부는 국방획득분야의 범정부적 차원의 점검과 국방부 자체의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 차원에서 국방획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착수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국방획득제도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표 4-14】 국방획득제도 10대 개선과제

· 소요기획의 합리성· 일관성 유지	·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
· 국외도입업무 효율성 제고	· 군 시설 공사업무 투명성 확보
· 국내연구개발 관리체계 개선	· 조직재설계 및 인력운용 개선
· 효율적인 자원운영체계 구축	· 평가체계 개선
· 군수품 조달업무의 합리성 제고	·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10대 개선과제 중 조직재설계 및 인력운용개선 과제에 대해 획득정책과 집행기능을 총괄하고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독립된 조직인 방위사업청(가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10대 개선과제에 대하여 관련부서·기관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이 마련되고 「획득기본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완료되면 2006년 1월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가칭)이 창설될 예정이다.

III 국방정보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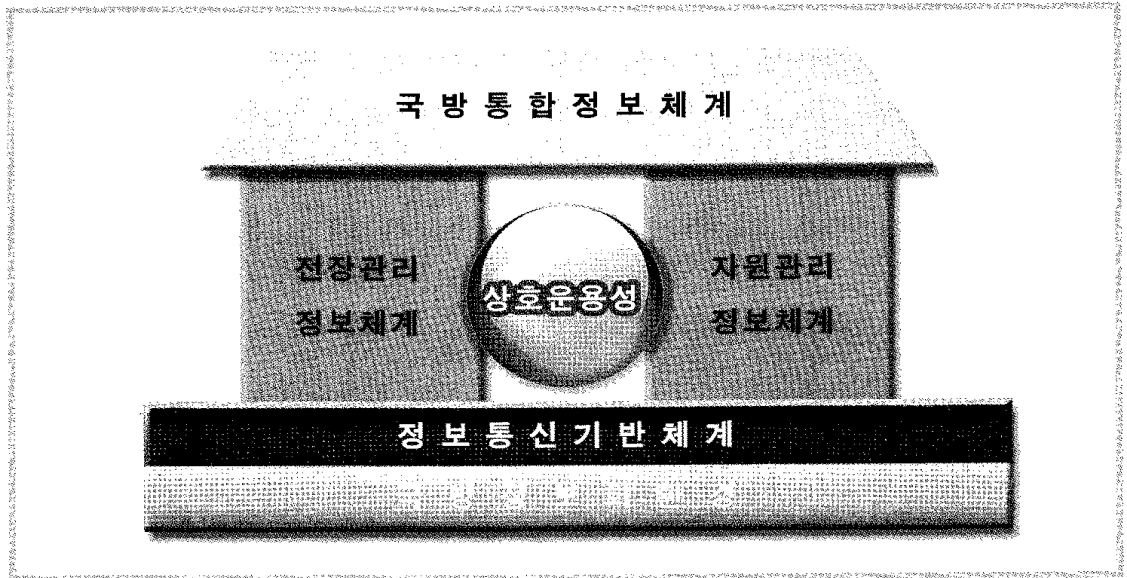
가. 국방정보와 정책 방향

(1) 국방정보화 목표

국방정보화는 정보기술(IT)과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하여 국방업무체계 전반을 정보·지식 중심의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방정보화의 목표는 전·평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실시간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능화된 정보화 군을 육성하는데 있다.

국방정보화는 아래 개념도와 같이 국방정보화 환경과 정보통신기반체계를 바탕으로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자원관리정보체계 간에 정보가 실시간 유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국방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도표 4-15】 국방통합정보체계 개념도



(2) 정책 및 추진전략

국방정보화 정책은 사용자(전투원) 중심의 정보체계를 민·관·군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과 표준화 기반 위에 목표지향적이고 점증적·진화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뜻.
정보화와 관련,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 주변환경에
내재된 모든 사물 및 사람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의미

추진전략은 도표 4-16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도표 4-16】 단계별 추진전략

단 계	목 표	사이버 상담
1단계 ('05 ~ '09)	기반 / 핵심체계 구축	· 정보통신망 중심의 기반체계 구축
2단계 ('10 ~ '15)	통합정보체계 완성	· 유비쿼터스 중심의 기반체계 구축 · 응용체계 성능개량 및 체계 통합 · 유비쿼터스 환경 구비
3단계 ('16 ~ '20)	차세대 선진체계 구축	· 지능화된 선진 정보체계 구축

나. 국방정보화 환경개선

국방정보화 환경은 제도와 절차, 조직과 인력, 상호운용성과 표준화, 민·관·군 협력체제 유지 등으로 구성되며,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제도와 절차는 국방기획 및 획득관리 문서체계 상의 관련 지침을 제정·개정하며, 정보화사업 평가와 감리절차를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최신 사업관리 기법과 제도를 도입·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조직과 인력 운영은 고위정보화책임관(CIO) 제도를 활성화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 기술연구를 위한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보강하는 것이다.

셋째,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는 국방정보체계와 정보자원의 범군적인 공유 및 공동 활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통운영환경과 자료공유환경을 구축하며, C4I체계를 중심으로 감시·타격 등 무기체계와의 체계통합을 추진하고,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인증체계도 구축한다.

넷째, 민·관·군 협력체제 유지는 국가정보화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협의체 발족을 추진하며, 군 정보화 업무와의 기술교류를 위해 국방정보화 기술 심포지움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

다. 정보통신 기반체계

정보통신 기반체계는 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 정보보호체계로 구성된다.

(1)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통신망은 정보의 공유와 대용량 멀티미디어(음성, 문자, 영상 등) 정보의 실시간 유통을 보장하는 통합된 망을 구축하여 전략통신체계와 전술통신체계로 구분, 운용되고 있다.

체계 구축은 국가 초고속통신망(BCN) 구축계획 및 응용체계 개발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차세대 국방정보통신망(국방NGN)을 설계한 후, 차세대 국방정보통신망으로의 체계전환을 추진하고, 이후 유비쿼터스 중심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 컴퓨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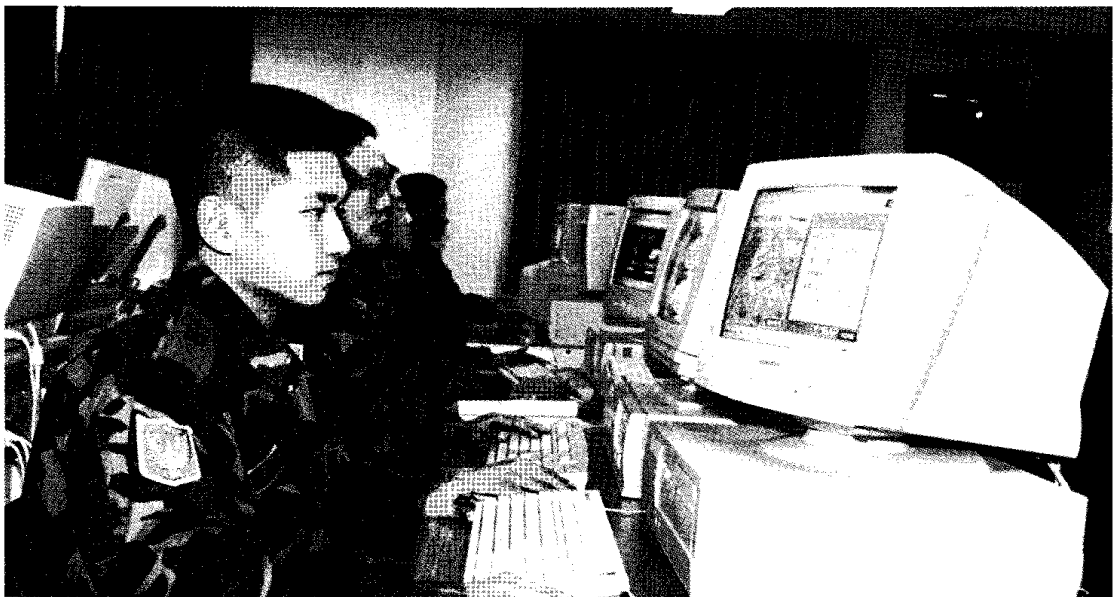
컴퓨터체계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Mega Center) 구축과 연계하여 주전산기 및 개인용 컴퓨터(PC) 등의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메가센터 구축은 전군에 분산된 전산실과 주전산기를 61개소의 전산센터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군별로 시험센터 1개소를 구축하였고, 단계적으로 메가센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컴퓨터체계의 보급에 있어서 주전산기는 Mega Center 개념과 연계 추진하고, PC는 실무자 1인 1 PC를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 군의 보급율은 PC는 94%, 주전산기는 96%수준이고, 2007년까지 100% 보급될 예정이다.

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유·무선망, 인터넷망,
방송망의 통합된 구조로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
터의 유통이 가능한
광역대역 기간망

NGN :
Next Generation
Network
국방 전산망, 마이크로
웨이브망 등 다수의
기간망과 각 제대별로
구축된 지역망이
상호 연동된 차세대
국방정보통신망



(3) 국방정보보호체계 구축

국방정보보호는 정보자산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탐지, 차단, 복구 및 대응하는 것으로서, 특히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실시간 대응 등 정보보호활동 수행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국방정보보호체계는 국방부와 각 군을 중심으로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반(CERT)를 운영하는 한편,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대한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전군 단일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체계에 대한 위협요소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적 사이버 전 침투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작전방호태세(INFOCON)에 따라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을 목표로 하는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관·군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유사시 관계기관들과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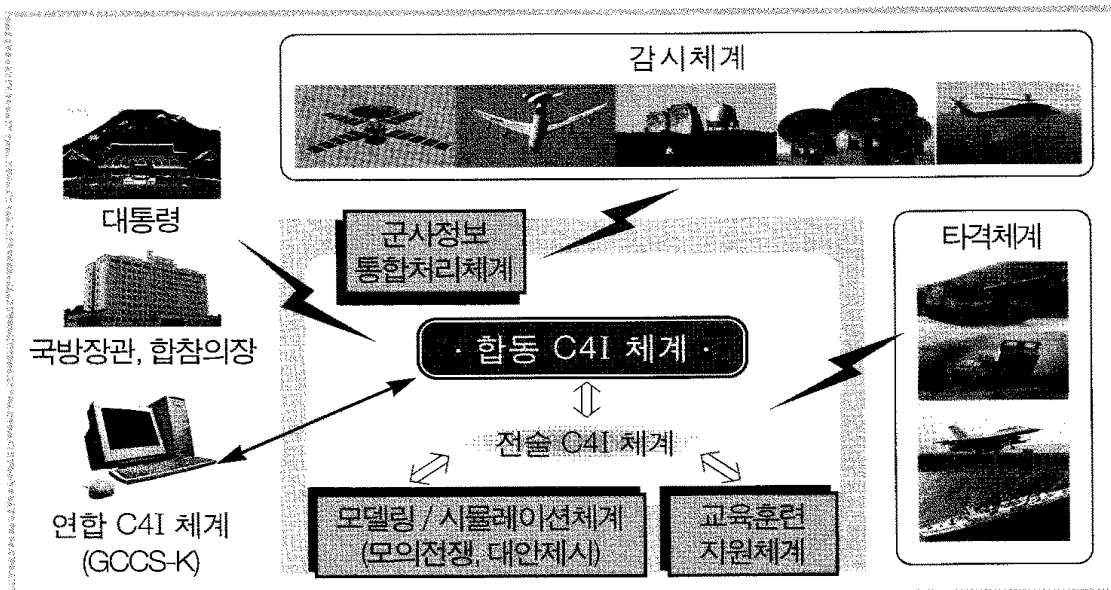
CERT :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반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INFOCON :
정보작전 방호태세
Information Operations
Condition

라. 전장관리 정보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는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타격’ 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 및 타격체계와 연동·통합하여 적시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합동C4I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총력전과 한미 연합작전을 위한 국가비상기획체계 및 연합C4I체계와의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표 4-17] 전장관리정보체계 개념도



GCCS-K :
Global Command and
Control System - Korea

(1) 합동C4I 체계

합참은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의 주요 전략 및 작전부대의 지휘소 기능을 자동화하고 예하 전술부대와 의 전문을 송·수신할 수 있는 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개량한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개발을 추진하여 개념연구를 완료하였고, 체계개발을 추진하여 관련부대를 대상으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C4I체계의 실시간 전 제대 정보공유 및 유통이 가능토록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장 개념구현을 위해 군 작전지역을 수치화하여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 전술C4I체계는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전장기능을 자동화하여 실시간에 전장을 확인하면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1개 군단을 대상으로 체계를 개발하여 전력화한 후 전 군단을 대상으로 전력화를 추진한다.

해군 전술C4I체계는 현재 운용 중인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를 기반으로 해상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통합적인 해상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군 전술C4I체계는 작전제대별 지휘관 및 작전요원의 상황판단, 의사결정 등 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핵심체계로서 현재 운용중인 전구항공통제본부(TACC)와 중앙방공관제소(MCRC)의 자동화방공체계와의 연동 및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2007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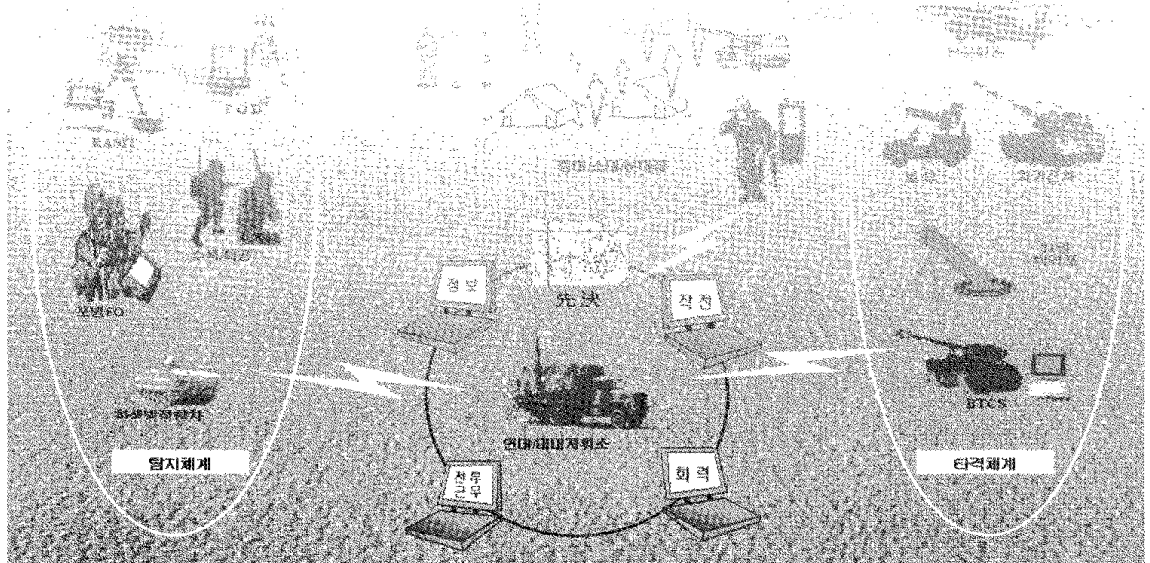
CPAS :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

KJCCS :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KNTDS :
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

TACC :
Theater Air Control
Center

MCRC :
Master Control &
Reporting Center



(2) 국방모델링 & 시뮬레이션체계

국방부는 장기적인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체계(Modeling & Simulation) 종합발전 구상을 바탕으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군사교리, 전장운영개념, 부대구조 및 작전계획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체계와 이를 통한 무기체계 획득 단계별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및 연구개발 시뮬레이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시뮬레이션은 육군의 사단 및 군단급 훈련모델 ‘창조21’ 등 제대별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합참, 각 군별, 제대별, 전장기능별 훈련 시뮬레이션체계의 확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대 훈련은 전장의 실상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훈련장을 전장화함으로써 간접경험을 통한 전장적응능력과 전술·전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대대급 과학화훈련장(KCTC)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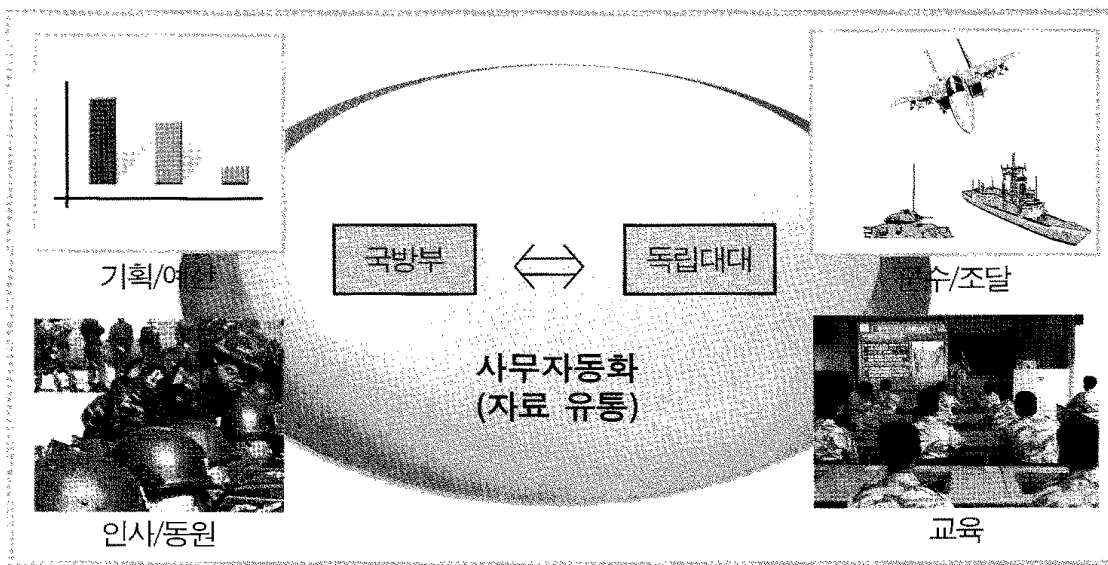
KCTC : 과학화훈련장
 Korean Army
 Advanced Combat
 Training Center

마. 자원관리 정보체계

(1) 기본계획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방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자원관리 정보체계의 통합을 목표로 체계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표 4-18】 자원관리정보체계 개념도



(2) 체계 구축 현황

그동안 각 분야별로 구축되어 온 각종 정보체계들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계획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이러한 자원관리 정보체계들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표 4-19] 자원관리정보체계 추진 현황

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구분	운영 현황	발전 계획
인사정보 체계	각 군 및 기관별로 단위체계 개발, 운영중	업무절차개선(BPR) 연구 재정립 후 전군 차원의 통합 구축
동원정보 체계	단위업무별 개발, 운영중	업무절차개선(BPR) 연구 재정립 후 핵심업무 위주 통합 구축
의료정보 체계	11개 병원 체계구축 완료	단계적으로 국군의무사 예하 전 병원에 확대 설치
군수정보 체계	탄약정보체계 및 물자정보체계 개발, 운영중	장비정비정보체계는 물자정보체계 개발 후 군수 관련 정보체계를 통합하는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전자조달 체계	중앙조달 및 부대조달로 구분하여 추진중이며, 중앙조달은 국방부 조달본부가 통합 데이터 베이스체계 및 전자문서교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중	전자정부체계(G2B) 및 국방재정정보체계와 연계한 국방전자조달체계를 확대 구축
시설관리 체계	부동산 및 시설 관리, 국토이용 협의업무 등 개발 운영중	각 군 시설 관련업무의 실시간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
전자행정 체계	국방사무자동화체계를 웹(Web) 기반의 신체계로 보완, 전군 및 정부 부처간 전자문서 유통 단일화 실현	기록물처리 전자체계 구축 후, 자료관 시스템 및 기록물 보존 시스템 구축 예정

IV 국방인력 육성

가. 국방인력 육성방안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정세와 과학기술 및 첨단무기체계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방인력을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체제의 발전과 전문인력 육성 및 여군인력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효율적인 인력운영체제 발전

군 인력운영 기본개념은 21세기 전장환경에 부합한 군사전략을 구현할 수 있고, 전투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효과성에 근간을 두고 균형된 인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군 하부구조 강화를 위해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우수 초임장교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학군장교 양성체제 및 군 장학생 선발방법 등을 개선하여 임관구분 별로 균형되게 적정인원을 획득·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적정인원의 진출을 고려한 장기 복무 인원선발과 적절한 인력순환을 위한 명예진급 및 퇴직, 진급적기 경과자 취업지원 등 군 조직의 효율성과 활성화에 목표를 둔 인력운영 체제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 훈련부사관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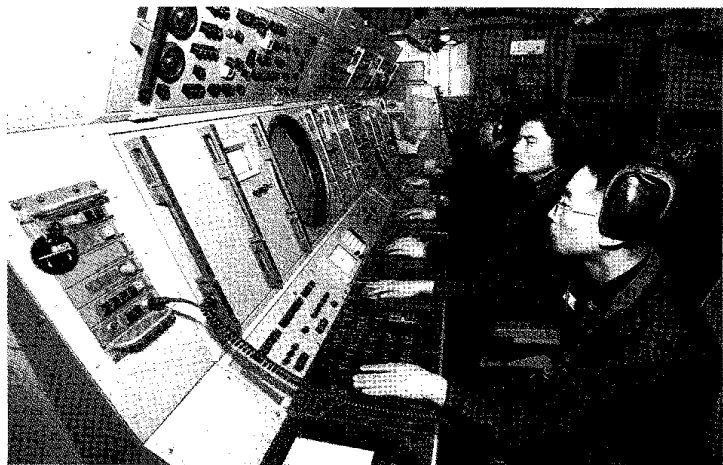
【도표 4-20】 초임장교 양성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사관학교	3사교	학군교	학사사관	간부사관	기타
'03년	8,628	625	450	3,667	2,666	200	1,020
'08년 이후	8,668	485	500	4,777	1,736	150	1,020
증감	+40	-140	+50	+1,110	-930	-50	0

또한 군 조직의 특성상 다른 조직에 비해 생애주기가 짧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발-임용-복무-전역 및 재취업보장」의 과정이 연계된 인력 운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사법령을 통합하여 검토 및 보완해 나가고 있다.

(2) 국방전문인력 육성



○ 기술·기능 전문인력

첨단 디지털시대를 맞아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전쟁양상의 변화 속에서 장차전을 주도할 전문성을 갖춘 국방전문인력의 육성·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육군에서 최초로 시행해 오던 국방전문인력 육성제도를 2002년부터 전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방전문인력은 국방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정책전문직위’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협상·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국제전문직위’, 특정분야에 고도의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활동이 요구되는 ‘특수전문직위’, 그리고 군 고유의 전문 기술·기능 및 직무지식이 요구되는 ‘기술·기능전문직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3) 여군인력 활용

각 군은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확대’ 정책에 따라 2000년부터 여군인력을 다양한 분야에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1999년 2,085명(장교 및 부사관)이었던 여군인력이 2004년에는 3,689명, 2020년에는 7,038명 수준으로 증원되어 간부정원 대비 1.4%에서 5%로 확대 운용될 전망이다.

【도표 4-21】 여성인력 운영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1999년 12월	2,085	2,021	34	30
2004년	3,689	3,002	194	493
2020년	7,038	5,030	1,023	985

이를 위해 2004년도에 각군 사관학교 입학정원의 10%를 여성인력으로 모집하였다. 또한, 여군학사(여군사관)장교를 육군 153명, 해·공군 각 18명씩 선발하여 임관시켰으며, 여군 부사관은 육군 200명, 해군 40명, 공군 90명을 선발하여 임용할 예정이다.



육·해·공군은 여군 활용 확대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대와 직위에 남녀 차별 없이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여 전문성과 여성특성에 부합된 직위에 우선 보직하되, 전투함 승조원·전투기 조종사 등의 전투병과 직위뿐만 아니라 법무·군의·수의 분야에도 우수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여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적(性認知的·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여군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복무여건을 보완하고 여성의 생리적 특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제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정예장병 육성을 위한 교육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정예장병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확보와 함께 획득된 인력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교육발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학교교육 개선

군은 그 동안 학교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기관의 구조와 기구를 재편하고 교육과목과 내용을 전투실무에 연계되도록 재정비함으로써 교육이수 후 야전과 실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군이 요구하는 우수한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생도 교육과 학군 및 학사장교의 양성교육 제도를 개선하였다. 사관학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합된 교육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인력구조에 부합되도록 생도 정원을 축소하였다.

학군·학사장교 후보생은 대학교육 중 안보 및 군사학분야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 우수자원을 양성하고, 2005년부터 군사안보 관련 학과를 15개 대학에 개설키로 하여 군사학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미래전에서는 전투력의 통합운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에 군은 합동참모대학 중심의 합동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 비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교육중인 공군사관생도



○ 육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



○ 해군사관생도 공학실습

2004년부터 합동참모대학 교육인원을 증원하고 우수한 장교가 입교할 수 있도록 선발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수료 후 이들 대부분은 국방부·합참·연합사 등의 정책부서에 보직 관리되고 있다.

한편, 정보화·과학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보조교육(CBT:Computer-Based-Training) 및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과 병행하여 군내 원격교육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 국내·외 위탁교육 확대

위탁교육은 국방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간부의 자질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학위교육은 정책부서, 학교기관 및 연구부서에 활용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석사 및 박사과정에 해마다 420여 명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 기계, 항공우주, 신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500여 명 수준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외 군사교육은 지역전문가 양성과 선진 군사지식 습득을 위해 선진군사강국에 사관학교부터 국방대학교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자원은 관련 직위에 반복하여 보직관리하고 있다.

(3) 민·군 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교육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교육기관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각 군과 국방대학교를 중심으로 민간대학 및 연구기관과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4년 말까지 우수 민간대학 131개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수 상호지원, 학술정보 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등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에게 더 나은 취학 여건을 보장해 주고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56개 부대 내에 43개의 민간대학(원) 분교를 개설·운영하게 되었다.



○ 민·군 교류협력체결식

(4) 군사교육 학점 및 자격의 인정 확대

군에서 받은 각종 군사학교육은 대부분 첨단과학 분야의 수준 높은 기술교육이며 국가가 공인하는 학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2003년도에 최초로 육군 11개 병과학교가 학점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부터는 군사학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군은 1975년부터 국가 기술자격검정시험을 노동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약 25만 명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였다.

【도표 4-22】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1975~2003)

(단위 : 명)

구 분	계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75~79	35,381	2,313	16,747	16,321
80~89	77,683	15,724	49,320	12,639
90~99	97,100	12,850	84,250	-
00~04	41,179	6,349	34,830	-
계	251,343	37,236	185,147	28,960



제6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군인은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의 임무수행에는 항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오지이거나 벽지이다.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은 잦은 이사로 자녀 교육과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짧은 정년과 전역 이후 재취업 제한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 실정이다. 주둔지 내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의 주거시설도 낙후된 것이 많고, 여가시설은 근무인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방부문이 우수한 인력을 유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안보의 확보라는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장병들의 군복무 의욕 고취와 사기 증진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증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군인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 국민주택 규모의 군관사 확보, 침대형 내무반과 병영생활 여가시설 설치, 장병 급양 향상과 피복 품질 개선, 의료환경과 군 복지 운영체계 개선, 군 자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장병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더불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군인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직업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I 장병 근무여건 개선

가. 장병 처우개선

(1) 군인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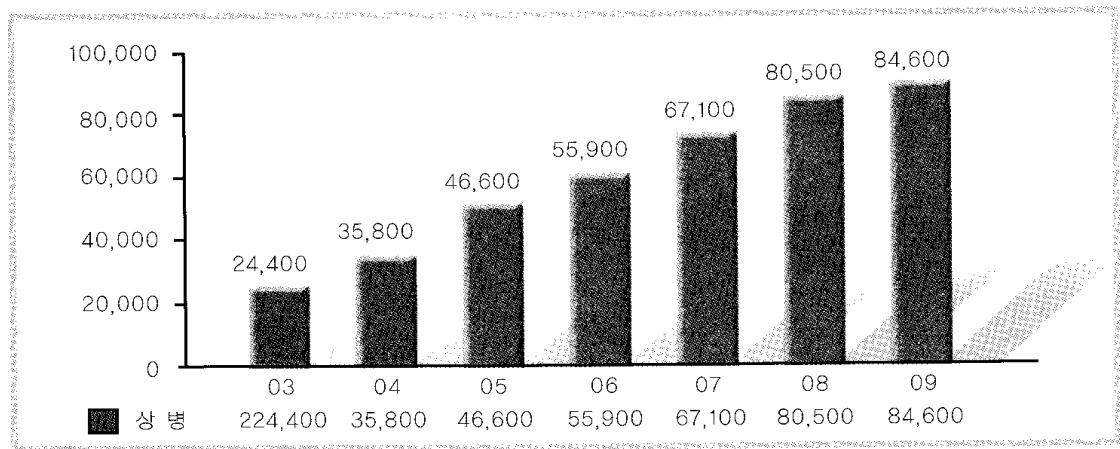
현행 군인의 보수는 「군인보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군 복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기퇴직, 재취업 곤란, 자녀교육 제한 등 열악한 군 복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군인보수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적용해 나가야 한다.

향후 군인의 봉급 수준은 민간 중견기업 임금 이상 수준을 목표로 하되 추가 인상요인을 전문기관의 연구 및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설정하고 적정 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해 「군인보수법」을 근간으로 하는 「군인보수법시행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병 봉급은 2004년부터 2003년도 대비 47%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병영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경비 수준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08년에는 8만원 수준까지 이를 전망이다.

【도표 4-23】 병 봉급 인상(상병 기준)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제도를 도입하고 군별·병과별로 수당 수혜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빈번한 야외훈련, 접적작전, 고도의 숙련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야외숙영 수당, 접적지역 특수작전 수당, 군의관 특별진료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개발하는 한편, 잦은 이사, 별거 생활, 열악한 복무환경에 따른 추가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해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가족 별거수당, 일·숙직수당 및 부서관 장려수당 등을 신설 또는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



특수한 군의 복무환경

아울러 현재 군 양성 교육기간을 호봉에 50%만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2) 장병 급양 향상과 피복류 품질 개선

신세대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면서 충분한 영양이 섭취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단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종래의 '양' 위주에서 '질' 위주 급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비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민간 대비 90%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표 4-24】 장병 기본급식비

(단위 : 원/1인 1일)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군 (민간대비)	4,032 (80%)	4,184 (80%)	4,271 (79%)	4,665 (84%)	4,665 (82%)
민 간	5,071	5,224	5,380	5,568	5,701

이에 따라, 군은 2004년부터 돼지갈비, 삼계탕, 비엔나소세지, 계맛살 등을 급식하고 2005년도에는 스파게티, 냉면 등 신세대 취향에 맞는 음식을 새로 보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늘리되 상대적으로 기호도가 떨어지는 메뉴는 줄이는 방식으로 병사들의 입맛에 맞춰 나갈 예정이다.

피복류는 사회의 의류발전 추세에 맞추어 군 피복을 연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병의 품위유지와 전술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피복류 품질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2004년에는 부드러운 천연가죽을 사용하여 착용감이 좋은 개선전투화와 하절기 근무여건을 고려한 재질이 가볍고 통풍성이 뛰어난 하전투복 지급 등 병영생활에 불편을 주는 품목부터 우선 개선하여 지급하였고, 런닝·팬티·동내의 등의 품질을 시중상품 수준으로 향상하여 2005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도표 4-25】 피복류 품질개선 5개년 계획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품 질 개 선	전 투 화 하전투복 슬 리 퍼	런 닝 / 팬 티 동 내 의 모 양 말 정복류('05-'08)	면/손수건 방상내피 매트리스 단 화	동운동복 침 낭 특수헬멧	형상기억피복

나. 병영시설 및 의료환경 개선

(1) 간부숙소 및 병영시설 개선



○ 민간아파트 매입

국민의식과 주거생활수준 향상 등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협소하고 노후한 군 간부 숙소와 병영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00년부터 관사 및 아파트 등 '간부숙소 개선 3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총 8,777억 원을 투자하여 15평 이하의 협소한 관사와 25년 이상의 노후 관사 12,378세대를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노후·협소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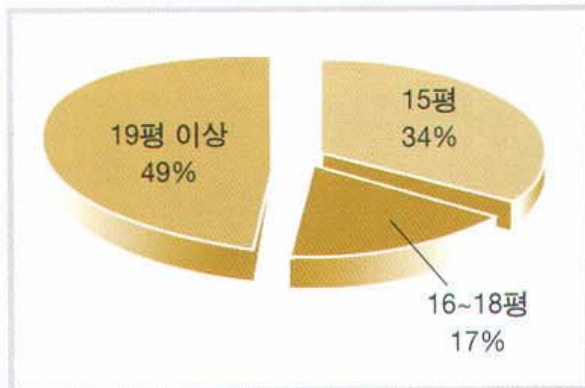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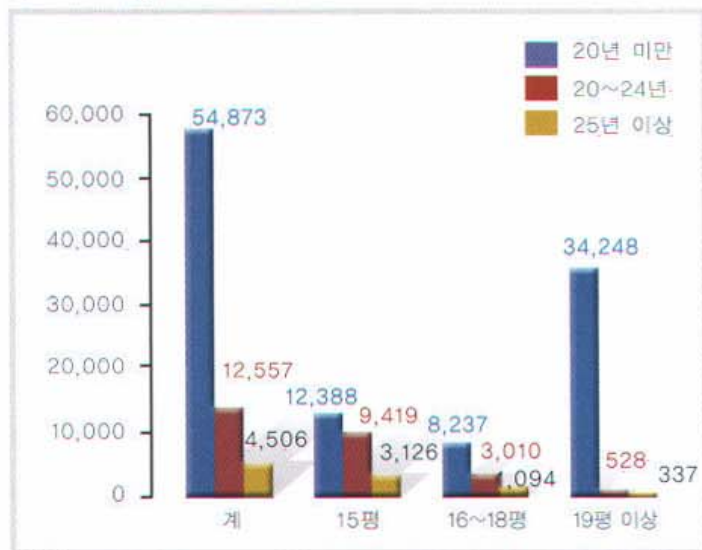
사가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까지 노후 및 협소한 관사를 국민주택규모 수준인 24~32평형 규모로 26,071세대를 개선할 계획이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건립을 최소화하고 매입이나 전세를 확대하고 있다.

독신간부 숙소는 25년 이상 된 노후 숙소이거나 소요에 비해 부족한 숙소가 39%를 차지하며 1실 당 2~3명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까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25년 이상 된 노후 숙소를 개축하거나 부족한 숙소를 신축하여 1인 1실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표 4-26】 군 관사현황

(’04.1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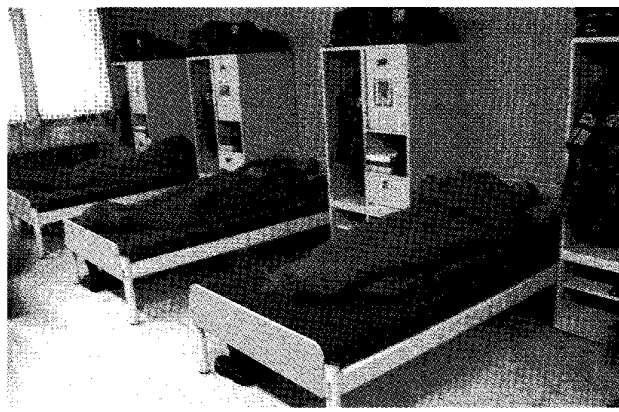
한편, 병영시설은 병사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참여정부 기간 안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무반은 신세대 장병들의 성장환

경을 고려하여 1인당 전용면적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소대단위 침상형을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04년에는 3,822억 원을 들여 GOP와 해·강안 경계부대의 내무반 168개 동과 75개 대대 통합막사를 개선하였다. 병영시설 개선사업은 단계화하여 전방지역 및 현대화되지 않은 노후막사를 '09년까지 우선 개선하고, 이후에는 이미 현대화 개수된 침상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내무반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 침대형으로 지속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가활동과 장병편의를 위해 중대단위 PC방과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샤워실 및 세탁실 등을 개선하며, 여군 전용 편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장병들의 주거환경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투력 향상의 근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소대단위 침상형 내무반(개선전)



○ 분대단위 침대형 내무반(개선후)

(2) 의료환경 개선

현역병이 휴가 중 부득이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198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군 병원시설 현대화 사업은 18개 부대를 완료하였으며, 광주병원 등 3개 병원은 2008년까지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군수도병원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복무 군의관 중 진료전담 임상직을 선발하여 2009년부터 보직시키고, 민간의사, 간호사 및 기타 우수한 의료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계약직 군무원 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2004년부터 5년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선진 의료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다.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1) 군 면세제도

군 면세제도는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면세율 인하, 가전제품 특소세폐지 등으로 면세효과가 아주 적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류에 대한 면세물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내구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병사가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면세혜택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생활필수품, 음료수 및 과자류 등 1,400여 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있다.

(2) 군자녀 교육 지원



○ 군 자녀 기숙사(무열학사)

직업군인은 군 복무 특성상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가족과의 별거생활 등으로 자녀교육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 자녀를 위한 기숙사 시설 확충과 대학 특례입학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자녀 기숙사는 전국 10개 도시에 12개소를 운영(총 1,968명 수용)하고 있으며 2007년 서울지역에 약 400명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군인자녀 ‘대학 특례입학제도’는 1999년도 3개 대학에서 2005년도에 60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학특례입학 대상대학을 국립대학교와 전문대학교까지 확대하여 전 계급의 자녀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대학 특례입학 관련 정보 ☞ 호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hoguk.or.kr

(3) 휴양시설

현재 군은 8개소의 중앙휴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민간콘도 회원권 2,008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구좌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직업군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현재 27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육군은 대전시 지역에 1개소를 2004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공군은 서산비행단에 9홀을 18홀로 증설할 예정이고, 군인공제회

에서는 경기도 화성지역 등에 3개소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휴양시설은 벨트개념으로 한 지역에서 휴식과 레저활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국내 주요 관광지역을 권역별로 세트화(복지회관, 휴양소, 콘도, 골프장 등)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 휴양시설 정보 ☞ 국방복지 포털 사이트 : www.imnd.or.kr

라. 군 복지운영체제 개선

(1) 복지시설 통합운영

군 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각군 및 예하 부대 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각군 복지단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현역은 자신의 부대에 재배치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복지시설의 관리는 근무원으로 대체하여 경영개선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통선 이북지역, 격오지, 함정 등에서는 현역을 운용할 계획이다.

군은 온라인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2003년도에 육·해·공군의 모든 복지시설을 통합하는 인터넷 국방복지 포털사이트(www.imnd.or.kr)를 구축하여 현역은 물론 예비역이나 군인가족이 군 복지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군은 직업군인의 계층별 복지수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공무원 복지제도의 기본 모델로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신에게 할당된 금액 한도 내에서 자신이 필요한 복지 종류를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복지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2004년 하반기에 국방부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였으며, 2005년부터 전군에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3) 복지기금의 투명성·효율성 증진

복지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군인복지기금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운용지침 및 내용과 성과를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를 통해 2005년부터 공지할 예정이다. 군내 편의시설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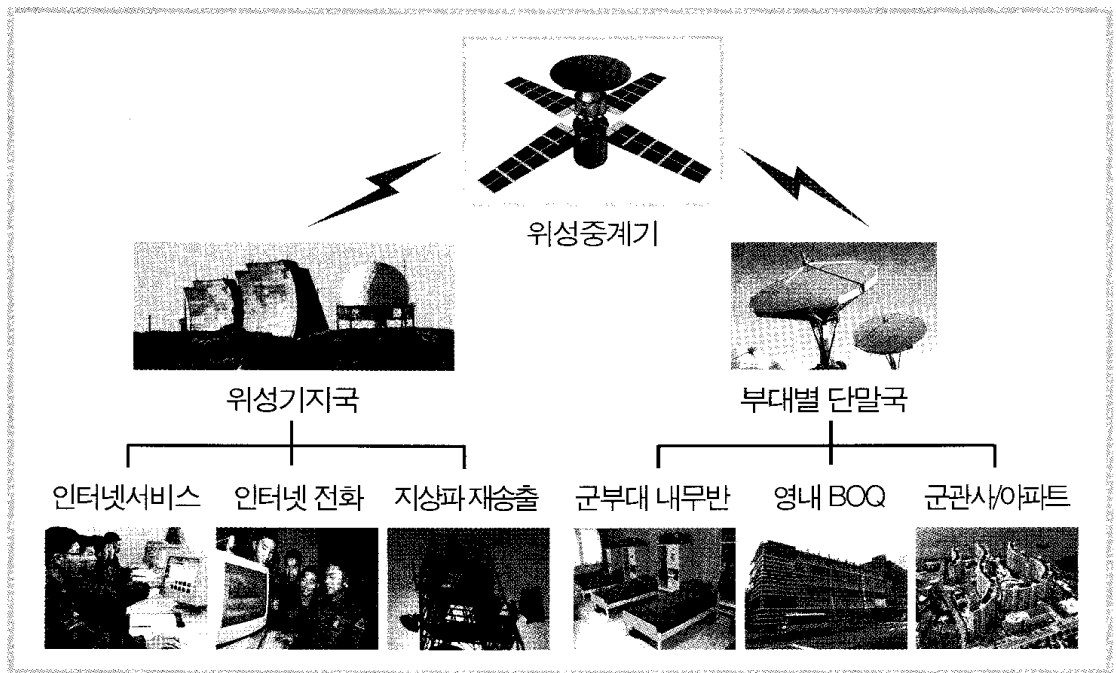
복지매장의 수익금 보고, 판매 및 재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시점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POS 체계는 판매 및 재고현황이 판매시점으로부터 각 군 복지단에 이르기 까지 실시간 처리되는 시스템으로서 현금과 쿠폰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4) 통신위성시스템을 이용한 신개념 지식복지 제공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과 군인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신지식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 전용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TV방송 및 전화 등의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통신위성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표 4-27】 양방향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도



이에 따라 중대 내무반까지 대도시와 동일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위성 인프라를 확대·보급하여 2006년까지 전 중대까지 설치함으로써 장병들의 정보화욕구를 해소시키고 복무 만족도와 사기 양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II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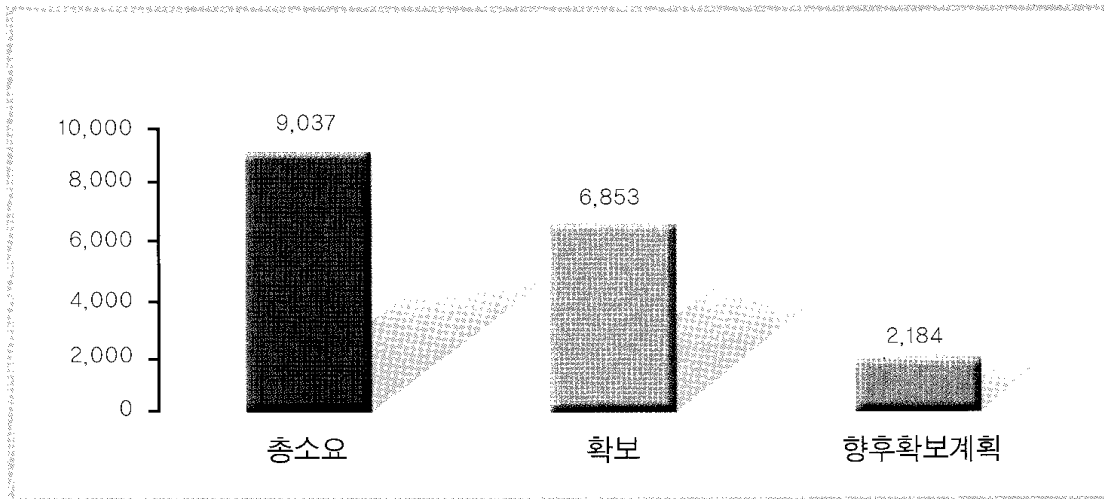
가. 취업지원의 기본방향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상’이다. 직업군인은 생애 최대 지출기인 4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에 대부분 전역하게 되어 사회 재취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최근 4년간 평균 취업률은 29.4%로 대부분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보장하고, 현역은 국가안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표 4-28】 취업직위 확보현황

(단위: 직위수)



제대군인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국방취업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다.

취업지원 정책방향은, 첫째,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 군내·외 취업 직위를 확대하여 취업을 보장토록 지원하고, 둘째,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는 직업보도교육을 통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군 관련 및 민간분야 직위에 제한된 취업을 지원하며, 셋째, 10년 미만 중기 복무자는 구인·취업정보안내 등을 통하여 취업여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업지원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직위 소요를 판단하여, 전문성과 군 경험이 충분한 제대군인들을 군

교육기관의 전임교수로, 군의 과학화훈련 확대방침에 따라 훈련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을 과학화훈련 교관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군 복지시설 관리요원, 예비군지휘관, 산하기관 등 취업직위를 확대·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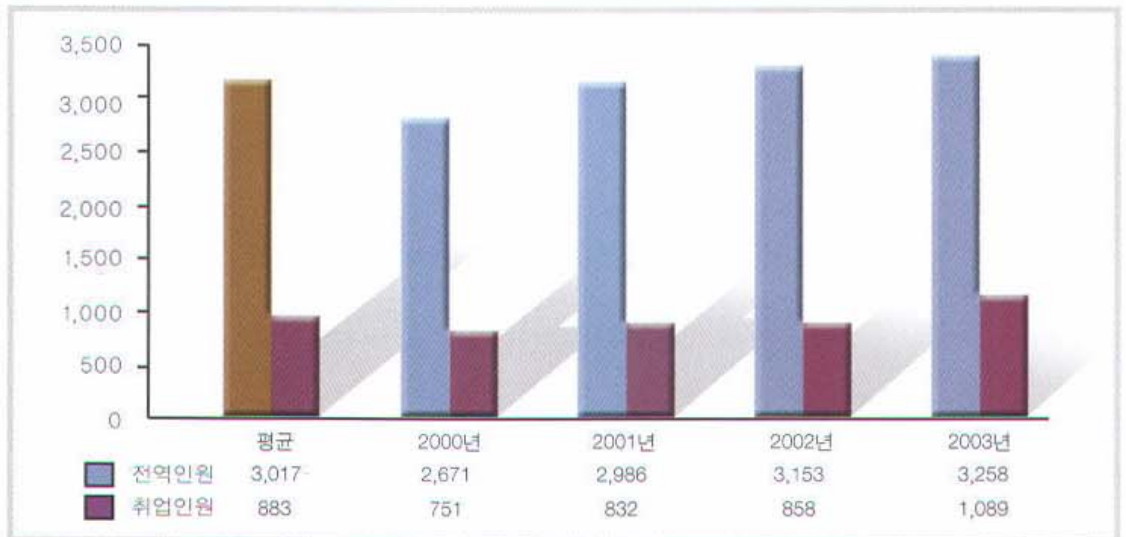
전역장병 취업상담



전역예정 간부를 위한 취업설명회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경영 차원에서 군에서 육성된 인재를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도표 4-29】 장기근속 제대군인의 취업 현황



그 결과 2003년도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은 전년에 비해 231명이 증가한 1,089명이 군 관련 직위에 취업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업지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 제대군인 직업보도교육 확대 시행

이 밖에도 군은 제대군인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고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

전역 1년 전부터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군 복무 중에는 자기계발 및 생활화 교육을 통하여 1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직지원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별 적성 분석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취업지원센터'는 구직 희망자들에게 접근 용이성과 관련 업체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03년 8월 용산역 부근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전역 및 전역 예정자들에게 정보제공 및 상담,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국방취업지원센터

Ⅲ 군인연금제도의 개선

가. 군인연금제도의 특성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이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퇴직,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과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1월 1일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포함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군 복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1963년 1월 2일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였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대비, 작전 및 훈련, 잦은 이사 등으로 사생활이 제한된다. 직업 안정기인 45~56세 정도에 진급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전역하며, 전역 후에는 복무 중 취득한 지식이 사회와 부합되지 않아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9년 이전 기간에 대하여 기여금 납입 없이 연금기간에 포함하였으며, 6·25전쟁, 월남전 등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조기전역으로 타 연금수급자에 비하여 연금수혜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의 사유로 시행초기부터 적정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 군인연금법 개정 공청회

연금수급자가 발생하였다. 이때문에 1973년부터는 연금운영에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에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군인연금제도 개선 노력

이에 정부에서는 군인연금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000년도에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개인 및 국가부담률을 각각 7.5%에서 8.5%로 인상하였고, 연금인상방식을 재직자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연금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로 지원토록 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도표 4-31】 개인 및 국가부담률 인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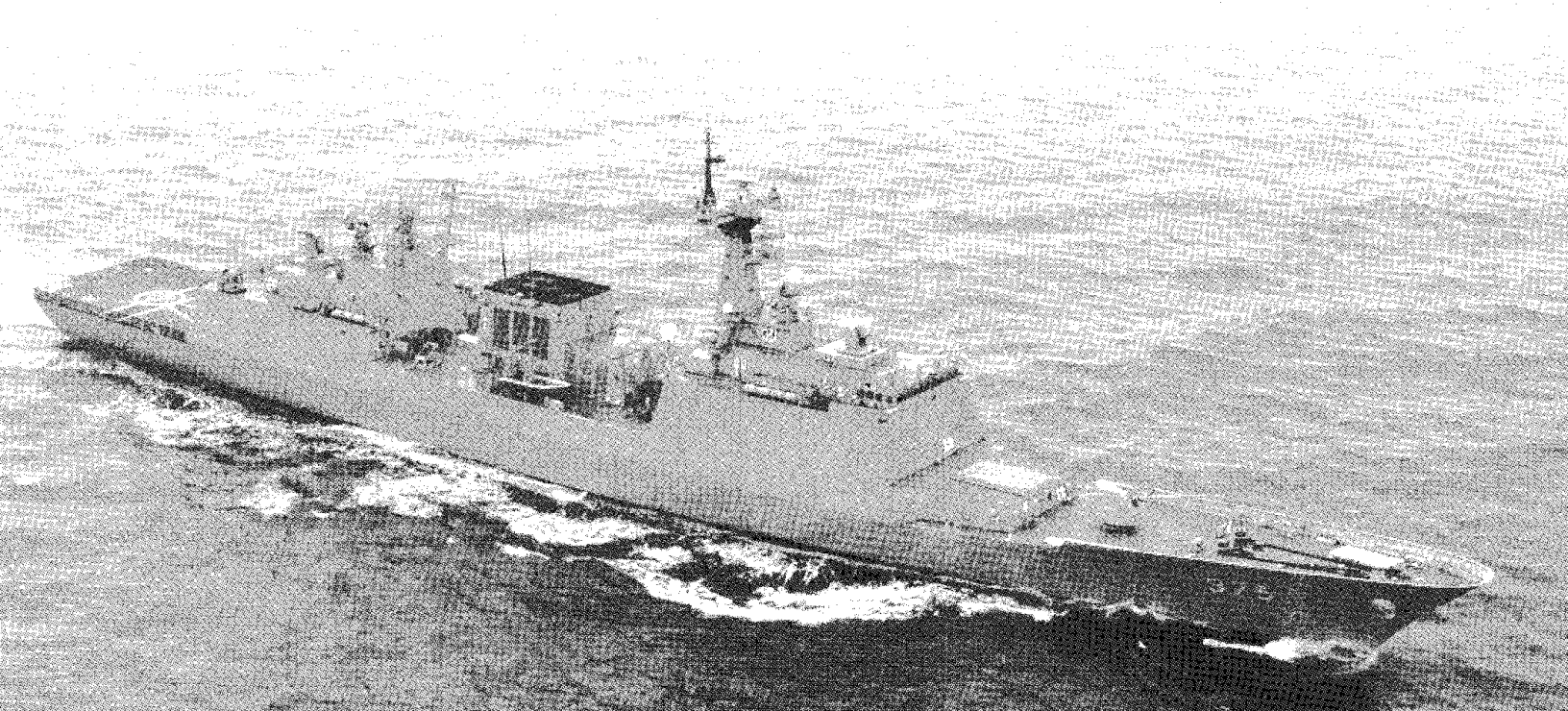
구 분	63	70	96	99	01 시행
부담률(%)	3.5	5.5	6.5	7.5	8.5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정기금을 적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연금체계를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인연금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여 기금을 적극 증식함으로써 연금재정을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목적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지휘통제체계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각 군별로 보면 먼저, 육군은 기동전 수행 및 종심 타격능력 향상을 위한 부대의 기계화 개편, K1A1 전차·신형 155밀리 자주포 전력화 사업 등,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4,000~7,000톤급 구축함과 차기 고속정, 1,800톤급 잠수함의 전력화 사업 등, 공군은 원거리 항공작전능력을 확보하고 핵심시설 방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F-15K 전투기, 차기 유도무기 전력화 사업 등을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연구개발 분야는 다목적 헬기, 중고도 무인정찰기, 방공 지휘통신 체계 등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통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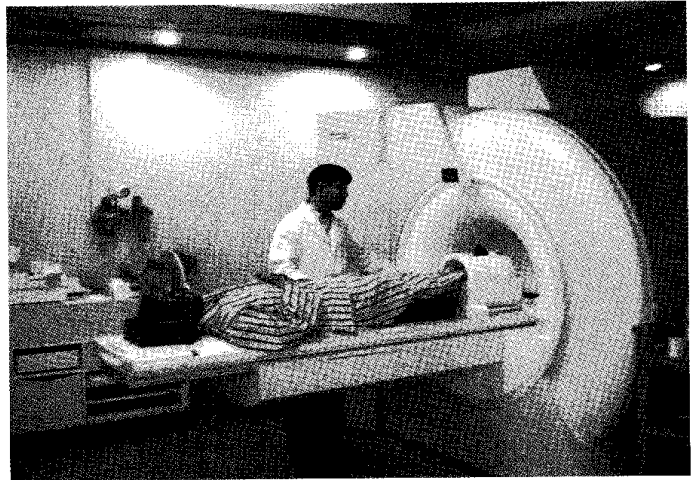
(2) 경상운영 분야

경상운영 분야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국방 정보화 및 교육훈련 강화, 현존 전투력 운영유지 소요 충족, 그리고 국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병들의 내무반을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 단위의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노후화 된 간부 및 독신자 숙소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병사들의 봉급을 2008년까지 월 8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 정보화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는 근거리 및 광역 전산망, 국방통합정보관리소(Mega Center) 구축 등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요원 양성과 간부 자질향상 교육을 확대 하도록 하였다.

현존 전투력 운영유지 분야는 교육용 탄약, 장비운영 연료 등의 필수소요를 보장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는 오·폐수 처리시설, 소음방지 시설 및 토양오염방지 시설 등 환경보전 시설을 2009년까지 완비하고,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정리, 사격장 및 탄약고 주변의 민가 이전 등 주요 민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였다.



○ MRI 진료



○ 지대공 미사일 사격훈련

II 2005년도 국방예산

2005년도 국방예산은 안보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위적 방위역량 확충과 장병 사기·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2004년도의 18조 9,412억원 보다 9.9%가 증가한 20조 8,226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정부재정의 15.5%, 국내총생산(GDP)의 2.85% 수준으로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배분되던 국방비가 2004년도부터 상향 배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가. 일반회계 예산

2005년도 일반회계 국방예산 규모 및 기능별 배분 현황은 도표 4-32 및 4-33과 같다.

【도표4-32】 2005년도 국방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4 예산		2005예산		증·감	
	액	구성비	액	구성비	액	%
계	18조 9,412	100.0	20조 8,226	100.0	1조 8,814	9.9
전력투자비	6조 2,930	33.2	7조 656	33.9	7,726	12.3
경상운영비	12조 6,482	66.8	13조 7,570	66.1	1조 1,088	8.8
인건비	7조 9,881	42.2	8조 5,948	41.3	6,067	7.6
사업비	4조 6,601	24.6	5조 1,622	24.8	5,021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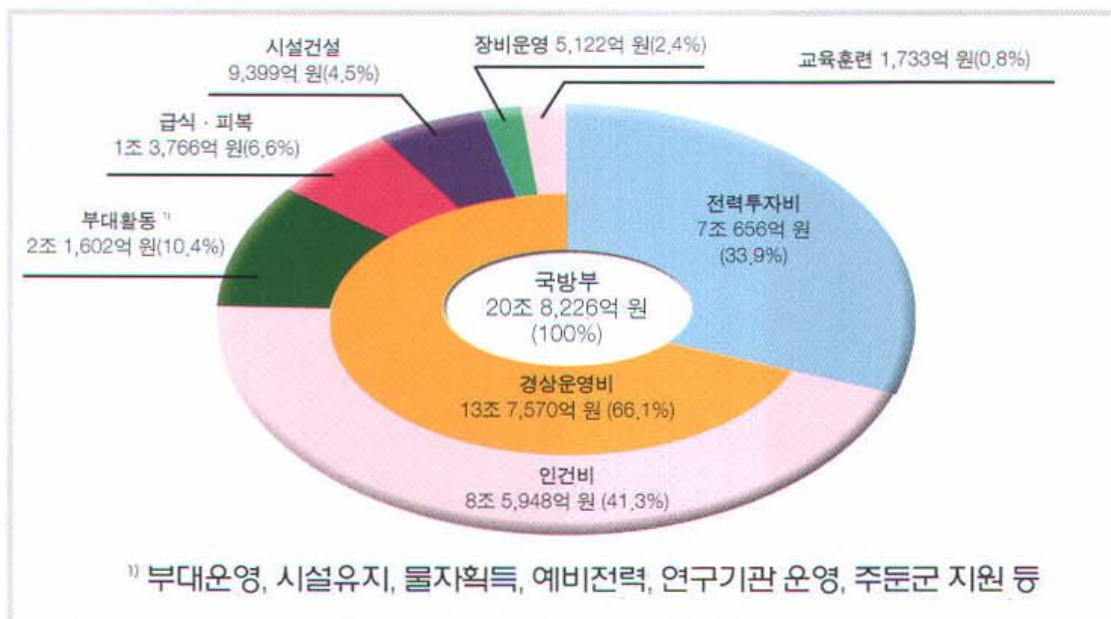
전력투자비는 2004년도보다 12.3% 증가된 7조 656억 원으로서, K1A1 전차, 신형 155밀리 자주포, 7,000톤급 구축함, 1,800톤급 잠수함, F-15K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핵심전력 확보에 필요한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고, 장비의 성능개량·유지 등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소요와 차기전차, M-SAM(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위성통신체계 등 핵심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상운영비는 2004년도보다 8.8% 증가된 13조 7,570억 원으로서, 침대형 내무반 개선, 독신자 숙소 확보, 병 봉급 인상 및 각급부대 운영비 현실

화 등 장비 사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소요를 중점 반영 하고 있다.

그리고 군의 전투력 유지와 기량 향상에 필요한 장비운영 연료, 교육훈련장 확보 예산 등을 증액하였으며,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환경보전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탄약고 주변의 민가 이전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소요 등을 반영하였다.

【도표 4-33】 2005년도 국방예산의 기능별 배분 현황



특히 2005년도 국방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재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600여억 원을 절감하여 장비 사기·복지 증진 및 전력투자비 등의 증액재원으로 활용하였다.

나. 특별회계 예산

국방부 소관의 특별회계에는 군인연금 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있다.

군인연금 특별회계는 제대군인의 연금 지급을 위한 회계로서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반영과 연금지급 대상 인원 증가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7.6% 증가된 1조 6,608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다.

[도표 4-34]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04 예산	2005 예산	증·감	%
군인연금 특별회계	1조 5,428	1조 6,608	1,180	7.6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892	6,792	3,900	134.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12	286	74	34.9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도심지에 있는 군용시설을 매각한 재원으로 부대시설을 교외로 이전하고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로서 2005년도에는 30개의 군용시설 이전과 민원부지 매입을 위해 6,792억 원을 편성하였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국방전문 홍보기관인 국방홍보원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2005년도에는 신문·방송·영화 제작비와 군 위성TV 방송 사업비로 286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

Ⅲ **적정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

우리 군은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하면서 전력발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국방 정보화·과학화 기반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 규모와 정부재정의 확대에 비해 국방 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은 상대적으로 하향 추세를 지속해옴으로써 군사력 건설은 물론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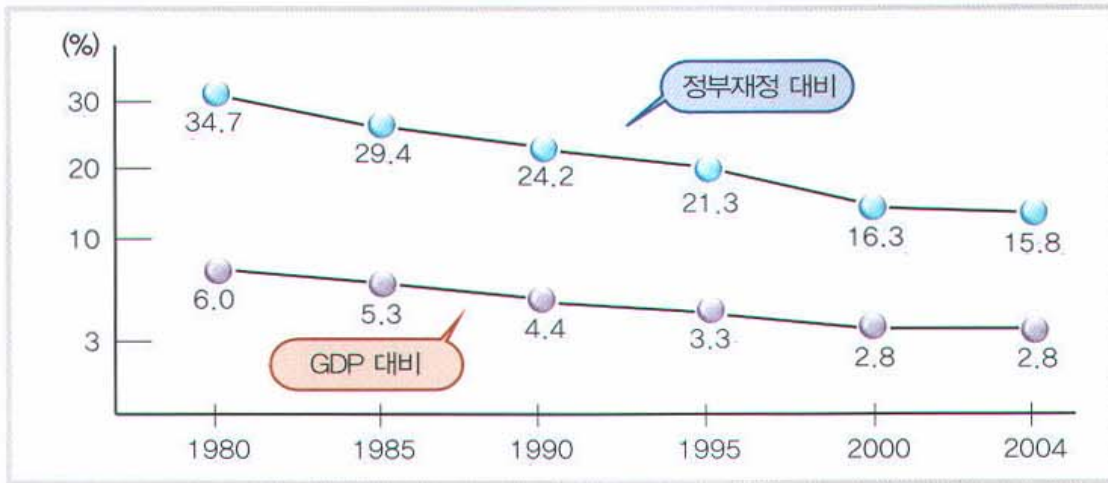
가. **국방비 배분 추이와 국방운영 실태**

국방비의 명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물가의 상승,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첨단무기체계의 고가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급여 수준 현실화, 장병 복지소요 증대 등 자연적인 비용증가로 인해 국방운영은 그동안 긴축 압력을 받아 왔다.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전반까지

6%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3년에는 2.7%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도 1980년대 초 34.7%에서 2004년에는 15.8%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왔다.

【도표 4-35】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그 결과 새로운 전력증강 사업의 추진여력이 부족하여 전차, 화포, 전투기는 아직도 구형장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부족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 확보와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재원의 부족현상은 현존전력의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교육용 탄약 보급률은 90% 수준이며, 비행훈련용 유류 확보도 제한되어 전투기 조종사의 연간 비행훈련 시간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한된 국방재원을 당장 긴급한 전력투자 및 유지를 위해 우선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장병들의 복지 수준은 일반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의 절감 운용,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 등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 조치를 강구해 왔으나 전반적인 운영여건의 악화 추세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 국가의 능력에 상응하는 국방비 지출

국방비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은 다시 국방을 위한 투자 능력으로 이어져 국력을 확대 재생산한다. 특히 북한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하는 안정과 평화는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더욱이 우리가 처한 전략적 환경과 높은 대외의존도 등 안보와 경제의 밀접한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세계 12위 수준의 경제규모에 상응한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 1인당 국방비는 2002년 기준 세계 29위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도 이스라엘 등 여타 분쟁·대치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도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으로, 2003년도에 비해 0.1%p 증가되었다.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된 국방비의 하향배분 추세를 상승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에 필요한 분야별, 사업별 소요를 종합해 볼 때, 국방비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안정적 수준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4-36】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스라엘	터키	이란	그리스	중국	쿠바	이집트	파키스탄	미국	한국	인도
12	10.3	9.7	5.1	4.6	4.4	4.1	3.9	3.9	3.9	3.3	2.8	2.7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2-2003(원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2.10.) 등

5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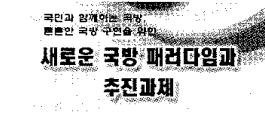
제1절

국방개혁의 추진목표와 추진중점



제2절

분야별 추진 현황



제3절

향후 국방개혁 방향

제1절 국방개혁의 추진목표와 추진중점

국방부는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사회와 국민의식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군의 역할과 의식의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비하며, 조직의 개선과 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국방운영을 현대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국방개혁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정신개혁과 군대문화 혁신’, ‘국방제도 개선’, ‘국방부분부 현역편제 조정과 군 구조 정비’를 개혁의 3대 중점으로 설정하고 101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국방조직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국방개혁의 핵심인 ‘정신개혁’을 통하여 직업군인의 투철한 국가관과 직업관, 사생관 확립과 함께 ‘국방제도 개선’을 통해 인사제도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군대문화와 병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여 ‘군 전력구조를 선진 과학·기술군체제로 정비’하는 등 안보를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변화와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표 5-1】 국방개혁 목표 및 추진중점

목 표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		
중 점	정신개혁과 군대문화 혁신	국방제도 개선	국방부분부 현역편제 조정과 군 구조 정비
추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군인 가치관 재정립 · 간부의 건전한 생활기풍 확립 · 선진 병영생활 문화 조형 · 부패, 비리, 부조리 척결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제도 개선 · 병무제도 개선 · 조달업무 개선 · 군 사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분부의 현역편제 조정 · 상부조직 정비 · 전력 및 부대구조 정비 · 미래전 대비 중·장기 전력구조 발전

제2절 분야별 추진 현황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진충보국의 국가관, 멸사봉공의 직업관, 일사보국의 사생관을 직업군인의 3대 핵심가치관으로 정립하여 정신개혁과 군대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 병영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병영내 악습을 근절하고 자율적 병영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간부의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부패·비리·부조리 척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I 정신개혁과 군대문화 혁신

가. 직업군인의 가치관 재정립

지난 50여 년 동안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 속에서 곳곳이 성장해 온 우리 군은 여전히 안보환경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도 국가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안보집단으로서 확고한 신뢰를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의 구현이라는 국방개혁의 목표 달성과 국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의 주체들이 그것에 적합한 정신자세와 가치관,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정신개혁을 국방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시대정신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직업군인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 '변화와 혁신' 장성급 연찬회



이를 위해 직업군인에게 요구되는 국가관, 직업관, 사생관의 3대 핵심 가치관과 이에 따르는 9대 덕목을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재정립하였으며, 그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국가관이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투철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민족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다.

두 번째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직업관이다.

우리는 군인의 길에 천직이라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품성을 갖추어 청렴한 생활태도를 견지하며, 나라와 겨레를 위해 부여된 책임을 창의적으로 완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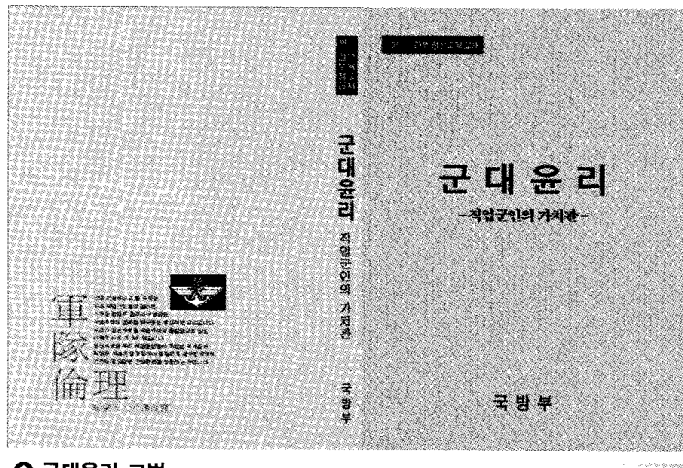
세 번째는 일사보국(一死報國)의 사생관이다.

우리는 선열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여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지향하며 조국을 위해 일신의 안위와 생명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한편, 효과적인 직업군인의 가치관 정립을 위해 3대 핵심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군대윤리' 교재를 제작하여 학교 교육과 지휘관 중심의 부대

생활화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이를 신념화 및 실천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직업군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도덕적 기준이 사회의 통념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참군인의 모습임을 인식하고, 군 간부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확고한 직업윤리의 정립을 위한 정신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군대윤리 교범

나. 간부의 건전한 생활기풍 확립

우리 군은 위국헌신을 실천하는 고유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바탕 위에 기존의 군대문화 중 긍정적인 요소를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청산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를 배제하고 토의문화 정착, 구두보고·전자결재 등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 1인 1제안, 주니어보드활동 등 업무혁신을 통해 창의적·자율적인 업무수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청탁 근절 등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생활을 통한 모범적 간부상 정립과 바람직한 군대문화 조형 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

다. 선진 병영생활 문화 조형

(1) 병영 내 악습 근절

선진 병영문화 조성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비인격적인 모독 행위와 병영저변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여 장병 상호 간 존중과 신뢰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병영실상 파악을 위한 부대정밀진단제도 시행, 장병들의 고충을 적시에 상담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병영전문상담관과 신고센터 운영, 가정과 연계한 장병신상관리, 복무 부적응 및 부적격자 식별을 위한 인성검사 프로그램 보완, 성(性)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등의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2004년부터 장병 기본권에 대한 개념연구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인성교육 체계 개선, 병영생활 규정의 합리적 개정과 각종 사고예방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2) 자율적 병영생활 환경 조성

군은 장병들의 군 복무가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병영생활체제로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과표를 개선하여 개인 자유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병영생활 구조를 자율적·능동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 병영 내 동아리(모형비행기) 활동



○ 군생활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아울러 장병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중대단위의 인터넷 PC방 설치, 국가 기술자격 검정 종목 확대, 각종 동아리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군 복무간 1인 1기 이상의 특기를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교육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도표 5-2】 2003년 장병 국가기술시험 자격증 취득 현황

(단위 : 명)

계	정보검색사	PC활용 능력평가	문서실무사	네트워크 관리사	산업기사	기능사
77,333	20,791	2,236	45,830	627	1,420	6,429

(3) 간부 지휘통솔 능력 배양

군은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초급간부들의 지휘통솔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기관으로부터 야전부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별 실정에 부합된 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부대지휘를 통해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나아가 전 장병을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로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국방대학교와 각군본부 예하에 리더십 센터(Leadership Center)를 개설하여 체계적인 리더십 연구와 교육 자료를 실시간대에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 기반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라. 부패·비리·부조리 척결 활동 강화

역대 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은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청렴도가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부패척결’ 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부응하고 청렴한 군대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구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대적인 반부패 청렴물결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첫째, 2003년 5월 19일 「국방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금품수수·선물·향응·접대문화 등 불합리한 기존 관행을 타파하여 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2003년 6월 17일 「내부공익신고센터운영지침」을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사단급 이상 162개 부대 및 기관에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고, 2004년 11월 19일 국방부 인트라넷망에도 추가 설치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상시 신고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제반 시설 공사, 복지시설 운영 등 취약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비리 척결을 위해 2004년 3월 1일 기동감찰반을 설치하고, 총 16회의 감찰 활동을 통해 적발된 비리에 대해 징계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7건, 통보 21건 등 총 47건의 신분 및 행정상 엄정한 조치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하도록 하였다.

넷째, 부패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4년 7월 국방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총 89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서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다섯째, 2004년 9월 24일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인사국장, 획득정책관, 군사시설국장 등 9명의 관계관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국방부반부패 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월 1회 개최를 통해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정기점검·평가, 부패취약분야 진단, 반부패 프로그램개발, 유공자(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이와 별도로 각군은 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부 감사관을 의장으로 하고 감사, 법무, 군검찰, 기무, 합조단 등 관계 담당관들로 군내 사정기관 협의체를 구성 월 1회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 및 각종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자율적, 능동적 부패 추방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여섯째, 2004년 10월 28일 창군 이래 최초로 국방부·합참장성급 간부 전원과 직할기관장, 군수·시설·조달분야 최고책임자와 군납업체 사장단 150여 명이 참여하는 민·군 합동 반



○ 민·군합동 반부패 워크숍

부패 워크숍을 개최하여 부패척결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일곱째, 참여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깨끗한 정부, 청렴한 공직자상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물결운동 순회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다. 1단계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51개 군사급 이상 부대 및 학교, 행정부대·기관 부사관 이상(장군포함)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였고, 2단계로는 군단급 이하 야전 실무부대 부사관 이상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청렴서약을 통해 부패추방에 대한 결연한 의지구현과 자발적인 부패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최근 발생한 부패사례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기관별·부대별·분야별 부패위험성 진단, 부패행위 연대책임제 시행,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한 신상필벌 강화, 퇴직공무원의 관련업체 취업제한 제도의 엄격한 시행, 접대·회식문화 개선 등 반부패 분위기 쇄신을 적극 촉진하고 반부패 교육 및 홍보강화, 감사 결과 사례전파·공개, 반부패 의견수렴을 위한 국방사이버 모니터 활용, 다면평가에 부패연관성 평가 포함, 국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부패 다짐 팝업창 설치 등 반부패의식 생활화를 통해 대대적인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도개선 등 부패방지대책을 계속하여 적극 추진하고,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과 500억 원 미만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계획 지침을 제정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종료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대별·기관별 청렴도를 측정하는 등 참여정부의 부패척결에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II 국방제도 개선

가. 인사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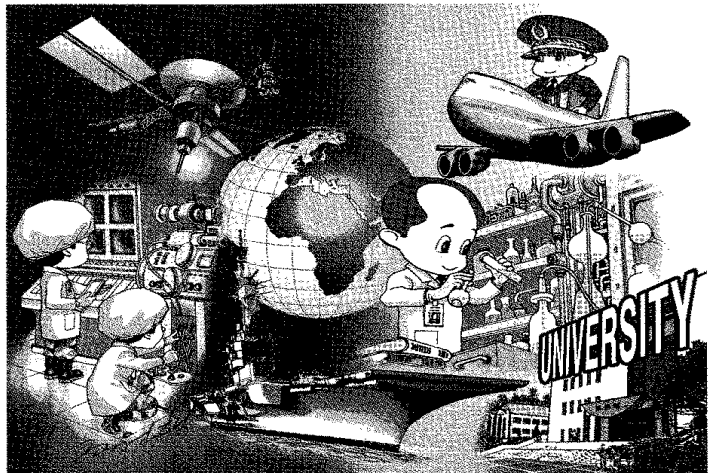
국방부는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사전문가로서 능력 있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보직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정·투명 인사관리를 위하여 제대별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교육·보직·진급관련 선발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규정화하였다. 진급제도는 '공정한 경쟁'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부분 시행 중인 자유경쟁 진급제도와 다면평가 및 공개평정제도를 전 계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복무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근속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복무심사 평가제도를 발전시켜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게는 임기제 및 명예진급, 취업우선권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국방정책 수행의 질적 향상 차원에서 정책부서 근무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합참·연합사에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를 보직하기 위한 합동특기 장교(JSO : Joint Specialty Officer)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군·공군장교의 정책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분야 부특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장기적체 인력 문제의 해소를 위해 순환 보직체계를 구축하고, 편제에 의한 인력운영과 제대군인의 취업능력 제고, 직업보도교육 인원의 '정원 외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수 인재육성과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 및 보직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및 적재적소 활용 개념

나. 병무제도 개선

(1) 의무복무 기간 단축

국방부는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3년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으며, 2003년 9월 이전 입영자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1주씩 단축하여 2003년 10월 입영자부터는 2개월(전문연구요원 1년)이 단축된다.

또한, 공군의 상대적 지원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11월 이후 공군 입영자부터 1개월 추가 단축하여 27개월 복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 시비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숙련도가 요구되는 정비·기술분야 및 분대장 직위를 부사관으로 대체하여 전투력과 전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도표 5-3】 병역의무자 복무기간 단축 현황

육군	해군	공군
26개월→24개월	28개월→26개월	30개월→27개월

대체복무제도는 전문인력과 현역소요를 충원하고 잉여자원을 국가산업과 공공이익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각 분야별로 복무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다.

【도표 5-4】 대체복무 기간 단축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4년→3년	36개월→34개월	28개월→26개월

한편, 복무기간 단축과 1980년대 이후 출산을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2005년부터는 병역자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군 소요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산업 핵심분야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2) 예비군 훈련제도 및 복지 개선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면서 예비군 훈련의 '질'과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훈련면제 대상을 8년차에서 7·8년차 예비군으로 확대하고, 동원 훈련은 3박 4일간에서 2박 3일로 훈련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소집점검만

받던 1년차 예비군을 훈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대 견제단위 동원훈련을 통한 실질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각 군 부사관·병의 동원미참자 훈련을 병과 및 부대별로 입소훈련 또는 부대별 입영훈련으로 실시하고, 순환식훈련장 설치와 훈련용 방독면 및 전투복 확보, 마일즈 및 서바이벌게임 장비 등 과학화장비를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 예비군 시가전 훈련(서바이벌 게임)

둘째, 급식제도를 개선하여 일부 부대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대급식을 점차 확대하고, 훈련급식비를 1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훈련보상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할 방침이다.

셋째, 대부분 교수 및 교직원이 겸직하고 있던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을 전담지휘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가 부실한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해체가 가능하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 항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군 전투장비 현대화와 부족한 전투긴요 항방물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시·도단위로 권역별 훈련센터 설치와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훈련장 부지를 매입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며 훈련장 관리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예비군훈련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표 5-5】 예비군 훈련제도 및 복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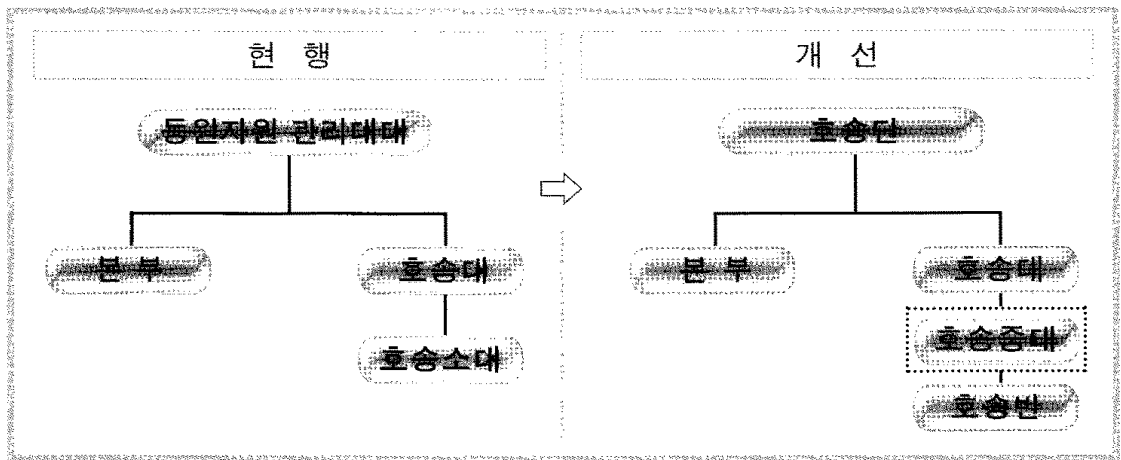
훈련면제 대상	8년차 → 7년차 및 8년차
동원훈련 기간	3박 4일 → 2박 3일
대학직장 예비군	교직원 → 전담지휘관 임명
부대급식 확대	현재 25개 부대 → 점차 확대
훈련급식비 인상	3,000원 → 3,500원
훈련보상비 인상	2006년도부터 교통비 반영 추진
기 타	물자확보, 훈련장 보완, 과학화 장비 활용

(3) 동원제도 보완

동원제도는 정예자원 지정 확대 및 호송체제 강화와 인력자원의 편제화, 동원정보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동원지정제도와 동원자원관리 및 전시 동원집행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선, 정예자원 동원지정 확대 및 호송체제 보강을 위해 대도시지역의 동원지정범위를 구(區) 단위에서 시(市) 전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병력동원 호송부대 운용과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동원자원관리대대를 통합하여 호송단을 편성하고 군단별로 분산하여 운용하던 호송부대를 군별로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생존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도표 5-6】 호송부대 편성 및 운용체계 개선



또한 일부 부사관의 유사특기 범위를 설정하여 적소특기가 부족할 경우 지정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원 운용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전시 긴급병력 동원체제를 확립하여 우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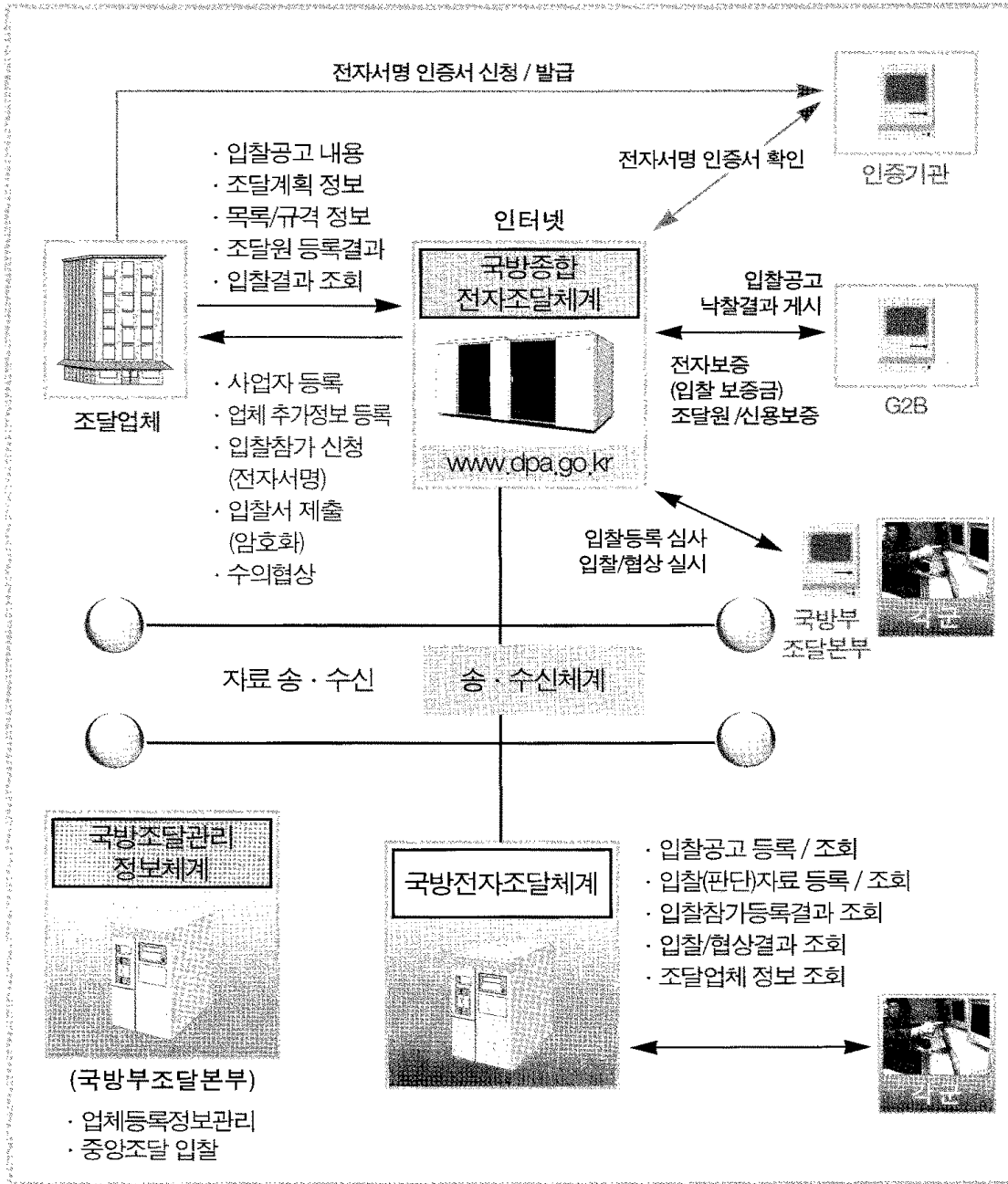
한편, 전시근로소집 대상과 기술인력자원은 부대별로 소요산정 기준을 재정립하여 정예자원이 적소에 지정되도록 하였으며, 소요부대를 편제에 반영하여 전시 운용의 융통성을 제고시켰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를 위해 병무청 및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연동된 동원업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 조달업무 개선

국방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군납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우수한 군수품을 획득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표 5-6】 전자입찰 체계



(1)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

국방전자입찰제는 2001년 4월 국방부조달본부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 2003년 7월부터 전군에 확대하였고, 2004년 7월부터는 국방재정정보체계와 연동한 전자대금지불체계를 개발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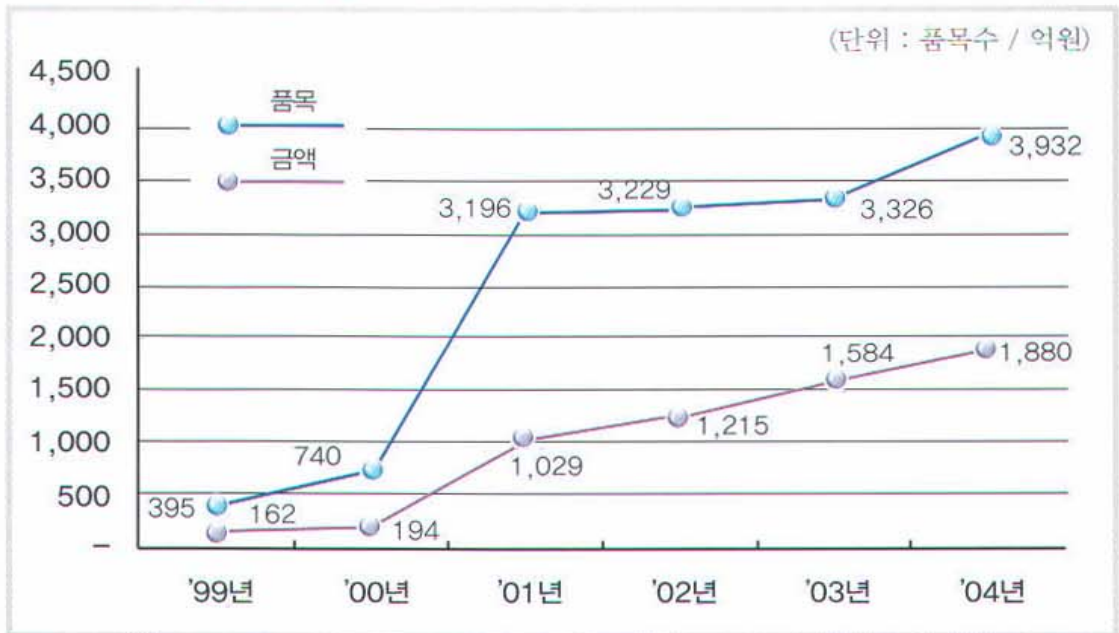
(2) 군납안전진단제도 폐지

1957년부터 46년간 시행해 온 군납안전진단제도를 2003년 9월에 폐지함으로써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가운데 많은 민간업체가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다.

(3) 상용물자 구매업무 조달청 이관

정부구매업무를 전문화하고 상용물자 조달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 소요 물자 중 일반 상용물자에 대한 구매업무를 1999년부터 조달청에 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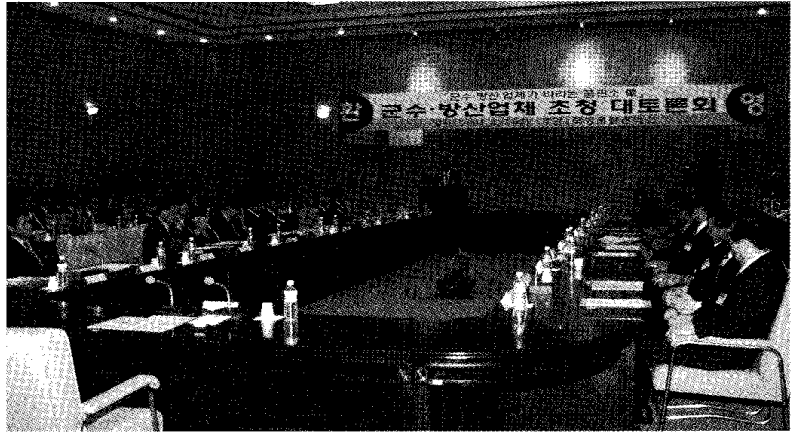
【도표 5-7】 상용물자 구매업무 이관 실적



이에 따라, 2003년에는 3,326개 품목, 2004년에는 18%가 증가한 3,932개 품목을 조달청에 이관하였다.

(4) 품질보증제도 개선

무기체계의 첨단화 추세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질보증 업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을 이수시키는 한편, 품질보증 요원이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품질검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 국방품질 향상 토론회

또한, '군수품 고객 만족도 지수'를 적용하여 사용자 불만요소를 적극 해소하여 줌으로써 품질검사의 신뢰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품질보증 심의회를 개방형 의사결정체제로 개선하여 주요 품질보증 정책결정시 관련부서와 업체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방산업체의 품질개선 동기부여를 위하여 2004년부터 '국방품질대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라. 군 사법제도 개선

(1) 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군은 참여정부 출범에 맞춰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법의 독립성과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군사법제도 확립을 목표로 전면적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03년 7월 마련한 자체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군사법제도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 군 내·외의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군검찰의 독립성·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징계영창제도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2005년 시행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군 사법제도 주요 개선내용

●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기존 군사재판의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부대 지휘관 등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 우려, 군판사의 전문성 저하와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경력 이상

의 우수 군법무관 중에서 군판사를 선발하고 그 소속을 국방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군판사단' 제도를 도입하여 권역별 순회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또한 법관으로부터 재판권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의적인 형 감경권 행사에 따른 형평성 침해의 지적을 받아 온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제도의 평시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권위를 확립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 군검찰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군 수사·소추기관인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군검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되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하는 방안과 군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하여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군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 징계영창제도의 합헌성 강화 등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징계영창처분과 관련하여 군법무관에 의한 징계영창의결의 적법성 심사제도 및 항고시 그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영창제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군법무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인력제도의 개선, 군 수감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군 행형제도 개선 등의 개혁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Ⅲ 국방부본부 현역 편제 조정과 군 구조 정비

가. 국방부본부 현역 편제 조정(문민화)

문민화는 문민통제(civil control)의 제도화를 뜻하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합법적 문민인 민간인 대통령과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 정치가 집단이 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민간전문가 집단이 국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의 정치·외교적인 정책적 결심에 입각하여 군사력 사용을 보장하는 체계이다.

국방부본부의 문민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다. 문민화의 대표적인 국가



○ 국방부 전군 지휘관 회의

인 미국의 경우, 국방부 내국은 대부분 안보분야 전문 민간인들로 구성되며, 군인들은 대부분 합참의 군령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방부가 위치한 워싱턴 지역에는 다수의 안보 및 국방관련 연구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 교수들이 수시로 아웃소싱되어 적절한 기간 동안 국방분야에서 근무하다가 학교로 복귀하기도 한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과 정부가 군에 요구하는 수준 또한 매우 높아졌으며, 전체적인 국방분야의 발전을 위해 문민 엘리트들이 군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적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참모가 현역군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중립적 관점과 균형감각 유지와 모군 중심의 사고로부터 탈피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수인재를 활용하여 군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문민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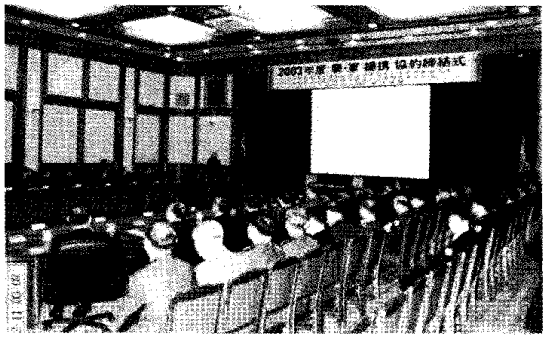
현재 우리 국방부 본부의 상위직에는 현역군인과 전역 5년 미만의 예비역이 다수 보직되어 있으며, 정책실과 획득실은 군인 위주로, 그리고 기획관리실과 차관보실 등은 일반직 공무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문민화의 수준과 효율적인 문민통제를 위한 체계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문민통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방부 본부의 문민직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군인직위는 필수직위 위주로 최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문민화의 핵심은 단순히 민간인의 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군사정책과 군사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포괄적인 정치·군사적 차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책

결정과정과 조직 운용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국방부 및 합참의 역할 분담과 권한을 보장하고 합참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군의 대표자인 합참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시킴으로써 정부정책과 국방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군사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 민·군 군사학 발전 협력합의서 체결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 군사전문가의 획득을 위해서는 일반대학에 군사학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등 관련분야 교육체계를 구축·확대하여 우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면서 공무원의 군사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행정고시 출신자 등 외부 전문가와 예비역 출신자들을 적극 발탁하여 전문가로 양성하고 이들이 국방부 본부를 이끌

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정치와 군사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위과정 개설 추진현황

- '04년 : 대전대
- '05년 예정 : 경남대, 원광대, 조선대

나. 상부조직 정비

우리 군은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에 적합한 조직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상부조직 전반에 걸친 정비와 업무혁신을 통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전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방부 본부는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량 증가로 불가피하게 운영해 왔던 한시기구와 비편제기구를 정비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구는 전체적인 정원 증원 없이 정식 직제화하였다.

그리고 국방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국방외교 및 남북한 군사협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실장 직위를 신설하였다.

또한 장병숙소 개선, 전역 예정자의 직업보도 등 종합복지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보건관 직위와 국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보관 직위를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과 국산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연구개발관 직위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합참은 장차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전쟁 기획·계획 및 작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합참의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각 군 본부는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군정기능 수행에 적합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작전지원 기능과 동원기능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다

다. 전력 및 부대구조 정비

우리 군은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부응하고, 제한된 국방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 효율이 크게 떨어진 전력을 정비하는 동시에, 병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부대구조를 정비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운영유지비가 증가되고 전력 효율성이 저하되는 전력과 대체전력 확보 이후에도 계속 운용되는 구형장비를 과감하게 도태시킴으로써 운영유지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운용을 위해 전투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공통 기능 부대(서)를 통합하고, 작전환경 변화로 임무와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정된 부대를 감편 또는 해체하며, 편제를 표준화하는 등의 부대정비를 통해 2004년에는 1만 명 수준의 병력을 감축하였으며, 절감된 인건비를 전력증강 부문에 배정함으로써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2005년도에도 효율적인 전력 운영을 위해 각 군의 부대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라. 미래전 대비 중·장기 전력구조 발전

21세기 전략환경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술 집약형 전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우선적으로 완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첨단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구조로 정예화하며, 병력 규모는 향후 전력증강 및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

(1) 합동 C4ISR 체계 발전

국방부는 각 군별로 개발 중인 C4I체계를 한국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중심으로 합동C4I체계 구조를 설계하고 감시·타격 등 무기체계와 상호연동관계를 식별하여 합동C4ISR체계 종합구조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설계 완료 후 각 군 C4I체계를 대상으로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의 도입과 정보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한 미래 합동C4ISR 체계 종합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2) 사이버전 체계 구축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 및 각종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비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전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전 교리 정립 및 정보보호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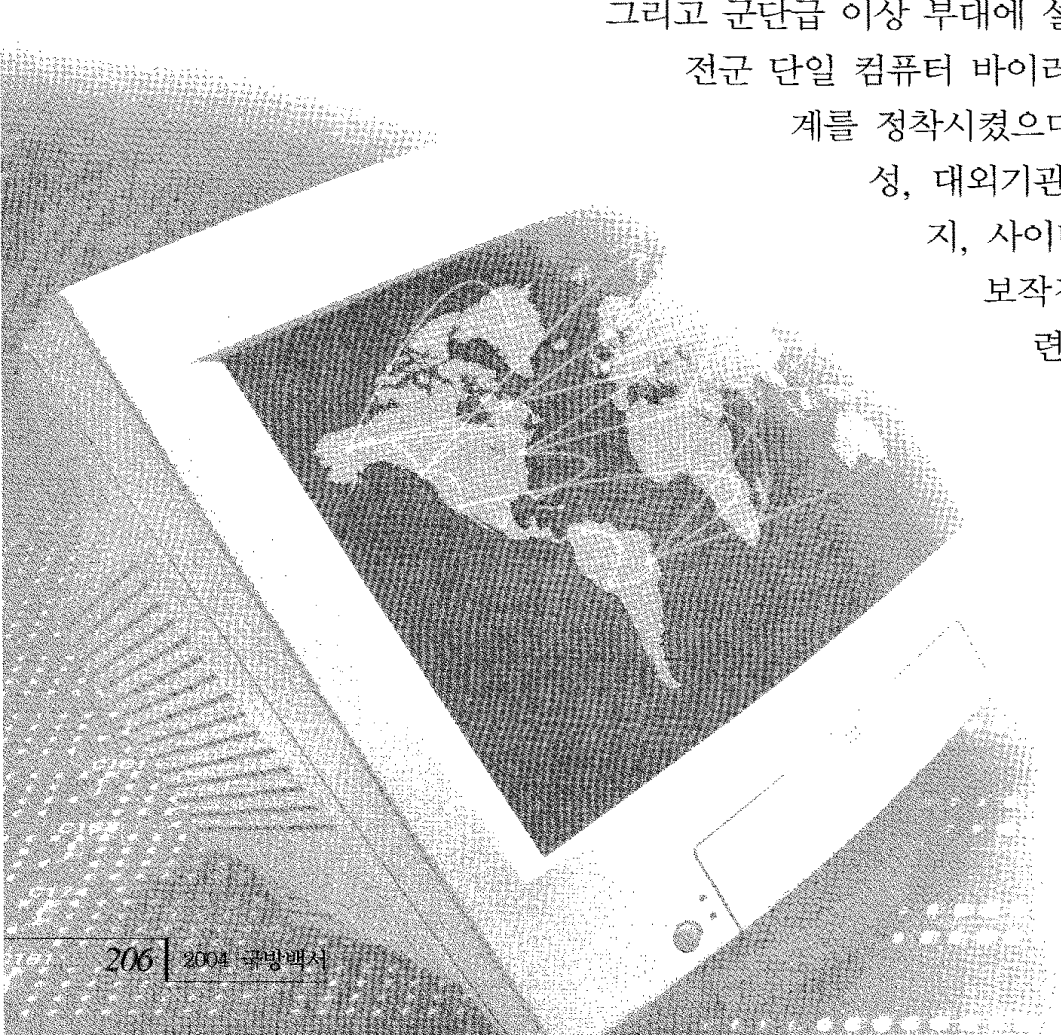
그리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통합보안관제체계 및 전군 단일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와 국방인증체계를 정착시켰으며, 사이버전 전문인력의 양성, 대외기관과의 공조 및 협력체제 유지, 사이버전 침해사고에 대비한 정보작전방호태세(INFOCON)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KJCCS:

Korea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
지휘소자동화체계를
성능 개량시킨
합동 C4I체계 명칭

C4I 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제3절 향후 국방개혁 방향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취임 이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튼튼한 국방' 을 구현할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새로운 국방패러다임은 문민통제체제 발전, 국력에 맞는 군사력 건설, 통합전력 극대화 보장,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이다.

I 새로운 국방패러다임의 필요성

이는 기존의 국방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국방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방은 북한과 대치한 특수상황 하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그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과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즉, 우리가 처해 있는 국방여건과 현 좌표를 진단해 볼 때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이 병존하는 이중적 상황과 미국의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안보전환기적 상황 하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된 군사력 건설 방향의 정립과 협력적 자주국방의 달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의 안보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국방정책·전략은 국가의 안보정책·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고 군사력 건설도 국력과 국가위상을 고려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대전략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II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에 의한 국방개혁 방향

가. 문민통제체제 발전

국방부본부는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지원한다는 문민통제 원칙 하에 정부정책과 국가전략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고 뒷받침하며, 민간관료와 현역군인간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방운영의 승수효과 달성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국가적·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방부의 위상과 위치를 인식하면서 군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아울러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되 포괄적·종합적 시각을 갖춘 전문인력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개념을 정립·발전시키면서 국방부본부 현역 편제조정에 따른 합참 및 각군의 기능보완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모군 중심적 사고와 입안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진급·보직 등 인사방침을 발전시키며, 이미 양성·활용 중인 군 전문인력 집단(pool)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민간 전문인력의 양성·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국력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되, 국가전략에 경제력, 국제적 위상, 한·미동맹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개념에 의거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군사력은 국가 및 군사전략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방재원은 경제력 등 총체적 국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군사력 건설 및 국방운영을 위한 국방예산도 국가 및 군사전략 개념과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사력 건설은 자주적 전쟁억제능

력을 우선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되, 미래 불특정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각 군·기능별 1~2개의 핵심전력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독자적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통신체계를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정보·조기경보 전력을 확보하고, 현대전의 양상이 과거의 '듣는 전쟁'에서 '보는 전쟁'으로 변화하였음에 유의하여, 실시간(real-time)에 탐지(sensor)-결심(C4I)-타격(shooter) 등 전투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전장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심지역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서는 우선 대전략 차원에서 한미공조와 국제통제체제 등을 통해 대처하되, 유사시 이를 타격 및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과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하고, 화력면에서 대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대화력전 전력 및 장거리 정밀타격수단을 보강하며, 아울러 조기에 공중 및 해양 우세를 달성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여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쟁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점증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해외파병 상설부대를 편성, 대기태세를 유지하는 등 유엔 상비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조직을 전향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다.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 보장

국방력 건설·관리·운영에 있어서 대외 의존성을 줄이고 기능간 불균형성을 극복하는 가운데, 한국적 특성에 부합된 통합 전력 발휘 여건을 조성, 미래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우리 한국군의 능력도 꾸준히 성장하였다. 최근 주한미군의 재조정에는 우리 안보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차제에 우리 군은 적극적인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을 통해 미래전 양상에 부응하고, 특히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정보·과학 기술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현재의 병력집약형 전력구조를 효율화·정예화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합참의 독자적인 전쟁기획·계획수립 및 작전수행을 위한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고, 군령과 연계된 국방부본부 일부 기능의 합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미 지휘관계 조정에 대비한 조직을 보강하고, 한 미연합사를 통해 선진 군사체계를 습득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지속 양성 및 확보해야 한다.

육·해·공 3군 균형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3군 균형발전 관련 기본지침과 방향 설정 등 개념을 정립하고, 합참과 국직·합동부대 인사의 균형편성과 순환보직제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인력을 국방부 정원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방자원의 균형배분과 합동차원의 전력건설을 보장하고 각 군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투자예산체계를 검토하고 분석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라.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바람직한 군대문화와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포괄적 안보개념 및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을 위한 국방을 구현,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군상을 확립

아무리 첨단무기와 장비로 무장된 강력한 군대라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군 스스로 내부개혁을 통해 바람직한 군대문화를 발전·정착시키고, 민주주의와 문민통제에 기반을 둔 군 수뇌부의 지휘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장병 사기·복지와 복무여건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민의 참여와 개방성·투명성이 보장되는 '열린 국방'을 구현해 나가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국방'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열린 국방’을 통해 국방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지향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국방현안 및 국민적 관심사항과 함께 국방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면서, 국방정책 발전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방’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적 재해·재난 관리·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체제를 정비하고, 대민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다.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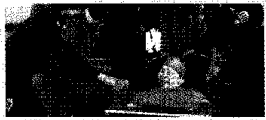
6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제1절

「열린 국방」 구현



제2절

「국민을 위한 국방」 구현

제1절 「열린 국방」 구현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본부와 각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국방민원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국민이 국방업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방홍보업무를 활성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정책이 투명하게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을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각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지문위원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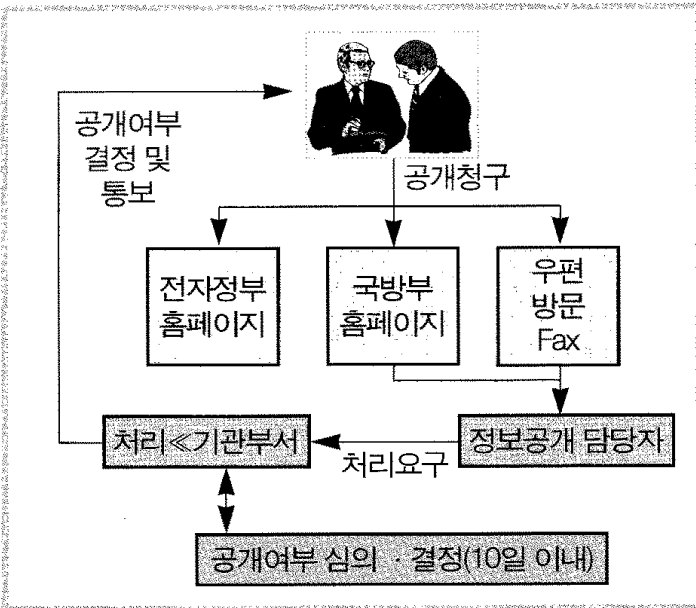
I 정보공개와 국방민원업무 개선

가. 정보공개

국방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기관에 정보공개 전담자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방관련 행정정보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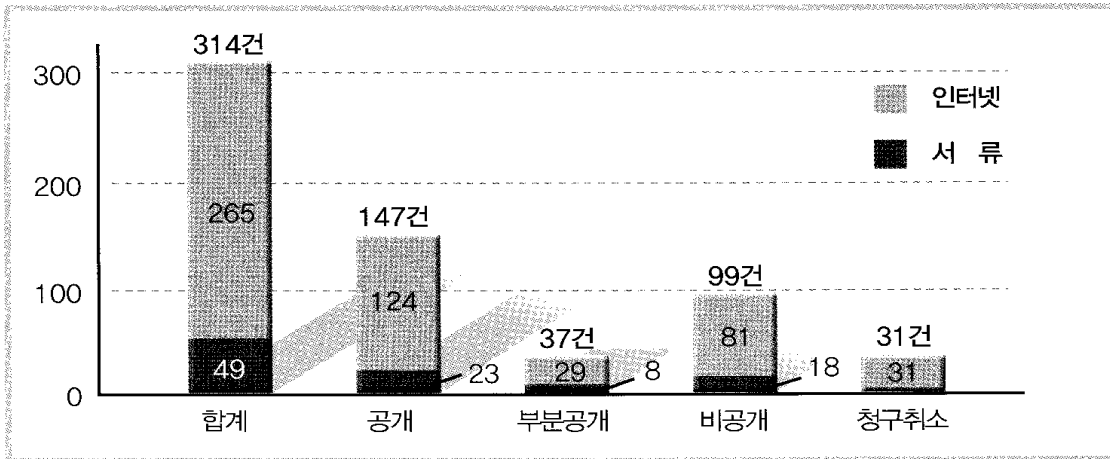
【도표 6-1】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방'에는 2004년 10월 15일 현재 '국방통계연보' 내용 중 공개가 가능한 183건, 주요 생산 문서 3,255건, 국방정책에 관한 180여 건의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도표 6-1과 같다.

【도표 6-2】 2003년도 정보공개 현황

(단위 : 건)



한편 2003년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총 건수는 314건으로 전년도 175건에 비해 179%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현황은 도표 6-2와 같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비밀사항 이외에는 가급적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행정을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표 6-3】 국방부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공개방」



나. 국방 민원업무 개선

국방부는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표전화(02-748-1111, 0114)와 민원상담 전용전화(02-748-6891~2)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관과의 대화방', '전자민원창구' 등 사이버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저해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신고센터' 및 신고 전용전화(02-748-5959)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신고사안에 대해서는 국방신고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다.

국방 관련 고충민원과 집단민원 및 장기 미해결·반복민원의 심의·조정을 위해 '국방민원조정위원회'와 '국방민원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방민원행정을 쉽게 이해하고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방민원사무편람'과 '민원처리사례모음집'을 발간, 각군본부 및 예하 군부대 등 국방관련 기관(부대) 민원실과 소속부서에 비치·활용토록 하였다.

국방부는 참여정부의 민원해결 의지 적극 구현을 위해 각급기관(부대) 민원담당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중요 민원에 대해서는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처리하는 민원직보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처리기반이 전군에 정착되었다. 아울러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80여 건의 민원관련 제도와 민원사무를 발굴·개선하는 등 국방민원처리 시스템에 일대 혁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서류를 전자화(스캔)하여 실시간으로 직접 해당 처리기관에 온라인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민원이송 방식을 개선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인터넷민원이 접수됨과 동시에 해당기관(부대) 민원담당자가 바로 인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특정 '음성'과 '팝업창'으로 민원도착 사실을 실시간 알려주는 '민원도착알리미' 프로그램을 개발, 국방부를 비롯한 사단급이상 군부대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 국방민원 사무편람 및 민원처리 사례모음집

담당공무원의 민원 도착여부 확인을 위한 복잡한 접속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업무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앞으로 인트라넷망과 인터넷망으로 이원화된 현행 서류민원 및 인터넷민원 처리

시스템을 인터넷환경으로 통합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새로운 민원 처리시스템인 '국방민원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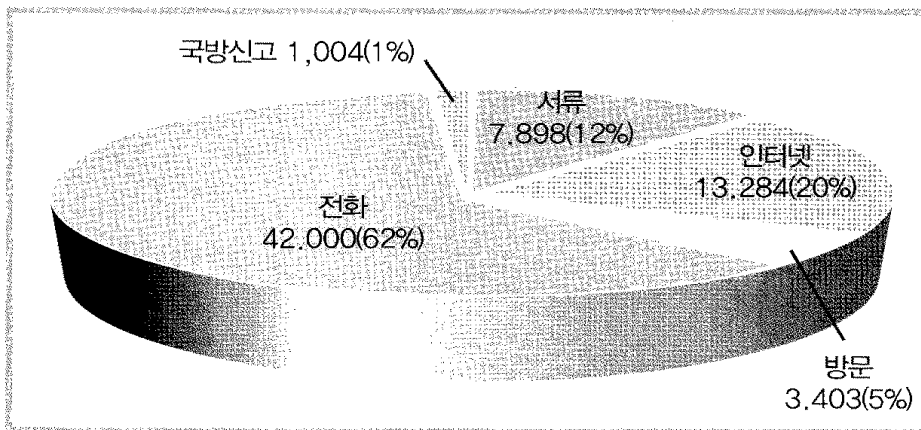
'국방민원포탈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접수·이송·처리 등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통지하여 민원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이메일로 조사하여 민원업무에 반영하는 등 국방민원 행정서비스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방관련 민원실태와 민원처리 우수사례, 민원업무 개선사항 및 향후 민원정책 방향 등 국방민원에 대한 종합 안내서인 '국방민원백서'를 발간, 국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 접수·처리하는 민원은 연간 6만 8천~7만여 건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년 3~5% 증가되고 있으며, 인터넷 활용의 보편화로 전자민원 비율이 대폭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도표 6-4】 유형별 민원 현황

(단위 : 건)



○ 국방부 민원상담 창구

II 국방 홍보업무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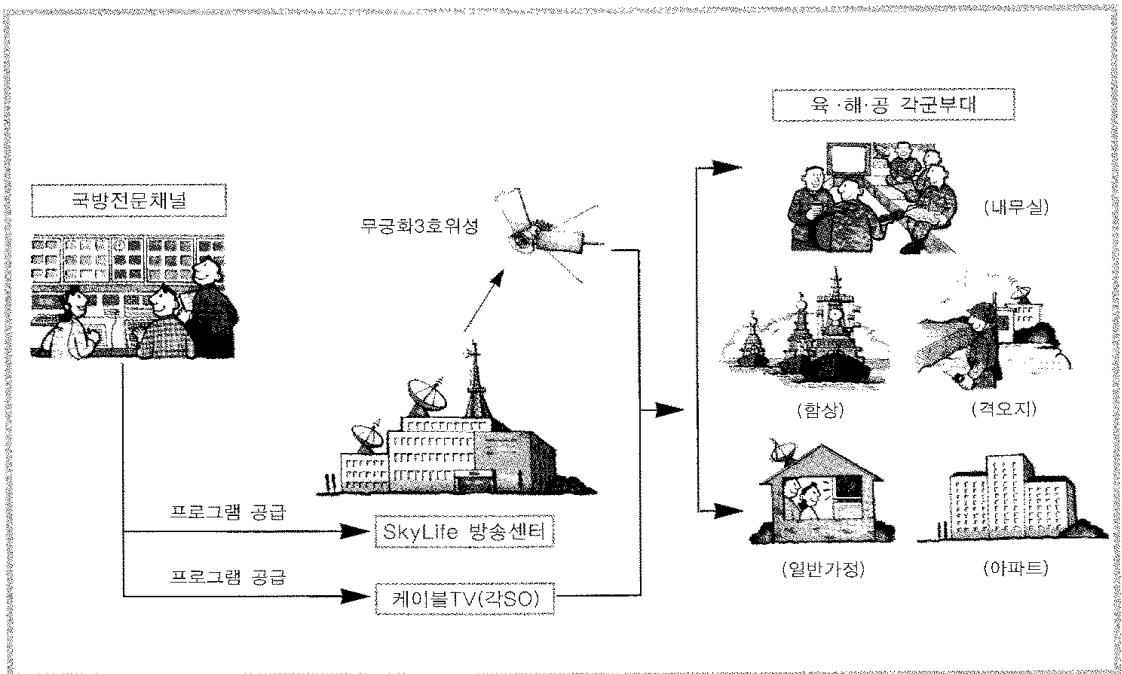
국방부는 주요 국방정책 추진내용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열린 국방」구현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요구 충족 그리고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등록된 모든 매체에 취재 기회를 부여하는 개방형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주요 직위자에 의한 정례 브리핑과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일보, 국군방송, 국방소식 등 군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국방현안 및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군 전용 위성TV 방송은 국방전문 채널로서 한 차원 높은 홍보활동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국방홍보시스템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도표 6-5】 위성 TV 체계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온라인 홍보활동 또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를 전면 정비하고 인터넷 신문인 '국방부 뉴스'를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의 '국정브리핑' 코너와 연동시켜 운영함으로써 정부시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네티즌들을 위한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 고교생 병영체험

또한, 고객관리 개념을 도입한 정책 고객서비스를 통해 국방관련 이해 당사자나 국민들을 관심분야별로 구분하여 원하는 정책자료를 전자 우편(e-mail)으로 송부해 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맞춤형 쌍방향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예비역 등 각계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정책설명회와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안보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한편,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각종 병영체험, 민간영화 및 TV 영상물 제작, 지역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안보관광지 출입절차 개선 등 국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III 국방정책발전에 민간전문가 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의 시대에는 국방정책이 투명하게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각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국방정책자문위원회

국방부는 1981년부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방업무에 자문하고 있으며, 민·군 간 상호이해와 공감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연 1회 개최하는 전체 회의와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있다. 13개 분과위원회별 자문위원 구성 현황은 도표 6-5와 같다.

【도표 6-6】 국방정책자문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정책실 (10명)			기획관리실 (7명)		차관보실 (6명)		획득실(11명)						합참
정책 기획	국제 협력	정훈 공보	계획 예산	법무	인사 관리	동원	군수	시설	획득	연구 개발	정보 체계		
4	3	3	4	3	4	2	2	1	3	2	3	14	

국방부는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2004년 현재 10명의 여성 자문위원들을 분야별로 편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지방인사와 시민단체 소속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

과거 민간전문가의 국방정책에 대한 참여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연구결과를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세미나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8년도부터는 민간인 전문가들을 각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2003년도에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국방연구위원회’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민간전문가들과 예비역 전문위원들을 자문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민간학자들로 하여금 국방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국방관련 학술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관련 분야 정책검토와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수행해 왔던 국방문제 관련 연구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제2절 「국민을 위한 국방」 구현

국방부는 「국민을 위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병무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각종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둔지 환경보전과 지역 정화활동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군 운용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국민이 고통을 느끼는 군 비행장과 시격장 소음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 태풍, 폭설 등 각종 재난시 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I 병무행정 개선

병역 이행이 국민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영광으로 인식될 때 국가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다. 국방부는 병무행정의 개선을 통해 올바른 병역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가.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1) 병역처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병역면제판정 2심제를 위한 중앙신체검사소 운영

병무청은 징병검사 전담의사의 단독판정에 의한 병역면제(신체등위 5~6급) 처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와 군병원의 정밀검사 의뢰로 인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등위 판정의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과목을 15개로 세분화하였으며 징병검사 전담의사

는 총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신체검사 관련 외부청탁이나 압력을 예방하고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우선 검사인원이 많은 내과 등 7개 과목에 전담의사를 복수로 배치하고 합의를 통해 판정을 함은 물론, 자기공명영상법(MRI) 기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갖추어 신체등위 판정을 더욱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MRI : 자기공명영상법
Magnetic Resonance
Imaging

다만, 신체등위 5·6급 판정의 2심 검사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외관상 명확한 질환이나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질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방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곧바로 신체등위를 판정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신체검사 실시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검사일자를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검사예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9월부터는 중앙신체검사과정을 완전 전산화하여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시스템과 연계시킴으로써 실시간으로 신체검사자료를 공유하면서 신체검사 업무를 지방청과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

신체등위 판정 과정의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5일 병역법에 공정한 신체검사와 관련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병무청에 '병무청위원회', 중앙신체검사소에 '중앙위원회', 지방병무청에는 지방병무청 검사장별로 '지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위원회'는 신체검사와 신체등위판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중앙위원회'는 중앙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사람과 신체등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등을, '지방위원회'는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5~6급 대상인 사람으로서 질병상태가 명백하여 중앙신체검사 의뢰에서 제외된 사람(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119개 질환)과 이의를 제기한 사람 등을 심의하고, 특히 2003년도부터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신체등위 4~6급 대상자를 추가로 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신체등위의 결정은 '지방위원회'는 징병관, 수석징병전담의사, 해당과

징병전담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인사(병무행정발전시민 참여 위원, 반부패국민연대, 참여연대 등 비영리 단체인사)등이 참석하여 전원 합의로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중앙위원회’는 1차로 중앙신검소장, 운영관, 수석 징병전담의사, 해당 과 징병전담의사, 진단방사선과 징병전담의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신체등위를 결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다수 의견을 얻은 신체등위 2개를 중앙신체검사소 징병전담의사 전원이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등급을 신체등위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중점관리대상 질환 선정 및 관리**

2003년도 일부 병역의무자가 문신, 다한증 수술 등을 악용하여 현역병 회 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우려가 있는 16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하였다.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신체등위 4급~6급 판정 대상자는 ‘지방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체등위를 결정하며,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질병 및 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받고 징병전담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며, 매월 보충역이나 면제자의 증감추세 등 징병신체검사 판정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각 대응하고 있다.

● **징병검사 명예 옴부즈만(ombudsman) 운영**

징병검사 명예 옴부즈만은 징병검사 전 과정에 대한 행정감시와 신체검사 대상자 및 가족 등의 불평 또는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위원과 반부패국민연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외부인사를 명예 옴부즈만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징병전담의사 친척·인척에 대한 신체검사 제척제도 시행**

신체등위의 판정관인 징병전담의사의 친척·인척의 청탁으로 인하여 부당한 신체등위를 판정할 소지를 제거하고 일반인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2004년부터 징병전담의사 친척·인척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제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척대상은 징병전담의사의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며 제척방법은 징병전담의사 자신이 직접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하게 될 경우 지방청에서는 중앙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징병전담의사가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체등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병역대체복무자 관리 강화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관리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체복무 지정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의 강화, 복무기강 확립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4,200여 개의 기관에서 72,000여 명이 복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며 복무이탈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복무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면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도표 6-7】 공익근무요원 복무 현황 (2004. 10월)

(단위 : 명)

계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	예술 / 체육 요원
	국가 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 단체	사회복지 시설		
72,549	13,570	45,033	10,039	3,591	184	132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병역자원 지원이 점차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할 경우 추천기관의 평가등급을 정하여 등급이 낮은 업체는 선정 및 인원배정에서 제외시키고,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고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

● 국내체재 허용 기간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출국과 귀국을 반복하며 사실상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6개월 이내 재입국자의 체류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체재 허용 기간을 1년에서 연간 통산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 향상

(1) 병무민원 콜 센터(Call-Center, 상담소) 운영

병무민원 상담은 병무청 본청과 13개 지방병무청(지청)별로 분산, 지역 중심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업무처리 또한 비효율적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민원상담체제를 전국단위로 통합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병무민원 콜 센터가 운영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9090(국방국방)으로 민원상담이 가능하게 되어 언제든지 전화로 병무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된 병무상담은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리콜 기능을 통하여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병무민원 콜 센터는 전화 민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민원과 FAX 민원 등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표 6-10】 병무민원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사이버 상담	전화 상담
2004. 10월	2,994,454	875,618	2,118,836
2003	3,882,444	1,106,652	2,775,792
2002(7~12월)	1,832,306	539,327	1,292,979

병무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 초청교육을 강화하고 민간 콜 센터와 협조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한편, 병무민원 상담 과정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과 민원불편 및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병무행정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2)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 및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과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병역수행자 중심으로 제도와 환경 및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 **입영일자, 입영부대 본인선택 제도 확대**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의무복무자가 복학시기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결정하는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첫 해 전체 입영계획 대상자의 13.5%인 3만여 명이던 접수인원이 2004년도에는 전체 입영계획 대상자의 38.9%인 7만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열차표 예매 방식과 비슷한 ‘유고자 실시간 변환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영계획 인원의 공석 발생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 전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본인의 입영일자와 입영 희망부대를 직접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육군 병 모집업무의 일원화**

육군 병 모집업무를 2003년부터 병무청이 주관하여 운영한 결과, 2002년 대비 군 지원율은 160%, 충원율은 13.8%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개별 적성에 맞는 군 지원 관련 정보를 이메일(e-mail),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고 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는 육군 병 모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이관하여 명실공히 육군 현역병에 대한 충원업무를 병무청에서 전담하게 되었고,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e-mail)로 교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방법 개선을 통해 업무처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도표 6-11】 병무청의 모병관리 주요 개선사항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개인별 지원 가능분야 안내
- 개인 적성에 맞는 군 지원관련 정보의 e-mail, 휴대폰 서비스
- 모집병 선발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
- 구비서류 감축 및 방문횟수 축소

● 육군 병 동반입대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의무복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가족의 걱정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친구,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전역 시까지 함께 복무하는 ‘동반입대병 복무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도에 최초로 2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터넷 본인선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에 발생되었던 인터넷 서버의 접속 불안정 문제가 해소되었고, 2004년부터는 지원자의 편익을 위해 모집 시기도 종전의 월 단위 모집에서 연간 단위의 수시모집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도 6개에서 40개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해 나가고 있다.

● 카투스(KATUSA) 선발과정 공개

카투사로 복무하는 것은 군복무 중 어학능력 습득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어 그 선호도가 증가되면서 지원 과열현상과 선발 및 배치과정에서 일부 부조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신의 요소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카투스 선발 및 배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자가족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선발과정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참관인이 직접 난수를 추첨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발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면서 선발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는 등 공개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모집 접수 때부터 매월 단위로 입영희망 시기를 기재하도록 하여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 요구하는 어학능력도 종전의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PS) 640점 기준을

KATUSA :
Korea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미 8군에 증강된
한국육군요원

TEPS :
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62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우수자원들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군 전투력 향상 및 민원편익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하고 있다.

(3) 적극적인 홍보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TV광고 및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홍보

군복무를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여기는 풍토를 확산하고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여 KBS, KTV, YTN을 통해 TV 방송광고를 하였다. 광고제작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위원, 병무홍보요원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제작하여 방송광고를 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체계를 개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고객관리시스템(CRM)’을 구축하고 45만 4천여 명의 고객에게 ‘병무청 뉴스레터’ 등 병무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e-mail)을 통해 전송하였으며, 사회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배너(banner)를 설치하여 병무행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을 찾아가는 홍보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시민단체회원 초청 설명회, 교통이 불편한 ‘낙도지역까지 찾아가는 병무청’과 ‘징병검사 수검자가족 초청 병무행정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병무청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기관으로서의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 언론을 통한 홍보

국방부는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적시적절하게 알려 주기 위해 기본적으로 언론보도(브리핑)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정책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반드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전에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홍보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9월 1일부터 국정브리핑을 통하여 병무청장 모닝메모와 각 실 및 국별 정책속보, 지방청장 활동 및 다양한 행사소식 등 병무청의 병무 관련 활동을 수시로 게재하고 있다.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리시스템

배너(banner) :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광고

●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이벤트 홍보

다양한 이벤트 홍보로 병무행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3대가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명문가로 선발된 40가문에 대해서는 포상과 '명문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홈페이지에 병역이행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는 등 선양사업을 펼침으로써 신성한 병역의무의 숭고성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병역이행과 관련한 문예작품 및 애니메이션 공모전 등을 통해 홍보하고, 병무홍보대사의 '일일 명예징병관 및 후배와의 대화' 활동을 월 1회 지방청별로 순회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병무행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하는 사회풍토 조성 및 상무정신 함양,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이벤트 홍보 등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다수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병역이행 명문가 시상식



○ 병무홍보대사 임명

II 군 환경보전 활동

군 환경보전 활동은 국민의 삶터인 국토환경 보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군은 주둔지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군 운용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가. 군 환경관리체계 발전

(1) 환경업무 수행체계 개선

군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환경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육군 군사령부급 부대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업무 전문화를 위해 1,258명의 환경전담인력을 두고 있으며, 향후 인력을 확대·운용할 예정이다.

【도표 6-12】 환경전담 인력 확충 실적

(단위 : 명)

총 소요	'03년 까지	%	'04	'05년 이후
1,609	1,123	70	136	351

(2) 장병 환경교육 내실화

군은 지휘관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매년 1,000여 명의 환경담당자에게 국립환경연구원 및 종합군수학교 등에서 환경실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군공병학교에서는 환경특기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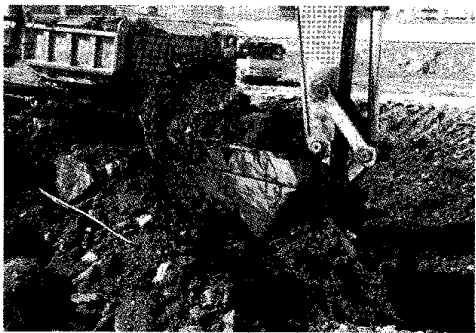
환경인식 교육은 주로 군 교육기관과 각급 제대의 기회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군은 자연정화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환경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군 주둔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대외협조

군 주둔지역 환경은 군이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므로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비정부기구(NGO) 등의 상호협조는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군은 민·관·군 협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1998년에 창설된 군·관 환경협의회는 국방부, 환경부 등 3개 중앙부처로 구성된 중앙협의회, 각 군 예하제대와 지방 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6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환경관련 협조를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전문가, 환경실무자,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군 환경보전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군의 환경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 군의 폐기물 처리

나. 주둔지 환경오염방지 사업

(1) 환경 기초시설 확충

군은 2004년 말까지 오수·폐수처리시설 2,127개 소를 확보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오수를 처리하며, 일일 처리용량 200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외부에 위탁관리 하는 등 오수·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도표 6-13】 환경기초시설 확보 추진현황

구분		총 소요	'04년 까지	%	'05	'06년 이후
환경 시설	개소	6,475	4,344	37	498	1,633
	억원	5,768	3,386		568	1,814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등 총 6,475개 소의 환경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강화된 환경기준 준수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시설 개수·보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가능한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군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처리하고 있다. 한편 주둔지 내 매물폐기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종합처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도표 6-14】 2003년 군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톤)

구분	발생량	위탁처리	자체처리				
			계	재활용	소각	기타	
계	199,667	133,121	66,546	60,322	4,869	1,355	
생활 폐기물	생활 쓰레기	104,962	74,855	30,107	25,238	4,869	
	음식물 쓰레기	35,197	871	34,326	32,971		1,355
지정폐기물	11,950	10,011	1,939	1,939			
건설폐기물	47,558	47,384	174	174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 지정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더 이상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군은 2003년 말 현재 2만 5천여 개의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군 건설사업 추진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강구

군은 각종 군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환경위해 요인을 최소화 하고 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장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에는 사업선정시 검토 및 협조절차, 환경친화적 사업설계 방안, 사업시공시 폐기물 발생 및 환경위해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

군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저장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주둔지 매물폐기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26개 소의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농약잔류량검사와 농약사용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부산지역의 옛 2정비창 부지 정화사업(122억 원 소요)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20개 소의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20여개 소에 대한 정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부대 주변 수질오염 검사

다.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대책 추진

군은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경로와 고도 및 비행시간을 조정하는 등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정비소음 저감을 위하여 방음정비고 13개 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소음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주요 비행장 및 사격장 40개 소의 소음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요재원을 판단하여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특별법은 소요재원 확보대책 마련, 공청회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06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라. 자연환경보전 활동 강화

(1) 지역 환경정화 활동 추진

매년 연인원 200여만 명 이상의 장병이 부대와 훈련장 인근의 산야, 하천, 해안, 공원 지역 등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1.5만여 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1부대 1산 1하천 가꾸기, 국토대청결운동, 한강 수증정화 및 낙도 환경정화 지원, 수해지역 쓰레기 수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는 환경정화 지원활동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국토환경을 가꾸는데 기여하고 있다.



○ 군의 환경정화 활동

(2) 야생동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추진

군은 또한 ‘군 주둔지 자연생태계 보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지리산, 대암산(용늪), 우포늪, 물거미(천연기념물) 서식지 등 특별 보전지역에 대한 보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겨울철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165톤), 울무·땃 등 밀렵도구 수거(4,750점), 감시초소 운영(731개 소) 등을 통해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전활동에 13만여 명의 장병이 참여하였다.

군은 작전, 훈련, 경계 등을 위해 과거에 설치되었던 초소, 참호, 철책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낡은 폐구조물을 가능한 한 복원하고 있으며, 훈

련을 하더라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방치 및 무단 매립을 금지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 작업환경 안전 관리

군은 국방부 훈령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규정」과 「군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바탕으로 군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작업환경 및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다.

군 작업장 내의 유해환경 요인인 중금속, 유기용제, 소음, 분진,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선 등에 대한 관리방안과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3년에는 15개 부대의 비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과학기술부에 신고하는 한편, 육군종합정비창을 방사선 안전검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1,200개의 방사선 장비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37개 부대에 대한 작업환경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4,300명의 작업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에는 해군정비창 등 7개 부대 20개 소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130여 개 부대에 대한 방사선 안전검사와 4,600여 명의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과 38개 부대에 대한 작업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Ⅲ 지역사회 발전과 민군관계 개선

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사시설 관리

(1) 군 사용 사유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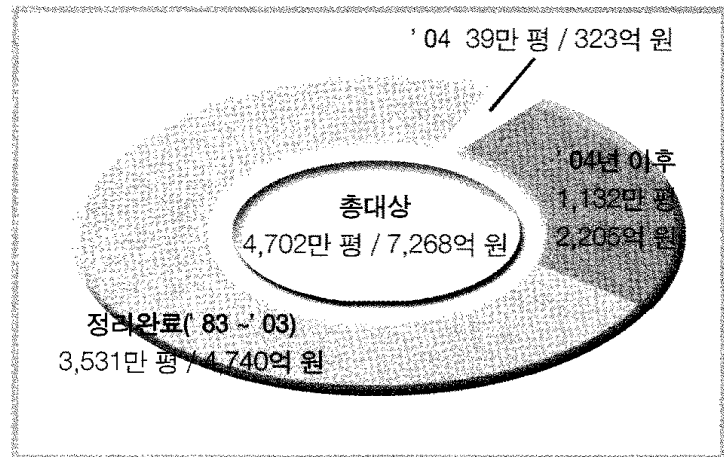
군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및 정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통해 매입하고 있으며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지는 반환하고 있다.

또한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유휴 국유지와 교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일반회계예산과 유휴 국유지 매각대금,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사용 중인 사유지를 보상을 통해 적극 매입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목적 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수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군의 사유지 정리 실적은 도표 6-15와 같다.

【도표 6-15】 군의 사유지 정리 현황



(2) 군용시설 이전 추진

우리 군은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국토이용, 도시의 균형발전 및 군 시설 현대화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예산을 사용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용시설 이전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용시설 이전은 1966년 이후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의 부대 이전요구가 급증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매각 차질 등으로 인한 이전비용의 부

족과 소요예산의 적기 확보 곤란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 왔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군은 1조 3,977억 원을 투자하여 56개 부대를 이전하였고, 2005년에는 2,335억 원을 투입하여 3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용시설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표 6-16】 군용시설 이전 실적(1998~2004년)

지역	계	서울	강원	경기	충청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이전 부대수	56	7	12	6	6	8	14	2	1

(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우리 군은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항공기지법」 등 군사시설(기지) 보호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접경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32억 1천여만 평을 군사시설(기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많은 부분이 군사시설(기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군사시설(기지) 보호구역과 관련된 각종 법규는 1970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도표6-17과 같다.

【도표 6-17】 주요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내용

- 민통선 북방 취락지역과 통일 정책 관련 사업지역, 안보관광단지 등 통제보호 구역을 제한 구역으로 변경
- 종전까지 탄약고 보호지역 내에서는 모든 주택의 신축·증축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철도·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보호구역 내 위치한 주택이 불가피하게 철거되어야 할 경우에는 건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
- 비행기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km까지 설정되었던 기지보호구역을 2km로 축소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명시된 건축 허용높이 범위내에서는 협의업무를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군 협의절차를 간소화

● 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완화

원활한 군사작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1975년부터 2004년 1월까지 28회에 걸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표 6-18과 같이 보호구역을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였다.

【도표 6-18】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

(단위 : 만 평)

연 도	계	'88 이전	'89~'94	'95~'03	'04
해 제	96,619	32,758	55,163	5,176	3,522
변 경	11,323	3,358	5,686	961	1,318
협의위탁	37,124			33,632	3,492

이외에도 2003년 1월부로 합참 작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호구역해제 및 설정·변경 등의 재조정, 규제완화, 작전성 검토 기준 재정립,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재산권 보장과 국민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04년 1월에는 경기, 강원 북부지역을 포함한 460개 지역 8,332만 평에 대하여 대폭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군사목적상 필요한 36개 지역 1,001만 평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으로 보호구역을 설정, 변경하였으며 서울 전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앞으로도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나. 재해·재난시 대민지원 활동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태풍, 홍수, 폭설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큰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경제성장 등에 의한 사회발전으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이에 참여정부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공포('04. 3. 1.)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04. 6. 1.)하여 정부의 재난관리체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였다.

국방부도 재난관리지원과를 신설('04. 8. 14.)하였고,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 전통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및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국방 재난관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지금까지 우리 군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중부권 지역의 폭설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헌신적인 대민지원 활동을 펼쳐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외부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재난관리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국방부는 국가재난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군의 역할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우선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 국가적 재난시 대민지원을 군의 기본임무로 수행토록 앞으로 국방기본정책서, 국방백서 등 각종 문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육군본부에 재난관리지원과를 창설하고 해·공군본부에는 팀 수준의 조직 창설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또한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과 군의 재난관리 가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방부와 소방방재청 간, 지역 군부대와 지자체 간 지원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체제도 제도화하



○ '04. 3월 폭설시 비닐하우스 복구



○ 긴급 구호 물자 지원

기로 하였다. 아울러 태풍, 해일을 비롯한 자연·인적 재난 11개 유형, 국가기반체계보호 8개 유형에 대해서 NSC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연계하여 재난시 즉각 활용이 가능한 구체화된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군에 배포·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시 군의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급 지휘관과 장병들의 기본인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방대학교 등 군내 각급 학교기관에 재난관리과목 개설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순회강연 등을 시행하는 한편, 긴급구조 요원은 물론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 교관들의 소방학교, 중앙 119구조대, 민간대학, 재난관리 연구센터 등에 대한 위탁 교육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방 재난관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를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군의 전비태세 강화와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군의 재해·재난 준비태세

국방부는 전군의 재난관리업무를 통할하는 차원의 「재해대책업무 처리 규정」을 정비하고 전국에 390개의 재해대책상황실과 재난구조부대를 운영하는 등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첫째, 탐색구조부대와 재난구조부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탐색구조부대는 특수능력을 구비한 부대로 대규모 재난이나 항공기 사고 및 선박 조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를 위해 각 군에서 24시간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난구조부대는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복구지원을 위해 광역시·도 단위로 1개씩 총 13개의 부대를 지정하여 행정관서의 요청이나 주민신고 시 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지원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둘째, 재해·재난구조지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1996~2002년 간 58.4억 원을 투입, 재난구조



○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

장비를 확보하여 구조지원 능력을 향상시켰다.

셋째, 재해·재난시 대민지원을 의료·방역·수질검사·세탁·급수 등의 종합지원 개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구급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응급환자와 중환자 후송시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 의무수송대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설이나 추석 등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일원에 110여 개 부대의 긴급구조·구난부대 및 응급환자를 위한 지정병원을 운용하여 24시간 대국민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표 6-19】 최근 5년간 재해·재난 복구 지원 실적

구 분	동 원			지 원 실 적				
	병력 (만명)	장비 (대)	인명 구조 (명)	도로/ 제방 (km)	가옥 정리 (동)	대민 진료 (명)	농경지 (ha)	기타
2000	52	3,790	-	66	1,493	459	5,926	· 산사태방지:114개 소
2001	184	66,892	124	681	36,252	-	-	· 방역:24,445ha
2002	98	22,872	111	567	11,822	2,750	1,830	· 세탁:154,500kg
2003	55	16,818	69	120	9,712	1,500	3,947	· 저수지 준설:43개 소
2004	23	5,054	2	59	569	1,500	63	· 토사/오물제거:82,163톤
계	412	115,426	306	1,493	59,848	6,209	11,766	· 질병 방역:3회('03년)

(3) 지원 실적

2003년 태풍(매미), 대구 지하철 사고, 돼지콜레라, 조류 독감 등의 각종 재난과 질병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2004년 3월 중부지방의 예기치 못한 폭설로 사상초유의 고속도로 마비 상황에서도 군은 고립된 국민들에게 식료품과 침구를 지급하는 등 신속한 긴급구조와 제설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4) 재해·재난 시 향토예비군 동참

예비군은 유사시 향토를 방위하는 임무 이외에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 중요행사 시에도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도에 「재해·재난시 예비군 운용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재해·재난 시 예비군 조직에 구축되어 있는 ‘크로샷(Xroshot) 경보전파체계’를 활용하여 재난을 사전에 경보 및 전파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자원봉사지원(429명)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에 9만여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여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였다. 또 해당 피해지역 예비군 5,000여 명에게 훈련을 면제함으로써 피해 복구를 위한 여건을 보장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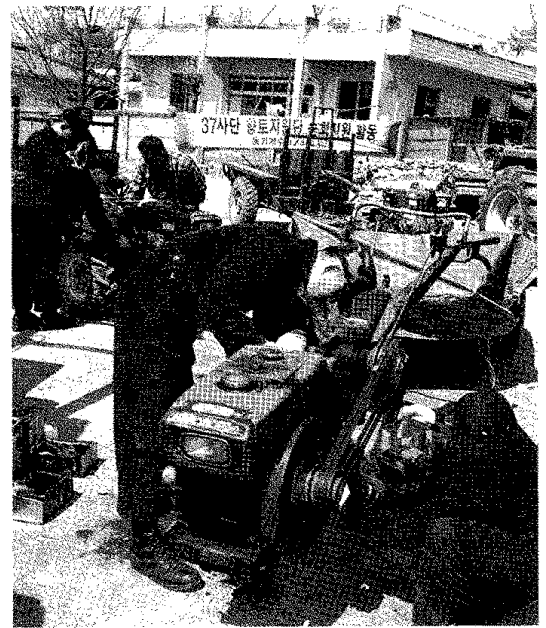
다. 기타 대민지원 활동

우리 군은 기본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군의 가용한 인력, 장비 및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민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농촌일손돕기 활동

군은 영농철과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적기 파종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기반 취약지역 농가에도 정기적으로 모내기, 벼 베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단순한 인력 지원보다는 농로정비, 하천 개수·보수 등 영농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농기계 수리봉사단’을 편성하여 농기계 서비스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운기,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수리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농기계 수리 지원

【도표 6-20】 2004년도 농촌일손돕기 지원 현황

참여인원	동원장비	주요 지원내용			
		영농지원	농기계수리	농수로보수	의료지원
344,773명	6,136대	8,225정보	6,320대	68km	2,554명

(2) 의료·방역지원 및 기타 활동

한편, 군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무료진료와 방역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변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불우이웃과 '부대 1개 이상 자매결연 맺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법률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대민 무료 법률상담도 실시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SARS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003년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가 발생했을 때는 국제공항과 검역소에 일일 평균 100여 명의 의료 인력을 지원하여 SARS 의심환자 17명, 추정환자 3명을 발견하여 입원시키는 등 총 475,060명을 검역함으로써 SARS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에 일조하였다.

고압챔버 :
고압산소를 이용하여 잠수함 승조원, 잠수사 등의 해저작업 훈련에 활용하는 장비로서, 일정공간에서 필요한 수심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만성근육통, 관절염, 가슴답답함 등 잠수병을 치료하는 치료용 챔버로서 활용 가능

2004년 12월 해군에서는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의 고압챔버를 이용하여 제주 화순지역에서 해녀 170여 명의 잠수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대민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고압챔버를 이용한 치료활동

부록

1. 2004년 세계전쟁 현황
2. 핵보유국의 핵 전략 현황
3.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5. 북한 연도별 군사비
6. 남북 군사력 비교
7. 북한의 미사일 개발/재원
8. 북한 핵문제 관할 경과 입지
9. 연합 및 합동 연습/훈련 현황
10. 남북군사회담 경과 입지('00. 9~'04. 7)
11.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12.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진활동 중지 및 선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13.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외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진활동 중지 및 선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14.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주요 입지
15.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6.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7. 2003~2004년도 대외 군사교류협력 현황
18. 주요 국제군비통제협약/기구
19.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력회의/참가국
20.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국방부 참가 현황('02. 4.~'04. 7)
21.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LNWFZ-NEA) 진행 경과
22. 유엔 평화유지 활동 현황 ('04년 11월 현재)
23.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평화·재건 지원 파병 경과
24. 연차별 정부재정과 국방비
25. 2005년도 국방예산
26. 연도별 국방비 구성 현황
27.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28. 2004년도 주요 군사장비 전력화 현황
29. 방산 관련 협정체결 현황
30. 국방연구개발 투자 현황
31. 2004년 국방개혁 추진과제(101개)
32. 국방기구도 및 국방인원 현황
33. 군 환경시설 설치 중기계획
34. 군 보유 토지 및 건물 용도별 현황
35. 국방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2003~2004년)
36.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37.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
38. 국방 주요연표(2003~2004.11.)

2004년 세계 분쟁 현황

2004. 10. 31 현재

지역	총돌분쟁 : 수준	대립분쟁(M)	잠재분쟁(L)	종결분쟁
아프리카 (28)	나이지리아내분: D→C	라이베리아내전: B→M		
	부룬디내전: C	기니비사우내분: L→M		
	소말리아내전: C	나미비아분쟁		
	수단내전: D→A	나이지리아-카메룬국경분쟁		
	알제리내분: C	르완다내전	시에라리온내전: M→L	레소토사태: L→종결
	앙골라분쟁: D	서부사하라분쟁	R콩고내분	지부티내분: L→종결
	우간다내전: C	이디오피아내전	토고정쟁	
	코트디부아르전쟁: C→D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국경분쟁		
	DR콩고분쟁: B→C	이집트종교분규		
		이집트-수단분쟁		
	중앙아프리카공화국전쟁, 차드분쟁, 케냐부족분규			
미주 (5)	콜롬비아내전: B→C	멕시코내전	페루내분: M→L	
	아이티내전: C		포클랜드분쟁	
중동 (13)	이라크 전쟁: A→B	이스라엘-시리아: D→M		
	예멘내전: C	이란-UAE 영유권분쟁	이란-아프가니스탄 분쟁: M→L	
	팔레스타인분쟁: C	이라크내분	이라크-쿠웨이트분쟁	
	이스라엘-레바논분쟁: D	이란내분	이스라엘-요르단분쟁	
	터키쿠르드족분쟁: D	이란-이라크분쟁		
아시아 (20)		미얀마분쟁: D→M		
	네팔내분: B→C	남북한대립		
	인도네시아분리운동: B→C	남사군도분쟁		
	태국종교분쟁: D	남쿠릴영유권분쟁		
	필리핀내전: C→D	방글라데시내분		
	미국-아프간전쟁: C	서사군도분쟁		
	아프가니스탄내전: C	센카쿠/조어도분쟁		
	스리랑카내전: D	중국-대만대립		
	인도분리운동: D	중국-인도국경분쟁		
	카슈미르분쟁: C	캄보디아내전		
	티베트독립운동			
CIS (9)		몰도바내분리운동		
	러시아-체첸분쟁: B	북오세티아-잉구시분쟁		
	그루지야내분: M→D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전쟁		
		에스토니아-러시아분쟁		
		우즈베크내전		
		키르기즈내전		
	타지크내전			
유럽 (14)			그리스-마케도니아분쟁	
		마케도니아내분: D→M	루마니아민족갈등	
	코소보독립분쟁: D	북아일랜드분리운동	보스니아내전	
		그리스-알바니아분쟁	보이보디나자치분쟁	
		키프러스분쟁	불가리아민족갈등	
	알바니아내분	슬로바키아민족갈등		
		에게해분쟁		
		이스트리아영유권분쟁		

*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세계 분쟁의 양상과 전망' (www.kidare.kr), 분쟁의 강도는 A→D로 갈수록 낮아짐.

핵 보유국의 핵전력 현황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영 국	프랑스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5,500km이상)	발수	550기	725기	30+기	0	0
	종류	미니트맨 III : 500 피스키퍼: 50	SS-18 :150 SS-19 : 150 SS-24 : 36 SS-25 : 36 OSS-27 : 29	CSS-4 (DF-5) : 24 CSS-X-9 (DF-5) : 8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2,500~5,499km)	발수	0	0	110+	0	0
	종류	-	-	CSS-2 (DF-3) : 32 CSS-3 (DF-4) : 20 CSS-5 (DF-21) : 60		
M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800 ~2,499km)	발수	0	0	0	0	0
	종류	-	-	-	-	-
SLBM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발수	432기	540기	12기	58기	64기
	종류	트라이던트 C-4 : 192 트라이던트 D-5 : 240 (SSBN : 18척)	SSN- 8 : 24 SSN-18 :112 SSN-20 :100 SSN-23 :96 (SSBN: 13척)	CSS-N-3 (JL-1) : 12	트라이던트 D-5 : 58 (SSBN:4척)	M-4 : 32 M-45 : 32 (SSBN:4척)
전략폭격기	대수	203대	240대	180		
	종류	B-2A : 21 B-1B : 89 B-52H : 93	TU-95 : 63 TU-160 : 15 TU-22M/MR : 162 (해군45 포함)	H-6 : 140 H-5 : 4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3.10)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 총괄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총병력	1,427,700	960,6000	2,350,000	238,579

■ 육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병력	485,500	321,000	1,600,000	149,360
사단 (예비)	10(8)	39(15)	59	10
전차	7,620	21,870	7,180	1,000
경전차	6,719	150	1,500	-
정찰전차	96	2,000	-	90
장갑차	15,910	25,975	4,500	1,220
견인포	850	10,065	14,000	860
자주포	697	4,705	1,200	550
다련장포	2,087	2,606	2,400	120
박격포	1,076	2,550	100	1,940
대전차 유도무기	토우 8,724 드래곤 19,000 재블린 950	AT계열의 다양한 형태 보유, 보유수는 불분명	6,500	650
지대공미사일	1,281	2,670	284	800
헬기	4,597	1,700	327	495
항공기	298	-	4+	16

■ 해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 력	400,000	155,000	250,000	44,340
잠 수 함 (전략)	72(16)	53(13)	69(1)	16
항 공 모 함	12	1	-	-
순 양 함	27	7	-	-
구 축 함(훈련)	49	14	21	45(2)
프 리 기 트(훈련)	30	10	42	8(1)
해 안 초 계 함(정)	21	88	368	(7)
소 해 함	26	60	39	31
상 륙 함	40	22	56	8
상 륙 정	200	80	55	-
지 원 함	35	436	163	26
수 송 함	24		-	8
에 비 수 송 함	127		-	-
전 투 기	1,705	217	200	104(P-3C)
헬 기	693	102	51	107
해 병 사 단	3	1	2(여단)	-

■ 공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 력	367,600	184,600	400,000	45,459
장 거리 폭 격 기	203	606	폭격기 180	-
정 찰 기	239	214	290	44
지 휘 기	62	20	-	-
전 투 기	3,513	908	1,700	367
수 송 기	1,020	354	513	42
급 유 기	659	20	10	-
훈 련 기	1,637	1,135	200	170
헬 기	219	848	90~100	59
민 간 에 비	927	1,500	-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3.10) 및 2004년 일본 방위백서(동경 : 일본방위청, 2004.7)

남북 경제지표 비교

구분	한국		북한		한국의 북한대비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GNI(억 달러)	4,770	6,061	171	184	28배	33배
1인당 GNI(억 달러)	10,013	12,646	762	818	13.1배	15.5배
경제성장률(%)·GNI 기준	6.3	3.1	1.2	1.8	-	-
무역총액(억 달러)	3,146	3,726.4	22.6	23.9	139.2배	155.9배
총인구(만 명)	4,764	4,793	2,237	2,252	2.1배	2.1배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UN, 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를 GNI로 대체 사용하고 있음(GNI≒GNP)

북한 연도별 군사비(1991~2003)

()내는 북한 공식발표 군사비, (단위 : 억 달러)

연도	GNI (한국은행)	총 예산 (북한발표)	군사비	GNI 대 군사비비율(%)	총예산 대 군사비비율(%)	환율 (미분 : 북한원)
1991	229	171.7	51.3(20.8)	22.4	29.9(12.1)	2.15
1992	211	184.5	55.4(21.0)	26.3	30.0(11.4)	1.13
1993	205	187.2	56.2(21.5)	27.2	30(11.4)	2.15
1994	212	191.9	57.6(21.9)	27.2	30(11.5)	2.16
1995	223	208.2	62.4	28	30	2.05
1996	214	-	57.8	27	-	2.14
1997	177	91.0	47.8	27	52	2.16
1998	126	91.0	47.8(13.3)	37.9	52(14.6)	2.20
1999	158	92.3	47.8(13.5)	30	51(14.6)	2.17
2000	168	95.7	50(13.7)	29.8	52(14.3)	2.19
2001	157	98.1	50(14.1)	31.8	51(14.4)	2.21
2002	170	100.1	50(14.9)	29.4	50(14.9)	2.21
2003	184	112.5	50(17.7)	27.2	44.4(15.7)	145

※ 1995~1997년도 군사비 규모는 GNI의 평균 27%를 적용한 추정치임

남·북 군사력 비교

2004. 12. 기준

구 분		한 국	북 한		
병력 (평시)	계	68만 1천여 명	117만여 명		
	육 군	55만여 명	100만여 명		
	해 군	6만 7천여 명	6만여 명		
	공 군	6만 4천여 명	11만여 명		
주요 전력	부 대	군단(급)	13(항작사, 특전사 포함)	19 (포병군단,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포함)	
		사 단	49	75	
		기동여단	19	69(교도 10여개 미포함)	
	육 군	장 비	전 차	2,300여 대	3,700여 대
			장갑차	2,400여 대	2,100여 대
			야 포	5,100여 문	8,7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4,600여 문
	해 군	수 상 함	지대지유도무기	30여 기(발사대)	60여 기(발사대)
			전투함	120여 척	430여 척
			상륙함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함			10여 척	30여 척	
공 군	헬 기	지원함	20여 척	3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전투기	530여 대	830여 대	
		특수기	7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예비전력(병력)	지원기	200여 대	520여 대		
	헬기	690여 대 (육, 해, 공군 헬기 통합)	320여 대		
예비전력(병력)		304만여 명	770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 한국의 군사력에 제시된 해군 병력은 해병대 2만 7천여 명을 포함한 수치이며 지상군 부대(사단, 여단), 장비는 해병대 전력을 합산한 수치임.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한 수치임.

북한의 미사일 개발/제원

■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연도	개발 / 생산 활동
70년대 초	· 중국의 미사일 개발 계획 참여 미사일 기술 획득(추정)
1976~1981	·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개발
1984.4	·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 발사
1986.5	· SCUD-C 미사일 시험 발사
1988	· SCUD-B/C 작전 배치
1990.5	· 노동미사일 최초 식별
1993.5	·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
1994.1	· 대포동 1호 미사일 최초 식별
1998	· 노동미사일 작전 배치
1998.8	· 대포동1호 미사일 시험 발사(북한측 : 위성발사 주장)

■ 북한의 미사일 제원

구분	SCUD-B	SCUD-C	노동	대포동1호	대포동2호
사거리 (km)	300	500	1,300	2,500	6,700
탄두중량 (kg)	800	600	500	500	1,000 (추정)
비고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시험 발사	개발 중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 일지 (2002. 10 ~ 2004. 12)

일 자	주 요 내 용
2002. 10. 17	· 미국, 10월 초 Kelly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음을 발표
10. 27	· APEC 기간 중 한·미·일 3국 정상회담 (Los Cabos, Mexico), 북핵문제에 대해 3국이 공동대응 (united front)을 유지기로 합의 - 북핵문제의 심각성 및 동 문제의 철저한 규명과 조속한 폐기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문제해결 시까지 3국이 공동대응 유지 방침 천명
11. 15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12월분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
12. 21	· 북한, 핵동결 해제 조치 개시 - 5MWe 실험용 원자로 봉인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 핵연료 제조공장 봉인 제거 및 방사화확실험실 (재처리시설) 봉인 제거,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12.23)
12. 31	· 북한, IAEA 사찰관 추방
2003. 1. 10	· 북한, NPT 탈퇴 선언
2. 12	· IAEA 특별이사회 개최, 북한 핵문제 안보리 보고결의안 채택
4. 18	· 북한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진행 주장 "8천여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4. 23~24	· 북경, 미·중·북 3자회담 개최
5. 14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 관련 당사국과의 공동 노력 아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핵불용 의지 다짐
5. 31	· 부시 대통령,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발표
6. 25	· 북한 조선중앙방송,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발언 "우리는 날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전략에 대처할 정당방위 조치로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
7. 7~10	· 노무현 대통령 방중, 한·중 공동성명 발표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양측은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함"
8. 27~29	· 제1차 6자회담 개최 (북경, 조어대)
9. 19	· IAEA, 제47차 총회에서 북핵 관련 결의안 채택 - 북한에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의 중요성 강조

10. 2	· 북한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 “8천여 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얻어진 플루토늄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시켰음”
10. 7	· 한·중·일 정상회담, 군축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14개항의 공동성명 발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20	· 한·미 정상 회담시 부시 대통령, 북핵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나 북한이 핵으로 위협한다면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임”언급
10.24	·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의 핵능력 언급 “북한은 핵무기 5-6발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음”
12.10	·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북한의 핵탄두용 기술 수출위험성 거론
12.12	· EU의장국 성명, 북한에 핵개발 계획 해체 촉구
12.12	· IAEA 특별이사회 개최, 북한 핵문제 안보리 보고결의안 채택
04.1.6.~10	· 미 비공식 대표단 방북, 북핵시설 방문 - 미 스탠포드 대학 존 르위스(John Lewis)교수와 로스 알라모스 국립 핵연구소 전 소장 지그프리트 핵커(Sigfried Hecker) 등 - 핵커 박사 미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방북결과 증언(1.21)
1. 9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리비아 WMD포기가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
1.29	· 대북제재법안 일본 중의원 통과 - 유엔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본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 송금정지와 선박입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안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
2.11	· 부시 대통령 국방대학 연설, WMD 확산방지를 위한 7가지 방안 제안 - ① PSI 참여국 및 기능확대 ② 확산방지를 위해 각국의 관련 법규 정비 ③ 년-루가 프로그램 확대적용 WMD 유출방지 ④평화적 이용을 발미로 한 핵개발 가능성 차단 ⑤ 추가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에 한해 민수용 핵설비 수입 허용 ⑥ IAEA 특별위원회 신설, 실질적 강제력 부여 ⑦ 핵확산 의심국의 IAEA 집행위 및 특위 활동 금지
2.25.~28	· 제 2차 6자회담 개최 - 의장성명 요지 · 아직 이견이 있으나, 상호입장에 대한 이해 증진 · 한반도 비핵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 표명 · 핵문제 및 관련된 관심사를 “상호조율된 조치”하에 다루기로 합의 · 2004년 2/4분기 내 북경에서 3차회담 개최 합의 · 전체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 · 실무그룹 임무는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
4.19	· 김정일 방중 시, 북한은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
5.12~14	· 제1차 실무그룹회의 개최(북경)
5.22	·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북, 김정일과 정상회담 - 핵문제는 ‘6개국 협의’ 활용 해결, 미사일 발사 시험유보 계속키로 합의

6.10	· G8정상회담, 북한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 폐기 촉구
6.21~23	· 제2차 실무그룹회의 개최
6.24~26	· 제3차 6자회담 개최, 의장성명 채택 - 의장성명 요지 · 한반도 비핵화 공약 재확인 및 이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first steps)의 조기 이행 필요성 강조 ·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 추진 필요성 강조 · 제시된 제안들이 향후 논의의 유용한 기초가 된다는데 유의 · 4차 6자회담을 9월 말 이전 베이징에서 개최기로 원칙적 합의 · W/G를 조속히 개최,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에 관한 세부사항 및 상응 조치들을 구체화, 적절한 형태로 본회담에 권고
7.6	·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핵 폐기에 대한 보상불가 입장 표명 “북한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은 있을 수 없음. 북핵은 동결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으며, 핵물질과 핵시설의 궁극적인 폐기가 연결되어야 함”
7.7	· 북한, 핵문제 해결은 다른 나라 방식이 통할 수 없다고 주장 · 북한, 검증방법에 대한 입장 표명
7.14	“우리가 말하는 검증이란 동결상태에 대한 감시를 의미함. 우리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문제는 핵폐기 단계에 가서나 논의해 볼 문제임”
7.27	· 북한, 선제공격이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님을 주장 · 북한, 보상 없는 핵동결 불가 주장
8.10	“미국이 ‘동결 대 보상’ 제안에 흥미가 없다면 서로 제 갈 길을 가면 그만이며 보상 없는 동결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임”
9.2	· 한국 과학기술부, 원자력 연구소의 농축우라늄 실험사실 발표 · 북한, 한국의 핵실험 사건 진상 규명 전 6자회담 불참 입장 표명
9.16	“남조선 비밀 핵실험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해명되기 전에는 우리의 핵무기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마당에 나갈 수 없음”
10.18	·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인권법」에 서명
10.22	· 북한, 3가지 6자회담 참가조건 제시 - ①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② 동결 대 보상에 미국 참여 ③ 한국의 핵문제 우선 논의 ·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의 6자회담 참가조건 수용불가 입장 표명
10.23	“그들이 얘기하길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다루야 함. 추가 6자회담을 갖는 조건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됨” · 북한, 북한이 미·북 양자회담을 고집한 적이 없음을 주장
11.14	“우리는 쌍무회담에 기대를 가져 본 적도 없고 기다려 본 적도 없으며, 우리의 제도 전복 음모를 꾸미고 있는 대상과 쌍무회담은 말도 안 됨” · 한·미정상회담 개최
11.20	-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 회담 참가 지연 가능성 시사
12. 4	“우리는 회담 개최에 바쁜 것이 없으며, 현재 제2기 부시행정부가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그의 정책과정을 지켜보려고 함” · 캘리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핵 관련 미측 입장 언급(한국일보 인터뷰)
12.13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다년간 평화·협동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북한은 김정일 체제하에서 체제의 변화(transform)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연합 및 합동 연습/훈련 현황

1.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태	목적	훈련내용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종합지휘소 연습	한국방위를 위한 총무계획 및 작계 5027 수행 절차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미 증원군 전개 절차 연습 · 작계시행 절차 연습
연합전시증원(RSOI) 및 독수리(FE) 연습	지휘소 및 야외기동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증원전력 한반도 정상전개 보장 및 한국군 전쟁지속 능력 유지 · 연합특전사 / 해·공군 작전포함, 연합/합동 후방지역작전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합동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 절차 숙달 · 전투력 창출 및 한국군 전투력 복원 능력 배양 · 전시지원(WHEN) 절차 연습 · 연특사 작계시행 절차 숙달 · 양륙공항·항만, 주요시설 방호, 요충지 방어훈련 · 해양 기동전투단, 연합상륙, 전구·유도탄 방어 훈련

2. 한국군 합동 연습 및 훈련

연습/훈련명	형태	목적	훈련내용
태극 연습	지휘소 연습	합참의 전시임무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전시임무 및 기능 수행 절차 숙달 · 전시체제 전환 절차 연습 · 공세적 대화력전 및 적극적인 중심작전 수행체계 절차 연습 · 지휘소 자동화 체계운용 활성화
호국 훈련	야외 기동훈련	군단급 합동작전 및 통합전투 수행능력 향상 위한 작계시행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계시행능력 향상 · 공·지·해 합동작전체제 검증 · 대화력전/제대별 통합전투 수행능력 증대
군단급 FTX	야외 기동훈련	군단급 통합전투수행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전투관리체계 운용 향상 · 대화력전 및 중심작전 수행체제 발전 · 제병협동작전 및 기동절차 숙달 · 공·지 합동작전 수행 능력 배양

3. 기타 주요 연합훈련

훈련명	시 기	참 가 국	훈련내용
환태평양 훈련 (RIMPAC)	격년제 (짝수년 5~7월)	한국, 미국, 호주, 칠레, 영국, 일본, 캐나다,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공방전 · 해상교통로 보호 · 해상차단 및 항공강습 · 함포사격훈련 · 유도탄 및 어뢰발사훈련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	격년제(6~8월)	한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전술훈련 · 조난 항공기, 선박 수색 및 구조훈련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 (Pacific Reach)	격년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함 승조원 탈출 및 구조훈련

남북군사회담 경과 일지 ('00. 9. ~ '04. 7.)

구 분	일 자	장 소	주요 협의/합의 내용
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2000.9.24 ~9.26	제주도	5개항의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0.11.28	통일각	「남북 군사보장 합의서(안)」 협의 · 남북관리구역 설정시기, 설정 범위, 도로노선 위치, 관 리구역 내 시설물 건설 ·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 동시 착공 문제
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0.12.5	평화의 집	「남북 군사보장 합의서(안)」 협의 · 도로노선 확정 · 남북관리구역 설정 및 운용, 공동규칙 관련 협의 ·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 동시 착공 의견 접근
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0.12.21	통일각	우리 측 합의서(안) 설명 및 전달 후 차후 회담에서 논의키 로 하고 1시간 만에 회담 종료
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1.1.31	평화의 집	주요 협의내용 : 「남북 군사보장 합의서(안)」 · 남북관리구역 설정 및 운용 · 비무장지대 내 지뢰제거 및 철도·도로 연결공사 방법,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 접촉 및 연락방법
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1.2.8	통일각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 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이 후 "군사보장 합의서") 타결
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2.9.14	평화의 집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2.9.16	통일각	군사보장 합의서 문본 확인, 1차 교환 및 제7차 남북군사 실무회담 진행절차 협의
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2.9.17	평화의 집	군사보장 합의서 교환·발효
1차 남북군사실무접촉	2002.10.3	통일각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북측입장 확인 · 철도·도로 연결작업을 위한 쌍방 일정별 공사 계획 및 노선도 교환 협의
2차 남북군사실무접촉	2002.10.11	평화의 집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쌍방 합의문(안) · 비무장지대 균형공사/지뢰제거장비 지원 협의
3차 남북군사실무접촉	2002.10.16	통일각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쌍방 합의문(안) · 철도·도로연결 관련 비무장지대 균형공사 관련 협의
4차 남북군사실무접촉	2002.10.25	평화의 집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관련 쌍방 공동보도 문안 및 개최에 원칙적 합의 · 동해선 통신선연결 문제 협의
5차 남북군사실무접촉	2002.11.13	통일각	· 철도·도로연결 관련 균형공사 검증문제, 공동 측량문 제, 동해선 통신선연결 문제 협의 ※ 북측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행정상 이 유로 어렵다"고 언급 회피

구 분	일 자	장 소	주요 협의/합의 내용
6차 남북군사실무접촉	2002.12.23	평화의 집	·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합의서(안) 및 동해선 통신선 연결 문제 협의
7차 남북군사실무접촉	2003.1.27	통일각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채택·발효
8차 남북군사실무접촉	2003.6.4	평화의 집	남북 상호 현장 확인 방문 합의 (방문일 : 6.11 / 인원 : 동·서해 각각 10명씩)
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3.9.17	통일각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채택·발효
9차 남북군사실무접촉	2003.11.14	평화의 집	·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안)」 관련 쌍방 입장 교환
10차 남북군사실무접촉	2003.11.28	통일각	· 「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관련 의견 접근 · 일부 이견 조항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채택 후, 본 회담을 통해 서명·발효기로 합의
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3.12.23	평화의 집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교환 후 발효
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004.5.26	금강산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선전활동 중지/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쌍방 입장 제기
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004.6.3~ 6.4	설악산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분계선 지역에 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	2004.6.10 ~6.12	개성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발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	2004.6.29 ~6.30	피주	· 쌍방 1단계 선전수단 제거대상 목록 교환 및 상호 확인 평가, 일부 이견사항은 추후 협의기로 합의 · 우리측, 서해문제 개선방안 제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수석대표접촉	2004.7.5	개성	· 1단계 선전수단 제거대상 관련 이견사항 협의 · 2단계 선전수단 제거 착수 합의 · 서해문제 관련 쌍방 합의대로 충실히 이행 재확인

※ '00.11.28 ~, 군사실무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 군비통계 차장 육군준장 김경덕
'02.10.25 ~, 군사실무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 국방부 회담운영 T/F장 육군대령 문성묵
'04. 5.26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 합참 작전기획차장 해군준장 박정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이 9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남측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대한민국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들과 북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찰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 9. 26

제 주 도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조 성 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부 장
김 일 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한다.
 - ④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 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 ⑥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 검증도 할 수 있다.
 -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
준장 박정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단장
소장 안익산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2004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문제

1) 남북 서해 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 ① 국제상선공통망의 주주파수는 156.8Mhz, 보조주파수는 156.6Mhz로 설정·운영하되, 주주파수는 1분 동안에 통화를 끝낼 수 있을 때에 사용하며, 통화시간이 그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장애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주파수로 넘어가고, 보조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주주파수로 넘어와서 1~16채널 범위내에서 임의의 주파수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쌍방 함정들이 상대측 함정들을 호출하는 경우 남측 함정 호출부호는 ‘한라산’으로, 북측 함정 호출부호는 ‘백두산’으로 한다. 호출시 감명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명도 상태를 1~5까지의 숫자로 대답하고, 감명도가 낮을 경우 출력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 함정들 사이 교신설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남측 : “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감명도?”
북측 : “한라산, 한라산, 여기는 백두산, 감명도 다섯”

- ③ 해당 해역에 일방의 함정이 2척 이상 있을 경우, 지휘함정들 사이에만 교신한다.
- ④ 쌍방은 교신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

2) 기류 및 발광신호 제정·활용

- ① 쌍방은 국제신호서의 국제신호체계와 남북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록 1과 같이 기류 및 발광신호를 보조수단으로 추가 제정하여 활용한다.
- ② 이 신호방법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쌍방 함정이 불가피하게 접근하게 될 경우(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에 사용한다.
- ③ 기류는 함정 마스트 좌우현 최외곽 기류줄 또는 최상부에 게양한다.
- ④ 야간에 함정 신호등화는 마스트에 있는 홍등 1개 또는 점멸등(소리 제외)을 켜고, 탐조등으로 기류신호에 해당하는 국제 모르스 전신부호를 상대측 함정이 응답할 때까지 반복하여 송신한다.

상호 교신을 위한 발광신호는 호출시 AA AA AA(·-·-·-)로, 응답시 TTTT(-)로 한다.

3)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교환

- ① 쌍방 관련 군사당국간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된 정보는 일일 1회(09시) 교환한다.
- ② 일일정보교환은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통하여 부록 2의 양식에 따라 한다.
- ③ 쌍방간 교환할 정보의 내용은 불법조업선박들의 조업시간, 위치, 척수로 한다.

4)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운영

- 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월중 통신실무자접촉을 통하여 협의해 나간다.
- ② 새로운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 후 통신장애 발생시 쌍방은 즉시 다른 연락방법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빠른 시간안에 각기 자기측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복구한다.
- ③ 새로운 통신선로는 2004년 8월 12일 오전 9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 동쪽 5m 부근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하며 시험통화는 10시에 한다.

5) 통신 운영

- ① 통신수단(유선, 무선, 기류 및 발광신호)은 상시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측이 호출시 즉각 응답하여야 한다.
- ②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 정기 통신시험은 일일 2회(09시, 16시) 실시한다.
- ③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관련하여 긴급한 연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통보한다.
- ④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4일 통신수단별 운영시험을 부록 3과 같이 실시한다.

2.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 문제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1) 쌍방은 2004년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 ①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한다.
- ② 상대측 군인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2) 쌍방은 2004년 6월 16일 0시부터 8월 15일 17시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의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선전수단을 철저히 제거한다.
- ② 제거 대상의 범위는 쌍방간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자기측 체제선전 및 상대측이 비방·중상·선동으로 인식하는 모든 확성기, 돌글씨, 입간판, 전광판, 전단, 선전그림, 선전 구호 및 글 등을 포함한다.
- ③ 점등탑, 석상, 석탑 등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상대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 ④ 선전중지와 선전수단 제거대상에는 한강하구, 서해 연안지역과 섬들에 설치된 선전수단들도 포함되며, 이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는 1단계 기간에 한다.
- ⑤ 쌍방은 단계별 제거 완료 7일 이전에 상대측이 제거해야 할 대상의 위치(군사분계선 표식물 기준), 형태, 내용을 포함한 목록을 교환하여 쌍방이 이 목록에 따라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검증한다.
- ⑥ 불가피한 이유로 제거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쌍방은 그 이유와 변경된 일정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고 합의에 따라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선전수단제거 검증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문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통지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쌍방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 ⑧ 쌍방은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한다.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3~5명의 검증단을 구성하여 약속된 시간에 군사분계선상에서 서로 만나 상대측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다.
- ⑨ 쌍방은 매 단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

3. 수정·보충 및 발효

- ① 본 합의서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단장간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필요시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6월 12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
준장박정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단장
소장안익산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주요 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0. 8. 21	·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국방부 추진위원회 편성
8. 26	· 육군 제1건설단 창설(경의선공사)
9. 18	· 경의선 기공식
9. 19	· 경의선 DMZ 이남 지뢰제거(2개 공병대대)
9. 26	·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제주) : 공사 추진원칙 합의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 남북관리구역 설정, 군사실무접촉 등)
10. 12	· 경의선 DMZ 이남 노반공사 (노반공사 : 5개 공병대대, 경계 : 1개 대대)
9. 26 ~ 2001. 2. 8	·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5회) :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타결 · 북측 합의서 서명 / 교환 일방적 연기로 발효 지연
2001. 8. 14	· 경의선 DMZ 이남 지뢰제거 완료
10. 13	· 경의선 철책 이남 노반공사 완료
12. 31	· 경의선 철책 이남 철도 / 도로공사 완료
2002. 4. 11	· 도라산역 개통식 행사
8. 31	·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 - 경의선 철도 : '02. 12월 말, 경의선 도로 : '03. 봄(5월 말) 완공 - 동해선 임시도로 : '02. 11월 말 완공, 12월 초 연결 - 동해선 철도·도로 : 1년 목표 완공('03. 9월 말)
9. 7	· 육군 제2건설단 창설(동해선 공사)
9. 17	·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 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9. 19	· 경의선 DMZ내 지뢰제거/ 철도·도로 노반공사 (지뢰제거 : 2개 공병대대, 노반공사 : 2개 공병대대, 경계 : 1개 대대) · 동해선 DMZ 지뢰제거 및 임시도로 노반공사 (지뢰제거 : 1개 공병대대, 노반공사 : 2개 공병대대, 경계 : 1개 대대)

일 자	주 요 내 용
2002. 12. 11	· 동해선 임시도로 공사 완료(6.6km)
12. 24	· 경의선 임시도로 완료
12. 31	· 경의선 철도공사 완료(DMZ 1.8km)
2003. 1. 24	· 남북 철도·도로실무 협의(평양) : 군사분계선 → 자기축 방향으로 공사 실시 협의
2. 14	·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통일전망대, 임시 CIQ)
5. 17	· 경의선 도로 노반공사 완료 · 노반검측 및 서울지방국토청에 인계
6. 14	· 경의선 / 동해선 철도 MDL 연결 행사
6. 30	· 개성공단 착공식 참석(119명) : 경의선 임시도로 경유
10. 31	· 경의선 도로공사 완료(DMZ 1.8km)
11. 15	· 육군 제1건설단 해체
12. 24	· 제9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 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 합의서 채택
2004. 1. 31	·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내 경비초소 신축
5. 1	· 동해선 DMZ내 도로 포장 완료
6. 11	· 동해선 임시도로 철거 완료 · 동해선 DMZ내 철도 궤도부설 완료
7. 12	· 동해선 군 책임 철도·도로 노반공사 마무리부대 복귀(1개 공병대대(-))
7. 30	· 동해선 DMZ이남 ~ 통전터널 간 철도 궤도부설 완료
10. 8	· 공사 잔류부대 복귀(1개소대(+))
11. 29	· 육군 제2건설단 해체
11. 30	· 육군 추진위원회 해체
12. 31	· 국방부 추진위원회 해체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2003. 11. 17. 서울

1. 제35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2003년 11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조영길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3년 11월 15일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인 김종환 대장과 리차드 마이어스 대장은 제25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파견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억6천만불의 재건비용을 제공기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사의를 표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순조롭고 시의적절한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정보공유 및 군수계획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기파견된 한국군이 세계적 수준의 군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그들의 국가를 재건하면서, 공격행위를 예방하고 테러리즘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기구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조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50주년의 의의에 주목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 양국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동반자 관계가 양국 이익의 근간을 이룬다는 강한 신념을 표명하면서 미래를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4. 양 장관은 2003년 개최되고 2004년에도 지속될 예정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협의의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한 만족을 표하였다. 양 장관은 서울내 주한미군의 이전, 연합군사능력 증강, 군사임무전환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구상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현대화 되고 강화되며,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5. 서울 도침에 소재한 주한 미군을 조기에 이전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부시 대통령간의 합의를 상기하며, 양 장관은 한미양측이 금번 SCM 이전에 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를 가능한 한 조기에 이전하고자 하는 양국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6. 양장관은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에 적응시키고 발전된 군사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연합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향후 3년에 걸쳐 한국 방위와 직

접 관련된 약 110억불 상당의 군사력 증강계획을 이행할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조 장관은 미국측의 공약에 사의를 표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능력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변혁을 참조하면서 한국 군사력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7. 럽스펠드 장관은 한국군의 전문성과 탁월함, 그리고 한반도 방위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희망하는 한국의 의사를 유념하면서, 10개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양국간 합의를 확인하였다. 조 장관은 이러한 군사 임무전환이 연합태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주한미군을 한강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하고 통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통합을 통해 연합 대비태세 강화와 부대방호 향상, 대한민국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지속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1단계가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2단계 재배치 시기는 2003년 5월 14일 및 10월 20일의 한미정상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 양국 국가 최고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9. 양 장관은 북한이 열악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에 반해 지속적으로 범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핵무기개발 계획이 세계 및 지역적 안보를 위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노력, 그리고 그러한 무기 및 관련기술 수출의 위험성이 양국 동맹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됨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실험, 개발 배치 및 수출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공동 선언을 상기하면서 6자회담이 제공하는 기회를 북한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11. 조 장관과 럽스펠드 장관은 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정에 대한 북한 군사력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력을 유지할 것에 동의하였다. 럽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인 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아시아 태평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12. 조 장관과 럽스펠드 장관은 제35차 SCM 및 제 25차 MCM이 한미 안보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재와 미래의 안보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고, 다음 SCM 은 2004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04. 10. 22. 워싱턴

1. 제3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4년 10월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4년 10월 21일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인 김종환 대장과 리처드 마이어스 대장은 제2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고,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군이 자유롭고 안전한 이라크 사회의 재건을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에서 한국군의 순조로운 임무완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한국과 특히 정보공유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군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전세계적인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 이익에 긴요하다는 강한 신념을 표명하고,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한 성공적인 노력에 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지난 18개월간 진행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의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군사능력 증강, 군사임무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한 구상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세계안보환경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을 유념하면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5. 양 장관은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에 대한 한미동맹의 적응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 방위에 직결되는 전력증강사업에 110억불을 투자하고자 하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윤장관은 한·미 연합사의 연합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미국의 군사변혁과 조화되도록 추진한다는 한측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임무전환 및 재조정의 이행을 통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10개 군사임무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성공적인 군사임무전환을 통해 연합대비태세를 강화시킨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들의 이전에 관한 합의내용을 검토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서울 도심지역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 이행은 2003년 부시 미국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이행일 뿐 아니라 9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국민들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윤광웅 장관은 주한미군기지의 통합을 통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의 연합 대비태세가 강화된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기지 재배치가 동맹 양국에 공히 유익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8. 양 장관은 주한미군 12,500명의 감축 계획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하였으며, 감축결정까지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세계방위태세 변화와 군사력 변혁노력이 어떻게 주한미군 감축에 주요 요인이 되었는지에 관해 설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한 지난 18개월간 추진되어 온 FOTA 회의의 성과 뿐 아니라, 한국군을 현대적 군대로 만들기 위한 지난 10여 년간의 한측의 투자를 통해 그러한 재조정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럼스펠드 장관은 일부 한국민이 표시한 우려에 관해 이해를 표하고,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동맹의 연합역지 및 방위능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동의지를 표명하면서, 그 누구든 동맹이 약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였다.
9.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이 지역 및 세계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공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수출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 기술들에 대한 실험, 개발, 배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및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남북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의해 조성된 기회를 받아 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11. 양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능력 유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 지속적인 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성과와 주한미군 감축협의를 성공적 타결을 재차 상기하면서, 한미 안보정책구상의 추진을 통해 고위급 협의를 지속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 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공적인 방식을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동맹현안들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윤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제36차 한미 안보협의회회의와 제2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의 안보협력관계의 나아갈 바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차기 한미 안보협의회회의를 2005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2004년도 대외 군사교류협력 현황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2003년 1월		- 해군총장 칠레, 멕시코 방문
2월		- 1군 사령관 러시아 방문
3월	- 일본 방위청 장관 - 터키 공군사령관 - 스페인 국방총장 - 중국 錢樹根 부참모장 - 영국 국방정책차장, 일본 방위연구소장 - 스페인 순항함대	
4월	- 러시아 국방장관 및 정보총국장 - 인도 공군총장	- 한·러 방산 군수 공동위(2차)
5월	- 프랑스 항공성 장관 - 말련 국방대생 - 한·러 국방정책실무회의 - 영국 해군함정 / 부산항	- 공군참모총장 일본, 러시아 방문
6월	- 칠레 해군사령관 - 중국 공군사령부 부참모장 - 스페인 국방대생 - 1차 한·베트남 방산군수공동위	- 장관 미국 방문 - 합참의장 러시아 방문 - 5차 한·프 국방정책실무회의 -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7월	- 정전 59주년 기념행사 참석(영국, 호주 항공성장관, 네델란드 국방장관 등) - 러시아 공군 부사령관 - 캄보디아 국제협력국장 - 캐나다 국방총장 - 중국 八一 체육부대 유도선수단	- 육군 군악대, 영국 에딘버러군악제 참가
8월	- PAOC-3 행사관련 22개국 육군총장 - 인도 해군총장 - 일본 육군 막료장 - 한·일 해상수색구조훈련(일 함정)	- 차관, 멕시코·칠레 방문 - 정보본부장 중국 방문 - 한국 함대, 러 태평양함대 훈련 참가
9월	- 몽골 국방참모총장 - 중국 총참모부 병종부 부부장 및 해군 공정대 부교장 - 인도 국방부 정책조정국장 - 중국 국방대생(사단장 과정) - 영국·호주 국방대생 - 뉴질랜드 합참대생	- 연합사 부사령관 미국 방문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총참모장 및 해군총장 -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관 - 베네수엘라 해군사령관 - 베트남 국방부(총정치국) 대표단 및 군 측 구팀 방한 전지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대생 해외연수(중,유럽 등) - 해사생도 순항훈련(아시아/대양주 13국) - 공군대학 총장 중국 방문(CN-235 1대)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항공막료장 - 러시아 총참모부차장 - 인도 동부함대사령관(함정 3척) -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 러시아 지상군훈련 참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장관 일본 방문 - 합참의장 중국 방문 - 육군총장 미국 방문 - 해병대사령관 미국 방문 - 한·중 교육대표단 중국 방문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캐나다 국방정책실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러시아 국방정책실무회의
2004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육사교장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해상막료장 - 일본 서부방면대총장 - 러 바랴크전단, 태평양함대사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UAE·쿠웨이트·오만 방문 - 합참의장 일본방문(유엔사 후방기지) - 육군총장 스페인, 터키, 오만 방문 - 국방차관 싱가포르 에어쇼 참관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총참모장 및 공군사령관 - 필리핀 공군사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의장 터키방문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국방장관 - 한·러 국방정책실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사 부사령관 일본, 괌 방문 - 한·뉴 국방정책실무회의 - 서태평양 기뢰전훈련참가(싱가포르) - 한·호 국방정책실무회의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라과이 국방장관 - 일본 통막의장 - 터키 지상군사령관 - PAC-REACH 훈련(일,호,미 등 잠수함) - 인니 순항함대 / 인천, 부산항 - 스페인 국방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군총장 UAE, 말련, 인니 방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항공막료장 - 1차 한·중 공군대공군회의 - 칠레 순항함대 / 부산항 - 영국함정 2척 / 인천항 - 러시아 친선군사사절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참가 - 해병대사령관 영국·이태리 방문 - RIMPAC 훈련 참가(하와이) - 합참대생 해외연수(유럽, 동남아 등)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국방차관 - 중국 총후군부 교통/운수부장 및 국방대 부정치위원 - 말련 해군함정 2척 / 부산항 - 한·러 해상사고방지협정 이행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총장 베트남·말련·몽골 방문 - 공사교장 중국방문(2/C-130) - 2차 한·러 공군대공군회의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순항함대 2척 / 부산항 - 캐나다 해군함정 / 인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 한·러 합참 본부장급회의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육군총장 - 베트남 군사전략연구소장 - 인니 국방대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의장 이라크, 쿠웨이트 방문 - 공군총장 터키, 태국 방문 - 공군차장 일본 방문 - 해사생도 순항훈련(러·일·미·맥·캐 등)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국방총장 - 칠레 육군사령관 - 호주 해군함정 / 부산항 - DA 2004(브라질 육군사령관 등) - '04 세계팍파르(일, 뉴 등 군악대) - 인도 함정3척(동부함대사령관)/부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미국 SOM - 합참의장, 미국 MCM, 캐나다 방문 - 합참차장 일본방문(CHOD회의 참가) - 해군총장 중국 방문 - 2군 사령관 일본 방문 - 1차 한·영 해군대해군회의 - 한·러 친선군사사절단 - 국방대생 해외연수(동남아, 유럽 등) - 지상군훈련참관단 러시아 방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웨이트 국방장관 - 독일 해군총장 - 터키 부총사령관 - 중국 심양군구 사령원 - 러시아 극동군관구 사령관 -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 - 한·프 국방정책실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쿠웨이트·이라크 방문 - 공군총장 이라크 방문 - 5차 한·영 국방정책실무회의 - 12차 한·러 국방정책실무회의 - 육사-일본 방위대학 친선경기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해군사령관 - 일본 방위연구소장 - 1차 한·인니 공군대공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총장 이라크 방문 - 정책실장 중국 방문

주요 국제군비통제협약/기구

1.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력 제공 · 당사국과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을 통해 NPT에 규정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여부에 대한 검증 수행 · 안전조치협정에 관한 불이행(분쟁) 발생 시 안보리에 보고 · 총회(매년), 이사회(매분기), 사무국(사무총장 예하에 6개 부서)으로 구성
<p>추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제8차 유엔총회에서 "Atoms for Peace" 제창 · 1956년 제11차 유엔총회에서 IAEA 헌장 초안 채택 · 1957년 미·영·불·소 등 26개국이 비준서 기탁함으로써 IAEA 헌장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23개조와 부속서로 구성(IAEA의 목적, 기능, 조직 및 사업수행 등을 규정) · 1970년 「전면안전조치협정」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비보유국인 NPT 당사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안전조치 적용 · 1993년 이라크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기존의 안전조치 제도 강화 결정 · 1997년 안전조치강화체제 이행을 위한 추가의정서 채택
<p>가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7개국(2004년 7월 현재) · 1957년 한국 가입, 북한은 1974년 가입 후 1994년 IAEA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이유로 탈퇴
<p>최근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는 원자력의 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종 국제 규범의 제정을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협약(1997)" 및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보충기금협약(1997)" 채택 · IAEA 사무국은 추가의정서에 따른 강화 프로그램을 기존의 안전조치에 포함시킨 통합 안전조치체제 구축을 추진 중 · 1999년 이후 IAEA 총회/이사회와 UN 총회에서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 · 2003년 제47차 IAEA 정기총회에서 IAEA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 및 핵테러 대처를 위한 IAEA 역할의 중요성 강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입장을 재천명하는 대북결의안 채택
<p>추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핵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 받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미체결, 미비준 국가에 대한 조속한 체결, 비준 촉구 · 대 북한 핵 안전조치 조속 이행 촉구

2. 핵비확산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의 핵확산 금지 의무 · 핵의 평화적 이용 증진 · NPT가입 시 IAEA와의 안전 조치협정 체결 의무화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년 아일랜드가 유엔 총회에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에 관한 가결의안 제출 · 1966년 유엔은 18개국 군축회의(ENDC)로 하여금 조약원칙을 제정토록 결의 · 1970년 미·소·영 등 주도로 발효
가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개국(2004년 7월 현재) · 주요 미가입국 :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 1975년 한국가입, 1985년 북한가입 (1993.3 탈퇴선언 1993.6 탈퇴유보 2003.1 탈퇴선언)
최근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5월 NPT 평가/연장회의 개최, NPT 무기한 연장 결정 * NPT평가회의 5년마다 개최 · 2000년 5월, NPT 제6차 평가회의 시 최종 선언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약속 명시 - NPT 평가절차를 강화하기로 합의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아국의 적극 지지 및 북한의 NPT 복귀 촉구 · 핵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 받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추진 · 핵 비보유국들의 핵 보유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 군축 요구 증대

3.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 · 화학무기 및 생산시설 폐기(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 · 당사국의 협약 이행여부 검증을 위한 국제사찰 실시 · 당사국은 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국제적 지원 및 보호받을 권리 보유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년부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다자간 협상결과 CWC 발족 · 1993년 1월 13일 CWC 서명식(파리, 한국 포함 126개국) · 1997년 4월 29일 협약 발효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발족 ※ CWC 협약 이행의 검증 및 협의를 위하여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설립.
가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국 164개국(2004년 7월 현재) · 1997년 한국 가입, 북한 미가입
최근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당사국총회(1998.11)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피선 · ADD 화학분석실이 OPCW 공인실험실(미국을 비롯한 12개국)로 지정 · 1998년 11월 OPCW 사무총장 방한 · 2003년 4월 OPCW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으로 아국 전문가(공군 예비역 장군) 진출 · 2004년 7월 OPCW 2대 사무총장 방한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등 모든 미가입국의 협약가입을 적극 유도 · 비준 당사국간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관련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추진 · 2005년 5월, 화학보호교육 실시로 개도국에 화학무기 보호기술 교육 전파

4.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및 무인비행체,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수출/이전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국제체제 <p>[통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UAV의 완제품/생산 시설 및 주요 하부 체계의 수출 및 기술이전 통제 (Category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켓체계 :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과학관측로켓 등 - 무인비행체 : 순항미사일, 무인 표적기, 무인정찰기 등 - 주요 하부체계 : 로켓단(stage), 재진입체, 추진장치, 유도/조종장치 등 · Cat.I과 Cat.I용 부품·기술 및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미만의 미사일/UAV 체계(Category II)의 수출 및 기술이전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제(propellant), 복합소재, 항법장치, 유도/조종장치, 항공전자 장비, 발사지원 장비·시설, 시험장비 및 기술 · 지침서는 7조의 본문과 20개 항목으로 구분된 기술 및 장비부속서로 구성되어 세부항목별 규제범위를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egory I : 2개 분야 - Category II : 18개 분야
<p>추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대전 이후 범세계적인 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 증가 · 레이건 대통령의「국가안보 결정 지시각서(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제 70호」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도 미사일 확산방지 방안강구 지시 · 1987년 4월 미국 주도하에 G-7 회원국을 중심으로 MTCR 설립
<p>가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국 가입 (2004년 10월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스페인을 필두로 하여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이 가입하였으며,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 등은 추가 가입을 추진 중이고, 이스라엘, 중국 등은 비회원국이나 통제지침을 준수하기로 서약 · 2001년 3월 26일 한국 가입, 북한 미가입
<p>최근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회원국의 미사일 확산 움직임을 규제하기 위한 헤이그행동규약(HCOC)을 제정, 비회원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 중 · 과학기술의 진보 및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통제품목의 세부항목 및 항목별 규격/기준에 대한 용어 재정의 및 관련 규격범위 조정 작업 중 · 2004년 10월 서울에서 총회 개최, 북한 미사일 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공감대 형성, 국제사회에서의 미사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 의지 천명 ※현재 국제사회는 미사일관련 기술의 확산을 중요한 안보이슈로 인식, MTCR은 미사일 비확산의 제도적 중심으로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p>추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미사일 확산을 규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제 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지속 예상 · MTCR 회원국으로서 미사일 비확산 분야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 제고 및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 집중 필요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과 MTCR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필요

5. 바세나르 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식 무기 :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등 'UN재래식 무기 등록제도'(1992. 2)에 따른 품목 -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 정밀공작 기계, 슈퍼컴퓨터 등 · 통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회원국이 통제품목 선정, 수출허용 여부는 독자적으로 결정 - 수출관련 정보교환 의무화, 회원국간 협력 및 수출통제 일관성 도모 <p>※ WA는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통제체제(NSG, ZC, AG, MTCR)를 보완하여 분쟁지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적을 회원국 간 상호 교환함으로써 전략물자 거래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세계평화 유지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함</p>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11, 미·영·불 등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 1949년 창설) 17개 회원국은 냉전 이후 지역분쟁 유발국으로의 전략물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COCOM을 해체하고 러시아, 동구 등 공산권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창설
가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개국 가입(2004년 10월 현재) · 1996년 11월 한국 가입
최근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1993년 발행, 2004년 10월 개정)를 통해 통제 · 2003년 1월 1일부 국내 'catch-all' 통제제도 도입

6.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차별적 살상효과를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5개 의정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및 부비트랩 사용금지 - 제3의정서 : 화염무기 사용금지 - 제4의정서 : 레이저 실명무기 사용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ERW) 규제 · 제2부속의정서(지뢰) 개정안(1996.5.3)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지불능 대인지뢰의 원칙적 사용금지 - 탐지물질(8g이상 금속) 부착 후 민간인 보호조치(표식, 감시, 차단물) 강구 시 사용 가능 - 탐지물질 부착은 9년간 유예 가능(즉 9년간 사용가능) - 원격투발(500m이상) 대인지뢰는 자동폭발·자동무능화 장치 구비 - CCW 회원국간 기술이전 허용, 비회원국에게 지뢰/기술이전 금지
가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개국 가입(2004년 7월 현재) · ※ 미, 중, 러, 일 등 주요 국가 가입 · 2001년 5월 한국 가입, 북한 미가입
최근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잔류폭발물(ERW, Explosive Remnants of War) 규제에 관한 의정서 채택에 이어 자탄을 포함한 특정탄의 디자인 개선 등 가능한 특별예방조치에 관한 규제문서 협상 본격 논의 · 비대인지뢰의 규제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력회의/참가국

국가명	ARF (24개국)		NEACD (6개국)	CSCAP (21개국)
	ASEAN (10개국)	ASEAN 외 참가국 (14개국)		
한 국		○	○	○
북 한		○	○	○
미 국		○	○	○
일 본		○	○	○
중 국		○	○	○
러 시 아		○	○	○
호 주		○		○
캐 나 다		○		○
뉴 질 란 드		○		○
말 레 이 지 아	○			○
태 국	○			○
인 도 네 시 아	○			○
싱 가 포 르	○			○
필 리 핀	○			○
베 트 남	○			○
라 오 스	○			
미 얀 마	○			
브 루 나 이	○			○
캄 보 디 아	○			○
파 푸 아 뉴 기 니		○		○
인 도		○		○
파 키 스 탄		○		
EU 의 장 국		○		○
몽 골		○		○

※ 파키스탄, ARF에 2004년 7월 최초 참가(자카르타 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국방부 참가 현황('02. 4.~'04. 7.)

일자 / 장소	다 자 안 보 협 력 회 의
2002.4.22~24 베트남 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ISG-CB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 정치안보상황 인식교환 - Counter Terrorism 및 초국가적 범죄/대응방안 논의 - 신뢰구축조치 이행 및 新 CBM 제안 검토 - 예방외교(PD) 및 CBM/PD 중복분야 발전 검토/논의 - 국방대화(Defense Dialogue) 설립문제 합의 등
2002.5.16~17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관리회의(S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안보상황 인식 교환 - ARF 활동 점검/제9차 외무장관회의 건의사항 작성 - 뉴질랜드 제의 'CBM 활동 유지관리 체제' 및 브루나이 제의 ARF 발전 9개 건의사항 검토 - Counter-terrorism 공동대응 노력 협의 등
2002.7.31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장관회의(F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국제 안보상황 인식 교환 - Counter-terrorism 공동대응 노력/세미나 개최 등 협의 - 對 테러리즘 및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회기간 회의 설립 합의 - 국방관리회의(국방대화) 설립/개최 합의 - 연례안보전망 및 전문가/저명인사 명부 발간 등
2002.8.28~30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관리협력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교류협력, 군사교육 자료 교환, 국방정보 교환, 국방인사간 Network 구성으로 군사안보 현안 협의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발전 공동노력 추진 등 합의
2002.9.16~20 러시아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대학총장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군사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내용 분석 - 군사교육 이슈별 교육범위 설정 - 군사교육의 문제점 경험/입장 교환 - 군과 경찰 교육체계 조정 문제 - 군사교육에서의 對테러리즘 문제 등 논의
2002.9.25~27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 아웃소싱 지원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군수 구조 및 운영체계 - 군수예산 할당 및 유희인원 재배치 - 아웃소싱 관련 국방정책 등 논의
2002.11.19~22 뉴질랜드 웰링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ISG-CB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핵문제 관련 심각한 우려 공감 및 평화적 조기해결 촉구 - Counter-Terrorism 및 초국가적 범죄 관련 논의 - 군축 및 비확산(NPT, CTBT, CWC, BWC) 강화 노력 강조 - 신뢰구축조치 증진 방안 및 이중용도 물질 수출통제 강화 - 제1차 공식 국방관리회의 개최
2002.12.4~6 싱가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재난감시 및 대응체제 설립 문제 - 국내 부처/기구간 역할 및 상호운용성 - 민군협력 및 인도주의 활동 자발적 참여/공동협력 등 논의

일자/장소	다자안보협력회의
2003.3.25~28 라오스 비엔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ISG-CB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핵 관련 NPT 복귀 및 IAEA 협력 촉구 - 이라크 사태 관련 찬반 논쟁(말련, 인니, 중국, 러시아 반대) - Counter-Terrorism 및 초국가적 범죄 공동대응 문제 - 군축/비확산(NPT, CTBT, CWC, BWC) 및 보편성 강화 - 이중용도 물질 수출통제 강화 재확인
2003.4.29~5.1 캄보디아 시엠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관리회의(S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핵 관련 NPT 복귀 및 IAEA와의 협력재개 촉구 - 이라크 전후처리 문제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처 공동 협력 - 군축/비확산(NPT, CTBT, CWC, BWC) 체제 강화 - 차관/차관보급 국방관리회의 개최 문제 등 논의
2003.6.17~18 캄보디아 프놈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장관회의(F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핵, 테러리즘, 초국가적 위협 공동대응 미얀마 인권탄압 논의 - 의장성명서에 북한 IAEA 협력재개, NPT 탈퇴 철회 촉구 - 남북 장관급 회담재개 환영,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 북경 3자회담(4.23~24)을 환영하고,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 촉구
2003.10.15~17 인도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대학 총장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재해 및 재난에 대한 군의 역할 확대(황규식 총장) -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군의 적응성 있는 태세 유지 - 인위적인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책 모색 - 필요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방안 마련
2003.11.19~22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ISG-CB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 미얀마 및 동티모르 문제, 지역협력체 강화 등 논의 - 이라크 조기 안정화를 위한 노력 필요성 제기 - 제2차 6자회담 조기 개최 전화원국 적극 지지 - 테러리즘, 마약, 해적, 불법이민, 돈세탁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2004.4.10~14 미얀마 양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ISG-CB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해양안보 구상 및 지역협력 개념 - 이라크 파병국들의 성과의 의의 - 고위급 국방관리 안보정책회의 신설 방안 논의 - 2차 6자회담 긍정 평가 한반도 비핵화지지
2004.5.11~12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관리 회의(S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서의 WMD 확산 위협 - 지역해상안보구상(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 ARF 안보정책회의 신설 11월 중국에서 최초 개최
2004.7.1~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장관 회의(F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지원 신뢰구축 및 이라크 파병준비 - 대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 대응 - 해상안보 확보를 위한 지역해상안보구상 논의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차 6자회담 성과 평가
2004.11.4~6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안보정책회의(AS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제안으로 최초로 북경에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이 되어 개최 - 대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 대응, 지역해상안보구상 논의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차 6자회담 속개 촉구 - 북한은 본회의에 최초로 인민무력부 군 고위인사를 참석시켜, 북핵문제에 대한 자국의 강경한 입장 표명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LNWFZ-NEA) 진행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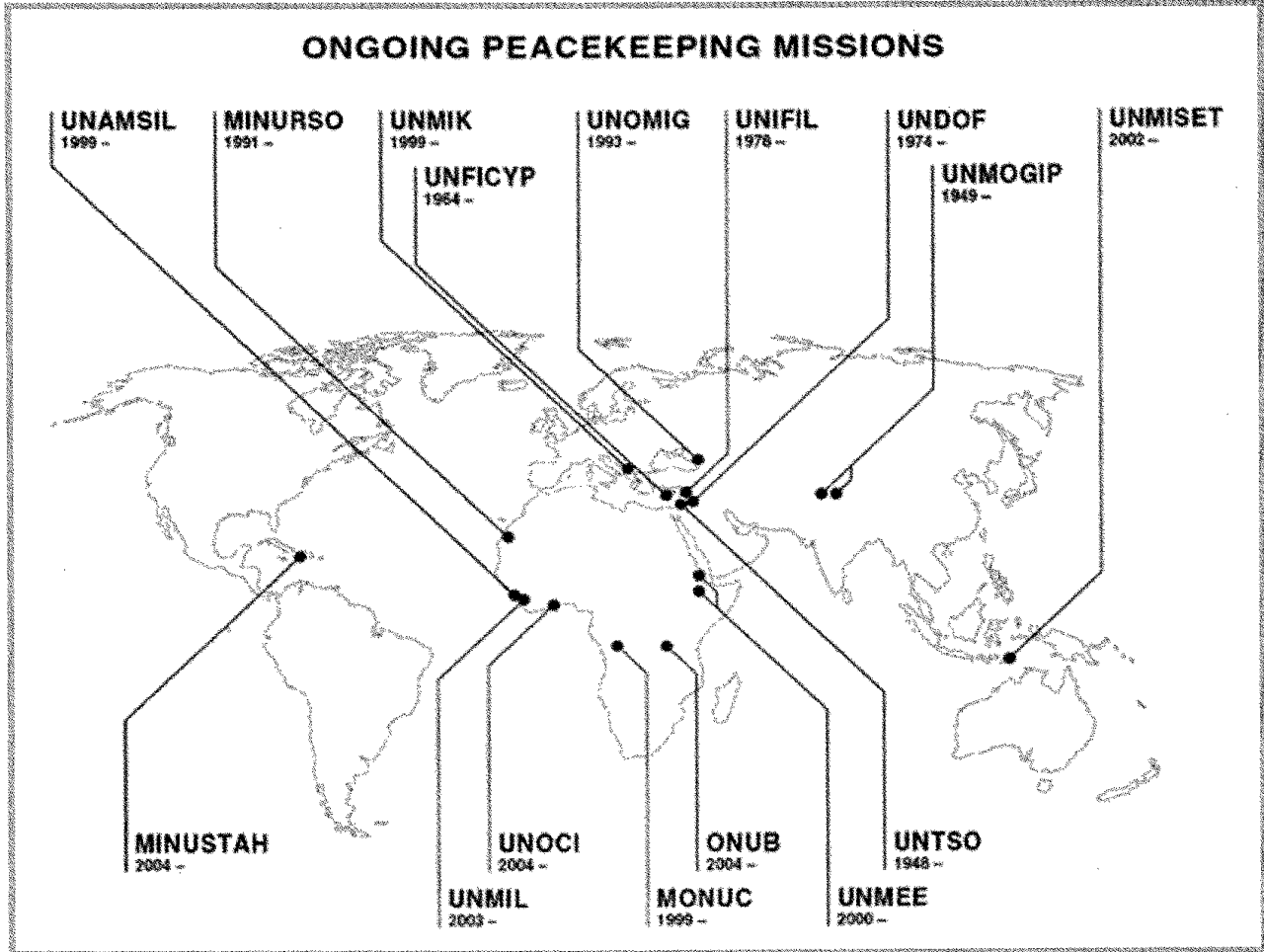
일자 / 장소	주요 논의 사항
1995.2.24 미국 아틀란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국 고위급 민간대표(한·미·일·중·러) 회의 -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개최 관련 기초원칙들에 합의 - 궁극적으로 지역내 핵무기 전면철거가 목적이나, 상당기간 현존 일부 핵무기의 잔류 인정 - 3개 적용지역 제시 : 원형지역, 타원지역, 북태평양지역
1996.3.2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확대고위급 전체회의 -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는 역내 새로운 협력안보체제 창립의 중요 단계로 천명 - 어떤 국가도 적대하지 않으며 투명성, 대화, 신뢰 증진 기여 노력 - 운영기구 설립문제, 검증레짐 문제 등 지속 논의
1996.10.13 프랑스 보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확대고위급 전체회의 - 지대범주, 제거/잔류에 포함시킬 무기체계, 검증체계, 운영기구, 신뢰구축조치 등 논의
1997.10.11 러시아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확대고위급 전체회의 - 신뢰구축증진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체 설립 노력 - TMD 전개시 영향 및 EurAtom과 같은 지역 핵안전기구 AsiaAtom 설립 필요성 논의
1998.10.12~14 핀란드 헬싱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확대고위급 전체회의 -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설립 필요성 재확인 -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북한 미사일/인공위성 시험발사, 일본 플루토늄 보유량 증가 문제 등 논의 -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긴요지역으로 동북아/중동 거론
1999.4.12~13 일본 동경/하코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확대고위급 전체회의 - 제한적 비핵지대 적용지역 논의 : 전략핵무기 전량 및 전술핵무기 일부잔류 허용 - TMD 및 ABM 조약 관련 국가별 입장 개진 - 양자/다자 관계 발전 논의 등
2000.9.16~20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확대고위급 전체회의 -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회의의 정부차원 회의로 승격문제 - CBM 관련 동북아 핵비확산/KEDO 발전 논의 - 북한의 조기참가 및 참가자들의 노력 촉구 등
2001.10.6~10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확대고위급 전체회의 - 9·11 테러사태/아프간 공격 등 최근 국제안보환경 논의 및 半官半民(Track-1.5) 대화체임을 합의 - 7년간 논의 종합 및 서울선언 채택,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조약(초안) 작성 및 지속발전 합의
2002.7.24~27 몽골 울란바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확대고위급 전체회의 - 제7차 「서울선언」과 「서울조약」에 대한 국가별 입장 수렴 -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군축/CBMs에 대한 북한 유인방안 협의 - 중국과 러시아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시 촉구함.
2004.6.17~19 한국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차 확대고위급 전체회의 - 한반도 비핵화 국제적 공감대 형성 - 다자적 접근과 다자대화의 틀이 제한적 비핵지대화 원칙 확인 - 북핵문제의 해결은 동북아 비핵화와 같은 맥락에서 신뢰구축 경제지원 등 통합적 접근방식 채택 필요성 인식

유엔 평화유지 활동 현황 ('04년 11월 현재)

('95. 2 ~ '04. 11)

■ 현재 진행 중인 평화유지활동 임무단 : 16개

※ 아프리카 : 8개, 중남미 : 1개, 아시아 : 2개, 유럽 : 2개, 아·중동 : 3개



※ '48년 이후 설치된 평화유지활동 임무단 : 총 59개

■ 활동 인원 : 총 66,339명

- 총 병력수(민간경찰 포함) : 62,443명
- 병력 및 민간경찰 공여국 : 102개국
- 국제 공무원(international civilian personnel) : 3,896명
- ※ 1948년 이후 PKO 활동간 사망자 : 1,846명

■ 세계 PKO 임무단 운영 현황

순번	명 칭	설치시기	배치지역 및 주요임무	파견 인원				사망자
				군	경찰	민간인	계	
1	UNTSO	1948. 6	팔레스타인 지역 정전감시	154	154	90	398	39
2	UNMOGIP	1949. 1	캐시미르 지역 정전감시	47		22	69	9
3	UNFYCIP	1964. 3	사이프러스 정전감시	1,222	45	43	1,310	173
4	UNDOF	1974. 6	시리아·골란고원 정전감시	1,036		39	1,075	40
5	UNFIL	1978. 3	남부 레바논 정전감시	1,993		103	2,096	250
6	MINURSO	1991. 9	서부사하라 정전감시 및 선거지원	235	2	121	358	10
7	UNOMIG	1993. 8	그루지아 정전감시	116	11	97	224	7
8	UNMIK	1999. 6	코소보 평화와 안정지원	37	3,562	771	4,370	29
9	UNAMSIL	1999.10	시에라리온 정전감시, 평화 정착	8,233	119	270	8,622	155
10	MONUC	1999.11	콩고민주공화국 정전감시, 평화정착	10,742	139	700	11,581	44
11	UNMEE	2000.7	에디오피아, 에리트리아 정전감시	3,870		219	4,089	8
12	UNMISET	2002.5	동티모르 평화와 안정 지원	471	147	272	890	13
13	UNMIL	2003.9	라이베리아 정전감시	14,564	1,089	454	16,107	23
14	UNOCI	2004.4	코트디부와르 평화정착	6,009	212	220	6,441	
15	MINUTSA	2004.6	하이티 평화정착, 재건지원	3,092	583	229	3,904	
16	ONUB	2004.6	부룬디 평화정착, 재건지원	4,507	52	246	4,805	3
계				56,328	6,115	3,896	66,339	803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평화·재건지원 파병 경과

■ 아프가니스탄(OEF)전 지원

일 자	주 요 내 용
2001. 9.11	미국에 항공기를 이용한 동시다발 테러 발생
9.12	부시 미국대통령, 미국 내 테러를 전쟁행위로 선언 유엔 안보리, 테러규탄 결의안 채택(제1368호)
9.17	김대중 대통령,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메시지 전달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동맹국으로서 지원할 것이며 국제적 연대에도 적극 참여
9.23	NSC 상임위, 대미 군사지원계획 검토
9.23	아국 구체적 대미 군사지원계획 사전 통보 · 의료지원단 파견, 수송자산 제공, 연락장교단 파견 등 ※ 외교부 → 주한 미대사관, 국방부 → 주한 미군사
9.24	정부, 지원계획 국회 설명·협조 후 공식 발표(외교안보수석)
9.28	유엔 안보리, 대테러지원금지 결의안 채택(제1373호)
10. 8	미·영 연합군, 아프가니스탄 공습 개시
10.16	파병 기본계획 국방부안 확정(장관보고)
11.14	아국 정부의 제의에 따라 미국이 아국 파병(의료지원단) 요청
11.16	동맹국 한국군 협조단 파견(10명)
11.20	미태평양사, 한국 해·공군 전력지원에 대해 미합참 RFF 요청
11.27	국무회의 안건 상정
11.28	대통령 재가
12. 6	정기국회 제20차 본회의 통과
12.19	해군 수송지원단 파병
12.21	공군 수송지원단 파병
2002. 2.29	육군 의료지원단 파병

■ 아프가니스탄 건설공병 지원

일 자	주 요 내 용
2002. 8.15	미 중부사에서 동맹국 협조단을 통해 전 동맹국을 대상으로 요청한 건설공병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
10.31	NSC상임위 심의, 건설공병 파병 추진 협의
11. 4	국회 국방위 사전 보고
11. 4~7	국회/정당 1차 설명, 2차 설명(1.8~14) ※ 대상 : 국방위원장, 각당 정책위 의장, 국방위 전문위원
11. 5	국무회의 의결
11. 7	대통령 재가
11.12	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
2003.1.16~22	국회 국방위/본회의 안건상정 및 가결

■ 이라크전 1차 파병

일 자	주 요 내 용
2002.11.20	- 미측 1차 요청(주한 미대사, 외교부 Non-Paper 전달) ·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 지원 · 수송, 장비, 전투근무지원병력(공병, 의료진 등), 지뢰제거 부대 등
12.27	- 미측에 대한 검토결과 제시 (외교부, 주미 대사관에 Non-Paper 전달) · 이라크 난민 지원, 주변국 지원, 전후 복구 지원 가능 · 군사분야 지원 : 아프간전 전개병력 전환, 공병 1개중대 추가지원 가능
2003. 3.13	- 미측 2차 요청(주한 미대사, 외교부 Non-Paper 전달) · 전쟁발발 직후 이라크의 안전 및 안정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항 · 요청목록 : ①군사적 지원(보병, 공병 등) ②WMD, 폭발물처리 전문가 ③화생방 공격 사후처리 ④인도적 지원, 의료지원 등
3.20, 11:30	미국, 이라크 공격 개시(현지시간 3.20, 05:30)
3.20	NSC 상임위 개최, 건설공병+의료지원단 파병 결정
3.21	국군부대의 이라크전 파견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국방위 파견동의안 통과
3.28~29	파병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4. 2	국회 본회의 파견 동의안 개최
4.17	선발대 파견(20명, 쿠웨이트 경유 나시리아)
4.30	1진 제1제대 파견 (의료지원단+건설공병 300여 명, 쿠웨이트 경유 나시리아)
5.14	2진 제2제대 파견(공병 300여 명, 쿠웨이트 경유 나시리아)
9.1	나시리아 기지 폐쇄, 자이툰부대 합류

■ 이라크 추가 파병

일 자	주 요 내 용
2003. 9. 4	미국, 한국군 추가파병 요청
10.18	정부, 여론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파병 결정 파병방안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협의 · 정부합동 현지조사(2회) 및 국회조사단 현지조사 활동 · 대미협의(3회), 정치권 의견 수렴
12.17	정부, 추가파병안 결정/발표
12.17~22	파병지역, 시기, 군수지원
12.23~24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국회 제출
2004.1.11~19	군수지원소요 현지조사
2. 9, 2.13	국회 국방위/본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
2.24~3. 3	현지 협조단 파견
3.15~3.19	파병지역 변경 현지 협의 * 아르빌, 슬레마니아 중 1개 지역 선정 합의
6.18	NSC, 상임위, 파병지역(아르빌) 및 전개일정 확정
7.9	범정부 파병지원 추진위원회
8.3	선발대 1제대 329명, 쿠웨이트 출발
9.3	본대 1제대 257명, 쿠웨이트 출발
9.22	자이툰부대 본대 2,884명 아르빌 전개 완료
11.25	후발대 1제대 312명 쿠웨이트 출발

연차별 정부재정과 국방비

(단위 : 억 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정부재정	99조 1,801	109조 6,298	118조 1,323	120조 1,394	134조 3,704
(증가율)	(11.8)	(10.5)	(7.8)	(1.7)	(11.8)
국방비	15조 3,884	16조 3,640	17조 5,148	18조 9,412	20조 8,226
(증가율)	(6.3)	(6.3)	(7.0)	(8.1)	(9.9)
전력투자비	5조 2,141	5조 4,756	5조 7,379	6조 2,930	7조 656
(증가율)	(△2.4)	(5.0)	(4.8)	(9.7)	(12.3)
(구성비)	(33.9)	(33.5)	(32.8)	(33.2)	(33.9)
경상운영비	10조 1,743	10조 8,884	11조 7,769	12조 6,482	13조 7,570
(증가율)	(11.4)	(7.0)	(8.2)	(7.4)	(8.8)
(구성비)	(66.1)	(66.5)	(67.2)	(66.8)	(66.1)
인건비	6조 4,822	7조 104	7조 5,788	7조 9,881	8조 5,948
(증가율)	(16.8)	(8.1)	(8.1)	(5.4)	(7.6)
(구성비)	(42.1)	(42.8)	(43.3)	(42.2)	(41.3)
사업비	3조 6,921	3조 8,780	4조 1,981	4조 6,601	5조 1,622
(증가율)	(3.1)	(5.0)	(8.3)	(11.0)	(10.8)
(구성비)	(24.0)	(23.7)	(23.9)	(24.6)	(24.8)
국방비 비율					
· 대 GDP(%)	2.8	2.8	2.7	2.8	2.85
· 대 재정(%)	15.5	14.9	14.8	15.8	15.5

※ 정부재정 : 일반회계 기준

2005년도 국방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	증 감	%
합 계	18조 9,412	20조 8,226	1조 8,814	9.9
전력투자비	6조 2,930	7조 656	7,726	12.3
경상운영비	12조 6,482	13조 7,570	1조 1,088	8.8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	증 감	%	
경 상 운영 비	· 인 건 비	7조 9,881	8조 5,948	6,067	7.6
	· 사 업 비	4조 6,601	5조 1,622	5,021	10.4
	· 급 식	1조 549	1조 1,186	637	6.0
	· 피 복	2,550	2,580	30	1.2
	· 부대활동지원	4,753	6,184	1,431	30.1
	· 교 육 훈 련	1,682	1,733	51	3.0
	· 장 비 운 영	4,838	5,122	284	4.1
	· 물 자 획 득	1,003	1,051	48	4.8
	· 시 설 건 설	8,177	9,399	1,222	13.6
	· 시 설 유 지	2,948	3,424	476	16.1
	· 예 비 전 력	705	787	82	11.6
	· 연구/보조기관	1,591	1,748	157	9.9
	· 주둔군지원	3,343	3,318	△25	△0.7
	· 기본사업비	4,281	4,834	553	12.9
· 책임운영기관	181	256	75	41.4	

연도별 국방비 구성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별	국방비		경상운영비			전력투자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구성비	금액	증가율	구성비
1982	3조 1,207	15.7	1조 9,392	18.2	62.1	1조 1,815	11.8	37.9
1983	3조 2,741	4.9	2조 525	5.8	62.7	1조 2,216	3.4	37.3
1984	3조 3,061	1.0	2조 122	△2.0	60.9	1조 2,939	5.9	39.1
1985	3조 6,892	11.6	2조 1,845	8.6	59.2	1조 5,047	16.3	40.8
1986	4조 1,580	12.7	2조 3,842	9.1	57.3	1조 7,738	17.9	42.7
1987	4조 7,454	14.1	2조 6,001	9.1	54.8	2조 1,453	20.9	45.2
1988	5조 5,202	16.3	3조 550	17.5	55.3	2조 4,652	14.9	44.7
1989	6조 148	9.0	3조 4,155	11.8	56.8	2조 5,993	5.4	43.2
1990	6조 6,378	10.4	3조 8,515	12.8	58.0	2조 7,863	7.2	42.0
1991	7조 4,764	12.6	4조 4,988	16.8	60.2	2조 9,776	6.9	39.8
1992	8조 4,100	12.5	5조 1,968	15.5	61.8	3조 2,132	7.9	38.2
1993	9조 2,154	9.6	5조 7,981	11.6	62.9	3조 4,173	6.4	37.1
1994	10조 753	9.3	6조 4,637	11.5	64.2	3조 6,116	5.7	35.8
1995	11조 744	9.9	7조 1,032	9.9	64.1	3조 9,712	10.0	35.9
1996	12조 2,434	10.6	7조 9,772	12.3	65.2	4조 2,662	7.4	34.8
1997	13조 7,865	12.6	8조 9,032	11.6	64.6	4조 8,833	14.5	35.4
1998	13조 8,000	0.1	8조 7,098	△2.2	63.1	5조 902	4.2	36.9
1999	13조 7,490	△0.4	8조 5,186	△2.2	62.0	5조 2,304	2.8	38.0
2000	14조 4,774	5.3	9조 1,337	7.2	63.1	5조 3,437	2.2	36.9
2001	15조 3,884	6.3	10조 1,743	11.4	66.1	5조 2,141	△2.4	33.9
2002	16조 3,640	6.3	10조 8,884	7.0	66.5	5조 4,756	5.0	33.5
2003	17조 5,148	7.0	11조 7,769	8.2	67.2	5조 7,379	4.8	32.8
2004	18조 9,412	8.1	12조 6,482	7.4	66.8	6조 2,930	9.7	33.2
2005	20조 8,226	9.9	13조 7,570	8.8	66.1	7조 656	12.3	33.9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국 가	GDP (\$억)	국방비 (\$억)	GDP 대 국방비 (%)	병 령 (천명)	국민1인당 국방비 (\$)
한 국	4,760	131	2.8	681	266
미 국	104,460	3,485	3.3	1,427	1,138
일 본	40,000	395	1.0	240	290
중 국	12,370	510	4.1	2,250	37
러 시 아	10,690	508	4.8	961	333
대 만	2,950	79	2.7	370	336
영 국	15,640	373	2.4	213	590
프 랑 스	16,000	402	2.5	259	636
독 일	22,000	333	1.5	285	383
이 스 라 엘	1,030	99	9.7	168	1,499
이 집 트	845	33	3.9	450	44
사 우 디	1,850	222	12.0	125	981
호 주	4,010	80	2.0	54	388
터 키	1,820	92	5.1	515	127
말 레 이 시 아	940	34	3.6	104	145
태 국	1,210	18	1.5	314	27
싱 가 포 르	880	46	5.2	73	1,010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3.10 / 단, 한국은 정부통계 기준)

2004년도 주요 군사장비 전력화 현황

(2004년 12월 기준)

종 류	2004년도 전력화 계획	비고
K1A1전차	26대	연구개발
K-9 155밀리 자주포	50문	연구개발
신형 제독차	32대	연구개발
지 상 전 력		
대구경 다련장	7기 ATACMS : 110발	해외구매 기술도입생산
전술통신체계(Spider)	4식	연구개발
지상전술 C4I 체계	1식	연구개발
해안감시 레이더 및 무인화	8대	연구개발
구축함(KDX-II)	1척	국내건조
소해함(MSH)	1척	국내건조
해 상 전 력		
ASTT 성능개량	1식	해외구매
백상어 발사능력 보강	6조	기술도입생산
전투기(KF-16)	10대	면허생산
기본훈련기(KT-1)	16대	연구개발
공 중 전 력		
C-130 항법장비	13대	해외구매
항공승무원 야간 투시경	105대	연구개발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천마)	12기	연구개발
방 공 전 력		
30밀리 자주대공포(비호)	16문	연구개발
휴대용 대공유도탄(신궁)	72발	연구개발

방산 관련 협정체결 현황

방산군수협력협정	과학기술자 및 자료교환협정	품질보증협정	가격검증협정
미 국	미 국	미 국	미 국
영 국	프 랑 스	영 국	영 국
프 랑 스	이 태 리	프 랑 스	독 일
이 태 리	영 국	스 페 인	
스 페 인	이 스 라 엘	스 위 스	
인도네시아		캐 나 다	
이 스 라 엘		이 태 리	
태 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	
필리핀		덴마크	
루마니아		호주	
캐나다		필리핀	
러시아		독일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터키	
네덜란드		인니	
터키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그리스	
베트남			
호주			
방글라데시			
21개국	5개국	18개국	3개국

국방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03년도	'04년도	증 감		
				금액	%	
연구개발비	국방비	175,148	189,412	14,261	8.1	
	계	7,386	7,968	582	8.1	
		국방비 대비(%)	4.2	4.2		
	전력투자비	소계	6,277	6,684	407	6.5
		국과연 연구지원	4,386	5,091	705	16.1
		군관리 연구개발	1,427	1,417	-10	-0.7
		KTX-II 정부분담금	464	176	-288	-62.9
	경상운영비	소계	1,109	1,284	175	15.7
		국방과학연구소	942	1,073	131	13.9
		한국국방연구원	158	202	44	27.9
		정책연구비	9.19	9.19	-	-

※ 2005~2009 중기계획 편성

(단위 : 억 원)

구분	계	중기 재원 편성					
		'05	'06	'07	'08	'09	
국방비	1,305,026	208,226	235,500	261,620	289,280	310,400	
총계	75,886	8,774	11,628	14,971	19,125	21,388	
	국방비대비(%)	5.81	4.21	4.94	5.72	6.61	6.89
연구개발비	소계	67,406	7,367	9,901	13,276	17,345	19,517
	A·D·D	44,302	5,412	6,986	8,060	10,987	12,857
	군관리	22,532	1,605	2,693	5,216	6,358	6,660
	KTX 분담	572	350	222			
	소계	8,481	1,407.2	1,727.2	1,695.2	1,780.2	1,871.2
	국과연	7,347	1,202	1,493	1,467	1,550	1,635
	국방연	1,088	196	225	219	221	227
	정책연구비	46	9.2	9.2	9.2	9.2	9.2

2004년 국방개혁 추진과제(10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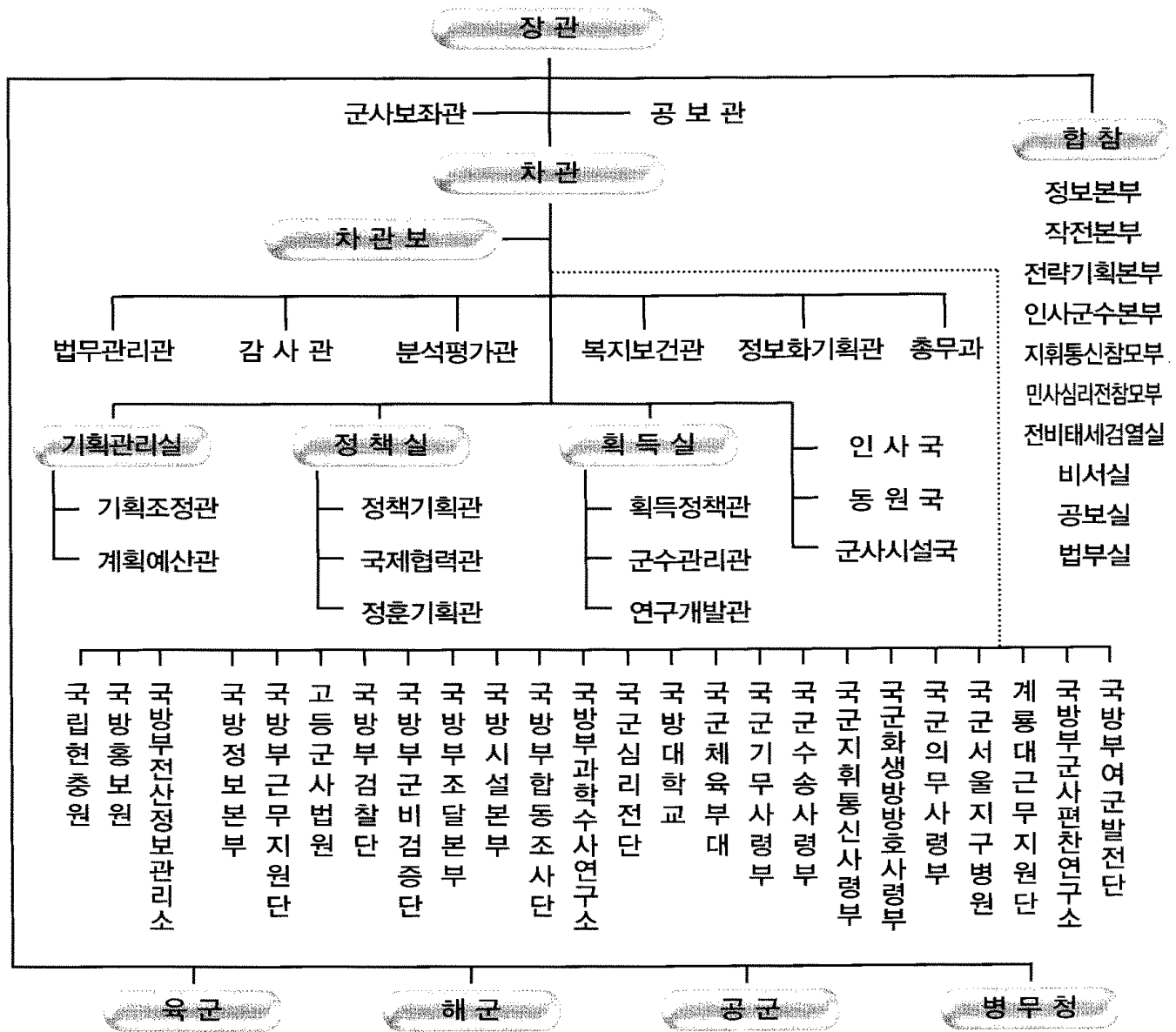
[] : '04년통합/삭제과제(6개) _ : '04년 추가과제(8개)

과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서
1. 직업군인의 가치관 정립	· [가치관 생활화 정착]	'04. 12	정훈기획관실
	· [지휘 관심제고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04. 12	
2. 건전한 생활 기풍 확립	· 간부들의 바람직한 생활기풍 지속 추진	'04. 12	인사국
	· 선진 병영생활 여건 조성	'04. 12	
	· 병영생활 관련 규정 개정	'04. 12	감사관실
	· 부정·부패·부조리 척결	'04. 12	
	· 군복무 중 사망자 예우	'04. 12	
3. 지속적인 업무 혁신 추진	· 국방업무혁신 인프라 활동 강화	'04. 12	기획조정관실
	· 「일하는 방식」 개선	'04. 12	
	· 국정모니터링 제도구축/국민참여 활성화	'04. 12	
	·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민원업무 개선	'04. 12	
4. 인력운영체제 발전	· 균형된 인력구조 개선	'04. 6	인사국
	· 우수인력 획득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04. 12	
5. 인사관리제도 개선	· 진급제도 보완 발전	'04. 12	인사국
	· 정책부서 근무자 전문성 제고	'04. 12	
	· 무관 인사관리제도 개선	'04. 12	
	· 장기근속 복무자 복무활성화	'04. 12	
	·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 법령 개정	'04. 12	
	· 각종모집 인터넷 채용관리 시스템 도입	'04. 12	
	· 군무원 다면평가 계획 수립	'04. 12	
	· 병력자원 부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재검토	'04. 12	
6. 병무관리체제 보완	· 병역처분 기준 및 징병검사 규칙 개정	'04. 12	인사국
	· 공군병 복무기간 검토	'04. 6	
	· 병역 공개대상자 확대 및 사회 관심자원 특별관리제 도입	'04. 12	
	· 모병업무 및 국민참여 병무행정 개선	'04. 12	
	·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재검토	'04. 12	
7. 군 사법제도 정비	· [03년 군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법령화 추진]	'04. 12	법무관리관실
	· 군 사법제도 발전 검토 보완	'04. 12	
8. 양성교육체제 발전	· 학군 및 학사장교 양성제도 개선 후속조치 추진	'04. 12	인사국
	· 사관학교설치법 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 개정	'05	
9. 보수교육체제 개선	· 각 군 대학 변경제도 정착 추진	'04. 12	인사국
	· 합참대 우수자 입교 및 수료자 추적관리	'04. 12	
	· 장기복무 부사관 능력개발교육 확대 추진	'04. 12	
	· 군무원 위탁교육 제도 보완	'04. 12	
10. 국내·외 위탁교육 확대	· 위탁교육 개선제도 조기정착 추진	'04. 5	인사국
	· 외국군 수탁교육체제 개선 검토/보완	'04. 6	
	· 간부 자기계발 위한 제도 보완	'04. 12	
	· 국방언어학교 창설 추진	'04. 12	
	· 병영시설 개선	'04~'15	
11.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간부숙소 개선	'04~'09	군사시설국
	· 병 복무여건 개선	'04. 12	
	· 피복류 품질 및 급식 개선	'04. 12	
	· 중대 인터넷 PC방 설치 추진	'04~'08	
	· 의무지원 발전계획 검토	'05	
	· 국방취업지원계획 추진	'04. 12	
	· 범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04~	
	· 취업전략과 연계한 직업보도 교육 확대	'04. 12	
12. 전역장병취업 확대	· 취업지원 관리시스템 보강	'04. 12	복지보건관실
	· 군인 고용보험 도입 연구 추진	'05. 12	
	· 국방부 산하기관 인사운영 개선	'05	
	· 취업지원 관리시스템 보강	'04. 12	
	· 취업전략과 연계한 직업보도 교육 확대	'04. 12	

과 제	세 부 과 제	추진일정	주관부서
13. 복지 운영 체제 개선	· 복지시설 운영구조/인력운영 개선 추진	'04~'06	복지보건관실
	· 복지기금 운영 개선 추진	'06. 12	
	· 군 매점 판매품 부가세 면세 확대 법제화	'04. 12	
	· 통신위성시스템을 이용한 신개념 지식복지 제공	'04~'06	
14. 예비군 훈련 및 관리 운영 개선	·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04. 10	동원국
	· 예비군 훈련장 종합발전계획 수립	'04. 10	
	· 동원실무자 직무보수 교육과정 신설	'04. 4	
	· 전투긴요 항방물자 확보	'04. 12	
15. 동원제도 보완	· 전시 긴급 병력동원체제 정립	'04. 8	동원국
	· 대학생 예비군자원 활용방안 발전	'04. 12	
	· 기술인력 자원 편제화	'04. 12	
	· 동원정보체계 구축	'04. 12	
16. 군수지원 체제 발전	· 아웃소싱 확대로 군수운영체제 혁신	'04~'06	군수관리관실
	· 적정 보급수준 설정 및 재고감소 대책 검토	'04. 12	
	· [미래전 대비 군수지원체제 발전]	'04. 12	
	· 군수물류체계 개선	'04~'08	
	· [창고 재고관리 개선]	'04~'10	
· 한·미 군수지원체제 개선	'04~'05		
17. 조달업무 발전	· 조달원가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 품질관리 시스템의 전면 쇄신	'04. 12 / '04. 12	군수관리관실
18. 군사시설 관리 체계 개선	· 국방시설본부 2단계 확대개편 준비	'04~'05	군사시설국
	· 용산기지 이전 및 LPP 추진	'04. 12	
	· 국방설계기준제정 검토	'04. 10	
	· 군보유 미등기 건물 해소대책 강구	'04	
19. 군사시설 보호 구역 관리 개선	· 작전환경에 부합된 작전성 검토기준 보완	'04. 12	합참작전본부
	· 작전수행보장과 국민편익 차원의 협의 업무 체계보완	'04. 12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피해보상방안 정립	'04. 12	
20. 군 환경 관리 체계 개선	· 군 소음 특별법 제정	'04~'05	군사시설국
	· 환경기초시설 및 전담인력 지속확충	'04~'06	
	· 환경오염 방지 및 복구활동 활성화	'04. 12	
	·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04~'08	
21. Zero Base개념에 의한 05국방예산편성	· 연구결과 검토 및 적용준비	'04. 3	계획예산관실
	· '05년도 국방예산 편성·제출	'04. 5	
22. 전력증강업무 수행체제 발전	· 국방획득 운영시스템 개선	'04. 12	획득정책관실
	· 전력증강 소요결정업무 개선	'04. 12	
	· 사업관리 및 집행절차 개선	'04. 12	
	· 전력증강사업의 분석평가기능 강화	'04. 12	
23. 연구개발 정책 발전	· 연구개발체제 혁신	'04. 12	연구개발관실
	·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 연구소로 육성	'04. 12	
	· 연구개발 투자비 확대 및 효율성 제고	'04. 12	
24. 방위산업 기반 강화	· 방산업체 기술개발 촉진	'04. 12	연구개발관실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제도 개선	'04. 12	
	· 방산수출 활성화	'04. 12	
25. 상부조직 정비	· 국방부분부 조직 정비	'04. 12	기획조정관실
	· 합참 조직 정비	'04. 12	
	· 각 군 본부 조직 정비	'04~'05	
	· [국방 조달본부 조직 정비]	'04. 12	
	· 합참 국직/합동부대 3군 균형편성 방안 검토	'05	
· 국방부 본부 문민화 추진	'04		
26. 전력및부대 구조 정비	· 각군 부대 정비 계획발전(2단계) / 해병대 부대 구조 개선	'04. 9 / '04. 8	합참전략본부
	·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발전방향 정립	'04. 12	
	· 미래 보병사단 전력구조 개선(안) 추진	'04~'08	
27.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발전	· 기동함대 전력소요 발전	'04. 12	정보화기획관실
	· 공군 전력구조 발전	'04. 12	
	· 합동 C4ISR체계 발전	'07. 12	
	· 사이버전 체계 구축	'04. 12	

국방기구도 및 국방인원 현황

(작성기준일 : '04.12.31)



(단위 : 명)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기타
합계	742,000여명	594,000여명	74,000여명	68,600여명	7,432
군무원	681,000여명	550,000여명	67,000여명	64,000여명	-
일반직 공무원	27,276	13,247	4,692	4,577	4,760
상근예비역	2,672	-	-	-	2,672
	31,175	29,763	1,412	-	-

* 예비군 중대장 군무원 포함(육군 4,026, 해군 138)

군 환경시설 설치 중기계획

(단위 : 억 원, 개 소)

구분	총소요	확보 ('05까지)	'06 ~ '10중기계획					소계
			'06	'07	'08	'09	'10	
계	6,475	4,842	490	671	297	82	93	1,633
오·폐수처리시설	3,307	2,455	394	362	27	49	20	852
소각시설	60	57	-	-	1	1	1	3
소음방지시설	13	13	-	-	-	-	-	-
토양오염방지시설	2,929	2,151	96	309	269	32	72	778
대기오염방지시설	166	166	-	-	-	-	-	-
소요예산	5,568	3,954	1,012	555	95	65	87	1,814

군 보유 토지 및 건물 용도별 현황

■ 토 지

기준일 : '03. 12. 31/단위 : 만 평

용도별	군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등
계		42,684	28,181	3,432	5,420	5,651
건 물 부 지		8,299	6,506	353	550	890
훈 련 장 부 지		21,609	15,318	805	2,224	3,262
저 장 시 설 부 지		3,578	3,146	196	187	49
비 행 장 부 지		3,006	307	60	1,951	688
축 성 부 지		1,495.5	1,235	66	187	7.5
기 타 부 지		4,696.5	1,669	1,952	321	754.5

* 타부처 국 공유지, 사유재산 및 기타(소유미상/미복구) 재산 포함된 면적임.

■ 건 물

기준일 : '03. 12. 31/단위 : 만 평

용도별	군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 직
계		734	475	81	113	65
병 영 기 본		82.7	34	9.7	19	20
교 육		35	22	5	5	3
정 비 / 보 급		65	23	6	34	2
군 숙 소		335	239	39	41	16
일 반 지 원		216.3	157	21.3	14	24

국방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2003~2004년)

(작성기준일: 2003. 1. 1. ~ 2004. 11. 20.)

■ 총괄

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
101	14	26	21	40

■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시설보호법	부분개정 제6870호(2003. 5. 15.)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과 협의시 심의 처리기간 단축
병역법	부분개정 제6972호(2003. 9. 3.)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현역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때에도 징병검사로 인정
군용항공기지법	부분개정 제7083호(2004. 1. 20.)	비행안전구역 중 경계부분이 연속하는 능선 형태의 경우 인접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 기준 적용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부분개정 제7084호(2004. 1. 20.)	국군간호사관학교 조교수 이상의 임용권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
군인사법	부분개정 제7085호(2004. 1. 20.)	장기복무 군인 및 단기복무 여군의 육아 휴직 허용범위확대 및 수의장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군무원인사법	부분개정 제7086호(2004. 1. 20.)	당연퇴직 사유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
사관학교설치법	부분개정 제7087호(2004. 1. 20.)	사관학교 교수·부교수의 임용권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
국방대학교설치법	부분개정 제7088호(2004. 1. 20.)	국방대학교 교수·부교수의 임용권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부분개정 제7089호(2004. 1. 20.)	3사관학교 교수·부교수의 임용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변경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제7121호(2004. 1. 29.)	삼청교육피해자(사망, 행불, 상이) 명예회복 및 보상 실시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제7122호(2004. 1. 29.)	과거 특수임무 수행요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과 특별위로금 지급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7199호(2004. 3. 22.)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제7200호(2004. 3. 22.)	6·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 중 군적 미등록으로 군인신분이 인정되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 실시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부분개정 제7229호(2004.10.16.)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규정(안제242조제1항)이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헌재 2003.11.27선고 2002헌마193 결정)됨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함

■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인사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7885호(2003.1.14.)	국방정책, 국제협상, 무관, 교수 등 전문인력 직위 체계 재정립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7945호(2003.3.25.)	계약공무원 채용 조항 마련 및 기술 및 기능 공무원 명칭, 특별 채용 요건 등 개정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분개정 제17959호(2003.4.7.)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장관정책보좌관 소요정원 반영
군인사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7964호(2003.4.17.)	직위제 진급자의 전직 또는 재보직 규정 보완
공군남부전투사령부령	제정 제18009호(2003.6.25.)	공군작전사령부의 소속부대 증가에 따라 공군남부 전투사령부 별도 창설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분개정 제18055호(2003.7.25.)	획득실장을 보좌하는 연구개발관을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군인복제령	부분개정 제18068호(2003.7.29.)	전역 또는 퇴역군인의 혼례식을 주관하는 등의 경우 정복이나 예복에 한하여 착용을 허용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8085호(2003.8.16.)	관할부대(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신설
해군기지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8090호(2003.8.21.)	일부 육상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군항 구역의 범위 조정
병역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8098호(2003.9.15.)	기존 3대 종교와 여타 종교의 군종장교 선발기준 및 군종장교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제정 제18109호(2003.10.7.)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을 전담 관리하기 위하여 헬기개발사업단을 설치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 규정	부분개정 제18156호(2003.12.11.)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장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 임용조항을 추가
군인사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8189호(2003.12.30.)	의무복무기간의 산입기간을 명확히 하고, 공군 부대의 장 직위에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포함
국방시설본부령	제정 제18190호(2003.12.30.)	국방부 및 각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사시설공사, 공여재산관리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국방시설본부 창설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인연금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8249호(2004. 1. 29.)	전사한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 인상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8302호(2004. 3. 5.)	운영이 부실한 대학 직장에비군부대를 해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분개정 제18320호(2004. 3. 20.)	국방부 본부 정원과 국방홍보원 정원 조정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분개정 제18328호(2004. 3. 22.)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따라 관련 하부 조직 신설 또는 조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18498호(2003. 8. 7.)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제7121호 2004.1.29.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합동참모본부직제	부분개정 제18509호(2004. 8. 7.)	작전 환경변화에 대비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본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전본부 밑에 부(部), 처(處)단위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분개정 제18517호(2004. 8. 14.)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국가핵심 기반체계가 마비될 경우, 군의 대체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군의 재난대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필요인력 4인을 증원함
군인사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8532호(2004. 8. 30.)	일반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와 같이 군 직업보도교육인원을 정원 이외 관리로 명시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8536호(2004. 9. 9.)	국방대학교설치법이 개정(법률제7088호 2004.1.20)됨에 따라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함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부분개정 제18537호(2004. 9. 9.)	사관학교설치법이 개정(법률제7087호 2004.1.28)됨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고 학위의 종류를 이학사, 문학사 및 공학사로 함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부분개정 제18539호(2004. 9. 9.)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이 개정(법률제7084호 2004.1.20)됨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함
6.25전쟁중적후방지역직전수 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 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18583호(2004. 11. 11.)	6.25전쟁 중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한 군 복무 인정 및 보상

※ 자료출처 : 법무관리관실 법제담당관실 ☎748-6821~4)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2급 김종환 1급 권태하

위원장



유재건 (1937)

서울 성북구(갑) : 3선 의원
 연세대 대학원 정외과,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대학원, 미국변호사,
 MBC 시사토론 사회자
 한·미 의원외교협의회장

의사당 : 323호
 전화 : 784-1364 / 788-2721
 FAX : 788-3685

입법조사관
 3급 이용원
 4급 홍승구
 5급 서덕교

성명(생년)	학력 및 경력	전화/사무실
 김성권(1952)	전남 여수(갑) : 2선 의원 고려대 사학과, 미 템플대 철학박사,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이사장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	의원회관 : 424호 전화 : 784-5285 / 788-2872 FAX : 788-3424
 김명재(1944)	비례대표 : 초선 서울대 화학과, 미 버지니아대 이학박사, 숙명여대 교수, KBS 객원해설위원, 환경부장관	의원회관 : 528호 전화 : 784-1270 / 788-2013 FAX : 788-3528
 문희상(1945)	경기 의정부(갑) : 3선 의원 서울대 법과대,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국민의 정부 정부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정보위원장	의원회관 : 323호 전화 : 784-5725 / 788-2535 FAX : 788-3323
 박찬석(1940)	비례대표 : 초선 경북대 지리학과, 미 하와이대학 원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 영남일보 기자, 경북대학교 총장, 지방대학육성대책 위원장	의원회관 : 218호 전화 : 784-6184 / 788-2590 FAX : 788-3218
 안영근(1958)	인천 남구(을) : 2선 의원 인하대 행정학과, 21세기동북아 평화포럼 책임연구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당 환경특별위원장	의원회관 : 819호 전화 : 784-5270 / 788-2808 FAX : 788-3819
 임종안(1956)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 초선 고대 법학과, 변호사, 당 양성평등위원장, 당 서민대책특별위원장	의원회관 : 834호 전화 : 784-6301 / 788-2469 FAX : 788-3834
 조성태(1942)	비례대표 : 초선 육사(20기), 동국대 행정대학원, 2군사령관, 국방부장관, 동국대·한남대 행정대학원 예우교수, 주간지 미래한국 편집고문	의원회관 : 521호 전화 : 784-2187 / 788-2361 FAX : 788-3521
 홍재형(1938)	충북 청주시 상당구 : 2선 의원 서울대 상대, 관세청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KBO 총재, 당 정책위의장	의원회관 : 321호 전화 : 784-5029 / 788-2642 FAX : 788-3321

열린우리당

성명(생년)	학력 및 경력	전화/사무실
 박진(1956)	서울 종로구 : 2선 의원 서울대 법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대통령 비서실 홍보·정부비서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의원회관 : 725호 전화 : 784-3872 / 788-2490 FAX : 788-3725
 권경석(1946)	경남 창원시 (갑) : 초선 육사(25기), 동아대 행정학 박사,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이사장	의원회관 : 828호 전화 : 784-6197 / 788-2349 FAX : 788-3828
 박근(1952)	대구 달성군 : 3선 의원 서강대 전자공학과, 육영재단 이사장, 한국미래연합대표, 당 최고대표위원	의원회관 : 545호 전화 : 784-172 / 788-2045 FAX : 788-3545
 박세원(1957)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 초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지검 검사, 변호사, 이회창 총재 법률특보	의원회관 : 811호 전화 : 784-6069 / 788-2167 FAX : 788-3811
 송영선(1953)	비례대표 : 초선 경북대 영문과, 미국 하와이대 국제정치학 박사, KIDA 국방정책실장 및 안보전략연구소장	의원회관 : 741호 전화 : 784-5272 / 788-2816 FAX : 788-3741
 이상득(1935)	포항시 남구·울릉군 : 5선 의원 서울대 상대, 코오롱 사장, 국회 재정위원장, 당 사무총장, 당 정책위의장	의원회관 : 419호 전화 : 784-1533 / 788-2037 FAX : 788-3419
 황준(1946)	비례대표 : 초선 육사(25기), 미국 센트럴미시건 대학원 행정학석사, 포병여단장 합참 C4I 부장, 유엔키프로스 평화유지군사령관	의원회관 : 827호 전화 : 784-6195 / 788-2347 FAX : 788-3827
 김흥일(1948)	비례대표 : 3선 의원 경희대 정치학 석사, 민주당 청년특별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의원회관 : 324호 전화 : 784-2052 / 788-2126 FAX : 788-3324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

■ 위원회 기능

※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소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와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

■ 2003.4.~2004.12. 위원회 활동(국방부 소관)

구 분	국방위 회의	주 요 내 용
제240회 임시국회 (2003.6.2~7.1)	2003.6.19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 ·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한·미안보동맹 및 주한미군재배치 문제 등) · 자주국방비전보고(비공개)
	2003.7.15	·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증액사항 동의 의결
제241회 임시국회 (2003.7.2~7.31)	2003.7.22	· 병역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등 3건 심사 ·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최근 북한 동향 등)
	2003.7.30	·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3차 회의 결과)
제243회 정기국회 (2003.9.1~12.9)	2003.9.17	·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회의 결과,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 태풍관련 군 피해와 복구지원 활동) ·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 심사
	2003.9.18	· 예산안및결산등심사소위원회 개최 ·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결산 의결
제243회 정기국회 (2003.9.1~12.9)	2003.9.22~10.10	· 국정감사(국방부, 합참 등 33개 기관)
	2003.11.5	· 200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2003.11.6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의결
제244회 임시국회 (2003.12.10~2004.1.8)	2003.11.25	·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제35차 SCM회의 결과, 이라크 추가파병) ·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등 3건 심사 의결 ·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의결
	2003.12.10	·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 등 8건 심사 의결
제244회 임시국회 (2003.12.10~2004.1.8)	2003.12.26	· 한미연합사령부와유엔사령부이전반대결의안 ·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이라크 추가파병, 군납 관련 사항)
	2004.1.8	·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퇴직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등 2건 심사 의결 · 한미연합사령부와유엔사령부이전반대결의안 (계속 심사)

구 분	국방위 회의	주요 내용
제245회 임시국회 (2004.2.2~3.2)	200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강창희 의원 발의) 심사 의결 ·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의결 ·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 의결
제246회 임시국회 (폐회 중)	2004.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보고 및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관련 등 안보 현안 질의
제248회 임시국회 (2004.7.6~15)	2004.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대 국회 국방업무보고(이라크 추가파병, 주한미군 감축협상, 2004년도 입법추진계획 등)
제248회 임시국회 (폐회중)	2004.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현안보고(북경비정 NLL 침범)
제249회 임시국회 (2004.8.23~27)	2004.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NSC, 병무청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 · NSC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4.9.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 및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3회계연도 기금 심사 의결
	2004.10.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감사(국방부, 합참 등 15개 기관)
제250회 정기국회 (2004.9.1~12.9)	2004.11.1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예산안 심사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4.11.2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 심사(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등 11건)
	2004.12.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부대의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3건 심사 의결
	2004.12. 31 (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부대의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2005년 정부 예산 의결

국방 주요연표(2003~2004.11.)

연 도	일 자	주 요 사 업
	1. 16	공병부대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결정
	2. 6	미 테러전쟁지원 '육군 다산부대' 창설
	2.27	제38대 조영길 국방부장관 취임
	3.19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실시
	3.29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4. 2	'국군부대의이라크전파견동의안' 국회 통과
	4. 8~9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회의 개최
	4.10	한·러 국방장관회담 개최
	4.11	2단계 한국형 구축함사업(KDX-II) 2번함 '문무대왕함' 진수
	4.15	이라크 파병 공병단 '서희부대' 창설
	4.17	이라크 파병 의료지원단 '제마부대' 창설
2003		이라크 파병 '서희부대' 1진 출국
	4.30	'제마부대' 1진 출국
	5.15	한미 정상회담, 북핵 평화적 해결 및 한·미동맹 발전 논의
	5.17	경의선 도로 노반공사 완료
	5.19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5.30	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훈련 중 주민안전 조치사항 SOFA 합동위원회서 채택
	5.31	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수립
	6. 2	조영길 국방부장관, 월포워츠 미 국방부 부장관과 의견교환
	6. 3	국방부, 6·25 유해 발굴 영구화사업으로 추진 결정
	6. 4	대구경 다연장로켓(MLRS)탄 국내 생산공장 준공식
	6. 4~5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2차회의 개최
	6.12	한국 공군통제관 미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첫 비행
	6.14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식 거행
	6.21	노무현 대통령, 군 지휘부와의 대화(계룡대)

연 도	일 자	주 요 사 업
	6.24	서해교전 전적비 제막식(제2함대사령부)
	6.24	6·25 전몰자 위패 합동봉안식(국립대전현충원)
	6.27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워싱턴)
	7.11	제마부대 아전병원 개원(이라크 나시리아)
	7.15	국산항공기(KT-1B) 2대 인도네시아 공군에 수출
	7.22~23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3차회의 개최
	7.27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전쟁기념관/판문점 평화의 집)
	8.27	동의부대 4진과 다산부대 2진 임무교대 출국
	9. 3~4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4차회의 개최
	9. 4	국산 A-50기 초도비행 성공
	9.22	이라크 파병 의료지원단 '제마부대' 창설
	9.24	국방부,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
	9.30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주한미군사령부)
2003	10. 6~8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5차회의 개최
	10. 6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19진 출국
	10.13	국방부 신관 준공
	10.23	상륙수부대 완전 철수
	10.30	대공유도무기 '신궁' 개발
	10.31	이라크 추가파병 2차 정부 합동조사단 파견
	11. 3	국방부 조직 개편(11개 비편제기구 조정)
	11. 4~9	제4회 '코리아 에어쇼 2003' 개막(부산 전시컨벤션센터)
	11.10	김종환 합참의장, 중국 총참모장과 회담
	11.12	차세대 구축함 '대조영함' 진수
	11.15	제25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개최
	11.17	제3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11.18	이라크 추가파병 국회조사단 파견	
11.26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도쿄 방위청)	
12. 3	국내 최초의 4,000톤급 구축함 총무공 '이순신함' 취역	

연 도	일 자	주 요 사 업
2003	12. 8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12.20	저속통제기 KO-1 양산 돌입
	12.23	'국군부대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1.10	한국형 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단 창설 (설치근거: 대통령령 제18109호)
	1.15~16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회의(하와이)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확정
	1.16	이라크 추가파병 부대 창설기획단 편성
	2. 5	국방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사업 추진
	2.13	'국군부대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3~14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7차회의 개최
	2.16	이라크에 무관부 설치
	2.17	한·미 4자 고위협의회의 개최(여의도 63빌딩)
	2.23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 창설(특전사교육단)
	2.24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 비행체 특화연구센터 발족(서울대학교)
	2.27	다산부대 3진과 동의부대 5진 출국
2004	2.27~3. 4	조영길 국방부장관, 중동 3국 순방 추가파병 취지 설명
	3. 3	이라크 현지협조단 귀국
	3. 4	국방사무와 기록물관리체계 전면 개정 발표
	3. 5	국군기무사, 보안업무 개정 첫 민간 공청회 개최
	3. 8	김종환 합참의장, 베트남 총참모장(퐁 팡 타잉)과 회담
	3.15	쿠웨이트에 무관부 설치
	3.2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1실 2국 3과 증편) 발효
	4. 9	이라크 현지조사단 출국
	4.14	수출용 아파치헬기 동체 출하
	4.18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추진단 편성 발표
	4.30	국군포로 유골 첫 귀환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 패트리엇어트여단 창설 발표
5. 6~7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8차회의 개최(미 국방부)	

연도	일자	주요사업
2004	5.10	국방과학연구소, 유도탄 '수직사출발사' 최첨단 기술 독자개발 발표
	5.18	국군화생방사령부, 생물학작용제 분석시약 첫 개발
	5.26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금강산)
	5.30	파병협조단 출국
	6. 3	제2차 남북 장성급회담 개최(설악산 컨싱턴스타호텔)
	6. 5	조영길 국방부장관, 제3차 아시아안보회의(4~6) 주제 연설
	6. 7~8	제9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회의 개최(서울)
	6.10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 접촉(개성)
	6.12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접촉 합의안 서명
	6.14	남북합정 첫 무선교신
	6.15	합참 2004년 무궁화회의 개최(육군사관학교)
	6.18	자이툰부대 이라크 추가파병 확정
	6.29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 접촉(파주)
	7. 1	국방혁신 비전('함께하는 국방 튼튼한 국방') 선포식 개최
	7. 5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개성)
	7.14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7.22	제10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회의서 주한미군기지 조정 합의(워싱턴)
	7.29	제39대 윤광웅 국방부장관 취임 이순신함 SM-2 첫 발사 성공(2004년 환태평양훈련)
	8.11	윤광웅 국방부장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재 / '위임 전결규정 훈령' 개정 발표
	8.16	F-4D 단일기종으로 세계 최초 7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
	8.19	제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개최(서울)
	8.27	다산부대 4진과 동의부대 6진 본대 파견
	8.30	2006년까지 단계적 문민화 검토 지시 발표
	9. 2	NLL 작전예규 수정 발표
	9. 3	'환경친화적 건설업무 지침' 마련
	9. 9	정부, 차관급의 '국방획득청' 국방부 산하에 신설하기로 확정
	9.16	합참의장, 청와대 첫 정례보고
9.21	제12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서 주한미군 감축시한 연장 논의(워싱턴)	
9.22	자이툰부대 아르빌 현지 안착	


연 도	일 자	주 요 사 업
2004	10. 1	건군 제56주년 국군의 날 행사(계룡대)
	10. 6	주한미군 2008년까지 3단계 감축 합의 발표
	10. 7	남북 군당국 경의선·동해선 임시 도로 통행과 관련 접촉
	10.11	자이툰부대 공수지원하는 '다이만' 부대 환송식 개최(서울공항)
	10.20	군사법제도 개선 발표
	10.25~29	한·태 군수협력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10.26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와 이행합의서 서명
	10.28	'반부패 청렴물결운동' 워크숍 개최
	11. 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임무 전담 수행
	11.10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III) 1번함 건조 개시

2005년 1월 25일 인쇄
2005년 1월 26일 발행

2004 국방백서

편찬 : 정책기획관실(기본정책담당관실)

발행 : 대한민국 국방부

편집 :  원디자인 (02)742-1771

스캔·출력 : 상원아트콤

인쇄 : 대웅인쇄

인터넷주소 : www.mnd.go.kr
문의처 : (02) 748-6231~7